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연구자 : 서준배, 민경선, 장일식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2023년 세종특별시의회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연구자 : 서준배, 민경선, 장일식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필요성	3
3.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7
1. 연구 방법	7
2. 연구내용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2
제1절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2
1. 개관	12
2. 미국의 자치경찰제도	13
3. 프랑스의 자치경찰제도	13
4.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15
5. 해외 자치경찰제도 분석 시사점	16
제2절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시행과 변화	17
1. 자치경찰제도의 연혁	17
2. 세종자치경찰의 시작과 성과	55
제3절 세종특별자치시의 현황과 시민 요청 사항	70
1. 세종특별자치시의 일반 현황	70
2. 세종특별자치시민 설문조사 등 분석	76
제4절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 현황 분석	105

1. 치안 트렌드의 변화	105
2. 112신고 세부 분석	114
3. 사회적약자 관련 분석	125
4. 범죄예방 관련 분석	132
5. 교통 분야 관련 분석	155
제3장 연구 결과 분석 및 활용방안	167
제1절 양적 연구 결과 분석	167
1. 중요도-성취도 분석	167
2. 분석 결과	170
제2절 심층 면접 결과 분석	191
1. 공무원 상대 심층 면접	191
2. 시민 상대 심층 면접	194
3. 경찰관 상대 심층 면접	216
제3절 우수사례 수집과 세종형 활용 방안	236
1. 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우수사례	236
2. 세종형 활용 방안	241
제4장 세종형 이원화 모형 적용 및 발전방안	243
제1절 세종형 이원화 모형 적용 및 추진 방안	243
1. 세종형 이원화 모형 적용	243
2. 분야별 추진 방안	246
3. 종합적 대응 전략	266
제2절 정책제언 및 세종형 특수시책	268
1. 정책제언	268
2. 세종형 특수시책	273
제3절 발전방안	278
제5장 결론	282

참고문헌 **288**

설문 조사지 **299**

표 목 차

〈표-1〉 양적 연구의 방법과 절차	9
〈표-2〉 자치경찰 사무의 변경	25
〈표-3〉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28
〈표-4〉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31
〈표-5〉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에 관한 사무	33
〈표-6〉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위임 현황	35
〈표-7〉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비교표	36
〈표-8〉 자치경찰위원회 변경 과정	38
〈표-9〉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40
〈표-10〉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조직 및 인력	43
〈표-11〉 시도별 자치경찰 국고보조 및 자체예산 편성 현황(2023년)	45
〈표-12〉 시도별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등 현황(2023년)	46
〈표-13〉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기준 및 내역	47
〈표-14〉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	48
〈표-15〉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고보조 지원 현황	49
〈표-16〉 자치경찰 사무 시도별 보전금 배분 내역(2023년~2026년)	50
〈표-17〉 특별교부세 유형	51
〈표-18〉 연차별 이행 계획(안)	52
〈표-19〉 빅 카인즈 ‘세종자치경찰’ 키워드 세부 분석	62
〈표-20〉 특별교부세 심사 결과(2021년)	65
〈표-21〉 특별교부세 심사 결과(2022년 상반기)	66
〈표-22〉 특별교부세 심사 결과(2022년 하반기)	67

〈표-23〉 세종자치경찰위원회 분과별 성과	68
〈표-24〉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 비교(시내권)	72
〈표-25〉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내국인)	73
〈표-26〉 최근 5년간 세종특별자치시 연도별 인구 추이	74
〈표-2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현황	75
〈표-28〉 세종특별자치시민(VOC) 세부 현황	76
〈표-29〉 전국 치안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80
〈표-30〉 치안 고객 만족도 세부 항목별 점수	81
〈표-31〉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82
〈표-32〉 지역별 자치경찰제 인지도	83
〈표-33〉 자치경찰에 대한 설문 조사 비교	97
〈표-34〉 행복도시 내 생활권역별 지역 관서 신축 및 운영현황	107
〈표-35〉 2021년 범죄 발생지역별 통계	108
〈표-36〉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109
〈표-3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안전 등급	110
〈표-38〉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 (2020년)	111
〈표-39〉 최근 3년간 사회적약자 분야 112신고 건수	125
〈표-40〉 전국 피해자 보호기관 현황	126
〈표-41〉 전국 여성인구 증가 현황(2022년)	126
〈표-42〉 전국 30~40대 여성 비율(2023.1월 기준)	127
〈표-43〉 시도별 여성 자살 현황(2020년 기준)	127
〈표-44〉 세종청 여성 폭력 관련 112신고 현황	128
〈표-45〉 세종청 여성 폭력 관련 시간대별 112신고 현황(2022년 기준)	129
〈표-4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현황	130
〈표-47〉 세종특별자치시 자살 사망 추이	130

〈표-48〉 세종특별자치시 자살 현황(다수자 순)	131
〈표-49〉 최근 3년간 범죄예방 분야 등 112신고 건수	133
〈표-50〉 범죄위험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2020년)	133
〈표-51〉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및 불안 이유(2022년)	134
〈표-52〉 세종특별자치시 방범용 등 CCTV 현황(용도별)	135
〈표-53〉 세종특별자치시 방범용 등 CCTV 현황(연도별)	136
〈표-54〉 세종특별자치시 방범용 등 CCTV 현황(장소별 / 읍·면 기준)	137
〈표-55〉 세종특별자치시 방범용 등 CCTV 현황(장소별 / 동 기준)	137
〈표-56〉 범죄예방 강화구역 현황	138
〈표-57〉 범죄예방구역 등 상세 현황	138
〈표-58〉 세종청 자율방범대 현황	139
〈표-59〉 세종청 생활안전협의회 현황	139
〈표-60〉 세종청 관내 청소년 비행, 학교폭력 신고 건수	140
〈표-61〉 아름동 관내 인구 현황	142
〈표-62〉 아름동 관내 치안 현황	142
〈표-63〉 아름동 먹자골목 112신고 접수 시간	143
〈표-64〉 조치원 관내 인구 현황	145
〈표-65〉 조치원 관내 치안 현황	145
〈표-66〉 렉스 스퀘어 주변 치안 현황	146
〈표-67〉 렉스 스퀘어 112신고 접수 시간	146
〈표-68〉 ‘깨·안·길’ 사업 진행 현황	150
〈표-69〉 한솔지구대 112신고 건수(2021년)	152
〈표-70〉 한솔지구대 112신고 건수(2022년)	154
〈표-71〉 교통사고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2020년)	155
〈표-72〉 최근 3년간 교통 관련 112신고 현황	156
〈표-73〉 세종특별자치시 교통 현황	157

〈표-74〉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고 현황	157
〈표-7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망사고 현황(연도별)	158
〈표-7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망사고 현황(연령별)	159
〈표-77〉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지수 현황	159
〈표-78〉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	160
〈표-7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시설 현황	160
〈표-80〉 세종청 교통경찰관 현황	161
〈표-81〉 IPA 결과에 따른 사분면별 해석기준	169
〈표-82〉 설문조사 문항 구성 개관	169
〈표-83〉 인구사회학적 통계 분석 결과(시민)	171
〈표-84〉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분야 현재 수준 및 요구수준 설문조사(시민) ·	172
〈표-85〉 사회적약자 대상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분야 현재 수준 및 요구수준 설문조사(시민) ...	175
〈표-86〉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활동 분야 현재 수준 및 요구수준 설문조사(시민)	178
〈표-87〉 인구사회학적 통계분석 결과(세종청 경찰관)	181
〈표-88〉 인구사회학적 통계 분석 결과(공무원)	182
〈표-89〉 치안활동에 대한 현재 수준 및 요구수준 설문조사 결과(공무원) ...	185
〈표-90〉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특수시책에 대한 인식 비교	186
〈표-91〉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에 대한 인식 비교	189
〈표-92〉 세종청 자살시도자 연계 현황	193
〈표-9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195
〈표-9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배분 현황(읍면동)	196
〈표-95〉 세종주민자치회의 자치경찰 추진 관련 역할	197
〈표-96〉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협의회 현황	199
〈표-97〉 세종청 녹색어머니회 구성 현황	204
〈표-98〉 세종청 모범온전자연합회 구성 현황	207
〈표-9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단체 조직 현황	210

〈표-100〉 세종청 지역경찰 인력 현황	216
〈표-101〉 지역 관서별 출동 현황(실제 출동 건수)	217
〈표-102〉 세종청 교통사고 현황(2021년)	222
〈표-103〉 세종청 교통사고 현황(2022년)	223
〈표-104〉 국가사무 신고 건수	227
〈표-105〉 자치경찰 사무 신고 건수	228
〈표-106〉 최근 4년간 학교폭력 사건 추이	250
〈표-107〉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현황	269
〈표-108〉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	270
〈표-109〉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 현황	270
〈표-110〉 세종특별자치시 경찰관 정원 비율 변화	271
〈표-111〉 1인당 담당 인구 변화 추이	271
〈표-112〉 가칭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 의견	273
〈표-113〉 광역순찰대, 지역 커뮤니티 치안센터 운영 의견	274
〈표-114〉 교통안전 ONE-STOP 센터 운영 의견	275
〈표-115〉 세종 범죄예방 지원 종합센터 운영 의견	276
〈표-116〉 자치경찰 사무 신규 채용에 대한 의견	277

그림목차

〈그림-1〉	최근 3년간 ‘자치경찰’ 연구 연관어 분석	3
〈그림-2〉	연구의 방향성	6
〈그림-3〉	주요 연구내용	11
〈그림-4〉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 논의사항	19
〈그림-5〉	자치경찰 지휘체계	23
〈그림-6〉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와 가치	24
〈그림-7〉	자치경찰 사무(경찰법 제4조)	27
〈그림-8〉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42
〈그림-9〉	세종자치경찰의 출범 과정	56
〈그림-10〉	세종자치경찰의 체계도	57
〈그림-11〉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도	57
〈그림-12〉	세종자치경찰의 추진 방향 및 목표	58
〈그림-13〉	빅 카인즈 ‘세종자치경찰’ 관계도 분석	60
〈그림-14〉	빅 카인즈 ‘세종자치경찰’ 연관어 키워드 분석	61
〈그림-15〉	빅 카인즈 ‘세종자치경찰’ 키워드 트렌드 분석	63
〈그림-16〉	세종자치경찰의 성과	64
〈그림-17〉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	70
〈그림-1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지도(시내권 확대도)	71
〈그림-19〉	세종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	85
〈그림-20〉	세종 자치위 추진 시책에 대한 인지도	86
〈그림-21〉	세종 자치위 추진 시책에 대한 인지 경로	87

〈그림-22〉	자치경찰 업무가 세종 치안에 대한 기여도	87
〈그림-23〉	자치경찰 업무 중 효과를 거둔 분야	88
〈그림-24〉	세종경찰의 생활안전 활동에 대한 만족도	89
〈그림-25〉	주민참여가 필요한 활동 분야	89
〈그림-26〉	시민안전도 향상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	90
〈그림-27〉	세종경찰의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만족도	91
〈그림-28〉	교통약자를 위해 필요한 경찰 활동	91
〈그림-29〉	교통안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	92
〈그림-30〉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에 대한 만족도	93
〈그림-31〉	사회적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찰 활동	93
〈그림-32〉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	94
〈그림-33〉	자치경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의향	94
〈그림-34〉	불참 의사에 대한 이유	95
〈그림-35〉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 방향	96
〈그림-36〉	Vavra(1997)의 수정된 IPA	99
〈그림-37〉	경찰의 주요 범죄 대응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 IPA 분석 결과(전국) ..	101
〈그림-38〉	경찰의 주요 범죄 대응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 IPA 분석 결과(세종) ..	103
〈그림-39〉	최근 치안 수요 트렌드의 변화	105
〈그림-4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지도	106
〈그림-41〉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업체 증가 현황	108
〈그림-42〉	2022년 세종청 경찰관 직무만족도	113
〈그림-43〉	최근 3년간 긴급코드별 112신고 건수	114
〈그림-44〉	연도별 중요범죄 112신고 건수	115
〈그림-45〉	범죄 종별 112신고 건수(기타 범죄)	116
〈그림-46〉	범죄 종별 112신고 건수(질서유지)	117
〈그림-47〉	사건 종별 112신고 건수(교통)	118

〈그림-48〉 사건 종별 112신고 건수(기타 경찰업무)	119
〈그림-49〉 사건 종별 112신고 건수(기타 경찰업무)	120
〈그림-50〉 최근 3년 1분기 대비 사건 종별 112신고 접수현황	121
〈그림-51〉 최근 3년 1분기 대비 중요범죄 112신고 접수현황	121
〈그림-52〉 최근 3년간 실종, 청소년 비행 음주운전 신고 건수	122
〈그림-53〉 최근 3년 1분기 대비 사건 종별 112신고 접수현황	123
〈그림-54〉 최근 3년 1분기 대비 중요범죄 112신고 접수현황	124
〈그림-55〉 시도별 청소년 자살 현황(2020년)	128
〈그림-56〉 세종청 가정폭력 112신고 연령대 비율	129
〈그림-57〉 아름동 일대 위치도와 사업 대상 지역	141
〈그림-58〉 아름동 빅데이터 분석 결과	144
〈그림-59〉 조치원 일대 위치도 및 사업 대상 지역	144
〈그림-60〉 조치원(럭스 스퀘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147
〈그림-61〉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추진도(아름동)	148
〈그림-62〉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추진도(조치원)	149
〈그림-63〉 조치원읍 상리 사거리 부근	161
〈그림-64〉 조치원읍 역전교차로 부근	162
〈그림-65〉 조치원읍 서창교 부근	163
〈그림-66〉 세종특별자치시 종촌 3교 부근	164
〈그림-67〉 범죄예방 분야 IPA 결과(시민)	173
〈그림-68〉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 IPA 결과(시민)	176
〈그림-69〉 교통안전 분야 IPA 결과(시민)	179
〈그림-70〉 세종자치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IPA 결과(공무원)	183
〈그림-71〉 세종청 녹색어머니회 활동내역 (2023년)	204
〈그림-72〉 세종청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내역 (2023년)	208
〈그림-73〉 세종형 1336센터(가칭 ‘세종형 1366 庭園’) (안)	221

〈그림-74〉 세종청 제작 PM 홍보 카드 뉴스	226
〈그림-75〉 집현동 일대 입주 예정 대학 현황	237
〈그림-76〉 시민 안전 모델 추진 전략	238
〈그림-77〉 시민 안전 모델 추진도	239
〈그림-78〉 고흥군 드론 실증 장면	240
〈그림-79〉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	241
〈그림-80〉 세종자치경찰 모델	242
〈그림-81〉 위치기반 ‘세종 안심이’ 서비스 체계도	248
〈그림-82〉 범죄예방 홍보 로고젝터 장면	249
〈그림-83〉 여성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장면	250
〈그림-84〉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시민)	251
〈그림-85〉 학교주변 및 청소년 밀집지역 중요도(시민)	252
〈그림-86〉 청소년범죄에 대한 현재 경찰의 대응 수준(시민)	252
〈그림-87〉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의 걱정 대응 수준(시민)	253
〈그림-88〉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우수사례	256
〈그림-8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환경 만족도	258
〈그림-90〉 세종 스마트시티 ‘실시간 교통서비스’ 제공 체계도	260
〈그림-91〉 ‘세종엔’ 앱 현출 장면	262
〈그림-92〉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중심의 치안 협력 모형	266
〈그림-93〉 시도별 합계출산율(2021)	268
〈그림-94〉 세종특별자치시 AI 로봇순찰 시연회 보도	278
〈그림-95〉 금강 보행교 순찰 로봇 활용 구성도	28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대한민국 경찰이 창설된 지 76년 만인 2021년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자치경찰은 지방분권 제도의 큰 축으로서 행정 자치, 교육자치에 이어 마지막 남은 미완성된 자치분권 제도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민생치안 정책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로서,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약자(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를 보호하고 지역의 질서와 교통안전을 확보하며 학교폭력·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믿음직하고 친근한 우리 동네의 이웃 경찰관이 되는 것이 자치경찰의 목표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이 지역에 더욱 특화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치경찰은 국민(주민)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주민들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경찰 본연의 모습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¹⁾

자치경찰제의 시행(2021년 7월 1일)으로 치안 업무의 성격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구현하는 ‘사회 공공재’로 변화한 만큼, 경찰청에서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 등과 유기적인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경찰 미래 비전 2050²⁾에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

정부는 과거 국가경찰 위주의 치안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적 개념에 기초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후, 형사소송법 및 경찰법 개정

1) 이순동, 「자치경찰법 해설」, 육법사, 3쪽.

2) 경찰미래비전위원회 출간, 2022.9.29.일.

으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수사 권한이 강화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맞춰 경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국가재정의 부족 등이 맞물리며 현재의 일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가져왔다.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은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점도 분명하여 과도기적인 형태의 자치경찰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 자치경찰제도³⁾는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았고, 일원화 자치경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2020년 12월 9일 자치경찰 법안이 국회 통과 이후, 자치경찰제가 마침내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 후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자치경찰제도 도입과정에서 조직과 개인 간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과 정확한 지침의 부재, 자치경찰 사무의 혼란 등으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이 낮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 요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하면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비전에 맞춰 각 시도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갖는 일원화 모델의 한계로 인해 진일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그중 세종특별자치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고,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다양한 요청 사항과 치안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접목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경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 요인(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8개 항목을 경찰의 임무 및 직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은 2022년 2월 MOU 체결 이후 지속적인 공동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치경찰 발전 방안에 대한 공동숙의(共同宿意)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그림 1〉은 최근 3년간 자치경찰 연구 관련 연관어를 시각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경찰에 관한 연구는 ‘자치경찰’,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위원회’, ‘제주자치경찰’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형 자치경찰제’, ‘충북형 자치경찰제’, ‘자치경찰 활동’, ‘경찰 사무 배분’, ‘이원화 모형’ 등이 주요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최근 3년간 ‘자치경찰’ 연구 연관어 분석



출처: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일 : 2023.6.30.)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법」에 규정된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에서 수행하고 있기에, 자치경찰제에 대해 ‘무늬만 자치경찰’,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로 이해되어야 하나, 실질적인 사무수행을 지방공무원(자치경찰관)이 아닌 국가공무원(국가경찰관)이 담당함에 따라, 일종의 국가위임사무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의 예산지원이나 업무협조 등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⁴⁾

2021년 자치경찰 출범과 함께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치안 시책을 발굴 중이나, 현재 일원화 자치경찰제도는 조직과 인력, 업무 프로세스 변화 없이 도입된 제도로, 당연히 조직 구성원인 경찰과 시민들의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 수용성이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⁵⁾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타 광역지자체와 다르게 기초지자체의 부재, 인구의 폭발적 증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특별자치시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발굴이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남 연기군,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 일부를 통합하여 2012년 7월 1일 자로 탄생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47개(중앙부처 23·소속 24) 및 국책 연구기관 16개 기관이 이전하는 등 중앙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및 인구 유입이 지속될 예정으로 치안 수요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이원화 시범지역으로서 세종의 치안 수요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 발전적인 「세종형 자치경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거친 뒤 이를 다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환류를 거치는 과정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할 것이다.

4) 윤태웅, “자치경찰제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 발전 세미나 발제집」, 2022, 2쪽.

5) 장일식, “자치경찰제도 시행 1년 후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과제」, 2023, 2쪽.

자치경찰제도의 정착과 진정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발굴과 적용은 향후 지방자치 실현하는 하나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뛰어넘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종합적인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인 세종의 치안 수요에 대한 분석과 시민, 경찰, 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시기이다.

아울러 지방시대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시점에서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갖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 개발되면 그 시사점은 더욱 클 것이며, 이를 토대로 타·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목적

이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로 시책이 발굴되면서 치안 정책에서도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제도적 한계로 인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수용도에 대해 시민, 경찰, 공무원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지역별 편차까지 반영한 수용성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물론 경찰청에 제공되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의 법률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시민 지향적 경찰 활동⁶⁾의 실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커뮤니티 폴리싱의 방향성도 제안할 예정이다.

덧붙여, 신세대 경찰관들의 입직으로 인해 경찰조직 내 다양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단순히 경찰관들의 수용성 제고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치경찰 시대에 맞춰 지방직 공무원과의 협업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6) 아시아경제, 현실은 “경찰도 직장인”...사명감을 높여라, 2021.12.6.일 자, 신임 경찰관 입직동기 중 ‘경찰은 시민을 도울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가 78.2%, ‘경찰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가 70.4%로, 신임 경찰관들의 입직 동기와 인식을 알 수 있다.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최대 장점인 지역주민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경찰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토대로 체감안전도 향상은 물론 자치분권의 이념에 따라 민주성에 기반한 자율성을 가미하는 다양한 시책 발굴을 목표로 하여 심층적으로 질적 연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과 설문 결과는 추후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경찰의 모형을 개발하여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어, 최종적으로는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참여형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의 마지막 퍼즐인 자치경찰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세종형 자치경찰제도의 적용과 추진으로 모범적인 운용 사례가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연구의 방향성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문헌 연구와 양·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문헌 연구의 경우 선행 자치경찰 연구자료가 적은 만큼 각종 세미나 자료집 등을 토대로 탐색적으로 살펴보면서, 세종형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제 시민들의 요구 사항과 다양한 시책 발굴은 물론 실행 방안까지 고려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양적 연구를 위해서는 대상자인 시민, 경찰, 공무원들 상대로 설문 조사할 예정이며, 사전에 대상자 중 일부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설문지를 정제화하고, 실효적인 발전방안 위주의 세부적인 정책 제안까지 담고자 한다.

아울러 질적 연구는 자치경찰 선행연구자와 실제 세종특별자치시민과 NGO 등 각종 사회단체는 물론, 자치경찰 분야 전문가들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제도개선과 발전전략을 제안하여 진정한 세종자치경찰 발전방안의 초석이 되는 연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 연구 방법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본적인 치안 상황을 분석하는데, 여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 수요의 확장성을 고려한 치안 트렌드를 추출하기 위해 경찰관 상대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할 것이다.

이외 직접 시민들을 접촉하여 시민수요 분석과 심층 면접(FGI)을 통해 우수한 시책의 제안 등 실제 세종자치경찰 제도의 변화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아울러 시의회, 공무원 상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협업적 측면에서 선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편, 타·시도 자치경찰의 우수사례 수집과 해외 사례 중 세종자치경찰에 적

용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원화 모형 추진 시 세종에 적용 가능한 모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다양한 계층과 대상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세종형 맞춤형 발전방안에 초점을 맞춰 입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근에 발족한 세종자치경찰 연구모임 등 학습 조직과의 면담을 통한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약자 커뮤니티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향후, 연구를 통해 신뢰를 쌓은 기관들과 MOU 개최까지 고려하여 연구를 더욱 심층화할 것이다.

질적 연구방법론은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문헌 연구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사례분석 (Case Study)의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며, 양적 연구방법론은 설문조사 (Survey), 계량 분석 (Econometrics Analysis)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기초적으로 자치경찰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학습하고, 자치경찰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로 하여 현재 자치경찰제도가 갖는 한계를 파악한다. 이후 연구대상자들에게 맞게 3가지 유형의 설문 조사지를 설계하고, 사전 테스트를 위해 표본 추출된 응답자들에게 배포하고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할 예정이다.

최종 완성된 설문지는 사전에 협조 된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시민, 경찰, 공무원에게 배부하여 분석, 연구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다.

현재 연구진들은 기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세종특별자치시청 여민홀에서 2회 개최한 경력이 있는바, 그동안 형성된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여 다양한 요청 사항을 수집하면서 연구 내용에 포함할 예정이다.

다음 <표 1>은 양적 연구의 방법과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설문지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기존 선행연구자료에서 문항 추출 및 검증을 통해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며,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다.

〈표 1〉 양적 연구의 방법과 절차

구분	내용	비고
조사 주제	세종형 자치경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3개 그룹
조사 대상	①시민 : 일반 세종 시민+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 (경찰 협력단체와 세종 커뮤니티 회원 포함) ②경찰관 :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지역경찰관 포함) ③공무원 : 세종특별자치시청 공무원	총 1,000명 시민 500명 경찰 250명 공무원 250명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QR코드 발송 또는 URL을 통한 문자 발송)	전문 Survey 업체
표본 수	대상별 80% 이상 회수 목표	
조사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문항 수	대상자별 ①시민 : 41문항, ②경찰 : 33문항 ③공무원 : 34문항	대상그룹별 설문 상이
사전 조사	대상자별 pretest 대상자 20명	설문 수정 및 보완
조사 일정	2023.10.4.~ 10.20.(17일)	설문 참여 독려, 협조

경찰과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특정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포하였으며, 일부 설문 참여가 저조한 부서 등은 연구 참여를 독려하면서 연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시민은 166명, 경찰관(지역경찰 포함)은 82명, 공무원은 31명이다.

시민도 다양한 경로로 배포하였으나 주로 주민자치회 등 기존에 구성된 각종 시민사회 단체와 경찰 협력단체의 구성원에게 배포되었으며, 이외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주부, 대학생 등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기존에 자치경찰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화 한 그룹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FGI)을 시행하였고, 이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자치경찰 연구모임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별도로 대면·비대면을 통한 정책 자문과 현장 의견을 수렴 청취하여 유형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책제언을 위한 개선방안 위주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종합적인 세종형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경찰청 및 청별로 진행 중인 각종 치안 정책을 수집하여 이 중에서 실제 치안 시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타 시도 우수사례와 해외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과정도 포함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다.

주요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제도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설문조사 (시민, 경찰, 공무원 대상) ▶ 자치경찰 실무자/전문가/시민 등 FGI 실시(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 ▶ 양적·질적 연구자료 토대로 종합적인 정책제언 발굴·특수시책 제안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실효적인 세종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 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과 실효적 추진 방안

이후에 설문조사 결과와 질적 연구를 입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한 이후에 자치경찰 선행연구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재차 정책 자문 형식으로 면담을 시행하여 최종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의 정착을 위한 최상의 개선 및 발전방안과 시책을 제안할 예정이며, 연구종료 이후에는 이를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서 제안하고, 재차 수정 보완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3〉과 같은데, 특히 세종형 이원화 모형의 정착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이에 따르는 정책의 중요도-실행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집중시켰다.

〈그림 3〉 주요 연구내용

현황 분석 및 수요 파악	사례분석	이원화 모형 연구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	자치경찰 발전전략
1. 세종특별자치 시 자치경찰제도 현황 및 여건 분 석 2. 수요조사 (시민 needs)	타지역 자치경찰 제도 사례분석, 해외사례 분석 ⇒ 시사점 도출 (적용 가능 사례)	1.조직 및 운영, 인사, 신분, 사무배분, 재정 지원 등 분석 2. 전문가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1.정책의 중요도- 실행도 비교·분석 2. 세종형 시민 커뮤니티 구성(안) 3. 사회적 약자 통합 센터 신설(안)	1.세종특별자치시 확장성 2. 세종중부서 신설(안) 고려 ⇒ 안전한 치안을 시민에게 제공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개관

우리나라와 세종시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선 미국, 프랑스,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해당 국가의 자치경찰제도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미법계 국가 중 미국을 선정하였다. 영국의 자치경찰제도의 경우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에 영국보다 미국을 소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형태로 정부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인구 및 영토의 규모가 커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치경찰제도라 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미국의 선행 제도를 많은 분야에서 참고하고 있기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륙법계 국가 중 하나로 프랑스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독일의 법체계를 많이 수용하였으나, 독일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에 프랑스의 자치경찰제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국가 중 일본을 선택하였다. 중국보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제도적 유사성이 많고 인구나 영토의 규모 면에서도 유사하여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였다.

2. 미국의 자치경찰제도

미국의 자치경찰제도는 주마다 상이하고 다층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크게는 연방경찰, 주(州) 경찰, 지방경찰로 구분되며 연방경찰과 주(州) 경찰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평가된다.⁷⁾ 연방경찰은 국토안보부, 연방 범죄수사국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 고속 도로 순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경찰은 지역경찰, 학교 및 공원을 담당하는 특별경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치안유지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⁸⁾ 2020년 기준, 80만여 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3만 7천여 명이 연방경찰로 근무하고 있다.⁹⁾

미국의 자치경찰제도가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연방경찰과 지방경찰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있어서 초기에는 현장 경찰관들의 반대가 상당하였다.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경찰로의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지휘·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반대 이유 중 하나였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은 수평적 관계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학교 및 공원 경찰이 우리나라와 달리 그 해당 구역에서 국가경찰이나 지방자치경찰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경찰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프랑스의 자치경찰제도

프랑스는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수상,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국가경찰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

7) 조계표, “경찰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자치경찰도입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018, 42, 9쪽.

8) 같은 곳.

9)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20)

(<https://bjs.ojp.gov/library/publications/federal-law-enforcement-officers-2020-statistical-tables>)

다.¹⁰⁾ 프랑스 경찰 인력은 2002년 기준으로 15만여 명으로, 프랑스 인구 5천 9백여만 명으로 보면 경찰 인력 1인당 국민 400여 명을 담당한다고 단순 계산할 수 있다.¹¹⁾ 현장을 담당하는 경사 이하의 하위직 경찰관은 전체 경찰관의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위 이상의 간부는 13퍼센트, 경정 이상의 간부는 2퍼센트를 차지한다.¹²⁾

하지만, 프랑스 경찰을 국가경찰로만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가경찰이 없는 인구 2만 명 이하의 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군인 경찰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콤뮌(Commune)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있다.¹³⁾

콤뮌은 프랑스 헌법 제72조에 따라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는 통합 지방자치 법전(CGT)에 의해 시장이 자치경찰권을 가지고 있다.¹⁴⁾ 자치경찰은 중앙정부의 직무감독을 받고 있으며, 국가경찰의 권한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 업무를 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의 보조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⁵⁾ 2019년 기준을 3천 5백 개 콤뮌에 속하는 자치경찰은 2만 3천여 명이며, 시장이 시예산으로 자치경찰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¹⁶⁾ 자치경찰의 계급은 시보 순경,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까지 있으며 총경은 40명 이상의 자치경찰이 근무하는 지역에 배치가 가능하다.¹⁷⁾

프랑스의 자치경찰제도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3천5백 개의 기초자치체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주민이 자치경찰제도를 체감하고 있다 할 것이다. 기초자치체에 도입되어 있는 관계로 중앙정부의 직무감독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 및 특별자치시 등을 중심으로 도입이 우

10) 이종화, “프랑스 경찰조직에 관한 연구”, 「경찰학 연구」, 2002, 3, 237쪽.

11) 같은 곳.

12) 같은 곳.

13) 조계표, 앞의 글, 10쪽.

14) 안영훈, “프랑스 코뮌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제도 연구”, 「자치경찰연구」, 2020, 13(1), 31-70. 47쪽.

15) 김택·오승규, “프랑스 경찰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윤리적 거버넌스”, 「한국경찰학회보」, 2013, 18(4), 142쪽

16) 위의 글, 50쪽.

17) 이임걸, “프랑스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2014, 2(2), 49쪽.

선되는 것이 타당하기에 프랑스의 제도를 직접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희망하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40명 이상의 자치경찰 근무지에서 자치경찰 총경까지의 직급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자치경찰 직급구조를 설계할 수는 있다고 판단한다.

4.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일본의 개화 과정을 보면, 메이지유신 때 독일식 법제를 채택하고 이후 미(美) 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식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찰 시스템도 이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대륙법계의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자치경찰제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공안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¹⁸⁾ 2015년 기준 국가경찰은 7만 7천여 명이며, 자치경찰은 28만 7천여 명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국가경찰을 관리하고, 지방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자치경찰을 관리한다.¹⁹⁾ 도도부현 경찰은 기본적으로 생활안전, 경비, 교통 등 거의 모든 경찰 사무를 처리하나,公安 사무 및 전국적인 규모의 사무나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결정한다.²⁰⁾ 자치경찰의 계급은 순사, 순사부장, 경부보, 경부, 경시, 경시정, 경시장, 경시감, 경시총감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 1종 시험 합격자 중 20명이 커리어라는 이름의 채용 절차에 따라 경부보로 채용되며, 국가공무원 2종 시험 합격자 20명이 순사부장으로 채용된다.²¹⁾ 도도부현 경찰의 경비는 도도부현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²²⁾ 다만, 국가사무에 관하여서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다.²³⁾ 지사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형식적 관계이며,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와 도도부현 경찰과의 관계는 간접적 관계이다.²⁴⁾

18) 조계표, 앞의 글, 10쪽.

19) 신현기, “일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2017, 10(1), 29쪽.

20) 조계표, 앞의 글, 10쪽.

21) 신현기, 앞의 글, 43쪽.

22) 신현기, 위의 글, 44쪽.

23) 박종철, “일본의 자치경찰체 분석과 시사점”, 「자치경찰연구」, 2018, 11(2), 37쪽.

즉, 지사가 도도부현의公安위원회를 지휘할 권한은 없으며, 도도부현 公安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도도부현 公安위원회는 직접적으로 도도부현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으며, 도도부현 경찰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에서는 公安위원회 제도와 예산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국가사무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광역단체장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지휘할 권한이 없어야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자체장에 의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등이 미리 차단될 것으로 판단한다.

5. 해외 자치경찰제도 분석 시사점

나라마다 자치경찰의 권한 및 범위가 다르다. 각 나라의 자치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형성되었기에 그 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찾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대안을 만들고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지금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자 논의하는 것이 과거의 국가경찰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의 국가경찰제도가 그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제도로 형성되었다면, 이제 현시대와 미래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치경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시도하는 자치경찰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만의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과거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개도국이었지만, 지금은 선진국으로 다른 나라가 모방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의 역사와 정치적 맥락은 다른 선진국과 다르기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그 모델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자치경찰에 관한 요소를 선별적으로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같은 곳.

제2절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 시행과 변화

1. 자치경찰제도의 연혁

1)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경찰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도에서는 분권화와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세 가지의 이념이 강조된다. 첫째, 분권화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민주성은 경찰 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경찰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주관자인 지역주민을 위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경찰행정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찰행정에 주민을 참여하게 하여 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치안 행정을 이루고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정치적 중립성은 어떤 정치세력이나 특정 계층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 집행과 치안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이념 중 특히 민주성은 민주적 통제와 참여를 위한 역할과 권한이 주민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주민 개개인에게 경찰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성에 기반한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은 주민의 의사에 따른 운영과 통제가 가능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경찰 기능을 중심으로 경찰 자치적 관점에서 자치경찰 개념을 정의하는 학자 중 이황우는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근거로 하여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라고 하였으며, 안영훈은 “주민이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정부의회 또는 지방정부의 장 책임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관할 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외 박진현(2000)은 “치안 행정 업적에 단체장이 책임지며, 선거 때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지방자치 이념의 진정한 구현을 위한 제도”라고 하였고, 한건우(2005)는 “일정한 지역 내의 경찰작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찰”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최종술은 “중앙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방지하여 자주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최기문(2000) 전(前) 경찰청장은 “경찰행정을 지방 분권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받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2) 자치경찰제도의 논의와 도입

다음 〈그림 4〉는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된 역대 정부의 논의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문민정부 시절에는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으며,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소위 ‘일본형’ 자치경찰 방안을 모델로 하여 논의하다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림 4〉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 논의사항

'93년 ~'98년	문민정부	'91년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 고조 '96년 경정아상은 국가공무원으로, 경감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회기종료로 폐기
'98년 ~'03년	국민의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당정협의 등을 진행하여 '99년 일본식 자치경찰제를 참고한 경찰위원회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 제출되지 못하고 폐기
'03년 ~'08년	참여 정부	'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행안부 소속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설치하여 법안 마련하였으나 회기종료로 폐기 '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제주자치경찰제 시행
'08년 ~'13년	이명박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을 19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통보('12.9월)하고, 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 토론회 등 거쳐 자치경찰제 실시방안을 마련('13.1월)하였으나 국회제출은 못함
'13년 ~'17년	박근혜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분권 강화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추진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실무안을 마련하였으나,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여 법률안으로 발의되지는 못함
'17년 ~'22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선정하고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과도한 재정 소요 및 사무 혼선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일원화 체제로 출범

출처 : 대전자치경찰위원회, 「2022 대전자치경찰 백서」, 15쪽.

참여정부 시절에는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설치하여 추진하였으나 결국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지만, 뒤이어 2006년 제주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유일하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는데, 최초 출범 당시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에서 38명(총경 1, 경정 4, 경감 8, 경위 9, 경사 8, 경장 8)을 특별임용해 자치경찰의 인사와 직장훈련 등 규칙을 제정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7월에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 운영과 관련한 ‘자치경찰 법안’을 보완하고, 대통령 소속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해 시행방

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실무안까지 도출되었으나 최종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법안 발의까지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새 정부의 출범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도입 및 시행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과도한 예산의 집행과 국가재정 부담, 사무의 혼선 등 한계로 인해 일원화 모형으로 추진되어 실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 권한을 분산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런 논의를 거치면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되었고, 2019년 3월 12일에 홍익표 의원이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2020년 5월 29일자로 국회 회기가 종료되어 폐기되었고, 2020년 7월 30일자로 관계기관 및 당·정·청 회의를 거쳐 국가-자치경찰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었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에 맞추어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을 의미하며, 2020년 12월 (구) 경찰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시범 기간을 거쳐 7월 1일 전면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의 제공함으로써 질과 효율성의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속해서 제안되었으며, 주로 국가경찰과 별개의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이원적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원적 모델의 형태로 제도화되었고,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참여,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치경찰 재원 마련 방안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²⁵⁾

25) 탁현우,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의와 과제”, 2021, KIPA 연구보고서(통권 103호), 2쪽.

일원화 모델로 변경된 이유는 치안 현장에서 업무혼선 우려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함에 있었다. 일원화 모델은 기구와 관서를 신설하는데 초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며,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를 그대로 두고 별도의 자치경찰 관서를 운영하게 된다면 유휴 관서가 없어 적정한 건물에 입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경찰관 4만 3천 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해야 하나 희망자 부족시 충원이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우려되어 결국 단일한 조직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일원화 모델이 결정되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 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 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 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필요도 있었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자치경찰 도입의 목적이었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이념에 따라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치안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만 구분해 놓고 있을 뿐,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관 없이 시행하는 등 운영상 한계가 뚜렷하게 노출되었다.

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명시하는 등 법령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국

가 경찰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 불가능한 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치안 활동의 민주성과 시민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이후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시대적 과제로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20년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으로서, 자치경찰관은 자치단체 공무원이어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관이 담당하는 사무가 다른 조직과 중복되지 않고 독점적이어야 하며, 자치경찰의 운영은 자치단체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²⁶⁾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자주적으로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경찰제도로서, 민주성과 분권성의 가치를 구현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복 이후 경찰권 분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및 민주성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가 논의되었으나, 분단의 현실과 불안정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경찰 체제가 유지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국민의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차원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²⁷⁾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적용은 경찰이 지닌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에 해당한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 이유는 중앙집권화된 국가 경찰제도의 한계점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²⁸⁾

다음 〈그림 5〉는 자치경찰 지휘체계도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비교하여

26) 양영철, “新 지방자치 경찰론-이론과 실제”, 「온 누리 디엔피」, 2021, 48-49쪽.

27) 전남자치경찰위원회, 「2022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백서」, 10쪽.

28) 홍승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조사, 「한국경찰학회보」, 2022, 24(2), 252쪽.

이해할 수 있는데, 기존에 없었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되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경찰의 신분 변화가 없고, 사무로 구분하였으나 그 실행 주체인 경찰관이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어 여전히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다.

〈그림 5〉 자치경찰 지휘체계



출처 : 경찰청 자료(2022).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거시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러한 담론이 정부 조직 간의 이해관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지방정부의 경찰권 통제 등과 맞물려 주요 정치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많은 현장 경찰관은 자치경찰 전환에 따라 신분의 변동과 업무 범위의 변화 등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에 자치단체의 비선호 사무 등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²⁹⁾

29) 강용길 외, “제주자치경찰 현장 대응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020,

결국,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미와 가치는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방의 종합 행정력을 제고하는 순기능에 있다. 다시 말해,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치안 정책의 수립과 집행, 경찰 체제 분권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치안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시도 일원화로 주민 요구 신속 반영, 종합적 업무수행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는 그 시행과 정착이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다. 많은 기대를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큰 우려와 문제점이 아직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련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³⁰⁾ 한편 양영철(2021)은 자치경찰의 실시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의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치안에 대하여 관여할 통로로 만들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새로운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³¹⁾

즉,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도 도입 의미와 가치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6〉과 같은데,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에 맞게 치안 행정을 지방자치로 연결시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의 발굴과 경찰권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치안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융합행정의 추진이라는 것에 제도의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와 가치



출처: 경찰청, 「자치경찰 소식」, 자치경찰 창간호(2021.9.9.), 3쪽.

21(3), 88쪽.

30) 박준휘 외, 2021,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Ⅲ),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21-B-01), 141쪽.

31) 양영철, 앞의 책, 6쪽.

(1) 자치경찰의 사무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친화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자치경찰 사무·수사 사무로 나눈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사무로, 생활안전·사회적약자(여성·청소년 등) 보호·교통과 경비 및 수사의 일부(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교통 등 일부) 사무를 말한다. 국가경찰 사무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이며, 수사 경찰 사무는 범죄 수사를 말한다.

다음 〈표 2〉는 최초 자치경찰 사무와 행안위에서 의결된 안을 비교한 것으로, 최초 안에서는 사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방대하여 이를 조정하였다. 특히, 생활안전 분야에서 기존 노숙인 등 보호조치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로 이관하려 하였고, 경비 분야에서 지자체가 관리 중인 공공청사 경비 등을 자치경찰 사무로 포함하려고 하여 자치경찰 논의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반대가 거세었다.

〈표 2〉 자치경찰 사무의 변경

구분	기존안	행안위 의결안
생활 안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주민보호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 보호조치	<삭제>
	주민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좌동 / 다만, 지자체 등 他 행정청 사무는 제외<단서 추가>
경비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지역경비 1) 지자체 관리 공공청사 경비 2) 지역축제 등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수사	학교폭력 범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성폭력 범죄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죄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범죄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수사
전국적 치안 유지	※ 국가-자치경찰사무 배타적 구분으로 상호 지원·조정 곤란	①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 다수 시도에 동일한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경우 ②자치경찰사무 관련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찰청장이 지휘·명령 가능

특히 사무와 관련하여 도입 논의 시점에 유의미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김영우 의원실(행안위)에서는 2019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경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경찰관이 직접 URL에 접속하여 답변)를 실시하였다. 동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 도입 찬반 및 이유, 도입 시기 및 도입 효과, 제도설계 과정에서의 일선 의견 반영 여부, 자치경찰 지원 의사 및 이유 등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자치경찰 사무가 불명확하기에 자칫 자치경찰 사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현직 경찰관들의 반대가 극심³²⁾했으며, 이는 시행 초기에도 국가직 신분 유지와 함께 자치경찰 제도의 수용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경찰의 치안력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은 긍정적이나, 현재에서 이미 치안 서비스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보니 경찰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처리하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서 자치경찰 추진시 타 부처, 타 기관과 갈등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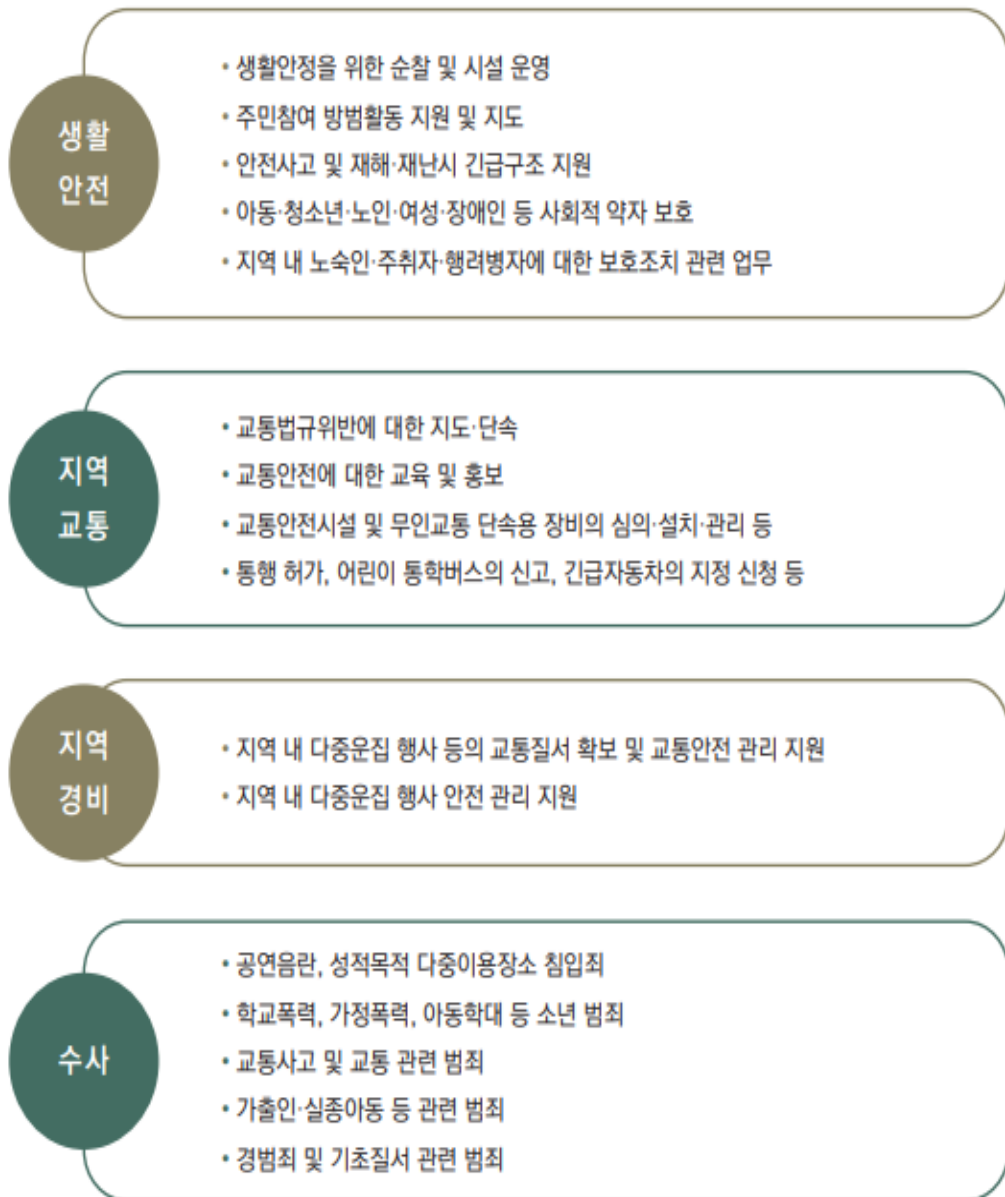
한편 수사사무의 경우 성(性)·가정·학교폭력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수사, 뺑소니·사망사고·교특법상 12개 중대사고,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 수사를 담당하고, 주민 기초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한정하였으며, 현장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이 단속한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건, 관공서 주취 소란 사범 등을 포함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경찰법 제4조에 자치경찰 사무³³⁾가 확정되었으며, 다음 〈그림 7〉과 같다.

32) 경기북부일보, 김영우 의원, 경찰도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설문 결과 발표, 2019.10.4.일 자.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8%(7,488명)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광역적인 치안상황에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가 35.8%(2,681명),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가 31.6%(2,364명), ‘지방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가 20.4%(1,524명) 순으로 나타났고,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77.8%가 ‘반대한다’고 응답함.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총경급 이상 간부의 반대의견은 38.5%였지만, 하위직급 근무자일수록 반대의견이 높았으며, 순경은 88.8%, 경장은 89.1%, 경사는 90%가 자치경찰을 반대함.

33)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 내’이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치안 사무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사무 확장을 방지하고 있음.

〈그림 7〉 자치경찰 사무(경찰법 제4조)



출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 위원회, 「우리 동네 자치경찰」, 19쪽.

다음은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정리한 것으로, 범위 기준과 구체적 사항을 열거한 것이다.

〈표 3〉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한 경설계(CPTED) 사업추진 ②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지원
	나)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 활동 시행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 안전 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재해 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재해 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 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가해자·피해자 조사 등) ③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①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 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①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위기청소년(가해학생·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가정폭력 사안 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학교폭력 사안대응(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참석, 117사안대응, 가해자·피해학생 조사 등) ③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청소년경찰학교 운영 ⑤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다만, 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은 제외한다)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죄,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인계 및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임의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출처 :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 2023.6.1.)

다음 〈표 4〉는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정리한 것으로, 범위 기준과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한 것이다.

〈표 4〉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그 밖에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①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①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의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①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 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①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지원 및 지도	①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발급 ③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①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①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①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교통불편 신고 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국제운전면허 신청 접수 및 교부 ④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그 밖에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관리	①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①시기별·취약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①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협약 등	관련 협약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약(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 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약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약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	---

출처 :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 2023.6.1일)

다음 <표 5> 는 경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정리한 것으로, 범위 기준과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한 것이다.

<표 5>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출처 :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 2023.6.1.)

(2) 자치경찰의 인사권 등

자치경찰제도의 시행과 함께 인력은 신규 증원 없이 사무수행 범위에 따라서 국가경찰로부터 단계적으로 이관받고, 시도 소속 자치경찰은 지방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되, 시범운영 기간 중 이관되는 인력은 국가직으로 유지³⁴⁾하게 되었다.

계급은 자치치안정감에서부터 자치순경까지 총 10개 계급으로 구분하며, 시·도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자치경찰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고, 신규 채용시에는 자치경정·자치순경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신규 채용하고, 국가수사본부장·자치경찰본부장은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의한다.

아울러 임용권은 시·도지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행사하며,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 자치경찰본부장에 위임하게 되어 있고, 경찰공무원 능력발전 및 치안사무의 연계 등을 위해 국가-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상호 간 교류가 가능하게 하였다. 승진의 경우 자치경정 이하의 승진은 심사와 시험을 병행하고 근속 승진은 국가경찰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시·도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본부에 승진심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승진토록 하고 있다.

이외 신규 채용 등 시험 및 교육훈련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고, 필요시 국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은 연령 정년(60세)으로 하고, 자치경찰은 계급 정년의 적용이 없으며, 국가경찰은 현행대로 계급정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표 6〉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위임 사항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로 정리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모든 임용권을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며,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경정 이하 계급의 전보와 파견, 직위해제, 경감 이하 계급의 중징계 처분, 경사 이하의 승진 임용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시·도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34) 경찰법 부칙 제2조 근거.

〈표 6〉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위임 현황

시도	위원회 임용권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 가능) (경정) 전보·파견·휴직·복직·직위해제 (경감 이하) 上同 + 중징계 처분 (경사 이하) 上同 + 승진임용 (※ 경감·경위 승진임용은 시·도지사 권한)	협의 경과
서울	모든 임용권을 자경위가 행사	'21. 10. 1. 의결
부산	廳 경정 이하·췌 경정 전보, 경정 휴직, 경정 이하 파견·복직, 경사 이하 승진임용	'21. 6. 28. 의결
대구	廳 경정 이하 전보, 췌 경정 및 보직 경감 전보, 경정 이하 파견·직권휴직·직위해제, 경감 이하 중징계 처분, 경사 이하 승진임용	'22. 3. 16. 의결 (~ '23. 3. 31.)
인천	경정 임용권, 廳 경감 이하 임용권, 경사 이하 승진임용	'21. 12. 28. 의결
광주	경정 임용권, 경감·경위 파견, 경사 이하 승진임용	'21. 6. 21. 의결
대전	경정 이하 전보, 경사 이하 승진임용	'21. 12. 12. 의결
울산	廳 계장 및 췌 과장 전보, 보직 경감 전보, 경감 이하 중징계 처분, 경사 이하 승진임용	'21. 6. 25. 의결
세종	경정 이하 전보·파견·직위해제, 경감 이하 중징계 처분, 경사 이하 승진임용	'21. 6. 29. 의결
경기 남/북	廳 계장 및 췌 과장 전보, 경사 이하 승진임용	'21. 9. 2. 의결
강원	췌 경감 이하 전보를 제외한 모든 임용권을 자경위가 행사	'21. 12. 21. 의결
충북	경정 이하 전보·파견·직위해제, 경감 이하 중징계 처분, 경사 이하 승진임용	'21. 6. 30. 의결
충남	경정 전보·파견, 췌 과장급 경감 전보·파견, 경감 이하 중징계 처분, 경사 이하 승진임용	'21. 6. 29. 의결
전북	경정 이하 전보·파견·직위해제, 경감 이하 중징계 처분, 경사 이하 승진임용	'21. 6. 22. 의결
전남	경정 전보, 췌 보직 경감 전보, 경사 이하 승진임용	'21. 6. 30. 의결
경북	廳 계장 및 췌 과장 전보·파견, 경사 이하 승진임용(근속 제외)	'21. 11. 15. 의결 (~ '23. 12. 31.)
경남	廳 계장 및 췌 과장 전보, 경사 이하 승진임용	'21. 6. 7. 의결
제주	廳 경정 이하 전보, 췌 경정 전보, 全 계급 파견, 경사 이하 승진임용	'22. 1. 1. 의결

* 2023년 3월 기준.

〈표 7〉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비교표

시도	경정					경감 이하						경사 이하
	전보	파견	휴직	복직	직위 해제	전보	파견	휴직	복직	직위 해제	중징계 처분	승진 임용
서울	○	○	○	○	○	○	○	○	○	○	○	○
부산	○	○	○	○	-	△ (廳)	○	-	○	-	-	○
대구	○	○	△ (직권 휴직)	-	○	△ (廳 보직 경감)	○	△ (직권 휴직)	-	○	○	○
인천	○	○	○	○	○	△ (廳)	△ (廳)	△ (廳)	△ (廳)	△ (廳)	△ (廳)	○
광주	○	○	○	○	○	-	△ (경감, 경위)	-	-	-	-	○
대전	○	-	-	-	-	○	-	-	-	-	-	○
울산	○	-	-	-	-	△ (보직 경감)	-	-	-	-	○	○
세종	○	○	-	-	○	○	○	-	-	○	○	○
경기 남/북	○	-	-	-	-	△ (廳 계장, 췌 과장)	-	-	-	-	-	○
강원	○	○	○	○	○	△ (廳)	○	○	○	○	○	○
충북	○	○	-	-	○	○	○	-	-	○	○	○
충남	○	○	-	-	-	△ (췌 과장)	△ (췌 과장)	-	-	-	○	○
전북	○	○	-	-	○	○	○	-	-	○	○	○
전남	○	-	-	-	-	△ (보직 경감)	-	-	-	-	-	○
경북	○	○	-	-	-	△ (廳 계장, 췌 과장)	△ (廳 계장, 췌 과장)	-	-	-	-	△ (근속 제외)
경남	○	-	-	-	-	△ (廳 계장, 췌 과장)	-	-	-	-	-	○
제주	○	○	-	-	-	△ (廳)	○	-	-	-	-	○

앞의 〈표 7〉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을 비교한 것으로,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의 전보, 파견, 직위 해제권과 경감 이하의 경우 전보, 파견, 직위해제, 중징계 처분권을, 경사 이하의 경우 승진 임용권을 갖고 있다.

(3)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법적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유일한 자치경찰 조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2명) 추천, 시장(1명) 지명으로 이루어진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은 크게 자치경찰의 정책 수립 및 운영, 자치경찰의 통제, 국가경찰과의 협의·조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시·도 경찰청장의 임명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사무로 지정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데, 자치경찰 활동 목표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 시·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사 의뢰), 감찰 요구 및 징계 요구, 고충 심사,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한다.

아울러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데, 시·도자치

경찰위원회는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이며, 다양한 시책 발굴과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의 독립성을 통하여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가지기 위해서는 집행성이 있어야 하지만, 경찰법 제28조 제3항에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하여, 심의·의결만을 통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 실질적 관리 감독권이 없고, 소관 사무인 법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 의결권을 통해서만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형식적 관리권만 가지는 한계가 있다.

최초 자치경찰제도 도입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찰권 분산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구성·권한·임기 등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표 8〉 자치경찰위원회 변경 과정

구분	기존안	행안위 의결안
위원 자격	판사검사변호사 3년 이상 재직자	판사검사변호사 경찰 5년 이상 재직자
위원 구성	시도의회 2명, 국경위 2명, 시도지사 1명, 시도추천위 2명	시도의회 2명 국경위 1명 교육감 1명 시도지사 1명, 시도추천위 2명
권한	직접 감찰 및 감찰 요구	감찰 요구<직접 감찰 삭제>
임기	3년 임기, 1회 연임	3년 임기<연임 삭제>
결격 사유	경찰·검찰·군인 퇴직 3년 미경과 일반직 공무원 퇴직 1년 미경과	경찰·검찰·군인 퇴직 3년 미경과 일반직 공무원 퇴직 3년 미경과
시도지사 관여	-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원회 업무 관여 不可
사무 기구	위원회 사무기구에 경찰공무원 배치 가능	위원회 사무기구에 경찰공무원 배치 의무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안은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으로 3년 이상 재직자이었으나 자치경찰을 실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출신도 필요하여 경찰관을 포함하면서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하였고,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2명 구성에서 1명을 빼고 교육자치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 추천 1명으로 변경하였다.

권한에서도 직접 감찰을 삭제하고 감찰 요구권만을 부여하였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연임 불가로 변경되었다. 이는 자치경찰 시행 초기 다양성 확보의 측면에서 연임보다는 전문적인 인재들이 영입되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끌어 주길 바라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 시도지사의 정치적 목적과 개인적 사익을 위해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였으며, 사무기구에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시행하였다.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안한 이 안에 따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평가, 인사위원회 운영, 4. 시·도경찰청장의 임용에 대한 협의, 5.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6.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 요구 및 징계 요구, 7.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현안의 점검, 8.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9.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이 있다.

다음 〈표 9〉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정리한 것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즉, 사무의 집행을 구체적·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고, 시도 또는 각 경찰청과 협업하면서 자치경찰 사무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시도지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표 9〉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구 분		주 요 기 능	비 고
소 속		▶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목적		▶ 비대해진 경찰권의 분산 및 시·도지사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구 성	위원	▶ 위원장 포함 7인 → 시·도지사가 임명 -(추천)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시·도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2명) -(지명), 시·도지사(1명)	전국 18개 위원회 (경기 남.북) - 126명
	상임 위원	▶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명 ▶ 사무국장은 위원중 호선에 의해 선출	전국 36명
	자격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 5년 이상 ▶ 변호사·조교수 이상 국가기관 등(연구기관) 5년 이상 종사자 ▶ 관할 지역주민 중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결격 사유	▶ 경찰·검찰·국정원·군인 퇴직 3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퇴직 3년, 당적 및 선출직 3년	
	신분	▶ 정무직 지방공무원	
	직급	▶ 위원장=시·도경찰청장>상임위원으로 설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상당 직급 규정
	임기	▶ 3년, 연임 불가	
위원추천위원회		▶ 위원장 1명 포함 5명으로 구성 -(추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체(1명),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협의체(1명), 경찰청장(1명), 해당 시·도 지방법원장 1명 -(당연직) 시·도 분청 소속 기획조정실장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도의회 및 교육감 각각 1명 추천
사무 및 운영		▶ 제13조 : 정기회의 월 1회 이상, 3일전 까지 통지, 회의록 작성 ▶ 제14조 :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 가능 ▶ 제15조 : 국가·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 경찰청'간 실무협의회 운영 ▶ 제16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 제17조 : 위원회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관계	경찰	▶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자치경찰 사무)	
	타기관	▶ 출석·발언 및 자료 요구	
사무기구		▶ 위원회에 별도 사무기구 설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 겸임

또한,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현안과 인사권 등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해당 분야 시책을 논의하면서 주민 친화적이면서 해당 지역에 맞는 특수시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필수 자격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예산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이므로, 그 임명에 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치경찰위원 각각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³⁵⁾

실제 다음 〈그림 8〉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남성은 80.2%, 여성은 19.8%이며, 출신별로 구분하면 교수 출신이 27.8%, 경찰 출신이 27.8%,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이 22.2%, 공무원 출신이 14.3%, 이외 기타 NGO 등 출신이 7.9%이며, 위원장의 출신은 교수 출신이 50.0%로 절반에 이른다. 이외 사무국장은 경찰 출신이 88.2%로 이는 시행 초기 경찰의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위원을 통해 협업도를 높이고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

35) 이시준, “제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발전방안”, 「경찰대학·한국경찰학회 공동 학술 세미나 자료집」, 29쪽. (2021.12.1.일 자).

〈그림 8〉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성별 및 출신별 위원 구성 현황 >

성 별			출 신 별					
총계	남성	여성	총계	교수	경찰	변호사	공무원	기타*
126명 (100%)	101명 (80.2%)	25명 (19.8%)	126명 (100%)	35명 (27.8%)	35명 (27.8%)	28명 (22.2%)	18명 (14.3%)	10명 (7.9%)

* 시민연대, YWCA, 언론, 상공회의소, 여성정책연구원 등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구성 현황 >

총계	교수	공무원	경찰	기타(시민)
18명(100%)	9명(50.0%)	5명(27.8%)	3명(16.7%)	1명(5.5%)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구성 현황 >

총계	교수	공무원	경찰
17명(100%)*	1명(5.9%)	1명(5.9%)	15명(88.2%)

* 「경찰법」 제3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상임위원 및 사무국 부재

출처 : 김영식, 「자치경찰제 출범의 의의와 과제-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문 10쪽. (2021.11.22.)

아울러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하며,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이들은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실제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활동역량에 따라 해당 자치경찰위원회의 시책 개발과 예산 증액 등이 편차가 생기고 있으며, 이는 제2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표 10〉은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현황으로, 경찰관은 170명으로 29.9%, 일반직 공무원은 63.8%, 이외 위원장과 사무국장인 정무직 6.3%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정원 11명에 현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8명, 세종경찰청 파견자 4명, 위원장과 사무국장 각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조직 및 인력

연번	구분	정원				현원			
		계	정무직	경찰관	일반직	계	정무직	경찰관	일반직
	총 계	460명	36명	53명	371명	568명	36명	170명	362명
1	서울	43	2	3	38	58	2	18	38
2	부산	29	2	3	24	39	2	11	26
3	대구	25	2	3	20	32	2	10	20
4	인천	27	2	3	22	39	2	14	23
5	광주	25	2	3	20	32	2	11	19
6	대전	25	2	3	20	27	2	6	19
7	울산	25	2	3	20	28	2	9	17
8	세종	11	2	2	7	14	2	4	8
9	경기南	29	2	3	24	38	2	12	24
10	경기北	25	2	3	20	30	2	8	20
11	강원	25	2	3	20	26	2	9	15
12	충북	22	2	3	17	29	2	10	17
13	충남	25	2	3	20	34	2	11	21
14	전북	25	2	3	20	31	2	10	19
15	전남	25	2	3	20	28	2	8	18
16	경북	27	2	3	22	27	2	6	19
17	경남	25	2	3	20	31	2	7	22
18	제주	22	2	3	17	25	2	6	17 (자치단 6명 포함)

*정원 대비 현원 108명 23% 과원 운영 중, 경찰관 정원 대비 117명 추가 파견 중, 일반직 정원 대비 9명 결원(2023.3월 기준)

(4) 자치경찰의 예산

예산의 경우 국가로부터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을 지원 받아, 예산 수립 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는데, 시·도의 판단하에 지자체 자체 예산 추가 투입이 가능하여 자율성을 두었다.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³⁶⁾

다음 〈표 11〉은 2023년 시도별 자치경찰 국고보조 및 자체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국고보조금은 사업비 113,399 백만 원과 운영비 13,000 백만 원을 합친 126,399 백만 원이다. 자체 예산은 총 187,275 백만 원으로 이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20,169 백만 원과 사업비 152,261 백만 원, 맞춤형 복지비 27,005 백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 중 세종은 721백만 원의 국조 보조금과 1,166 백만 원의 예산을 운용 중으로, 가장 적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규모와 인구수, 각종 치안 수요 등과 비례하여 편성된 만큼 자체 예산 증액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3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법) [시행 2023. 2. 16.] [법률 제 19023호, 2022.11.15., 일부개정], 제35조 예산.

〈표 11〉 시도별 자치경찰 국고보조 및 자체 예산 편성 현황(2023년)

구 분	국고보조금 (백만 원)			자체 예산 (백만 원)			
	소계	사업비 (시도 보전금)	운영비 (행안부)	소계	운영비 (인건비 포함)	사업비	맞춤형 복지비
총 계	126,399	113,399	13,000	187,275	20,169	152,261	27,005
서 울	14,272	13,379	893	22,381	1,101	19,280	2,000(50)
부 산	6,676	5,868	808	11,708	651	9,333	1,724(30)
대 구	5,344.5	4,607	737.5	8,844	1,429	5,729	1,686(35)
인 천	6,320	5,512	808	12,028	2,108	7,700	2,220(60)
광 주	3,372.5	2,635	737.5	4,471	461	3,547	463(24)
대 전	3,588.5	2,851	737.5	6,656	945	4,736	975(50)
울 산	3,504.5	2,767	737.5	5,216	1,726	3,008	482(30)
세 중	721	595	126	1,166	230	791	145(50)
경기남부	19,601	18,732	869	32,790	1,376	24,664	6,750(100)
경기북부	7373.5	6,636	737.5	13,511	1,129	9,900	2,482(100)
강 원	6,386.5	5,649	737.5	8,030	121	7,414	495(60)
충 북	5,363.5	4,626	737.5	7,461	1,311	5,090	1,060(50)
충 남	8,358.5	7,621	737.5	11,368	201	9,730	1,437(50)
전 북	7,564.5	6,827	737.5	13,029	2,444	8,966	1,619(50)
전 남	7,629.5	6,892	737.5	11,189	795	9,363	1,031(50)
경 북	8,547.5	7,810	737.5	12,190	918	9,962	1,310(50)
경 남	9,274.5	8,537	737.5	14,000	2,446	10,579	975(30)
제 주	2,501	1,855	646	3,397	777	2,469	151(50)

※ 괄호 안 숫자는 경찰관 1인당 복지포인트 지급액 (단위: 만원)

〈표 12〉 시도별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등 현황(2023년)

구분		2023년 자원계획									
		예 산 편 성 (백만원)	지원액(만원)			인 원 (명)	지원 범위				비고 (천원, 명)
			'23	'22	증감		임용권 범위	일반직	공무직	지구대 파출소	
서울		2,000	50	50	-	4,000	○	○	○	×	
부산		1,724	30	24	6	5,200	○	○	○	○	건강검진 1억원 국제교류 1,400만원 휴양시설 200 * 250
대구		1,686	35	35	-	3,550	○	○	○	○	건강검진 (격년) 250 * 1,775 (지·파 포함)
인천		2,220	60	60	-	3,700	○	○	○	○	
광주		463	24	15	9	1,930	○	○	○	○	
대전		975	50	24	26	1,950	○	○	○	○	
울산		482	30	30	-	1,606	○	○	○	○	
세종		145	50	24	26	290	○	○	○	○	
경 기	남	6,750	100 (50)	100 (50)	-	10,998	○	○ (50)	○ (50)	○ (50)	
	북	2,482	100 (50)	100 (50)	-	3,969	○	○ (50)	○ (50)	○ (50)	
강원		495	60	60	-	660	○	×	×	×	건강검진 (격년) 300 * 330
충북		1,060	50	50	-	2,123	○	○	○	○	
충남		1,437	50	50	-	2,873	○	○	○	○	
전북		1,619	50 (25)	25	25	3,237	○	○ (25)	○ (25)	○ (25)	
전남		1,031	50 (25)	50 (25)	-	3,274	○	○	○ (25)	○ (25)	
경북		1,310	50 (25)	50 (25)	-	4,240	○	○ (25)	○ (25)	○ (25)	
경남		300	30	30	-	1,000	○	×	×	×	건강검진 (격년) 300 * 2,250 (지·파 포함)
제주		151	50	-	50	302	○	×	×	×	

※ 괄호 안 숫자는 일반직, 공무직, 지구대·파출소 직원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그 액수

앞의 〈표 12〉는 시도별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등 현황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마다 예산이 다르게 책정되어 그 혜택도 상이한데, 특히 지역경찰의 경우 실질적인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12치안종합상황실 아래 직제가 편제되어 있어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다.

2022년에 비해서 6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점차 복지 포인트 등 혜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대구·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권 등을 추가로 부여하여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2023년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경찰까지 포함하여 임용권의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2023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 기준 및 내역을 살펴보면, 배분 방안 중 산출 기준은 2021년 7월 23일 자치분권위원회 의결에 따르고, 교부 기준은 직급별 단가가 동일하고 비중이 높은 인건비 기준에 의해, 교부 방안은 시도별 인건비 총액의 47.7%를 정액으로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기준 및 내역

사업명	회계구분	예산과목	2023년 국고보조 예산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사업	일반회계	1144-301-330-01	13,000,000천원

다음은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열악한 시·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상반기 중 전액 교부할 예정이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억 2천5백9십9만9천 원(0.97%)으로 가장 적은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16억6백1십2만4천 원으로 전체 교부 결정액의 12.35%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시책 발굴과 교부금을 적극 요청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표 14〉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

시도	교부 결정액	교부액(70%) (1차, 3월)	교부액(30%) (2차, 6월)
계	13,000,000,000	9,099,996,000	3,900,004,000
서울특별시	892,963,000	625,074,000	267,889,000
부산광역시	807,807,000	565,465,000	242,342,000
대구광역시	737,539,000	516,277,000	221,262,000
인천광역시	807,807,000	565,465,000	242,342,000
광주광역시	737,539,000	516,277,000	221,262,000
대전광역시	737,539,000	516,277,000	221,262,000
울산광역시	737,539,000	516,277,000	221,262,000
세종특별자치시	125,999,000	88,199,000	37,800,000
경기도	1,606,124,000	1,124,286,000	481,838,000
강원도	737,539,000	516,277,000	221,262,000
충청북도	737,539,000	516,277,000	221,262,000
충청남도	737,539,000	516,277,000	221,262,000
전라북도	737,539,000	516,277,000	221,262,000
전라남도	737,539,000	516,277,000	221,262,000
경상북도	737,539,000	516,277,000	221,262,000
경상남도	737,539,000	516,277,000	221,262,000
제주특별자치도	646,371,000	452,460,000	193,911,000

다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국고보조금을 비교한 것으로, 2022년에는 사업비를 경찰청에서 지급하였으나 2023년에는 사업비를 시도보전금에서 지원해주었으며, 사무국 운영비는 행안부에서 동일한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2022년 9억2천6백만 원에서 2023년 7억2천1백만 원으로 22.1% 감액된 만큼 향후 국고보조를 지원받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15〉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고보조 지원 현황

구 분	2022년 국고보조금 (백만 원)			2023년 국고보조금 (백만 원)		
	소계	사업비 (경찰청)	사무국 운영 (행안부)	소계	사업비 (시도 보전금)	사무국 운영 (행안부)
총 계	142,900	129,900	13,000	126,399	113,399	13,000
서 울	16,093	15,200	893	14,272	13,379	893
부 산	7,408	6,600	808	6,676	5,868	808
대 구	6,037.5	5,300	737.5	5,344.5	4,607	737.5
인 천	7,108	6,300	808	6,320	5,512	808
광 주	3,937.5	3,200	737.5	3,372.5	2,635	737.5
대 전	4,137.5	3,400	737.5	3,588.5	2,851	737.5
울 산	3,937.5	3,200	737.5	3,504.5	2,767	737.5
세 종	926	800	126	721	595	126
경기남부	22,169	21,300	869	19,601	18,732	869
경기북부	8,237.5	7,500	737.5	7,373.5	6,636	737.5
강 원	7,137.5	6,400	737.5	6,386.5	5,649	737.5
충 북	6,037.5	5,300	737.5	5,363.5	4,626	737.5
충 남	9,737.5	9,000	737.5	8,358.5	7,621	737.5
전 북	8,537.5	7,800	737.5	7,564.5	6,827	737.5
전 남	8,737.5	8,000	737.5	7,629.5	6,892	737.5
경 북	9,437.5	8,700	737.5	8,547.5	7,810	737.5
경 남	10,437.5	9,700	737.5	9,274.5	8,537	737.5
제 주	2,846	2,200	646	2,501	1,855	646

다음은 자치경찰 사무 시도별 보전금 배분 내역으로, 세종의 경우 전체 총액의 0.52%에 불과한 만큼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표 16〉 자치경찰 사무 시도별 보전금 배분 내역(2023년~2026년)

(단위:천원)

구분	年 배분 금액
총계	113,399,719
서울특별시	13,378,800
부산광역시	5,868,273
대구광역시	4,606,511
인천광역시	5,511,478
광주광역시	2,635,255
대전광역시	2,851,224
울산광역시	2,766,710
세종특별자치시	595,248
경기도	25,367,934
강원도	5,648,867
충청북도	4,626,241
충청남도	7,621,349
전라북도	6,827,359
전라남도	6,892,075
경상북도	7,809,897
경상남도	8,537,051
제주특별자치도	1,855,447

※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 추진, 2021년 국비규모 기준으로 보전금을 시도별로 배분하였으며, 시도에서는 총규모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규모, 사업내용 등 편성 가능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과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법적 근거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2조 및 별표 8이다.

특별교부세 재원은 정률 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3%로 하며, 유형은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특별교부세 유형

계	지역 현안 수요	시책수요(국가지방협력)	재난 안전 수요
100% (정률 교부세의 3%)	40%	10%	50%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 소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 소관

교부 대상은 시책 수요(국가지방 협력,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9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국가적 장려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 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하고, 자치경찰 교부 내역은 총 134억 원으로 2021년 20억, 2022년 상반기 20억, 2022년 하반기 94억 원을 배정하였다.

(5) 향후 자치경찰제도 변화 전망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발표된 국정과제에 자치경찰권 강화가 포함되면서,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도 소속 자치경찰관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자치경찰의 지휘권·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본 모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모델 마련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세종·강원·전북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 모델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시범 시행 후 성과 분석을 통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³⁷⁾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현행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가 기초단위까지 확산을 고려하면서 안정적 운영과 재정 지원 방안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표 18〉은 연차별 이행 계획(안)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표 18〉 연차별 이행 계획(안)

실천과제	연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자치경찰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정부 협의체 구성 •제주·세종·강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를 위한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세종·강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대비 재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세종·강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시범실시 성과 분석및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이원화 전면 시행을 위한 법령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및 「경찰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시행 성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마련

37)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법」으로, 자치경찰은 「지방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하는 방안 병행 검토 예정임.

아울러, 자치경찰 관련한 의원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로 문진석 의원 안(2023.2.6. 발의, 2023.2.7. 행안위 회부)은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교육’을 추가하고,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윤준병 의원 안(2022.12.15. 발의, 2022.12.16. 행안위 회부)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정치 운동죄 처벌 규정 준용 및 직권남용 금지·처벌 규정³⁸⁾을 신설하려는 목적으로 입법 중이다.

세 번째, 이채익 의원 안(2022.11.17. 발의, 2022.11.18. 행안위 회부, 2023.2.16. 전체 회의 상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시도자치경찰위원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경찰공무원 출신 및 특정 성별에 편중³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입법 중이다.

네 번째, 이해식 의원 안(2021.7.21. 발의, 2021.7.22. 행안위 회부, 2021.11.15. 전체 회의 상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자치경찰사무를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제4조 제2항),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찰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구성·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입법 중이다.

다섯 번째, 권은희 의원 안(2021.1.25. 발의, 2021.1.26. 행안위 회부, 2021.5.12. 전체 회의 상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직무 및 선임기준⁴⁰⁾을 변경하고 시·도자치경

38)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 방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39) 경찰공무원 30%, 특정 성별 60% 초과 불가.

찰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신설하는데, 현행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중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을 관할 고등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법관 자격이 있는 자에 한정)으로 변경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을 삭제하고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2명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입법 중이다.

40)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 호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권한을 대행,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 연장자가 권한 대행.

2. 세종자치경찰의 시작과 성과

1) 세종자치경찰의 시작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6월 29일 “시민과 함께 세종을 더 안전하게, 세종자치경찰!” 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시민 주권, 인권 중시 등 6가지 주요 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효과성 있는 과제 발굴 및 수행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후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감동의 해’를 맞아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구성한 ‘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민참여방안’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 시민참여 강화 3대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3대 방안의 첫 번째는 시민 중심 네트워크인 ‘으뜸 마루’ 운영으로, 시민이 직접 지역사회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16개 시민단체(총회원 수 약 47,000명)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두 번째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확대 설치한 것으로, 시민이 지역 내 교통 현안에 대해 제언하는 창구를 개설하여 각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운영되던 것을 세종청으로 통합하여 월 1회 개최하고, 심의위원에 시민을 참여시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찾아가는 자치경찰 순회설명회를 실시하였는데, 주민자치회, 이·통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치경찰제 제도의 장점에 관해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여 자치경찰 초기에 시민 곁으로 다가가려는 선제적인 시책들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경찰법」 제36조⁴¹⁾에 규정된 특례조항에

41) 경찰법 제36조 ①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3항에도

근거하여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이에 업무수행의 효율화 등을 위해 개선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결국 「경찰법」 제36조(세종특별자치시 특례) 폐지 및 이원화 시범 시행을 추진하였으며, 위원 비상임 및 사무국 미설치를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특례조항을 2022년 10월 27일 자로 폐지하여 타 시·도위원회와 동일하게 자치경찰위원회 정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정과제로 세종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시행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다음 〈그림 9〉는 세종자치경찰의 출범 과정을 도식화한 것으로, 2021년 1월 14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준비단을 출범하였는데, 당시 4명의 적은 인원으로 출발하였다. 2021년 5월 28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정식 임명하여 시범운영 실시에 들어갔고,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자치경찰제도가 출범하면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도 출범하였다. 이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3년 2월 16일 자로 공식적인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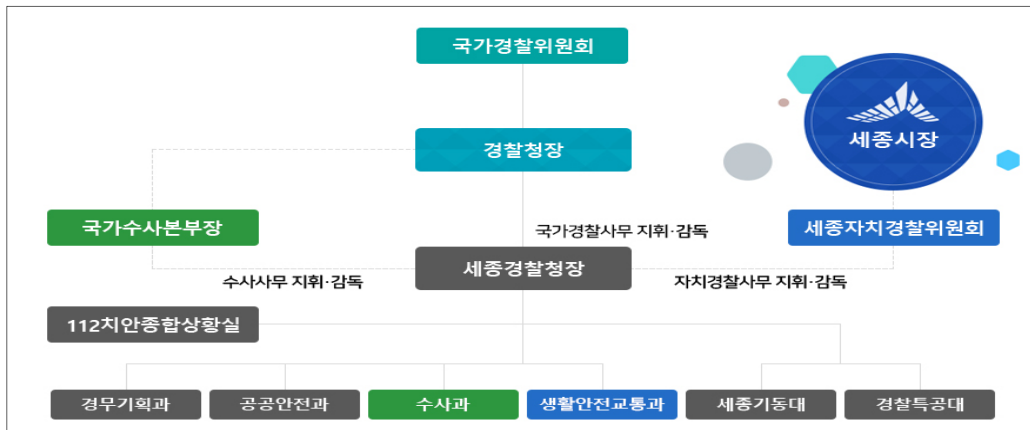
〈그림 9〉 세종자치경찰의 출범 과정

2021. 1. 14	‘세종시 자치경찰준비단’ 출범 (1단, 4명) 세종경찰청과의 업무협약 및 자치경찰 준비단 현판식
2021. 5. 28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및 시범운영 실시 * 7명(시장지명1명, 시의회2명, 교육감1명, 국가경찰위1명, 위원추천위2명)
2021. 7. 1.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전국 동시 시행) - 시청 內 자치경찰협력담당(2명) ↔ 경찰청 內 자치경찰팀(7명) 신설
2023. 2. 16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 (3담당, 15명) - 「경찰법」 제36조(세종시 특례) 폐지*에 따라 사무국 설치 * (‘22.10.17)국회 본회의 통과, (‘22.11.15) 정부 공포, (‘23.2.16)개정안 시행 ※(구성)위원장1, 상임위원1, 시7, 교육청2, 경찰4(위원장상임위원은 정부직공무원)

불구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한다.

다음 〈그림 10〉은 세종자치경찰의 체계를 정리한 것으로, 세종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며,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그림 10〉 세종자치경찰의 체계도



출처 :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 2023.6.1.)

다음 〈그림 11〉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도로, 위원장을 비롯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장 아래 자치경찰 행정팀, 자치경찰 정책팀, 자치경찰 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도



출처 :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 2023.6.1.)

다음 〈그림 12〉는 세종자치경찰의 추진 방향과 목표를 도식화한 것으로, 비전은 ‘시민 중심의 생활안전공동체’이며, 목표는 ‘시민과 함께 세종을 더 안전하게, 세종자치경찰!’로 이를 위해 6개 실천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림 12〉 세종자치경찰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출처 :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 2023.6.1.)

이후 2022년 7월 26일,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 『이원화 시범사업』을 발표하였는데, 3개 특별자치시·도(제주·강원·세종)를 선정하여 2024년부터 실시(2년 시범)하고, 2026년 전국으로 시행한다는 기본 계획이다. 이에 2022년 9월 6일 이원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한 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를 구성하여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전북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17.)으로 이원화 시범사업 추가에 참여하고자 2023년 1월 31일 전라북도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참여 의향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후 2023년 4월 11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전북 이원화 시범 실시 지역으로 추가 참여 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2023년 5월 18일에 4개 시도(전북·강원·제주·세종) 공동건의문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후 시범사업실시 지역 4개 시도(전북·강원·제주·세종) 대상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3년 7월 말 이원화 시범사업 권고안 및 정부안이 발표(경찰발전위, 행안부)되면, 특별법 개정 등 이원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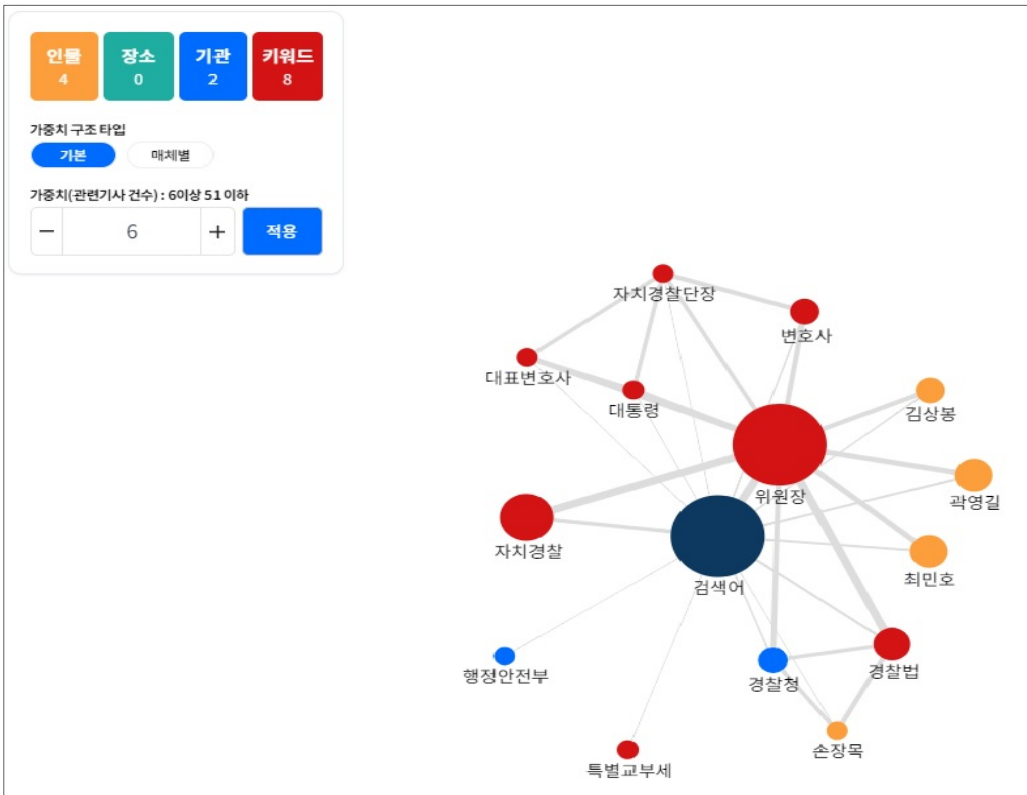
아울러 현재 세종자치경찰 연구모임이 출범⁴²⁾되어 내부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권고안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민들과 세종경찰관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의 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다음 〈그림 13〉은 빅 카인즈 분석을 통해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다. 분석된 주요 키워드는 8개로, 인물로는 최민호, 박영길, 김상봉, 손장목이, 기관으로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그 외 단어로는 위원장, 자치경찰이 나타났다.

주로 자치경찰위원장과 주요 활동 인물들이 검색되었으며, 기관으로는 실제 추진 부처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을 알 수 있다.

42) IPN뉴스, 자발적 참여 세종자치경찰 연구모임 출범, 2023.6.30.일 자.

〈그림 13〉 빅 카인즈 ‘세종자치경찰’ 관계도 분석



출처 : 빅 카인즈, (검색 기간: 2022.1.1. ~ 2023.6.30.)

이는 언론에 보도된 뉴스를 통해서 분석되었기에, 세종자치경찰이 전체적으로 빈도가 86건으로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비상설로 운영되던 기간 중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특수시책 추진은 물론 공식적인 사무국 출범 전까지 체계화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책 발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관 사무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14〉는 연관어 분석 결과로, 키워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위원회’ 287, ‘위원장’이 164, ‘나승권’ 44, ‘시민들’ 32, ‘주민추천제’ 24로, 주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장, 세종자치경찰의 시책인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등이 거론되었다.

〈그림 14〉 빅 카인즈 ‘세종자치경찰’ 연관어 키워드 분석⁴³⁾

출처 : 빅 카인즈, (검색 기간: 2022.1.1. ~ 2023.6.30.)

다음 〈표 19〉는 ‘세종자치경찰’ 키워드 세부 분석으로, ‘위원회’가 287회, ‘위원장’이 164회, 위원장인 ‘나승권’이 44회로 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장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세종자치경찰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세종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 사업인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와 ‘시민들’도 높은 빈도를 보였다.

특히 세종 특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다른 지역과는 상이하며, 시정에 적극 참여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세종 특별 시민들의 요구(needs)를 어떻게 수용하고 정책화하면서 자치경찰사무로 자연스럽게 안착시켜나가는지는 매우 중대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도 이러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특히 ‘시민’에 집중하여 주민자치와 연결할 것이다.

43) 1위 위원장(가중치 106.45), 2위 위원회(가중치 64.17), 3위 생활안전(가중치 4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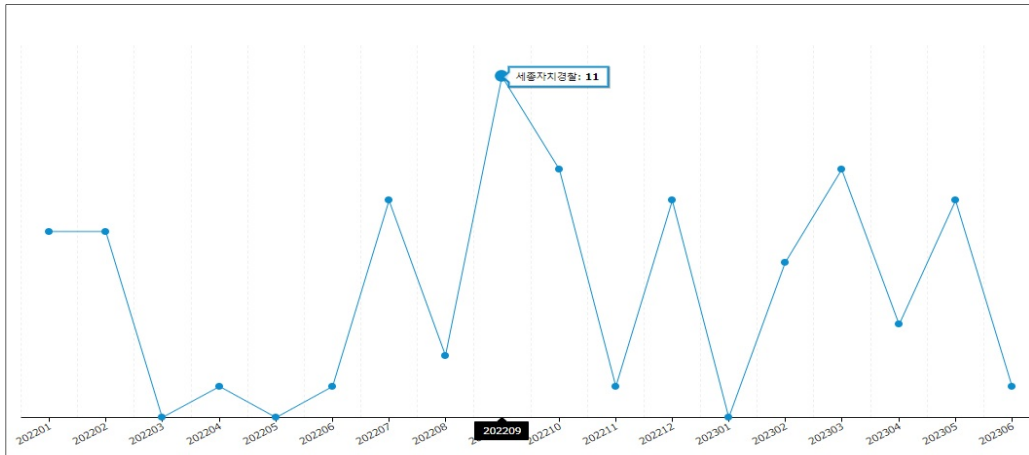
〈표 19〉 빅 카인즈 ‘세종자치경찰’ 키워드 세부 분석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위원장	18.64	164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	8.15	6
나승권	7.86	44
위원회	6.39	287
공모전	5.6	28
교육청	4.8	15
대표변호사	4.44	13
제17차 실무협의회	4.42	3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4.07	8
사무국 출범식	3.91	4
김상봉	3.5	28
나승권 변호사	3.33	5
간담회	3.27	11
으뜸마루	3.2	23
파출소장	3.11	17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3	2
나승권 법무법인 이인	3	0
조치원	2.86	15
상임위원	2.67	21
인사권	2.67	9
직무대행 체제	2.67	5
현판식	2.67	5
최린아 변호사	2.64	4
시민들	2.53	32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	2.31	2
청소년 마약 범죄	2.31	2
주민추천제	2.18	24
사무기구	2.18	21
지방시대	1.87	9
지방의회	1.87	9

출처 : 빅 카인즈, (검색 기간: 2022.1.1.~2023.6.30.)

다음 〈그림 15〉는 월별 ‘세종자치경찰’ 키워드 트렌드 분석으로, 2022년 9월이 11회로 많이 보도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다양한 학술 활동과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빅 카인즈 ‘세종자치경찰’ 키워드 트렌드 분석



출처 : 빅 카인즈, (검색 기간: 2022.1.1.~2023.6.30.)

2) 세종자치경찰의 성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 대상 순회설명회를 실시하여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으뜸 마루’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해 선제적 발견을 위한 문제해결적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주민참여를 통해 라온길(전의면 읍내리), 비추미(조치원 명리) CPTED 사업을 완료하였고, 범죄예방강화구역과 여성안심귀갓길 내 ‘CCTV·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를 확대 중이다.

또한, 피해자·청소년 맞춤형 활동 및 성폭력 예방 활동을 추진 중으로, 가정폭력 등 피해자 「1:1 원인분석에 따른 맞춤형 지원」 연계로 실질적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며,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성인권 상담센터 등 5개 전문기관에

연계를 강화하여 네트워크화하였다.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촬영 예방·점검 공동 매뉴얼 제작·배포, 불법 촬영 탐지 장비 최신화, 여성 안심 거울 개선 등을 통하여 불법 촬영 범죄 현장 대응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발생 추이 분석 및 청소년 동향을 반영한 범죄예방 교육 추진,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집중단속 및交通安全 시설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경찰관 기동대와 협업하여, 배달 이륜차, 음주운전, PM⁴⁴⁾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였다. 동시다발적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하여 전년 대비 음주단속이 26% 증가하였고, 청소년 무면허 등 PM 관련 위반행위 중점 단속한바 전년 대비 무면허 단속이 증가하였으며, 이륜차 핑음·불법 구조변경도 6회에 80건 단속하였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에 맞도록交通安全시설심의위원회를 개편하여 매월 세종청에서 통합하여 심의 운영이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交通安全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무인단속 장비 41대를 추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20대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16〉 세종자치경찰의 성과

지역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종형 자치경찰제' 구축

- '경찰법' 개정('23.2.16 시행)에 따른, 상임위원 임명 및 사무국 신설
- 범죄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관리 등 활동 강화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CPTED 방법 시설물 설치,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VR체험 교육, 치안 활동, 교통 관리 등
-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24년)에 따른 기반 마련
 - 시범실시 지역(강원·제주)과 요구과제(조직, 재원 등) 발굴 및 공동대응



44) 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 전기를 동력으로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총칭함.

〈표 20〉 특별교부세 심사 결과 2021년, 총액 20억 원)

〈 시 단위, 대상 8개 〉

순위	기관명	사 업 명	비고
1	대전	도시철도 스마트안심화장실 조성을 통한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 통합시스템 구축	200백만원
2	광주	AI(인공지능)와 Hardware(방범시설)를 더한 안전은 Now(지금부터) 「AHN(안)전한 우리마을 조성 프로젝트」	100백만원
3	부산	아동지킴이 과속방지시설 설치	100백만원
4	서울	여성대상범죄 근절을 위한 가해자 교정·치료 연계 및 피해자 보호 지원	100백만원
5	대구	주민과 함께, 「가장 안전한 우리동네(가안동) 만들기」	100백만원
6	세종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빛추미' 사업	100백만원
7	인천	「보행자 사고위험도 분석을 통한」 주민참여형 보행환경 개선	100백만원
8	울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100백만원

〈 도 단위, 대상 10개 〉

순위	기관명	사 업 명	비고
1	경북기부	『원스톱 위기아동 보호체계』구축(위기아동 보호센터 신설)	200백만원
2	경남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 함몰형 표지병, 바닥형 신호등 등 설치	100백만원
3	전남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 CCTV 설치 확대 사업	100백만원
4	강원	원주 봉산동 우물마을 골목길 반딧불 사업	100백만원
5	충남	범죄예방용 보강된 스마트보안등* 설치 * LED등+블랙박스(200만화소, 상시 30일저장) 기능	100백만원
6	제주	삼도2동한림읍동흥동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개선 사업 * 방범용 CCTV, 솔라표지병, 솔라안심등 설치	100백만원
7	경기남부	교통정체 구간 신호운영 최적화 구축	100백만원
8	전북	대학가 1인 여성 원룸밀집지역 침입절도 예방사업	100백만원
9	경북	「노인보행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통과구간 도로 시인성 강화 시범사업	100백만원
10	충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100백만원

〈표 21〉 특별교부세 심사 결과(2022년 상반기/총액 20억 원)

〈 시 단위, 대상 8개 〉

순위	기관명	사 업 명	금액
1	부산	'15분 생활권' 일상안전, 범죄 예방 복합단지공간 조성	150백만원
2	광주	생활이 안전한 복구 10개동 만들기 사업	100백만원
3	세 중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사업 : 안심화장실 만들기	97백만원
4	서울	시민참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	100백만원
5	인천	경찰 미배치 도서지역 선착장, 마을입구 CCTV 설치	96백만원
6	울산	울산 복구(호계동)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폴로 조성사업	100백만원
7	대구	셋별로 프로젝트	100백만원
8	대전	청소년 비행 예방 「스마트 AI CCTV」 설치	100백만원

〈 도 단위, 대상 9개 〉

순위	기관명	사 업 명	금액
1	전북	The 행복한 街, one-stop cpted 사업	300백만원
2	전남	범죄예방, 재난감시, 생활민원대응을 위한 이동형 cctv 활용	150백만원
3	경북	경북형 생활안전망 구축, 우리동네 안전 지킴이 사업	107백만원
4	경기남	첨단기술 맞춤형 교통 안전시설 확충사업	100백만원
5	경기북	어린이 보호구역내 일시정지 문화정착을 위한 시설 개선 추진	100백만원
6	충남	노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야간 시인성 개선	100백만원
7	경남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사업	100백만원
8	제주	농촌마을 범죄 예방을 위한 블랙박스형 CCTV 설치	100백만원
9	강원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100백만원

〈표 22〉 특별교부세 심사 결과(2022년 하반기/총액 94억 원)

〈 시 단위, 대상 8개〉

기관명	사 업 명	교부금액
서울	소계	350백만원
	지하철 역사 내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150백만원
	한강경찰대 계류장 신설 사업	100백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설치 사업	100백만원
부산	소계	650백만원
	지역 내 고질적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400백만원
	도시철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사업	100백만원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횡단보도 조성사업	150백만원
대구	소계	300백만원
	제일고·서부초 통학로 개선 사업	150백만원
	안전을 불어넣다 안심 새로이 검단 `중고등교 범죄예방 안심 환경 조성`	100백만원
	과학적 분석을 통한 `주민이 안전한 수성 만들기` 사업	50백만원
인천	소계	400백만원
	`안전한 우리동네 보행길 만들기` 조성 사업	150백만원
	구도심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심거리 조성사업	200백만원
	유흥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CCTV 설치사업	50백만원
광주	소계	550백만원
	첨단 산월초~천곡중 일원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	250백만원
	2030 여성 범죄예방 안전 빛나길 조성사업	200백만원
	스토킹 범죄예방 재범평가 시스템 개발사업	100백만원
대전	소계	350백만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불용) 교체·신규 설치사업	150백만원
	다목적 이동형 CCTV 설치·운영 사업	150백만원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50백만원
울산	소계	600백만원
	해 뜬 달 빛 시장 만들기 사업	400백만원
	아산로 구간단속 장비 설치사업	100백만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발광형 LED도로 표지병` 설치사업	100백만원
세종	소계	750백만원
	주민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역관서 환경 개선사업	400백만원
	교통약자 안심 횡단보도 조성사업	200백만원
	학교폭력 예방 VR `폴스 잇`	150백만원

다음 〈표 23〉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분과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의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23〉 세종자치경찰위원회 분과별 성과

구분	실무협의회	생활안전분과	교통분과	여청분과	정책자문위원회
개최횟수	25	5	4	4	2
주요 주요성과	자치위 운영 관련 협의, 실무 현안 정책 판단 등	범죄예방 사업 결정 및 추진 협의	교통 현안 위주 기획 및 정책 자문 등	사회적약자 분야 사업 추진 등 의견 수렴	세종 자치위 종합적 플랜 정책 자문 등

출처 :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자료(2022-2023).

단순하게 회의 개최 횟수로 성과의 고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실무협의회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각종 정책적 판단을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발전해 온 기초가 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경찰청과 소통하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시민네트워크 협의체(으뜸 마루) 구성·운영 방안, 위원회 의결사항 관계기관 통지 절차 협의, 실무협의회 안건 추진 상황 보고 및 지속 논의 여부,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논의 등 주로 내부적인 시스템 정착에 집중하였고, 이외 아동학대 협력 강화, 교통신호 운영 TF팀 구성 등 긴급 현안에 주력하였다.

이후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비추미’ 사업 추진,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 방지 및 보행 안전 확보, 게임기 압수물 보관장소 확보 및 운영 협조,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면허인증 절차 및 단속강화,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두루중 회전교차로 정비, 자전거도로 이륜차 통행 제한 안전표지 설치 등 다양한 안전을 처리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외 3개 분과는 기능별로 범죄예방 분야는 생활안전분과에서,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 시설개선 등은 교통분과에서,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해서는 여청 분과에서 각각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안 등을 도출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2회 개최하였는데, 정책자문위원회 14명과 관계 직원등이 참석하는 자리로, 2023년 4월 7일에 최초 개최하였고, 6월 16일에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2회 개최 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위상 정립, 다중운집행사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 안전 교육기관 설립, 경찰의 아동학대 조사 업무 지원을 위한 지자체 파견 근무 실시, 우범지역 경찰활동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학교폭력 조정제도 구성 및 운영 등 세종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러한 추진 결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사업과 치안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각종 자치경찰 정책 세미나 개최와 언론 홍보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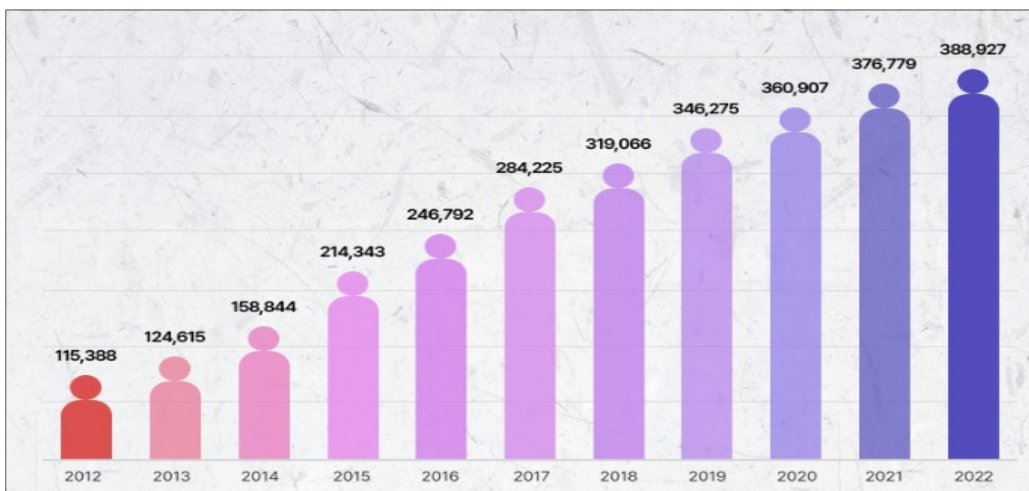
제3절 세종특별자치시의 현황과 시민 요청사항

1. 세종특별자치시의 일반 현황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남 연기군·충북 청원군·충남 공주시 일부를 통합하여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47개(중앙 23·소속 24) 및 국책 연구기관 16개가 이전한 명실상부한 중앙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 한 평균 연령이 37.7세로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향후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등의 이전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및 인구 유입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음 〈그림 17〉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12년에 115,388명에서 2015년에 214,343명, 2018년에는 319,066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10년 만에 273,539명이 증가하여 237.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17〉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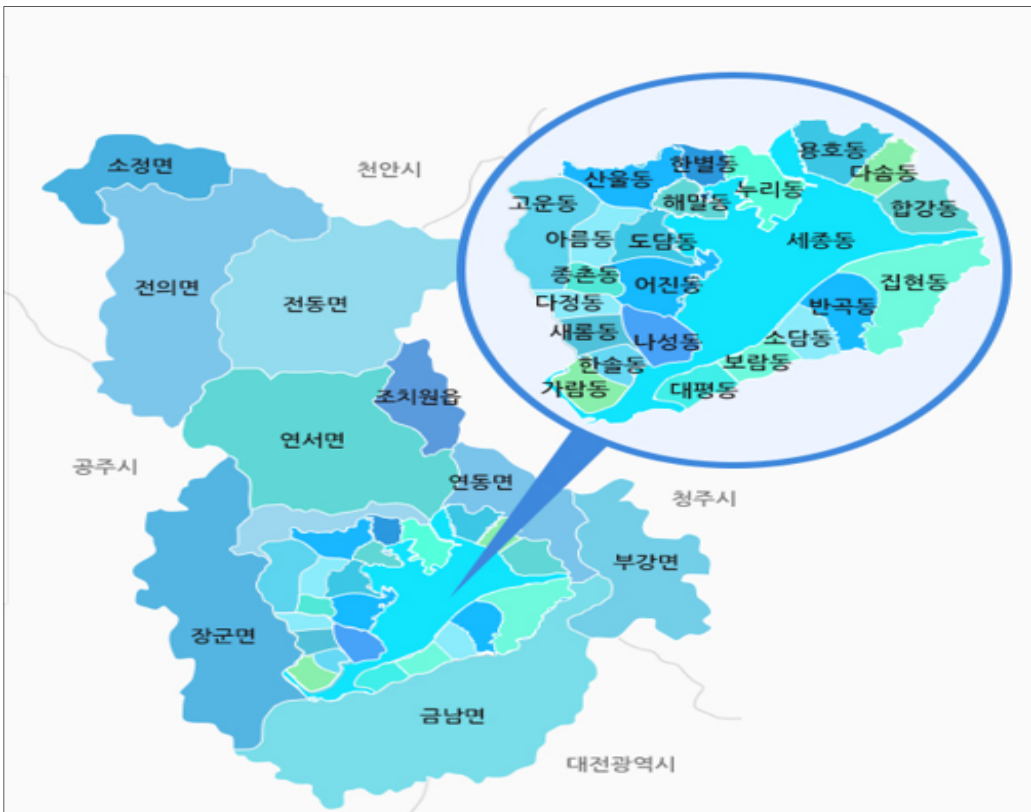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검색일 : 2023.6.30.)

다음 〈그림 18〉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 지도로, 9개 면에 시내권과 2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천안과 청주시와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공주시와 동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 경계를 이룬다.

특히 시내권에 형성된 행정 밀집 지역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향후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며, 인구 유입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지도(시내권 확대도)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검색일 : 2023.6.30.)

다음 <표 24>는 시내권의 인구 현황을 별도로 나타낸 것으로, 세대가 많은 순으로 정리하였다. 가장 많은 세대가 밀집된 행정동은 도담동으로 16,245세대에 인구는 39,679명이며, 그 다음으로 소담동이 12,028세대에 32,599명이 거주하고 있다.

<표 24>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 비교(시내권)

(기준 : 세대별)

구분	세대	인구	경찰관할(지구대)	면적(km ²)
도담동	16,245	39,679	아름	4.72
소담동	12,028	32,599	보람	1.17
새롬동	12,014	29,696	한솔	26.51
고운동	11,896	34,525	아름	5.35
종촌동	10,779	29,690	아름	1.15
다정동	10,076	27,344	한솔	1.70
아름동	7,701	23,634	아름	2.19
보람동	6,956	19,466	보람	1.33
한솔동	6,458	19,302	한솔	2.70
대평동	4,154	11,004	보람	1.52
소계	98,307	266,939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검색일 : 2023.6.30.)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를 내국인만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증감을 살펴보았다. 총 385,609명에 남성은 192,212명으로 49.85%의 비중을 차지하며, 여성은 193,397명 50.15%로 여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대당 인구수는 아람동이 2.97명으로 가장 많고, 연기면 등 면 지역 9개가 세대당 인구수가 2명이 되지 않는데, 이는 인구 유입이 시내권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인 면(面) 단위는 지속해서 세대당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내권에서는 도담동이 36,601명이 거주하여 최대 밀집 지역이며, 나성동은 세대수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5〉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내국인)

구분								세 대 수		세대 당 인구
	내 국 인							세대수 (외국인 제외)	전월 대비 증감	
	내국인 계	지역별 내국인 비율	전월 대비 증감	남	구성비 (남)	여	구성비 (여)			
계	385,609	100.00%	▲324	192,212	49.85%	193,397	50.15%	160,320	▲308	2.41
조치원읍	42,064	10.91%	▼53	21,901	5.68%	20,163	5.23%	20,809	▲24	2.02
연기면	2,583	0.67%	-	1,476	0.38%	1,107	0.29%	1,566	▼9	1.65
연동면	2,949	0.76%	▲4	1,546	0.40%	1,403	0.36%	1,690	▲7	1.74
부강면	5,812	1.51%	▼22	3,220	0.84%	2,592	0.67%	3,253	▼7	1.79
금남면	8,575	2.22%	▼26	4,600	1.19%	3,975	1.03%	4,783	▼3	1.79
장군면	6,841	1.77%	▼60	4,004	1.04%	2,837	0.74%	4,223	▼32	1.62
연서면	7,128	1.85%	▼49	3,921	1.02%	3,207	0.83%	3,859	▼39	1.85
전의면	5,442	1.41%	▼30	2,895	0.75%	2,547	0.66%	3,049	▼17	1.78
전동면	3,238	0.84%	▼7	1,732	0.45%	1,506	0.39%	1,920	▲3	1.69
소정면	2,191	0.57%	▼13	1,166	0.30%	1,025	0.27%	1,144	▼8	1.92
한솔동	18,375	4.77%	▼14	9,063	2.35%	9,312	2.41%	6,395	▲6	2.87
새롬동	26,476	6.87%	▼13371	12,849	3.33%	13,627	3.53%	9,733	▼6088	2.72
나성동	13,392	3.47%	▲13392	6,562	1.70%	6,830	1.77%	6,078	▲6078	2.2
도담동	36,601	9.49%	▲42	17,626	4.57%	18,975	4.92%	15,574	▲34	2.35
해밀동	8,889	2.31%	▲29	4,318	1.12%	4,571	1.19%	3,130	▲1	2.84
아름동	23,505	6.10%	▼16	11,634	3.02%	11,871	3.08%	7,918	▲13	2.97
종촌동	28,552	7.40%	▼16	13,864	3.60%	14,688	3.81%	10,832	▲20	2.64
고운동	35,025	9.08%	▼29	17,170	4.45%	17,855	4.63%	12,321	▲3	2.84
소담동	21,689	5.62%	▲97	10,532	2.73%	11,157	2.89%	8,337	▲47	2.6
반곡동	27,508	7.13%	▲452	13,571	3.52%	13,937	3.61%	11,594	▲253	2.37
보람동	18,974	4.92%	▲47	9,303	2.41%	9,671	2.51%	6,914	▼3	2.74
대평동	11,245	2.92%	▼35	5,558	1.44%	5,687	1.47%	4,365	-	2.58
다정동	28,555	7.41%	▲2	13,701	3.55%	14,854	3.85%	10,833	▲25	2.64

* 가람동은 한솔동 포함, 도담동은 어진동 포함, 해밀동은 산울동 포함, 반곡동은 집현동,합강동 포함.

출처 : 세종 통계연보(검색일 : 2023.3.31.)

2017년 284,225명에서 2018년 319,066명으로 34,841명 증가하여 12.3%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가 30만 인구를 넘어선 시점이다. 이후 지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22년 말 기준 388,927명으로 5년 만에 69,861명, 2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 30만을 넘어선 이후에는 증가율이 점차 감소 되었지만, 거주 세대의 증가와 일자리로 인한 단기 유입 인구, 이외 국가 부서 및 각종 연구기관의 이전으로 실제 거주 인구는 해당 인구수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말 기준이었던 388,927명에서 2023년 7월 21일 기준으로 391,579명으로 2,652명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 최근 5년간 세종특별자치시 연도별 인구 추이

구분 연도별	인구				세대		세대당 인구수
	계	증가율(%)	남	여	수	증가율(%)	
2018	319,066	12.3	159,840	159,226	123,762	13.0%	2.58
2019	346,275	8.5	173,432	172,843	135,408	9.4%	2.56
2020	360,907	4.2	180,741	180,166	144,275	6.6%	2.50
2021	376,779	4.4	185,678	186,217	153,649	6.5%	2.45
2022	388,927	3.2	194,570	194,357	159,386	3.7%	2.44

출처 : 세종 통계연보(검색일 : 2023.6.30.)

인구 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향후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한다면 인구 증가와 함께 성별, 지역별로 시민의 안전과 체감 치안 향상을 고려하여 치안 정책을 세밀하게 대비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자치경찰 분야와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현황으로, 총 165개가 있는데, 이중 유치원 64

개, 초등학교 52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21개. 특수학교 1개가 운영 중이고, 3,217개 학급에 학생 수는 총 65,351명이다. 이외 교원은 유치원 592명, 초등학교 교사 2,099명, 중학교 교사 1,145명, 고등학교 교사 1,108명, 특수학교 교사 55명으로 총 4,999명의 교사가 지도 중이다.

〈표 2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현황

(2023.1.1.일 기준)

구분	학교 수			학급수(특수)			학생 수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유치원	62(20)	2	64(20)	433(44)	7	440(44)	582	10	592
초등학교	52	0	52	1594(69)	0	1594(69)	2,099	0	2,099
중학교	27	0	27	643(24)	0	643(24)	1,145	0	1,145
고등학교	20	1	21	481(14)	24	505(14)	1,061	47	1,108
특수학교	1	0	1	35(35)	0	35(35)	55	0	55
계	162(20)	3	165(20)		31	3217(186)	4,942	57	4,999

출처 : 세종교육청 누리집, 「2023년 주요 업무계획」, 2쪽.

2. 세종특별자치시민 설문조사 등 분석

1) 세종특별자치시민(VOC⁴⁵⁾의 요청 사항 분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 실제 112에 신고한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 자료는 경찰청에서 제공받아 각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경찰관에 대한 격려, 사건처리 불만, 신고 과정에서 혼선, 음주운전 불발건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주를 이룬다.

〈표 28〉 세종특별자치시민(VOC) 의견 세부 현황

구분	소계	112 신고	교통 사고조사	교통 민원	유실물	총포 화약	수사
소계	648	246	30	262	59	5	46
세종 남부서	519	194	22	218	50	4	31
세종 북부서	129	52	8	44	9	1	15

출처 : 경찰청 자료(2023).

먼저 세종 남부서는 총 519건으로, 이중 112신고 사건에 대한 응답이 194건, 교통 민원이 218건, 유실물 관련 신고가 50건, 수사 관련 신고가 31건이었다. 이중 112신고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36건⁴⁶⁾,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 34건, 처리 결과 통보 요청이 27건, 음주운전 미단속에 대한 불만이 9건, 이외 기관별 연계 강화 4건, 위치추적 개선 요청이 4건, 기타 의견 12건, 경찰관 격려 및 감사 표현이 68건이었다.

45) 고객의 체감서비스를 향상하는 고객 관리시스템으로, Voice of Customer의 약자임.

46) 신속한 출동 요청은 12건, 정확한 위치 파악 출동 요청이 7건, 응대 태도 개선이 5건, 통화 품질 개선이 2건임.

실제 112신고 처리에 대해서 신속한 출동과 대처, 설명 등 감사 의견이 68건으로 35.1%를 차지하며, 이외 더 빠른 출동 요청과 대응 요청, 세부적인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신고 후 콜백 시스템을 더욱 잘 준수하여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교통사고 조사 22건을 분석해 보면, 교통사고 조사에 장시간 소요되어 불만족이 5건, 사후 통보 미흡이 4건, 가해자·피해자 인정에 대한 불만 3건, 피해자보호 강화 필요 2건, 업무(관할) 이관 1건, 전문용어 사용으로 인한 이해 어려움 1건, 친절한 설명과 처리에 대한 감사 의견 6건이었다. 사건 당사자들이 사고처리 결과에 대해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남아 있고, CCTV와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 제출 후 수사하면서 다소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건처리 진행 시 중간통보를 하고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만족도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다음은 교통 민원 218건을 분석해 보면, 주차장 협조로 인한 불편이 54건, 신속한 현장 조치 필요 12건, 민원실과 원거리로 인한 불편이 8건, 불친절 10건, 기타 교통 정책 제언 6건(국제운전면허증 갱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과속 속도 하향, 면허증 발급 관련 우편물 수령제도 신설 제안 등), 적성검사 병원 안내 요청 3건이었고, 기타 의견 12건, 이외 민원 업무 처리와 친절한 응대에 감사하다는 의견이 113건이었다. 전반적으로 교통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세종 남부서 주차장 협조와 주차장으로 가는 불편 호소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유실물 관련 의견은 50건으로 40건이 유실물을 찾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견이었고, 이외 처리 결과 통보 요청 2건, 2회 방문으로 인한 불편함 2건, 불친절 2건, 불만족 2건, 주차장 협소가 2건이었다.

이외 총포 화약 민원 4건은 주차장 협소 1건, 부서별 안내 필요 1건, 전문성 필요 1건, 감사 의견 1건이었다.

수사 관련 의견은 총 31건으로 이중 불송치(경찰의 내사 종결 또는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을 말함)의 경우 15건, 이중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이 7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외 수사관의 전문성 필요 4건, 불친절 2건, 사건처리 간소화 필요 1건, 만족 의견 1건이었다. 이는 사건 당사자들이 실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의견들에 비해 고소 또는 고발한 경우라서 그 결과에 따라 불만족한 의견이 다소 많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사 관련 의견 중 송치 관련은 총 16건으로 신속한 수사 필요 의견이 4건, 사건처리 결과 통보 안내 요망이 3건,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 3건, 친절 의견 4건, 기타 2건이었다. 수사 관련 의견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만족도가 높게 나오게 되며, 수사관의 법령 숙지와 전문성 향상은 지속해서 배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세종 북부서의 VOC를 분석해 보면, 총 129건으로, 이중 112신고의 경우 52건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과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이 18건, 신속한 출동과 처리에 대한 감사와 격려 19건, 사건처리 결과 통보 요망이 5건, 원거리로 지연 도착이 5건, 기타 3건, 경찰 처우 개선 2건이었다. 세종 북부서의 경우 조치원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으나 인근 면 단위 지역은 신고 출동시 거리 자체가 멀어 다소 늦게 도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 상대 홍보도 필요해 보인다.

이외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의 경우 음주운전 신고가 8건으로 신고자는 운전자가 직접 술 마신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오인 신고가 많고, 실제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측정 수치에 해당하지 않아 혼방하는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보하면 경찰에 대해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를 설명 과정에서 잘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실제 치안 현장에서 음주운전 신고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CO 또는 C1으로 하달하여 대상 차량을 추격하거나 주요 동선을 차단하여 검문하는데,

야간·심야시간대에는 확인 및 검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통보해 주는 방안도 추후 치안 시책 홍보시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교통사고조사로 총 8건인데, 이중 처리 불만과 불편이 3건, 처리에 대한 감사 2건, 기타 3건이었다. 이중 불만 관련 3건은 경미한 사고인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불편하다는 내용과 상대 운전자의 신원을 빨리 확보해 수사해달라는 내용, 신속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음 교통 민원 44건을 분석해 보면,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친절한 응대에 대한 감사 12건,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이 4건, 기타 3건, 내용 없음이 8건이었다.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은 교통 민원 처리 시 인원이 부족해서 대기했다는 의견이 3건이었고, 처리 결과 지연이 3건으로, 일시점에 많은 시민이 교통 민원실 방문하여 처리 시 순번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외 코로나19로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지만, 입구에 없어 불편했다는 의견, 더욱 친절하게 응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교통 민원실이 경찰의 얼굴임을 인식하고 민원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실물 처리 관련 처리 결과 만족 3건, 불만이 4건, 기타 2건으로, 불만 의견의 경우 신속한 처리 요청과 대기실 등이 불편했다는 의견이었다.

다음 수사 민원 15건 중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의견이 9건으로 수사 처리 시 오래 걸렸고, 당사자 의견만 들었다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과 전문성 부족 의견이 5건, 지연 수사 2건, 최종 수사 결과 통보 2건, 만족 의견 1건이었다. 송치 사건에 대한 의견은 6건으로 감사 의견 2건, 사건 내역 통보 요청 3건, 수사 불만이 1건이었다. 수사 민원의 경우 조사관의 역량과 전문성도 중요하며,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는 분야로, 공정한 수사는 물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중간 통보와 최종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는 과정이 더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2)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설문조사 분석

(1) 세종청의 조사 결과

경찰청에서는 매년 치안 고객 만족도와 체감안전도를 평가하여 12월에 각 경찰청에 하달하여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치안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부에 공표하여 해당 지역의 치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며, 실제 치안이 비교적 안정되고, 지역에서 큰 사건 사고 없이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는 경우 상위권에 오르고, 이에 따른 경찰관 유인책도 있어 일선 지휘관들의 주요 관심 자료 중 하나이다.

다음〈표 29〉는 2022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모바일 설문 조사 방식을 통해 경찰과 직접 접촉한 고객 384,909명 중 세종청 2,426명이 응답한 치안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로, 치안 서비스에 대한 분야별 및 전반적 만족도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세종청은 2021년 81.4점에 16위로 최하위권이였으나 2022년 85.4점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세종경찰의 각고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시민들로부터 치안 정책 전반과 분야별 치안 서비스의 수준에서 고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전국 치안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전국 평균	시 · 도 경 찰 청 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남	경 북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22	점수	82.9	81.8	86.1	83.3	84.9	83	82.8	83.8	85.4	81.1	83.8	82.1	84.2	83.5	85.3	83.3	82.9	84.6	82.1
	순위		17	1	11	4	12	14	7	2	18	8	15	6	9	3	10	13	5	16
	대비		-0.2	1.2	0.6	0.2	0	-0.1	0.4	4	0	0.5	1.8	0.3	0.5	-0.3	-0.1	0.9	-0.3	0
2021	점수	82.8	82.0	84.9	82.7	84.7	83.0	82.9	83.4	81.4	81.1	83.3	80.3	83.9	83.0	85.6	83.4	82.0	84.9	82.1
	순위		15	3	12	4	9	11	7	16	17	8	18	5	10	1	6	14	2	13

출처 : 경찰청 자료(2023).

다음 〈표 30〉은 세부 항목별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민원 분야가 95.6점으로 가장 높고, 수사 분야가 69.9점으로 가장 낮았다. 세종 북부서와 세종 남부서 간의 편차도 다소 큰 편인데, 이는 지역 거주 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해 주는 만큼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수사 분야의 경우 각종 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하는 수사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며, 이는 다른 경찰청도 마찬가지이다.

〈표 30〉 치안 고객 만족도 세부 항목별 점수

구분	응답 수	종합 만족도	민원 분야	112신고 처리 분야	교통사고 조사 분야	수사 분야
세종청	2,426명	85.4점	95.6점	88.0점	88.1점	69.9점
세종 북부서	570명	87.1점	93.7점	88.3점	94.9점	71.6점
세종 남부서	1,856명	83.8점	96.1점	87.1점	83.8점	68.2점

출처 : 경찰청 자료(2023).

단, 이러한 치안 고객 만족도의 경우 경찰관과 직접 접촉한 시민들로 112신고를 했다거나 해당 분야 민원 및 수사에 응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여 실제 치안 서비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인 만큼 앞으로는 정교화하여 상시 시민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 31〉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화로 시행한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국의 일반 국민 51,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세종청의 경우 경찰서별 200명이 응답하여 총 40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체감안전도는 분야별 안전도(범죄·교통사고·법질서 준수)와 전반적 안전도를 구분하여 응답도록 하고 있으며, 비접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강력 사건 또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대도시권의 경찰서와 시골 지역 경찰서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확연한데, 세

중청의 경우 2021년 81.0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 80.3점으로 4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남과 경북, 전북 등 지역이 상위권을 인천, 광주, 울산, 대구 등 광역시들이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순위는 매년 큰 차이는 없다. 세종의 경우 체감안전도에 대한 평가가 하락한 만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31〉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구분		전국 평균	시 · 도 경 찰 청 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남	경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 종합	점수	78.8	77.4	77.1	77.0	75.4	76.4	77.5	76.6	80.3	77.6	77.4	80.1	79.6	78.7	80.9	82.2	81.2	79.9	74.9
	순위		11	13	14	17	16	10	15	4	9	12	5	7	8	3	1	2	6	18
2021 종합	점수	76.5	76.0	73.8	74.1	73.4	74.1	74.5	73.5	81.0	74.6	75.7	78.1	76.7	76.5	79.1	79.7	78.9	77.7	74.0
	순위		9	16	13	18	14	12	17	1	11	10	5	7	8	3	2	4	6	15

출처 : 경찰청 자료(2023).

(2)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설문 조사 결과

시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⁴⁷⁾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시민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범죄 경험은 별도로 하고, 직접 경찰관을 접촉하거나 목격하거나 경험을 청취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직접 경찰관을 통해서 사안을 해결한 만큼 그에 대한 반응은 편차가 있을 것이며, 이는 체감안전도 등으로 실제 표출되고 있다.

47) 남재성, “국가경찰과의 조화를 통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모색”, 『한국경찰학회보』, 2019, 21(4), 52쪽.

다음 <표 32>는 지역별 자치경찰제 인지를 나타낸 것으로, 세종은 충청권으로 통합하여 조사되어 세종만의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제주를 제외한 권역별로 봤을 때 가장 인지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표 32> 지역별 자치경찰제 인지도

지역		자치경찰제 인지			전체
		알고 있음	들어봄	모름	
서울	빈도	30	31	129	190
	%	15.8%	16.3%	67.9%	100.0%
인천/경기	빈도	31	74	210	315
	%	9.8%	23.5%	66.7%	100.0%
강원	빈도	8	8	14	30
	%	26.7%	26.7%	46.7%	100.0%
대전/충청/세종	빈도	29	26	51	106
	%	27.4%	24.5%	48.1%	100.0%
대구/경북	빈도	17	21	60	98
	%	17.3%	21.4%	61.2%	100.0%
부산/울산/경남	빈도	26	39	87	152
	%	17.1%	25.7%	57.2%	100.0%
제주	빈도	10	0	3	13
	%	76.9%	0.0%	23.1%	100.0%
전체	빈도	174	222	606	1,002
	%	17.4%	22.2%	60.5%	100.0%

출처 : 박준휘 외, (2021),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Ⅲ), 619쪽.

실제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시점에서 시민상대로 설문 조사한 홍승표(2022)의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⁴⁸⁾

자치경찰은 지역사회 근린 경찰 활동에 최우선 기능을 부여하여 자치경찰 활동의 가시화를 통해 사건·사고 및 범죄예방 활동을 통한 주민 생활의 안정화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⁴⁹⁾

48) 홍승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조사”, 『한국경찰학회보』, 2021, 24(2), 263-264쪽.

49) 박재희 외, “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 분석”, 『지방행정연구』, 2021, 35(4), 159-160쪽.

시민들과 현장 경찰관은 여전히 자치경찰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원인은 자치경찰제도 자체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이 학계나 실무자들 다수의 의견이다.⁵⁰⁾ 지금 형태의 ‘개정된 경찰법’은 각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및 지역 특수성에 맞는 주민 맞춤형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비록 부족한 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항의 검토를 함으로써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행 모델 내지 과도기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⁵¹⁾

(3)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에 대한 별도 설문 조사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1호 시책 사업으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⁵²⁾』를 추진해 왔는데, 실제 자치경찰제 시행 2년 차에 지역경찰과 주민들의 반응을 인사정책에 환류하고자 2022년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13개 항목으로 리커드 5점 척도를 활용하여 ①주민 추천 인사제도 이해도, ②자치경찰제 취지와 부합, ③능력 위주 인사제도, ④공정한 인사제도, ⑤전시성 인사제도, ⑥시행 후 지역경찰 업무변화 정도, ⑦지역주민과 소통·협력 증진에 적극적이었지 여부, ⑧읍면동 현실에 맞는 치안 정책 추진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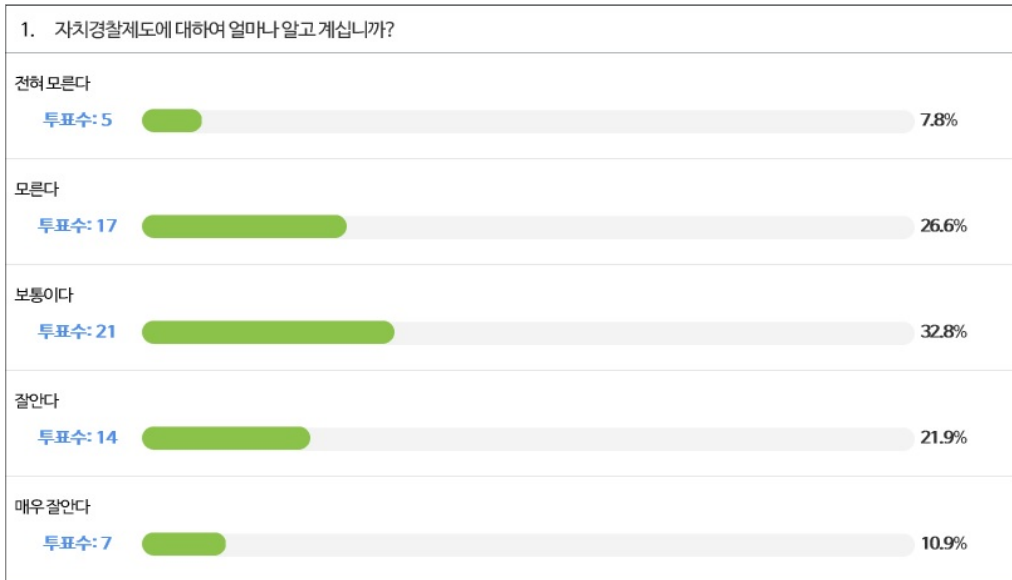
그 결과 설문 참여자 총 64명(경찰관 44, 지역주민 22) 중 다음 <그림 19>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로, 21명(32.8%)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부정적 답변도 22명(34.4%), ‘보통’이라는 응답도 21명으로 32.8%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경찰제도 초기 시행 단계인 만큼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0) 임정호·양경민·좌동진, “캐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경찰논총」, 2022, 1(1), 114쪽.

51) 송영지,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실태와 한국자치경찰의 도입”, 「국제법무」, 2022, 14(1), 2쪽.

52) ‘지역경찰관서장 주민추천제’는 지구대장, 파출소장 보직 시에 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한 것을 근거로 삼아 주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적임자를 보임하는 제도로, 경찰의 고유권한인 보직인사를 개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본 제도는 열린 치안정책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통하여 감동 치안을 구현하고자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시책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9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그림 19〉 세종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



다음 〈그림 20〉은 세종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진 시책에 대한 인지도에 관한 결과로, 긍정 답변이 13명(20.3%), 보통 답변이 21명(32.8%), 부정 답변이 30명(46.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치경찰 출범 이후 추진된 시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지역에만 국한하여 인식이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도 아직 시행 초기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그림 20〉 세종 자치위 추진 시책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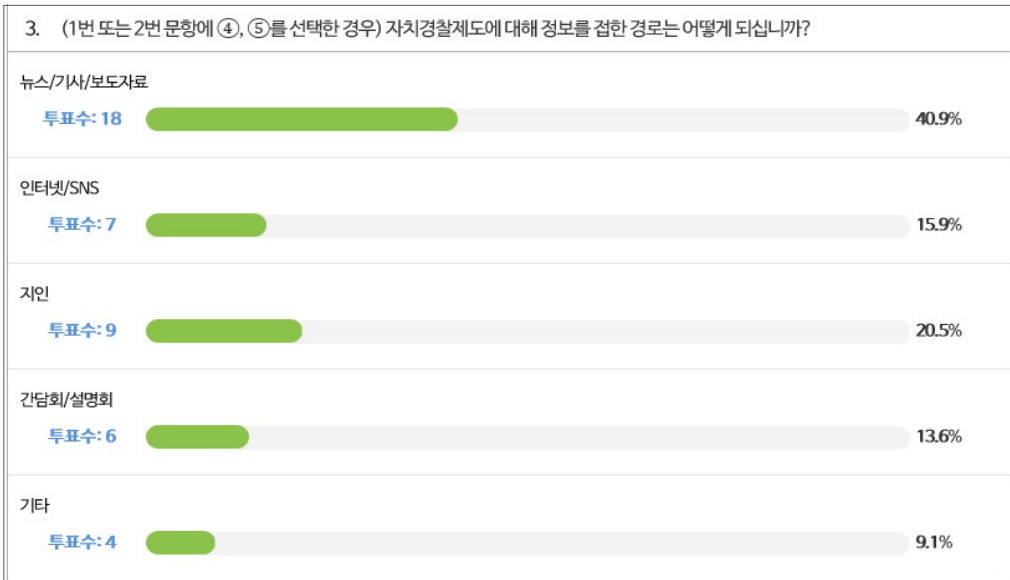


다음 〈그림 21〉은 세종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진 시책 인지 경로에 관한 결과로, 뉴스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18명으로 40.9%,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9명으로 20.5%, 인터넷과 SNS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7명으로 15.9%,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는 6명으로 13.6%로 나타났다.

주로 언론 홍보와 기사를 통해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추진 시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적극적인 홍보 정책과 SNS 등 다양한 접근 방안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즉,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 사항이 실시간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성원을 받으면서 참여까지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가 세종특별자치시청에 마련된 만큼 이를 적절하게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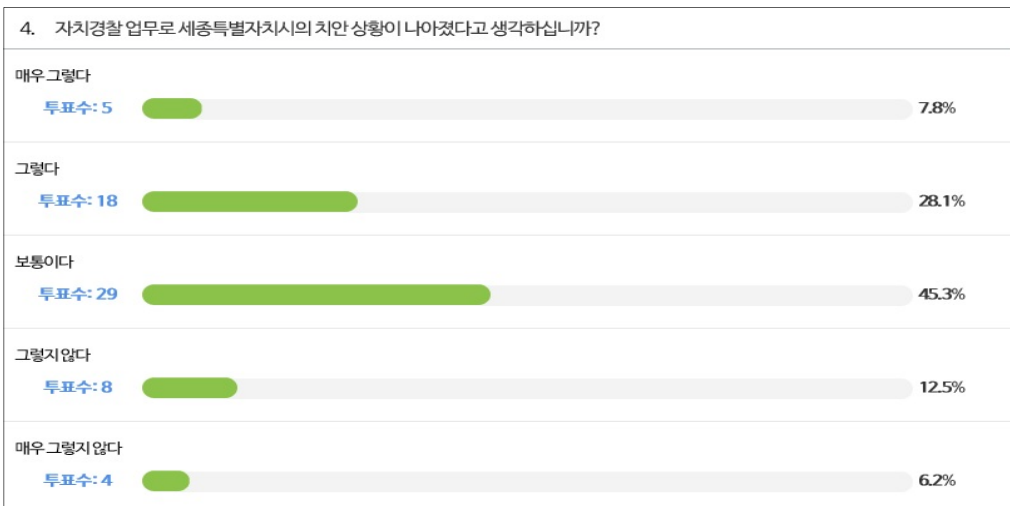
또한, 지인을 통해 인지한 경우도 많은 만큼 추진 시책이나 홍보자료와 안전 관련 정보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적·정기적으로 생산한다면 시민과의 치안 분야에서 소통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1〉 세종 자치위 추진 시책에 대한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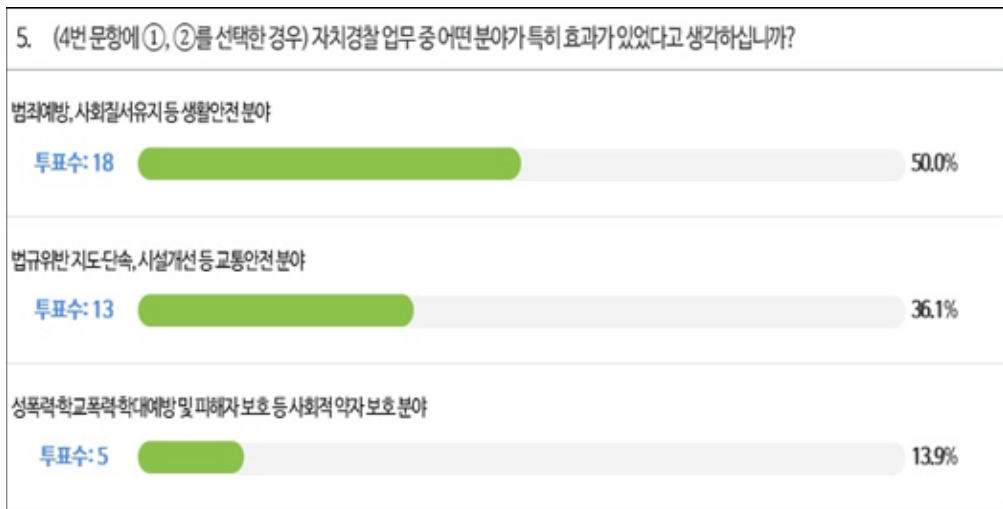
다음 〈그림 22〉는 자치경찰 업무가 세종 치안에 대해 기여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긍정 의견이 35.9%, 보통이 45.3%, 부정 의견이 18.7%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치경찰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림 22〉 자치경찰 업무가 세종 치안에 대한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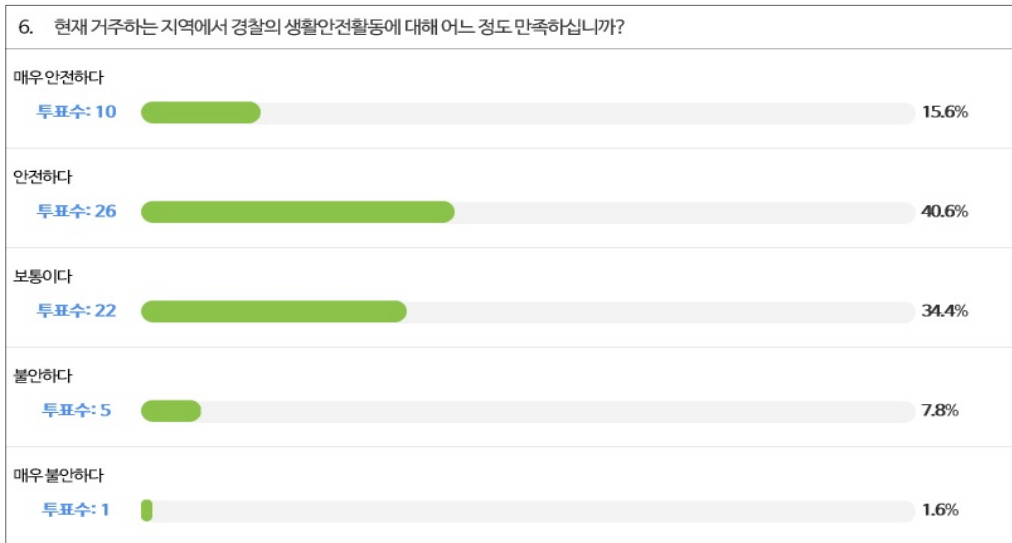
다음은 자치경찰 업무 중 효과를 거둔 분야에 대한 응답으로,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 등 생활안전 분야가 5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법규 위반 및 지도단속, 교통안전 분야 시설개선 등이 36.1%,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가 13.9%로 나타났다.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는 명확하게 성과가 도출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분야는 가시적인 홍보와 성과가 가능한 분야로 이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자치경찰 업무 중 효과를 거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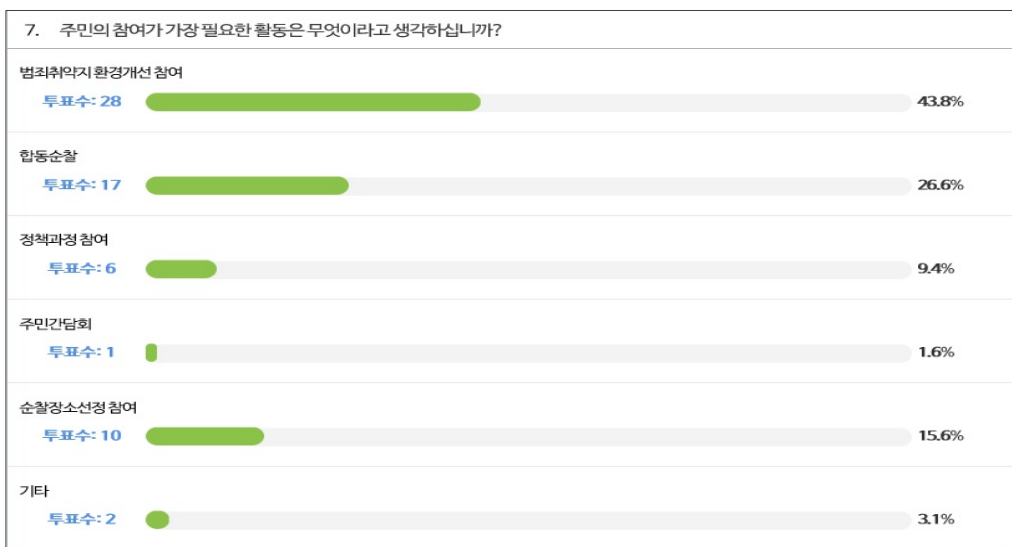
다음은 세종경찰의 생활안전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로, 긍정 답변이 56.2%, 부정 의견이 9.4%, 보통 의견이 34.4%로 나타났다. 이중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40.6%로 나타나 세종의 전반적인 생활안전 활동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주민 생활에 밀접한 만큼 향후 자치경찰 추진 시에도 생활안전 분야의 확장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림 24〉 세종경찰의 생활안전 활동에 대한 만족도



다음은 주민참여가 필요한 활동 분야에 대한 응답으로,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사업 참여가 43.8%로 가장 높았고, 합동 순찰이 26.6%, 순찰 장소 선정 참여가 15.6%로 나타나,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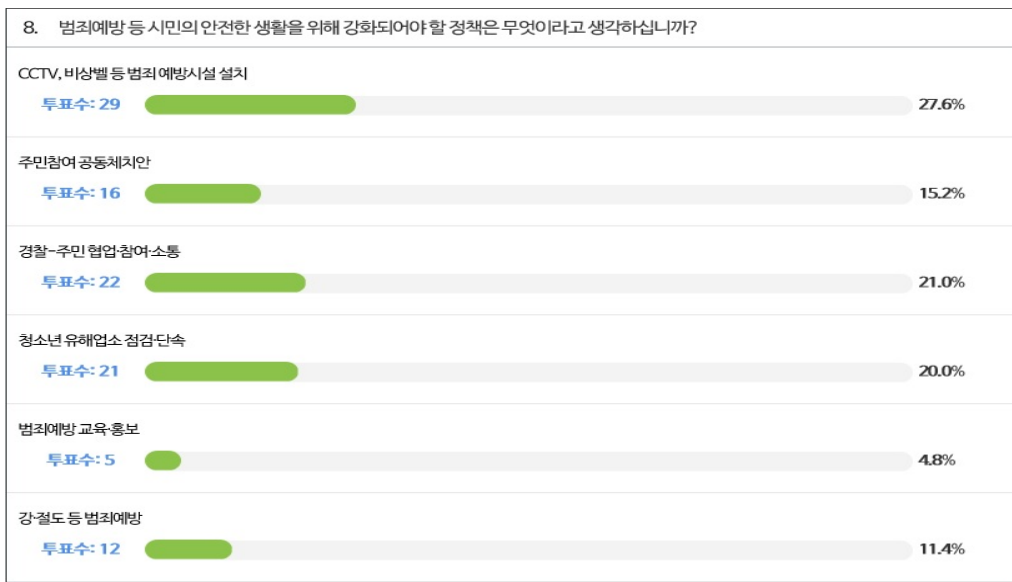
〈그림 25〉 주민참여가 필요한 활동 분야



다음은 시민안전도 향상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 범죄 예방시설 설치가 2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찰과 주민 간의 소통 강화가 21.0%,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20.0%,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치안 확보가 15.2%, 강절도 예방 활동이 11.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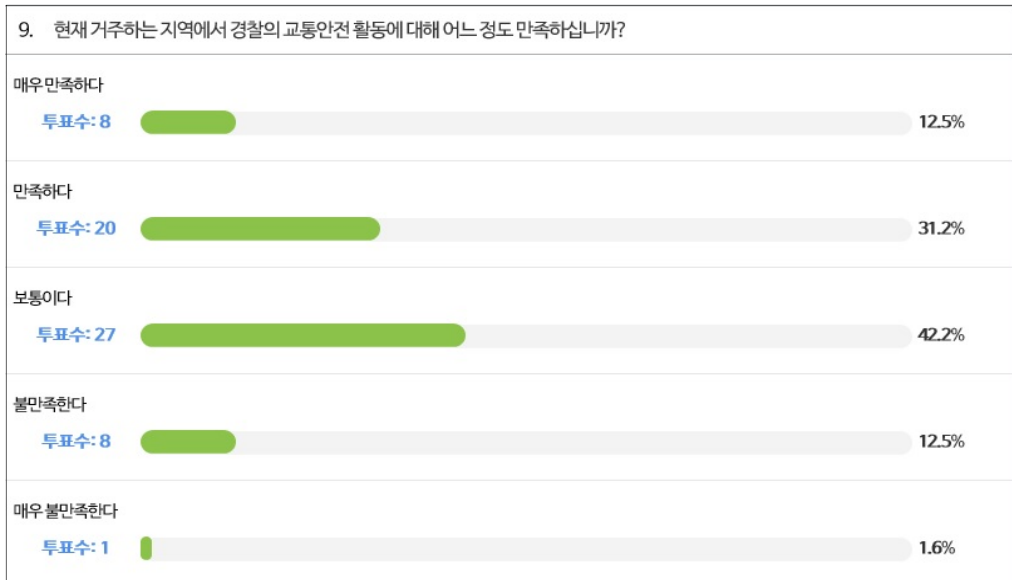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치경찰과 세종특별자치시민 간의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시 주민 의견수렴은 물론, 범죄예방 분야에까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수요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를 정책화하고, 다시 시민과 환류하는 프로세스를 갖춰 자치경찰 추진 이후 시민의 안전에 더욱 세분된 치안 시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6〉 시민안전도 향상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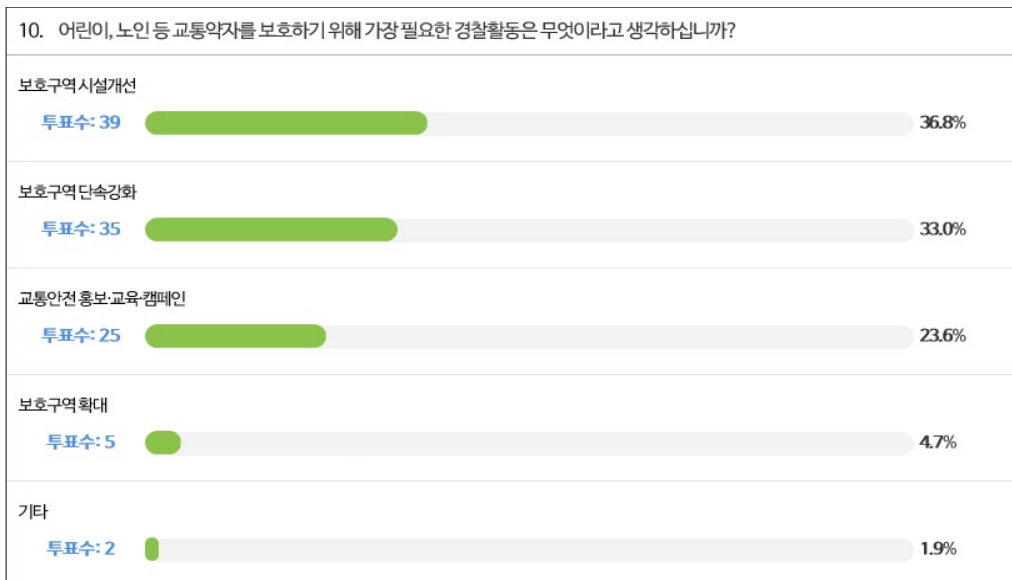
다음은 세종경찰의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만족도 결과로, 보통 의견이 42.2%, 긍정 의견이 43.7%, 부정 의견이 14.1%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생활안전 분야 활동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긍정 의견이 12.5%가 낮은 만큼 향후 교통안전 활동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별도의 교통시설 개선과 환경 분석 등은 추후 교통 분야 시책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그림 27〉 세종경찰의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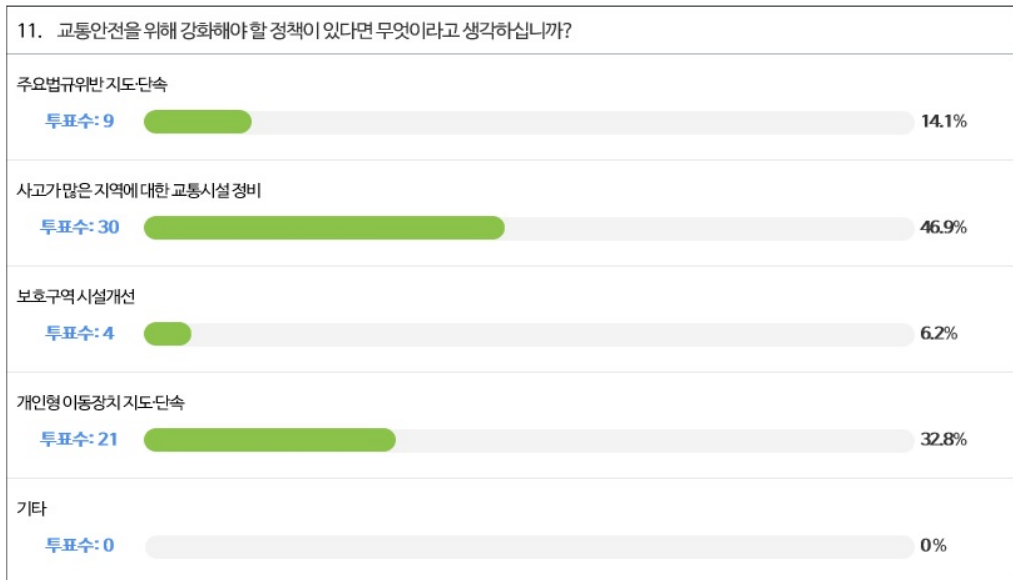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해 필요한 경찰 활동으로, 보호구역 시설개선이 36.8%로 가장 높았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고려한 시설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림 28〉 교통약자를 위해 필요한 경찰활동



다음은 교통안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 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한 시설 정비 46.9%, PM 등 개인 이동장치 지도단속 32.8%, 주요 법규 위반 단속 14.4%, 보호구역 시설개선이 6.2%로 나타나 교통시설 정비와 개선을 바라는 요청사항이 많고, 이러한 요청사항은 최근 무분별한 개인이동 장치의 사용이 증가⁵³⁾하면서 이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각종 사고 우려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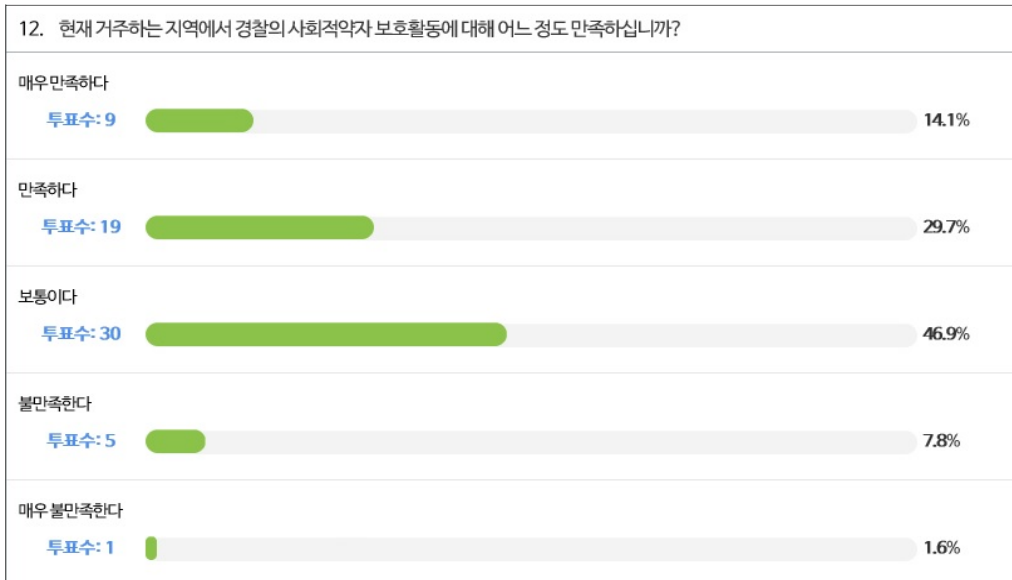
〈그림 29〉 교통안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



다음은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에 대한 만족도로, 보통 46.9%, 긍정 의견 43.7%, 부정 의견이 9.4%로 나타났는데, 생활안전 분야 만족도 긍정 의견이 56.2%, 교통안전 활동 분야 만족도 긍정 의견이 43.7%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실제 체감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안 활동과 예산이 투입되어도 바로 개선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분야의 특성상 다소 만족도가 낮은 측면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사업과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다양한 변수 등도 고려하면서 맞춤형 치안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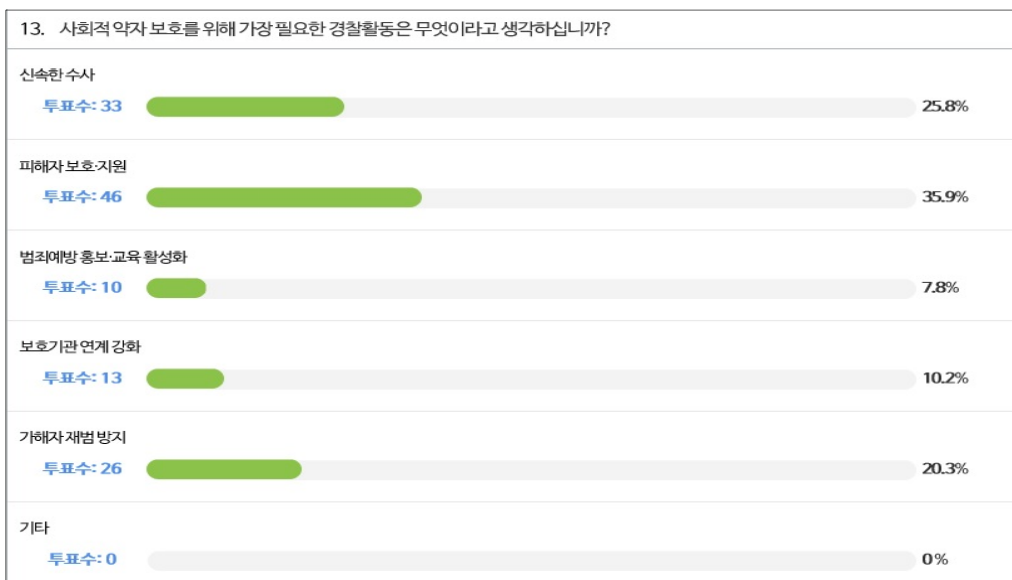
53) TJB, 세종특별자치시 '10대 무면허' 전동 킥보드 문제.."단속 강화", 2023.6.10.일 자. 5개 민간업체의 전동 킥보드 2천8백여 대가 운영 중이며,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로 인한 소방 출동 건수도 지난 2020년 30건에서 지난해 132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함.

〈그림 30〉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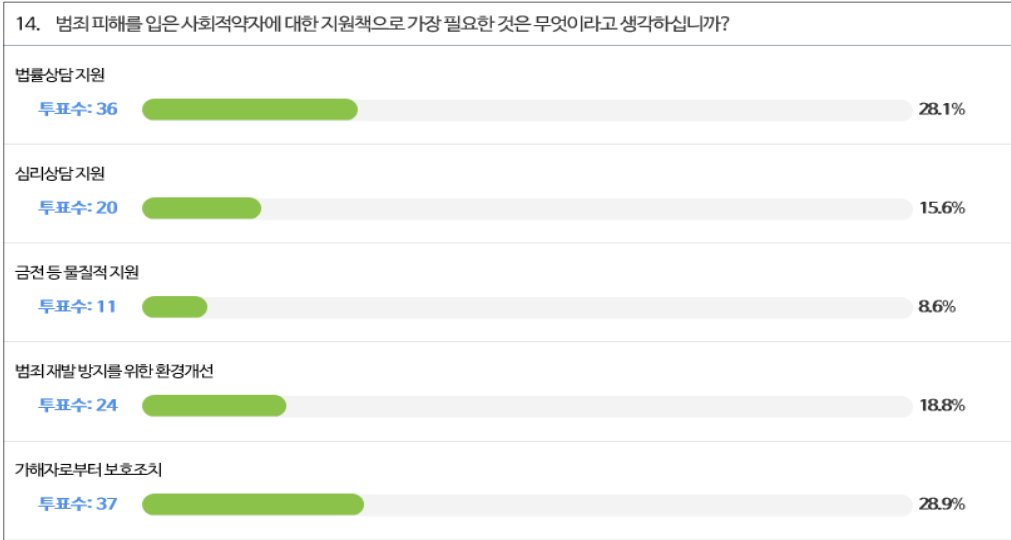
다음 〈그림 31〉은 사회적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찰 활동으로 피해자보호 지원이 3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신속한 수사 25.8%, 가해자 재범 방지가 20.3%로 나타났는데, 피해자보호와 수사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1〉 사회적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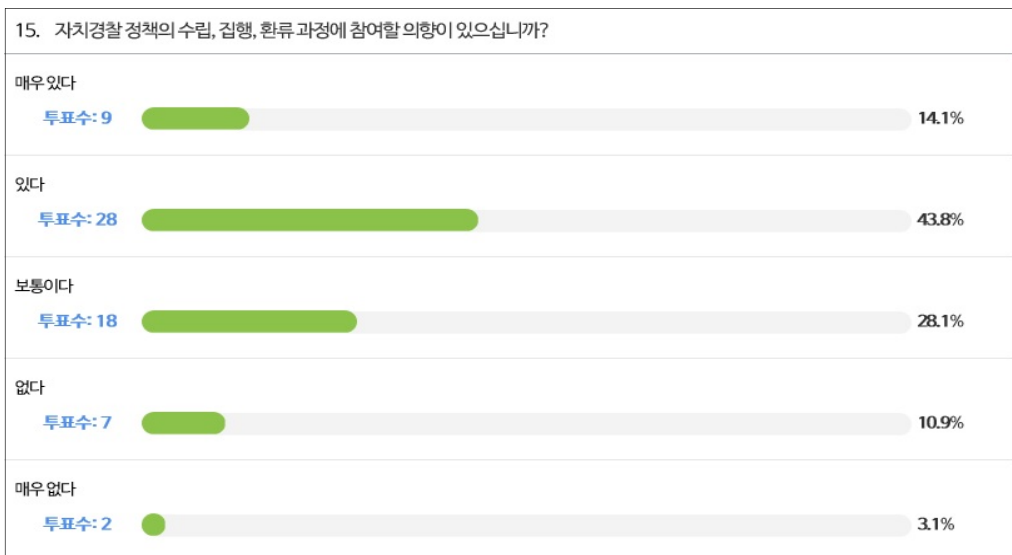
다음 〈그림 32〉는 범죄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응답으로, 보호조치가 28.9%, 법률상담 지원이 28.1%,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이 18.8% 순이었다.

〈그림 32〉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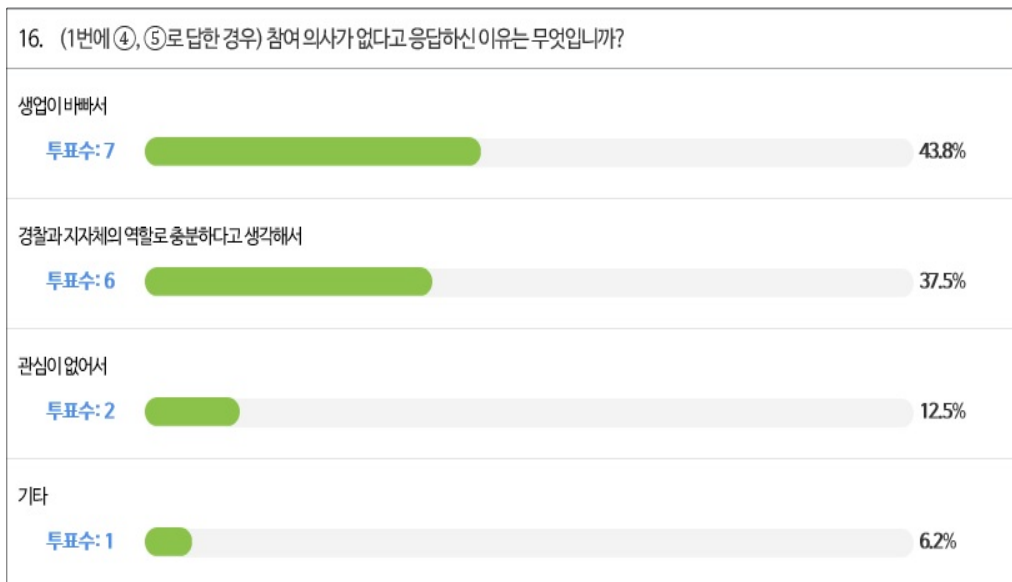
다음은 자치경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긍정 의견이 57.9%, 보통 의견이 28.1%, 부정 의견이 14.0%로 나타났다.

〈그림 33〉 자치경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의향



다음 〈그림 34〉는 불참 의사에 대한 이유로, 생업이 바빠서가 4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경찰과 지자체의 역할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가 37.5%, 관심이 없어서가 12.5%로 나타났다. 대부분 생업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제도 추진 이후 참여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추후 치안 시책 홍보 등을 통해서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의 유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34〉 불참 의사에 대한 이유



다음 〈그림 35〉는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 방향에 대한 응답으로,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가 4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참여와 소통증진,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 강화 순이었다.

〈그림 35〉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 방향



아울러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와 관련하여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면 단위 파출소 주민들은 긍정적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지역경찰과의 소통과 협력이 바탕이라고 할 수 있고, 주민들은 본 제도가 지역주민들이 경찰의 시책과 치안 활동 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며 주민에게 공감받는 치안 시책을 펼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의 시책이 주민들과 환류하면서 고도화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찰장들도 평상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전개하면서 협력 치안⁵⁴⁾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시민 지향적인 시책으로 정착화 될 것이다.

54) 장일식, “시민지향적 시책의 발전방안-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시행”,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세종자치경찰위원회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2022.6.3.일, 22쪽.

(4) 시민들 인식·평가 비교

다음 <표 33>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 이외 시도별로 상이한 설문 문항이 구성되어 완벽한 비교라고 보기 어려우나 대략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실제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각 자치경찰위원회별로 자치경찰에 대해 도민들이 얼마나 인지·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수용하여 지역별 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표 33> 자치경찰에 대한 설문조사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자치경찰 인지도	들어본 적 있음 (54.3%)	보통 (45.0%)	모름 (45.5%)	만족도 (57.5%)	알고있음 (44.9%)	보통 (39.4%)	모름 (39.1%)	알고있음 (49.6%)	모름 (59.0%)
범죄 안전도	안전체감도 안전함 (43.1%)	-	-	-	범죄예방 만족도 (71.2%)	안전 (49.1%)	대체로 안전 (43.2%)	대체로 안전 (50.7%)	안전 (41.8%)
위험받는 장소	-	주거지 (74.2%)	야간보행길 (28.2%)	-	주택가 (45.2%)	유흥지역 (41.7%)	주거지 (34.3%)	상업지역 (31.4%)	주거지 (31.3%)
교통 안전도	-	-	-	교통안전 만족도 (45.0%)	교통안전 만족도 (53.4%)	안전 (45.2%)	보통 (51.0%)	대체로 안전 (55.2%)	불안 (45.7%)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범죄	청소년 범죄 (45.0%)	청소년 범죄 (65.6%)	아동범죄등	-	학폭· 청소년 범죄 (43.0%)	학폭· 청소년 범죄 (33.4%)	청소년 범죄 (30.1%)	학폭등청소년 범죄 (29.4%)	아동학대 (50.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치경찰 인지도	-	보통 (39.8%)	-	보통 (45.1%)	보통 (33.9%)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4.8%)	조금 알고 있다 (57.2%)
범죄 안전도	-	-	안전 (66.9%)	안전 (46.8%)	보통 (31.5%)	주민안전 (만족, 45.8%)	안전 (52.1%)	보통 (51.9%)
위협받는 장소	-	-	-	유흥지역 (66.4%)	주거지 (28.7%)	유흥지역 (58.7%)	유흥지역 (32.0%)	-
교통 안전도	-	-	안전 (48.0%)	안전 (41.1%)	보통 (36.7%)	교통안전 (만족, 42.0%)	보통 (39.3%)	보통 (47.0%)
근절해야할 사회적 악자범죄	-	성범죄 (53.3%)	-	성범죄 (34.4%)	청소년 범죄 (43.0%)	성범죄 (54.3%)	-	-

※ 각 항목의 리커트 척도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1개만 입력. 각 자치위 설문조사 종합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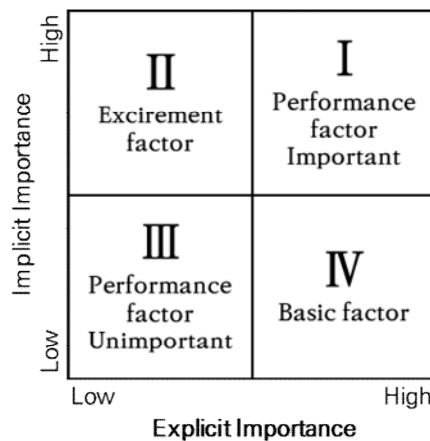
출처 : 각 자치경찰위원회 설문 조사 자료(2021, 2022)

한편 ‘범죄안전도’, ‘범죄예방 만족도’, ‘교통안전도’, ‘교통안전 만족도’ 등 개념은 다소 모호하지만, 전반적인 안전의 척도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담겨 있는 만큼 이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설문조사의 주체는 각 자치경찰위원회였기 때문에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면서 정책적 수용성을 높이는 후속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5) 자치경찰제도 시행 1년 후 시민 인식에 대한 IPA 분석(세종)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찰의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장일식(2023)의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찰의 주요 범죄 대응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 수준 수정된 IPA 분석을 하였다.

Vavra(1997)의 수정된 IPA 기법은 전통적 IPA 기법과 다르게 명시적(explicit) 성취도(X축)는 응답 결과의 성취도로, 내재적(implicit) 성취도(Y축)는 응답 결과의 개별 성취도와 전반적인 성취도의 회귀계수를 산출하여 2차원 사분면으로 시각화한다.⁵⁵⁾ 각 사분면의 의미는 Kano et al.(1984)의 3요인 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한다.⁵⁶⁾ 첫 번째 요인은 기본(basic) 및 필수(must-be) 역량으로 4사분면에 나타나며, 이러한 기본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 전반적 현재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성과(performance) 및 일차원적 역량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나타나며, 역



〈그림 36〉 Vavra(1997)의 수정된 IPA

55) T. G. Vavra , *Improving your measurement of customer satisfaction: A guide to creating, conducting, analyzing, and reporting customer satisfaction measurement programs*. Milwaukee, WI: ASQ Quality Press, 1997; Gwan-Hui Han, Jae-Ho Yoo, Gye-Hee Lee, "A study on smart airport activation strateg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raditional IPA and Vavra's modified IPA : Focusing on technology-based self-service (TBS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36, no. 3, pp. 91-105, 2022, doi: 10.21298/IJTHR.2022.3.36.3.91.

56) Gwan-Hui Han, Jae-Ho Yoo, Gye-Hee Lee, "A study on smart airport activation strateg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raditional IPA and Vavra's modified IPA : Focusing on technology-based self-service (TBS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36, no. 3, pp. 91-105, 2022, doi: 10.21298/IJTHR.2022.3.36.3.91; T. G. Vavra , *Improving your measurement of customer satisfaction: A guide to creating, conducting, analyzing, and reporting customer satisfaction measurement programs*. Milwaukee, WI: ASQ Quality Press, 1997; N. Kano, N. Seraku, F. Takahashi, and S.-I. Tsuji, "Attractive Quality and Must-Be Quality," *Hinshitsu(Quality, the Journal of Japanese Society for Quality Control)*, vol. 14, pp. 39-48,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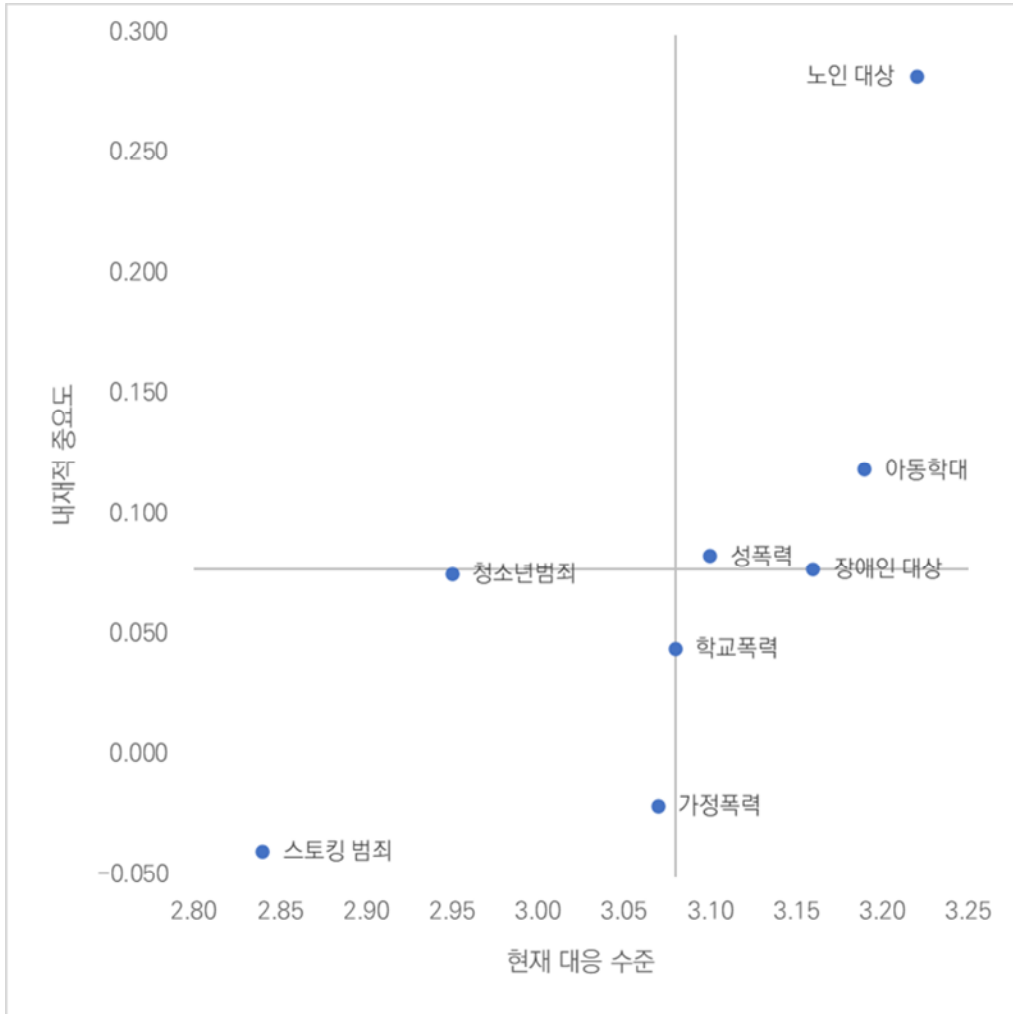
량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현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낮을수록 전반적 현재 수준을 낮게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흥미(excitement) 및 매력(attractive) 요인은 2사분면에 나타나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 높을수록 전반적 현재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그림 35 참조).

장일식(2023)은 ‘자치경찰제도 시행 1년 후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국의 시민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범죄는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노인 대상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스토킹 범죄 등 8개 범죄를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장일식(2023)의 연구에서 수집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개 주요 범죄에 대한 경찰의 현재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인 치안활동 만족도를 비교하는 Vavra(1997)의 수정된 IPA 분석을 하였다.

8개 주요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현재 대응 수준)를 X축으로, 전반적인 치안활동 만족도와 현재 대응 수준을 비교하여 도출한 회귀계수를 Y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경찰의 주요 범죄 대응에 대한 전국 시민의 인식 수준에 대한 수정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37>과 같았다.

〈그림 37〉 경찰의 주요 범죄 대응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 IPA 분석 결과(전국)



구체적으로 경찰의 대응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4사분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장애인 대상 범죄와 학교폭력이 경계선상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반적인 치안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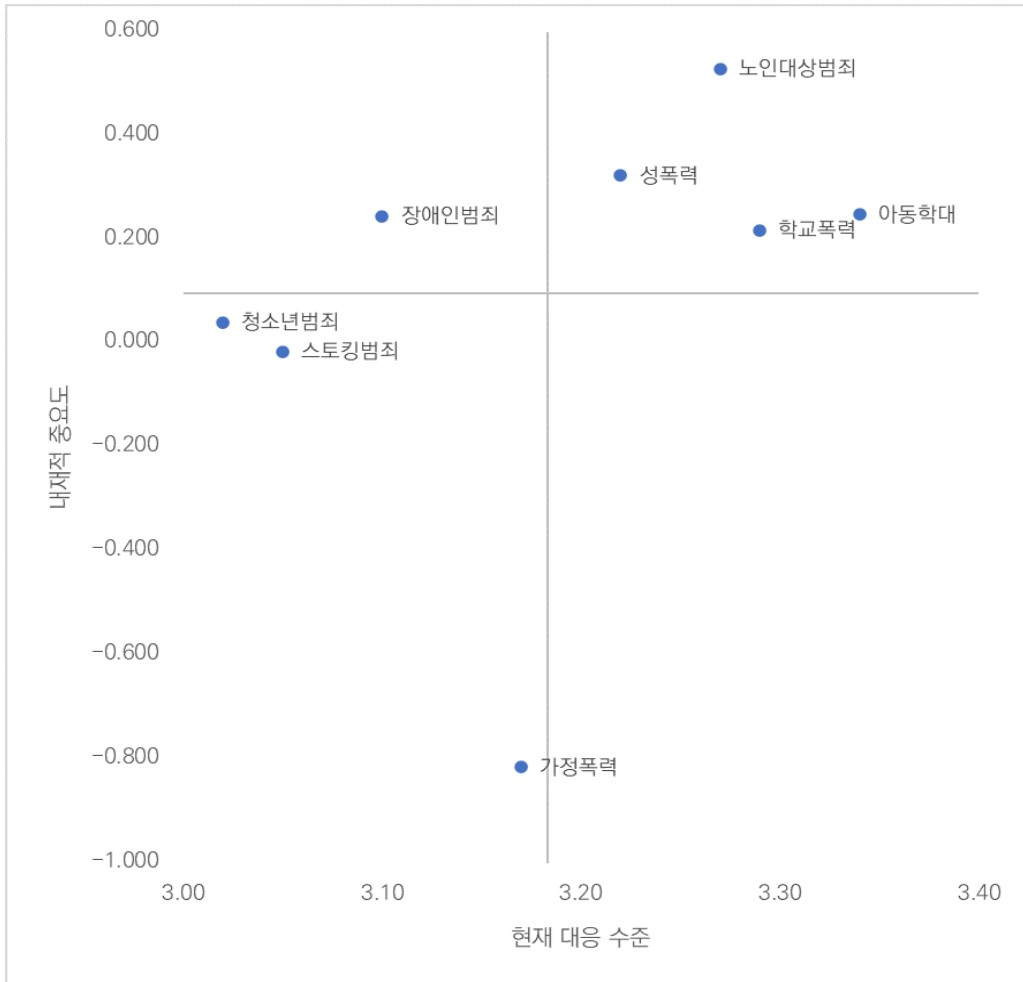
경찰의 대응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1사분면)는 노인대상 범죄, 아동학대, 성폭력이 해당하였다.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청소년범죄는 경찰의

대응 수준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높을수록 전반적인 현재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2사분면)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범죄의 경우 2사분면과 경계선상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제든지 경찰의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장일식(2023)의 연구에서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시민 41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주요 범죄 대응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에 대한 Vavra(1997)의 수정된 IPA 분석을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주요 범죄에 대한 경찰의 현재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인 치안활동 만족도를 장일식(2023)의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경찰의 주요 범죄 대응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 수준에 대한 수정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38>과 같았다.

〈그림 38〉 경찰의 주요 범죄 대응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 IPA 분석 결과(세종)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민이 인식하는 경찰의 대응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4사분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의 대응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1사분면)는 노인대상 범죄,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이 해당하였다.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청소년범죄는 경찰의 대응 수준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높을수록 전반적인 현재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2사분면)에는 장애인 범죄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세종특별자치시민은 8개 주요 범죄 중에서 노인 대상 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따라 전반적인 치안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국 시민의 인식과 달리,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도 및 경찰 활동 수준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조성된 비교적 신도시라는 점, 인구 구성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세대가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대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반적인 치안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범죄와 가정폭력은 전국 시민의 인식과 달리,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3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정폭력은 현재 대응 수준이 평균 정도이지만 전반적인 치안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인구 구성(학력,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청소년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적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 범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치안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범죄에 대한 대응 수준이 높으면 전반적인 치안활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성되는 단계에서 장애인 관련 학교, 장애인복지관, 보호센터나 훈련센터 등 자활 기관이 다수 위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활동 방향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1순위로 초점을 맞추고 아동학대, 성폭력, 노인 대상 범죄 등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기본요인에 대한 치안 활동 만족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후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치안활동을 추진하면 전반적인 치안 활동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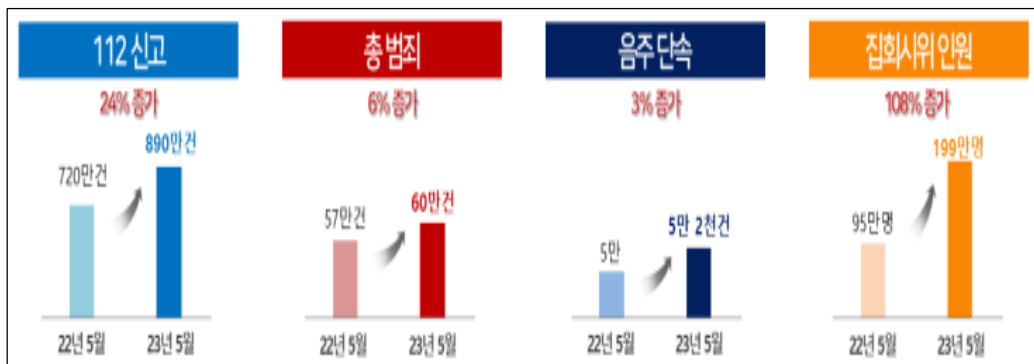
제4절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 현황 분석

1. 치안 트렌드의 변화

2022년 말 ‘이태원 참사’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치안 수요가 점증하면서, 각종 치안 수요와 사회갈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5년 후 안전’ 항목에서 2020년 39.1%에서 2022년 32.6%로 6.5p % 하락하였고, 실제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치안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그림 39〉는 최근 치안 수요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112신고 건수의 증가와 총 범죄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단속 건수도 증가하였으며, 각종 사회적 이슈로 인해 집회 시위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민생치안에 집중해야 할 경찰력이 분산될 수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도의 추진에 맞춰 실제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으로 하는 시책 발굴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후속 대책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림 39〉 최근 치안 수요 트렌드의 변화



출처 : 경찰청 자료(2023.7.10.)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 남부경찰서 신설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치안을 유지 중이고, 세종경찰청도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행정수도’에 걸맞은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에 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특별자치시 남부권(행정중심 복합도시)은 젊은 층이 거주하는 행정 도시로서의 성격을, 북부권은 농촌지역의 도농 복합적인 특색을 갖고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공공기관 이전 및 국토 균형발전 혁신 거점으로 지정되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첨단 지식기반 산업 유치로 인해 단계별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급속한 인구 유입 증가⁵⁷⁾ 추세가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지정 등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치안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림 4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구역 지도



출처 : 세종청 자료(2022).

57) 2022, 8월 인구 388,073명,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7월, 115,388) 후 336%(272,685명) 급증.

세종 남부경찰서는 8개 과에 5개 지역경찰관서, 세종 북부경찰서는 6개 과에 7개 지역경찰관서를 운영 중이며, 세종경찰청 소속으로 경찰관 기동대(1, 2, 3 기동대)와 경찰특공대를 두고 있다.

또한, 향후 세종특별자치시의 확장에 따라서 다음 그림과 같이 지역경찰관서의 신축을 고려하여 부지확보는 물론 경찰관 정원 확보를 통해 치안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표 34〉 행복도시 내 생활권역별 지역 관서 신축 및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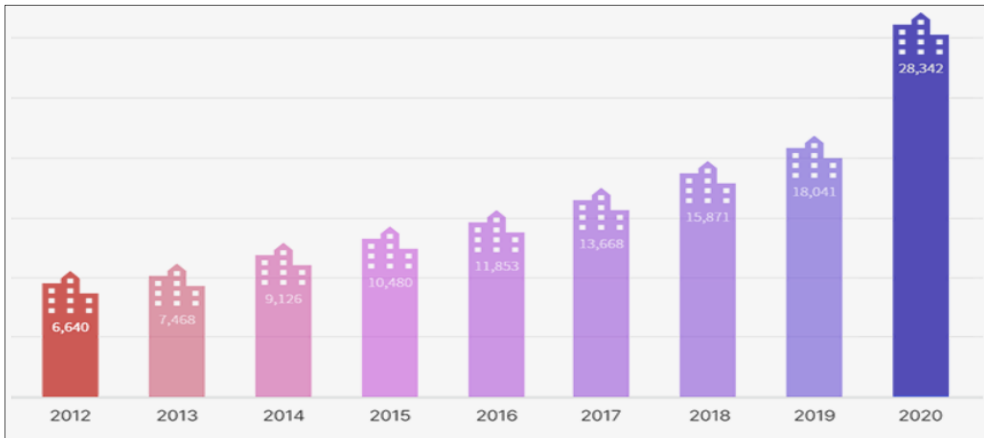
구분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지역관서	아름지구대	가칭도담어진	한솔지구대	보람지구대	가칭집현지구대	가칭다솜지구대
운영현황	운영 중	24년 상반기	운영 중	운영 중	24년 하반기	26년 하반기

출처 : 세종청 자료(2022).

아울러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테크노밸리(8만㎡) 등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로봇, AI 기반 첨단 과학 기술 등 치안 환경 변화가 예상되며, 북부권 일반산업단지(4개소) 구축 등 신성장산업 테스트 베드 조성 등 첨단 지식기반 산업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그림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업체 현황으로, 2012년 6,640개에서 2015년 10,480개, 2020년에는 28,342개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사업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업체 증가 현황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검색일 : 2023.6.30.)

이에 따른 최근의 범죄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세종은 2021년 총 6,147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발생 건수를 보였고, 이를 다시 인구 10만 명당 수치로 환산하여도 1,652건으로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표 35〉 2021년 범죄 발생지역별 통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범죄 발생 총건수 (A) (건)	1,531,705	274,830	113,558	72,339	85,432	44,610	41,921	23,463	6,147
인구(B) (명)	51,638,809	9,509,458	3,350,380	2,385,412	2,948,375	1,441,611	1,452,251	1,121,592	371,895
A/B x 100,000 (건/10만 명)	2,966.2	2,890.1	3,389.4	3,032.6	2,897.6	3,094.5	2,886.6	2,091.9	1,652.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범죄 발생 총건수(A) (건)	388,004	45,398	47,020	63,290	52,587	60,205	75,300	111,102	26,499
인구(B) (명)	13,565,450	1,538,492	1,597,427	2,119,257	1,786,855	1,832,803	2,626,609	3,314,183	676,759
A/B x 100,000 (건/10만 명)	2,860.2	2,950.8	2,943.5	2,986.4	2,943	3,284.9	2,866.8	3,352.3	3,915.6

* 인구수는 2021.12.31.일 통계청의 주민등록 인구수임/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

출처 : KOSIS 통계(검색 : 2023.7.10.)

다음 〈표 36〉은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로, 2021년 기준으로 세종청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79명이며, 향후 경찰관 정원 증가에 따라 현원을 적기에 충원해야만 안정적인 인력 배치로 치안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표 36〉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행정구역별	2020			2021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A÷B)	주민등록 인구(A)	경찰공무원 정원(B)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A÷B)	주민등록 인구(A)	경찰공무원 정원(B)
전국	416.2	51,829,023	124,531	405.8	51,638,809	127,243
서울특별시	327.0	9,668,465	29,571	318.1	9,509,458	29,892
부산광역시	368.6	3,391,946	9,201	360.0	3,350,380	9,307
대구광역시	418.0	2,418,346	5,786	404.7	2,385,412	5,894
인천광역시	449.2	2,942,828	6,551	441.8	2,948,375	6,673
광주광역시	419.0	1,450,062	3,461	404.0	1,441,611	3,568
대전광역시	450.4	1,463,882	3,250	430.9	1,452,251	3,370
울산광역시	425.8	1,136,017	2,668	403.7	1,121,592	2,778
세종특별자치시	526.4	355,831	676	479.2	371,895	776
경기도	553.8	13,427,014	24,245	550.0	13,565,450	24,663
강원특별자치도	351.5	1,542,840	4,389	340.1	1,538,492	4,524
충청북도	433.1	1,600,837	3,696	416.6	1,597,427	3,834
충청남도	451.1	2,121,029	4,702	434.5	2,119,257	4,878
전라북도	360.0	1,804,104	5,011	347.8	1,786,855	5,138
전라남도	334.3	1,851,549	5,539	320.1	1,832,803	5,726
경상북도	394.2	2,639,422	6,695	382.6	2,626,609	6,866
경상남도	469.0	3,340,216	7,122	454.6	3,314,183	7,291
제주특별자치도	342.8	674,635	1,968	327.7	676,759	2,065

출처 : KOSIS 통계(검색 : 2023.8.1.)

다음 <표 37>은 지역 안전 등급으로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가 취약하고, 이외 화재, 범죄, 자살 등은 양호한 등급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단지 수치적인 것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안전도와 범죄예방, 자살자수 감소를 위한 맞춤형 시책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표 3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안전 등급

구분	2020						2021					
	교통 사고	화재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교통 사고	화재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세종특별 자치시	5	1	1	5	1	2	3	1	1	4	1	1

출처 : KOSIS 통계(검색 : 2021.8.1.)

다음 <표 38>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으로 긍정적인 답변(비교적 안전+매우 안전)은 62.3%, 보통은 31.0%, 부정적인 답변(비교적 불안+매우 불안)은 6.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사회 안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단, 세부적으로 면 지역과 동 지역의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골 농촌 지역에 대한 안전도의 향상이 필요할 것이며, 직업별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직군과 주부, 학생, 무직인 직군에서 ‘비교적 불안’ 비율이 높았던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시책 개발의 시행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주거 점유 형태별 구분에서도 월세 등 기타 주거가 불안정한 직군에서 ‘비교적 불안’ 비율이 높았던 만큼 원룸촌 밀집 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발굴해야 할 것이다.

〈표 38〉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 (2020년)

구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전체	소계	1.0	5.7	31.0	54.0	8.3
읍·면·동별	조치원읍	2.5	14.4	36.3	43.3	3.5
	면 지역	0.8	9.8	37.6	47.1	4.7
	동 지역	0.8	3.2	28.6	57.5	9.9
성별	남자	0.8	4.8	31.3	54.4	8.7
	여자	1.2	6.7	30.8	53.5	7.9
연령별	13~19세	0.8	4.8	33.9	44.8	15.7
	20~29세	1.6	5.8	30.4	51.8	10.4
	30~39세	1.1	4.7	32.5	53.4	8.3
	40~49세	0.7	4.3	29.6	58.1	7.4
	50~59세	1.1	6.8	28.4	57.8	5.9
	60세 이상	0.9	8.3	32.5	52.3	6.1
	65세 이상	0.9	8.6	32.7	51.7	6.2
교육 정도별	초졸이하	0.8	9.2	37.1	43.8	9.2
	중졸	1.3	8.7	32.5	48.1	9.4
	고졸	1.5	6.7	32.9	52.3	6.7
	대학 이상	0.8	4.1	28.6	57.9	8.6
직업별	전문관리	0.8	5.1	24.9	58.3	10.9
	사무	1.6	4.0	29.6	58.6	6.3
	서비스 판매	1.0	5.4	32.1	53.2	8.4
	농어업	1.0	13.2	43.8	36.4	5.5
	기능노무	1.8	6.8	33.3	54.1	4.0
	군인/주부/학생/무직	0.7	5.9	32.6	51.8	9.1
혼인상태별	미혼	1.1	5.6	32.1	49.5	11.7
	유배우	0.9	5.6	30.3	55.8	7.5
	사별/이혼	1.6	7.3	34.8	52.9	3.5
주거 점유형태별	자가집	0.6	5.4	29.6	56.5	7.8
	전세	2.0	5.6	27.3	57.4	7.7
	월세/기타	1.5	6.7	35.7	51.8	4.4

출처 : KOSIS 통계(검색 : 2023.8.1.)

현재 세종청의 지역경찰 근무 인원을 정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당 담당 인구는 2,072명으로 전국 1위에 해당하는데, 향후 세종 남부서 관할에 국회 이전까지 확정되어 있고, 정부 세종 1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약 11,81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어진동 주상 복합 건물에 1637세대에 약 6,548명이 입주해 있고, 2024년까지 6-4 생활권에 3,100세대에 약 1만 2천 명이 추가로 입주하게 되면 치안 수요의 급증이 예상⁵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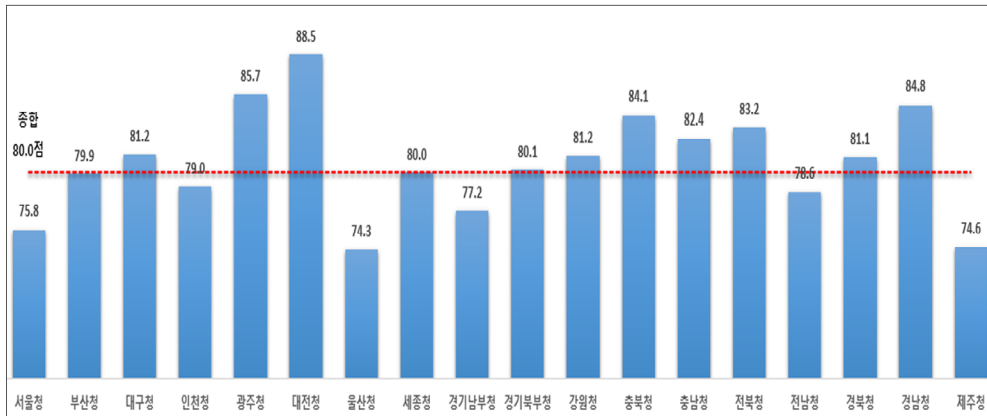
이에 세종경찰청에서는 도암(어진)지구대를 신설하려고 진행 중이며, 현재 청사는 건축 중인데, 정부세종청사와 국무총리공관 등 경호·경비적인 측면과 집회 시위의 증가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자치경찰사무와 인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세종중부경찰서 신설 추진은 세종경찰청에서 장기 계획에 따라 논의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지속되어 세종자치경찰 발전방안과 연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세종경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만족도⁵⁹⁾를 조사한 〈그림42〉에서는 세종청이 80.0점으로 하위권에 속해 있어,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을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는 실제 시민과 접촉하는 경찰의 치안 수준과 만족도와도 연계되는 만큼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주민 민원의 증가와 함께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종남부서 관할 지구대장 심층 면접 시 정보공개 청구 증가와 현장에서의 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이를 토대로 세종청 근무 경찰관들의 애로사항 또는 직무 스트레스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58) 세종청, 2023년 사무감사 대비 자료(2023.5월).

59) 매년 경찰청 고객 만족 모니터센터에서 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7개 분야 만족도(총 25개 항목 / 인사·성과관리 6, 근무환경 2, 급여 및 복리후생 2, 의사소통 3, 조직 운영 3, 직무 6, 교육 3), 전반적 만족 수준(1항목), 직장협의회(3문항) 및 경찰조직 내 성인지 수준(5문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매년 말에 발표됨.

〈그림 42〉 2022년 세종청 경찰관 직무만족도⁶⁰⁾

출처 : 경찰청 자료(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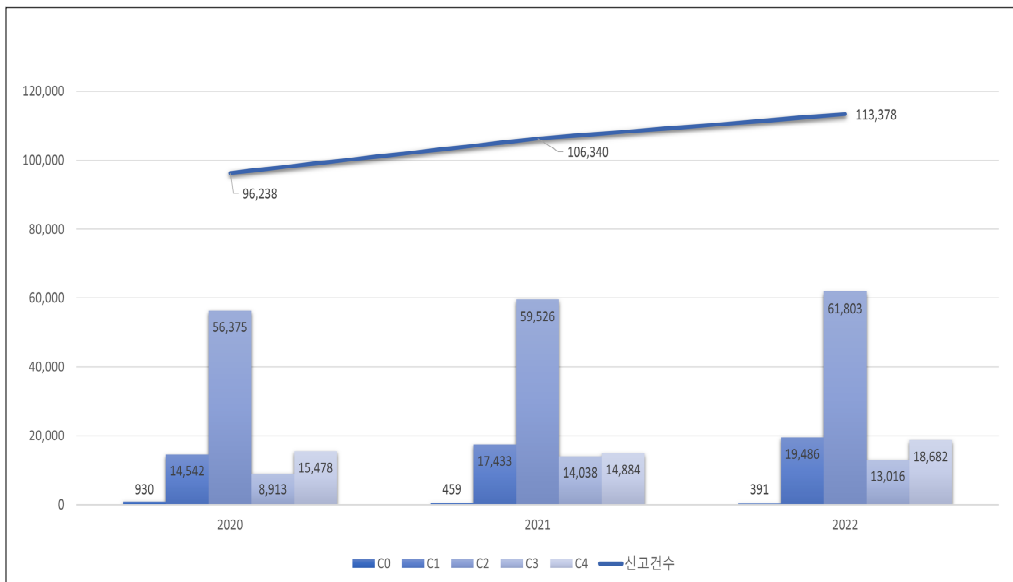
60) 인사·성과관리 80.5점(전국 평균 대비 -0.5점), 근무환경 분야 82.8점(+2.2점), 급여 및 복리후생 분야 71.1점(-0.3점), 의사소통 분야 83.1점(-1.1점), 조직 운영 만족도 83.4점(-0.7점), 직무만족도 80.3점(-0.8점), 교육 만족도 79.0점(+0.8점)임.

2. 112신고 세부 분석

다음 〈그림 43〉은 최근 3년간의 긴급코드별 112신고 건수로, C0은 2020년 930건에서 2021년 459건, 2022년 391건으로 감소하였고, C1은 14,542건에서 2021년 17,433건으로 2,891건이 증가하여 19.9%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19,486건으로 다시 2,053건이 증가하여 11.8%의 증가율을 보인다.

실제 경찰에서 가장 긴박한 C0과 C1을 합한 건수가 2020년 15,472건에서 2022년 19,877건으로 4,405건이 증가하여 28.5% 증가하였다. 이는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여 즉시 조치 및 지원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현장 대응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3〉 최근 3년간 코드별 112신고 건수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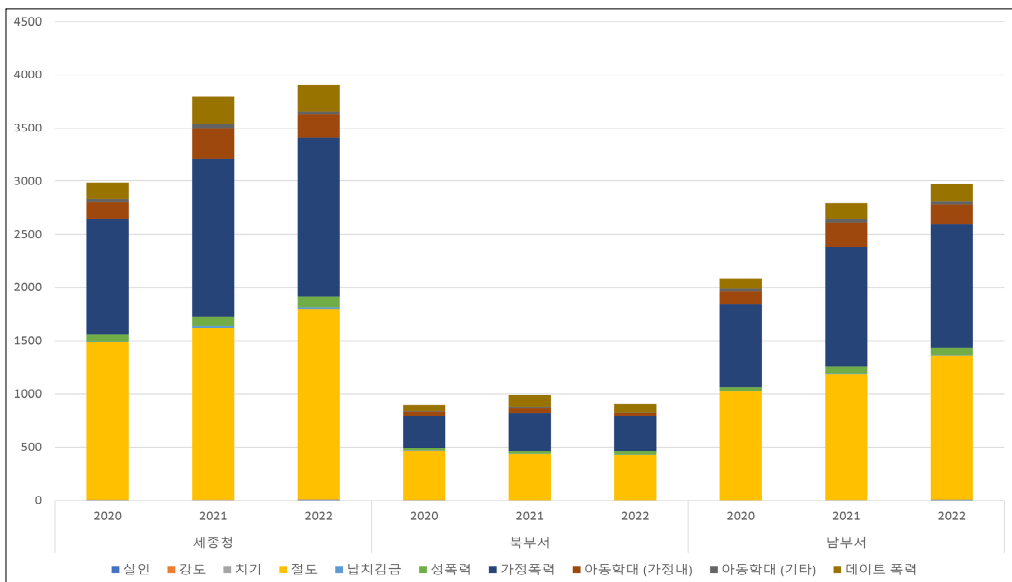
이외 C2도 2020년 56,375에서 2022년 61,803건으로 5,428건이 증가하여, 9.6% 증가하였고, C3도 2020년 8,913건에서 2022년 13,016건으로 4,103건

이 증가하여, 46.0% 증가하였으며, CO4도 2020년 15,478건에서 2022년 18,682건으로 3,204건이 증가하여, 20.7%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2020년 96,238건에서 2022년 113,378건으로 17,140건이 증가하여 17.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세종의 확장성과 인구이동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그림 44〉는 연도별 중요범죄 112신고 건수로 절도는 2020년 1,478건에서 2021년 1,614건, 2022년 1,790건으로 2020년 대비 21.1%(312건) 증가하였고, 가정폭력은 1,080건에서 2021년 1,484건으로 404건이 증가하여 37.4% 증가, 2022년에는 1,504건으로 20건이 증가하여 1.34%의 증가율을 보인다. 성폭력 신고는 2020년 67건에서 2022년 97건으로 30건 증가하여 44.7%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살인 관련 신고는 2020년 6건에서 2021년 3건, 2022년 7건으로 증감하였다.

〈그림 44〉 연도별 중요범죄 112신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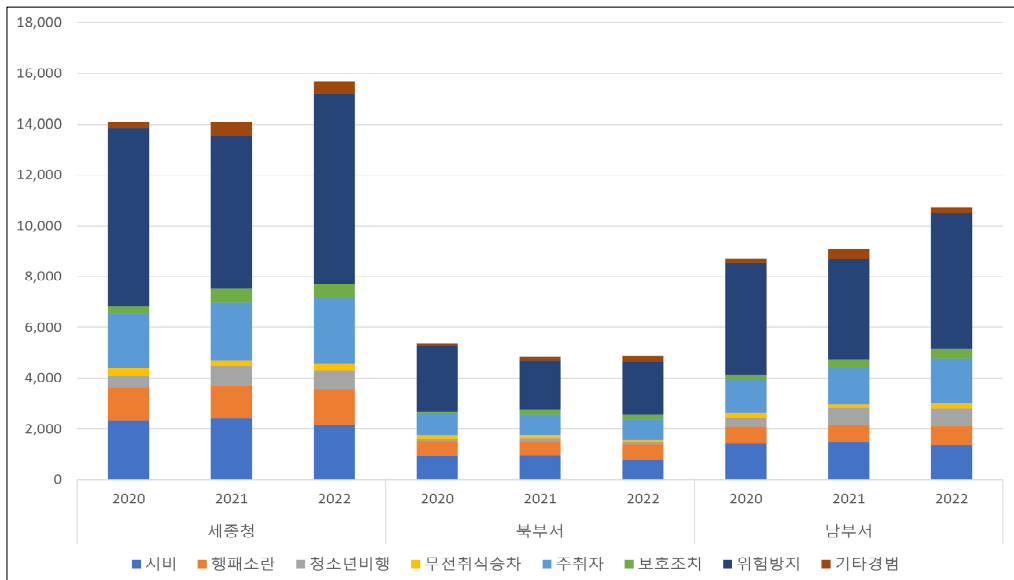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이외 아동학대, 납치감금 관련 신고도 증감 반복을 보였으며 아동학대(가정 내, 기타 포함) 신고 건수는 2020년 190건에서 2021년 327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 241건으로 감소하였다. 납치감금 관련 신고는 2020년 8건에서 2021년 18건으로 증가, 2022년에는 11건으로 감소하였다.

다음 〈그림 45〉는 시비, 주취자, 위험방지, 행패소란, 청소년 비행, 무전취식승차,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기타 범죄의 범죄 종별 112신고 건수로, 가장 많이 차지한 위험방지의 경우 2020년 7,041건에서 2021년 6,007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7,509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주취자 관련 신고는 2020년 2,162건에서 2021년 2,271건, 2022년 2,575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시비 관련 신고는 2020년 2,343건에서 2021년 2,431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 2,181건으로 감소하였다. 기타 범죄 항목 중 청소년 비행, 보호조치 관련 신고 건수는 2020년 대비 2022년 각각 73.8%, 101% 대폭 증가하였는데, 청소년 비행은 2020년 440건에서 2022년 765건으로, 보호조치는 2020년 283건에서 2022년 569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45〉 범죄종별 112신고 건수(기타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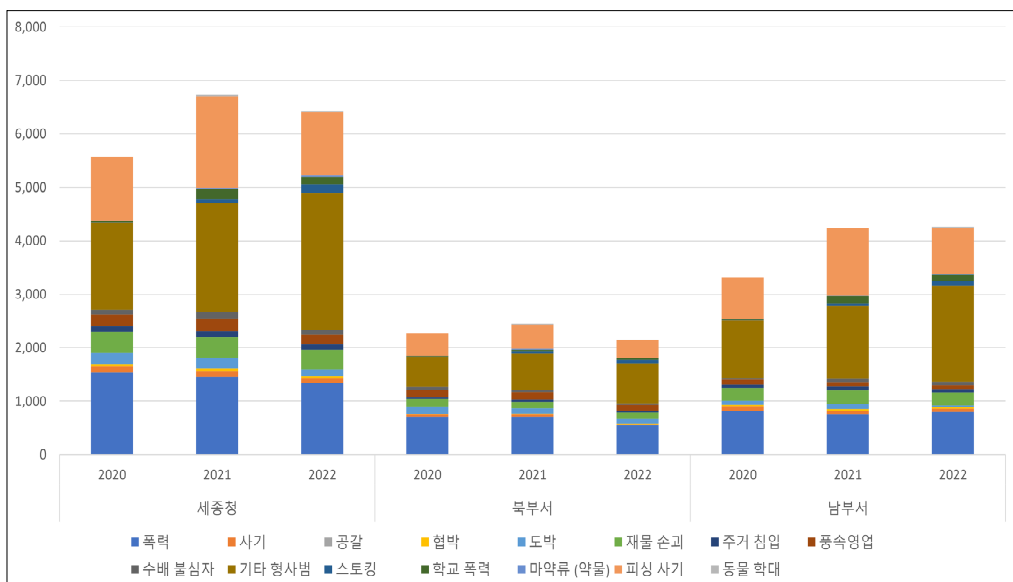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 〈그림 46〉은 질서유지 항목의 112신고 건수로 폭력, 사기, 공갈, 협박, 채물손괴, 주거 침입, 스토킹, 마약류, 피싱 사기 등의 신고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항목 내 신고유형 중 기타 형사범, 스토킹, 동물 학대를 제외한 신고유형들은 지속 감소 추세 또는 소폭 증가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폭력 관련 신고는 2020년 1,537건에서 2022년 1,353건으로 184건이 감소하여 12% 감소하였고 사기 관련 신고도 2020년 118건에서 2021년 105건, 2022년 82건으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대비 30.5%(36건) 감소하였다.

채물손괴 관련 신고의 경우 2020년 395건에서 2021년 382건으로 3.2%(13건) 감소, 2022년 3.9%(15건) 감소하여 소폭 지속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관련 신고는 2020년 31건에서, 2021년 17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22년 139건으로 감소하였다.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2020년 7건에서 2021년 85건으로 114.2%(78건) 증가, 2022년에는 165건으로 증가하여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46〉 범죄 종별 112신고 건수(질서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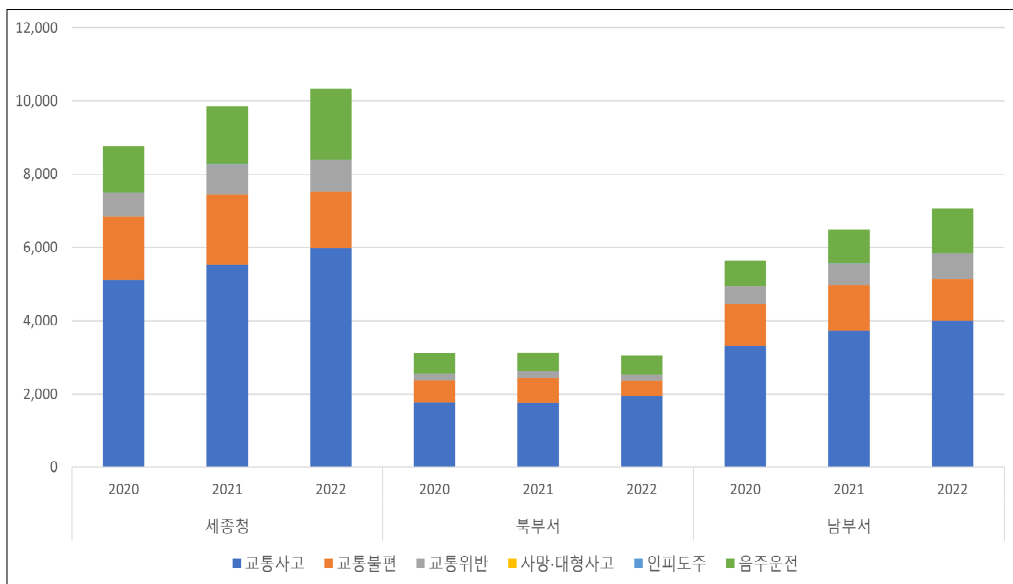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 〈그림 47〉은 교통 관련 112신고 건수이며, 가장 많이 접수된 신고는 교통사고로 2020년 5,100건에서 2022년 5,981건으로 881건이 증가하여 17.2%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교통 불편 관련 신고는 2020년 1,730건에서 2022년 1,523건으로 207건 증가하여 1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 음주운전 관련 신고의 경우 2020년 1,280건에서 2021년 1,603건, 2022년 1,928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통 관련 신고는 전체적으로 2020년 8,766건, 2021년 5,532건, 2022년 10,334건으로 전체 기간 1,568건이 증가하여 17.8%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47〉 사건 종별 112신고 건수(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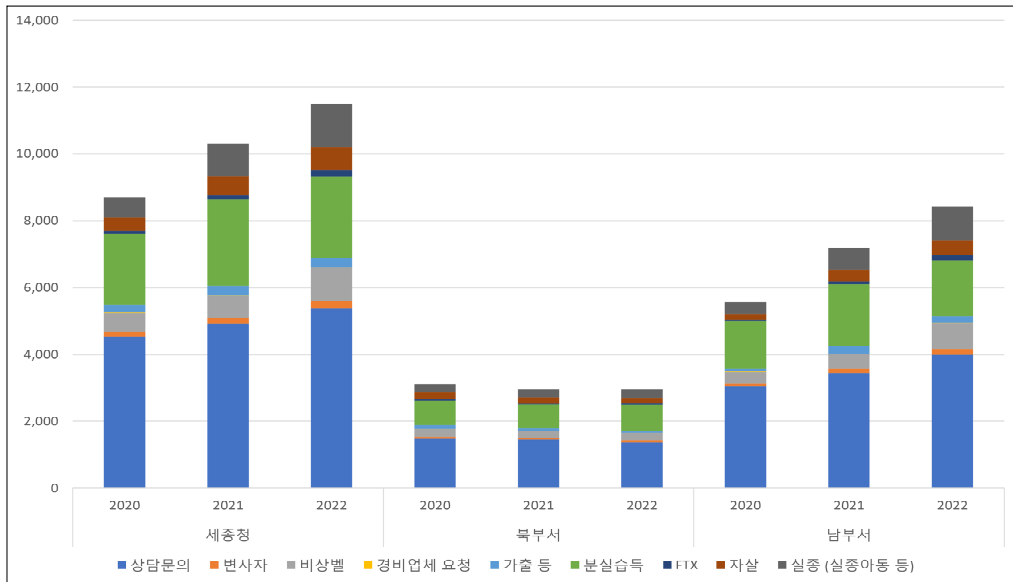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 〈그림 48〉은 상담 문의, 비상벨, 가출, 분실습득 등 기타 경찰업무 관련 112신고 건수로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인 상담 문의 관련 신고는 2020년 4,525건에서 2021년 4,918건으로 2022년 5,381건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변사

자 관련 신고의 경우도 2020년 152건 2021년 182건으로 2022년 2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실종 관련 신고는 2020년 614건에서 2022년 1,310건으로 증가하여 2020년 대비 112.8%(696건) 증가하였다.

〈그림 48〉 사건 종별 112신고 건수(기타 경찰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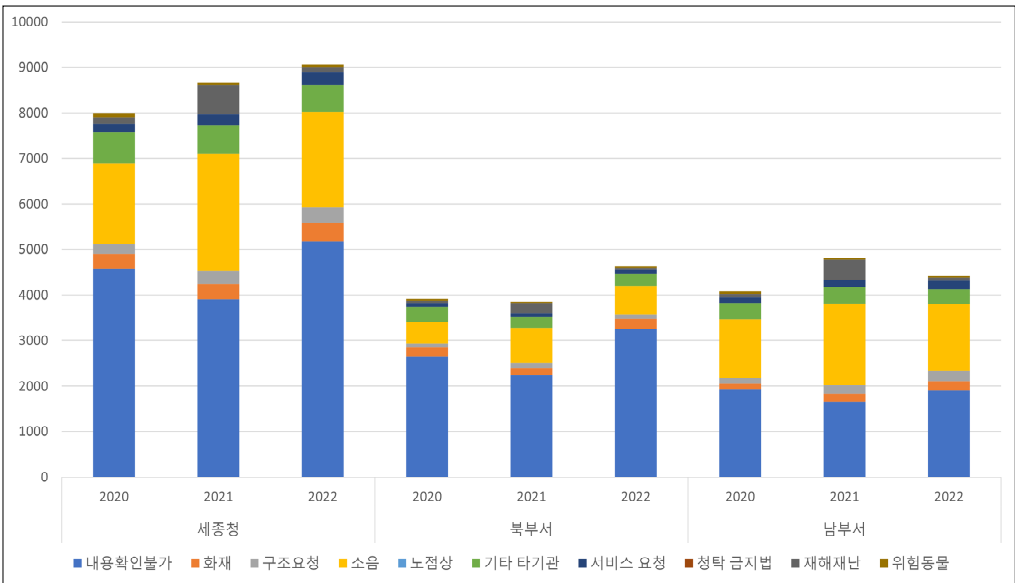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 〈그림 48〉은 사건 종별 중 기타 경찰업무의 112신고 건수 추이로, 화재, 구조요청, 서비스 요청 관련 신고는 지속 증가하였으며, 화재 관련 신고는 2020년 320건, 2021년 325건, 2022년 413건으로 2020년 대비 29%(93건) 증가하였다. 구조요청의 경우 2020년 208건, 2021년 300건, 2022년 340건으로 지속 증가하여 63.4%(132건)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 요청 신고는 2020년 194건에서 2021년 232건, 2022년 274건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2020년 대비 41.2%(80건) 증가율을 보였다. 소음 관련 신고는 2020년 1,768건에서 2021년 2,566건으로 798건 증가하여 45.1%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2년 2,092건으로 474건 감소하여 증감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재해재난 관련 신고는 2020년 139건에서 2021년 659건으로 520건 증가, 증가율 374%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22년 107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과 집중호우 등 재해 재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112신고로도 접수가 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2023년 집중호우로 세종의 금강 등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준 만큼 향후 집중해야 할 분야이며, 자치경찰의 확장성을 고려하면 세종특별자치시청과 소방 등 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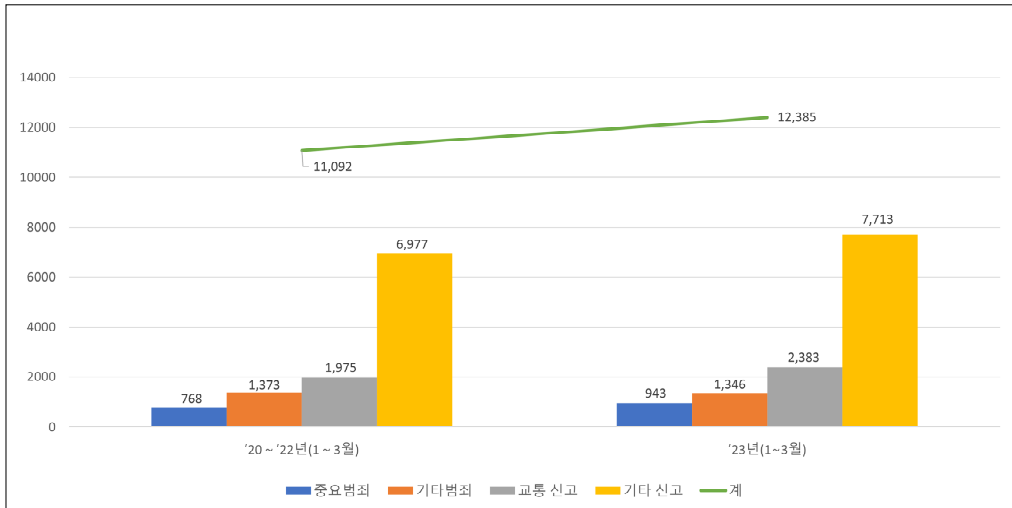
〈그림 49〉 사건 종별 112신고 건수(기타 경찰업무)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 〈그림 50〉은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 1~3월 접수 건수와 2023년 접수 건수를 대비한 현황으로, 11,092건에서 12,385건으로 1,293건이 증가하여 11.7% 증가하였다. 중요범죄는 768건에서 943건으로, 175건이 증가하여 22.8% 증가하였고, 기타 범죄 건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교통 신고가 1,975건에서 2,383건이 증가하여 20.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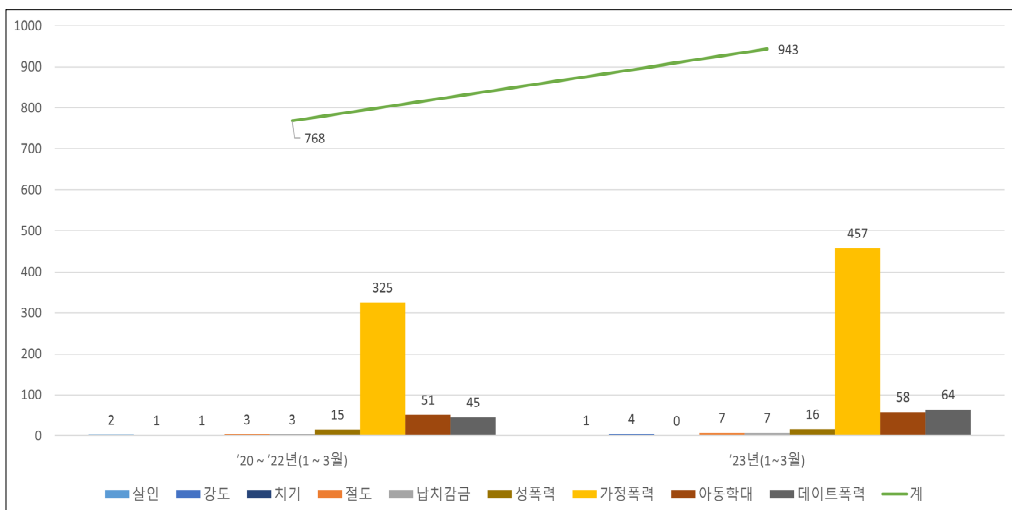
〈그림 50〉 최근 3년 1분기 대비 사건 종별 112신고 접수현황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 〈그림 51〉은 중요범죄에서 세부 항목별로 증감 현황을 비교한 것으로, 절도 신고가 3건에서 7건으로 증가하였고, 성폭력은 1건이 증가한 반면, 가정폭력이 325건에서 457건으로 132건이 증가하여 40.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51〉 최근 3년 1분기 대비 중요범죄 112신고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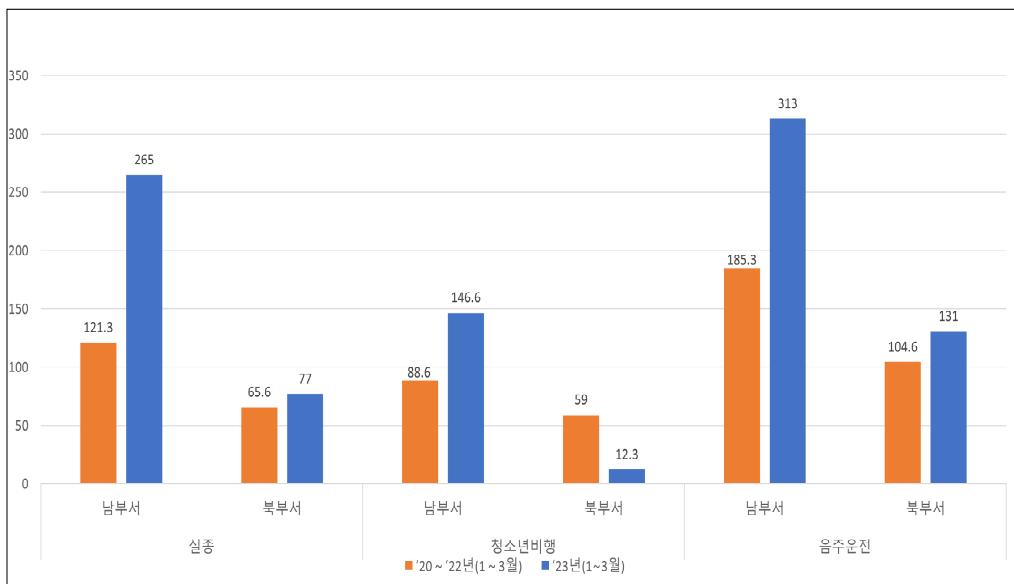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 〈그림 52〉는 2020년에서 2022년 1분기와 2023년 1분기 신고 건수를 경찰서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으로, 자치경찰 사무와 밀접한 3개 지표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세종 남부서의 경우 실종은 3년 평균 121.3건에서 265건으로, 청소년 비행은 88.6건에서 146.6건으로, 음주운전은 185.3건에서 313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증가율이 가장 큰 항목은 실종이다. 실종은 가출, 미아 등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초등 수사가 중요하여 일선 현장에서 긴박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외 세종 북부서의 경우 청소년 비행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려대와 홍익대 캠퍼스가 있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적으나, 세종 남부서의 경우 학교가 신설되면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청소년 비행과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52〉 최근 3년 연도별 실종, 청소년 비행, 음주운전 112신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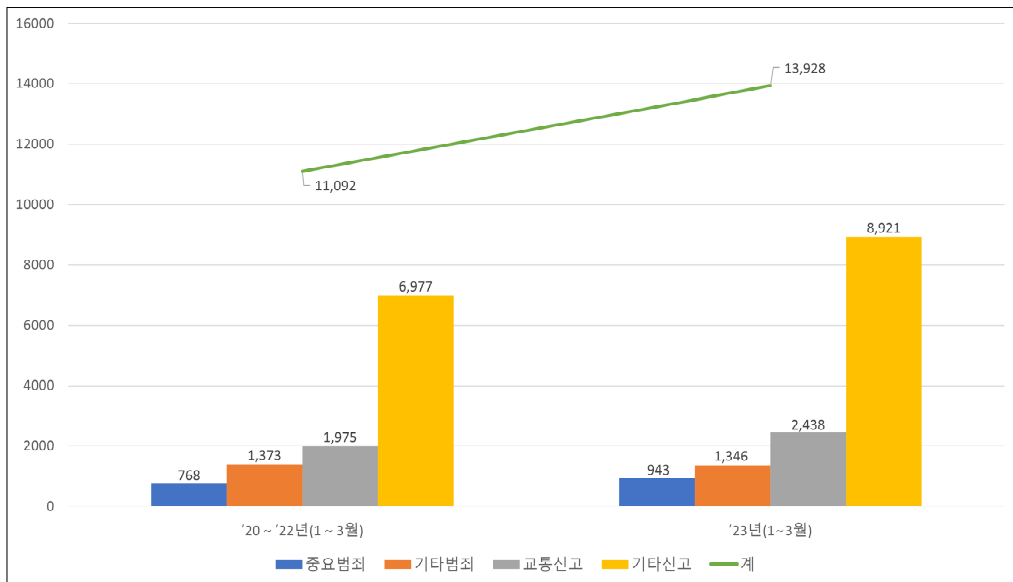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 〈그림 53〉은 2020년에서 2022년 1분기와 2023년 1분기 신고 건수를 중요범죄, 기타 범죄, 교통 신고, 기타 신고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중요범죄 신고는 768건에서 943건으로, 교통 신고는 1,975건에서 2,438건으로, 기타 신고는 6,977건에서 8,921건으로 증가하였고, 가장 증가율이 큰 항목은 기타 신고이지만 실제 교통 신고가 25.7% 증가하였다.

특히 교통 신고의 경우 비교 시점이 1~3월로 겨울철임을 고려한다면 기상 등 날씨와 연관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교통 체증과 교통사고 등 세종특별자치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월 세부적인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교통안전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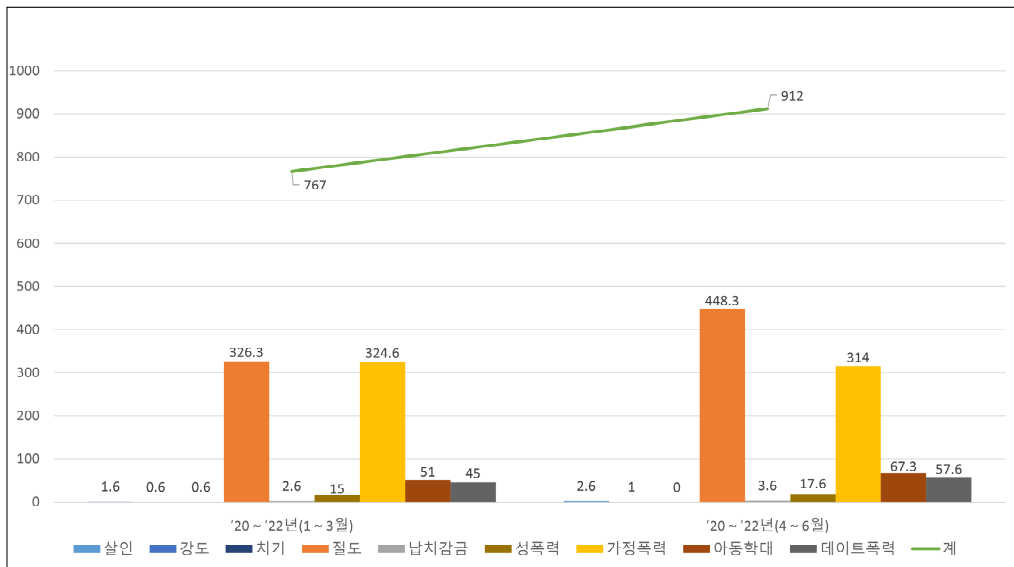
〈그림 53〉 최근 3년 1분기 대비 사건 종별 112신고 접수현황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 <그림 54>는 2020년에서 2022년 1~3월과 2020년에서 2022년 4~6월의 중요범죄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767건에서 912건으로 증가하여 18.9% 증가하였다. 이는 겨울철에서 봄철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활동이 많아지며 절도 등 범죄가 증가 37.4%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이와 함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감소하였다. 이외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4> 최근 중요범죄 112신고 접수현황(분기별 비교)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향후 세종청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매월 112신고 건수를 포함한 최근 사건 사고와 특이 유형의 신고 등 범죄는 물론 시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과 지표들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이를 다시 시민들에게 환류해 주는 플랫폼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시민들이 자치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 지구대·파출소별 또는 읍면동별 112신고 건수 추이와 세부 분석 자료는 치안 시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사회적약자 관련 분석

다음 〈표 39〉는 최근 3년간 사회적약자 분야 112신고 건수를 정리한 것으로, 2020년 2,553건에서 2022년 4,370건으로 1,817건이 증가하여 71.2%의 증가율을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기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였는데, 특히나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의 증가가 확연하게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여성청소년과에서 각각 담당별로 사례관리와 솔루션 회의, 외부 협업을 통해 고도화하고 있으나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이외라고 하더라도 행정, 교육 당국과 더욱 긴밀하게 네트워크가 되어야 할 분야이다.

〈표 39〉 최근 3년간 사회적 약자 분야 112신고 건수

구분	소계	성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가정내)	아동 학대 (기타)	데이트 폭력	스토킹	학교 폭력	자살	실종
2020	2,553	67	1,080	159	31	156	7	31	408	614
2021	3,963	90	1,484	285	42	253	85	179	583	962
2022	4,370	97	1,503	214	27	254	163	139	663	1,310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여성인구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여성 폭력 범죄의 잠재적 수요가 높고,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지속 증가세에 있어 피해자보호 및 여성 범죄예방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다음 〈표 40〉을 살펴보면 전국에 위치한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세종에만 이러한 보호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0〉 전국 피해자 보호기관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정폭력 상담소	128	13	11	3	6	4	3	3	-	21	10	5	8	8	9	9	13	3
보호시설	65	11	3	3	1	4	1	1	-	11	5	3	4	4	4	2	6	2
긴급전화 1366	18	2	1	1	1	1	1	1	-	2	1	1	1	1	1	1	1	1
해바라기센터	33	4	2	1	2	1	1	1	-	6	3	1	1	2	2	3	2	1
계	244	30	17	8	10	10	6	6	-	40	19	10	14	15	16	15	22	7

* 1366센터는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에 의거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긴급전화센터임.

이에 반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여성인구 증가는 2017년 기준 14만 명에서 2022년 기준 19만 명으로 전국 1위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 증가율은 4년 만에 36.9%가 증가하였다.

〈표 41〉 전국 여성인구 증가 현황(2022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7	502만	176만	124만	146만	73만	75만	56만	14만	639만	76만	78만	104만	93만	94만	133만	167만	32만
2022	485만	169만	120만	148만	72만	72만	54만	19만	675만	76만	78만	103만	88만	90만	128만	162만	33만
증감 (%)	3.3 ↓	3.9 ↓	3.2 ↓	1.3 ↑	4.0 ↓	3.5 ↓	3.5 ↓	36.9 ↑	5.6 ↑	-	-	0.9 ↓	5.3 ↓	4.2 ↓	3.7 ↓	2.9 ↓	3.1 ↑

또한, 전국 30~40대 여성 비율도 17.7%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들의 안전 확보가 치안은 물론 지역 안전 지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는 곳이다. 세종의 확장에 따라서 유입 인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들도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좋은 세종을 선호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종의 주거환경, 각종 도서관 등 교육 여건이 좋으며, 젊은 세대들이 향후 정착을 목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군면 등 일부 면 단위 지역은 저렴한 원룸 등도 많아 일자리 중심으로 전입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

다만, 젊은 20~30대 여성들이 1인 가구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방법상 취약한 요인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적합한 범죄예방 및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표 42〉 전국 30~40대 여성 비율(2023년)

(2023.1월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인구	942만	331만	236만	296만	142만	144만	111만	38만	1359만	153만	159만	212만	176만	181만	259만	327만	67만
30,40 여성	144만	43만	31만	42만	20만	20만	15만	6만	202만	18만	20만	26만	21만	19만	30만	42만	9만
비율 (%)	15.3	13.2	13.4	14.3	14.3	14.0	13.9	17.7	14.8	11.8	12.5	12.6	11.9	10.9	11.7	13.0	13.8

아울러 세종청의 자살 관련 112신고 현황은 2021년 583건에서 2022년 663건으로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의 시도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세종의 여성 자살자 수는 32명으로, 이를 다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환산한다면 18.3명으로 전국 1위라는 위험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인구가 유입되는데, 여성 자살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불안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별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표 43〉 시도별 여성 자살 현황(2020년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살(명)	752	281	203	232	104	121	86	32	981	157	121	217	127	143	252	236	57
연령 표준화 자살률	14.2	15.0	15.5	14.5	13.1	15.7	14.9	18.3	13.8	15.6	12.7	17.2	12.6	12.4	16.3	13.0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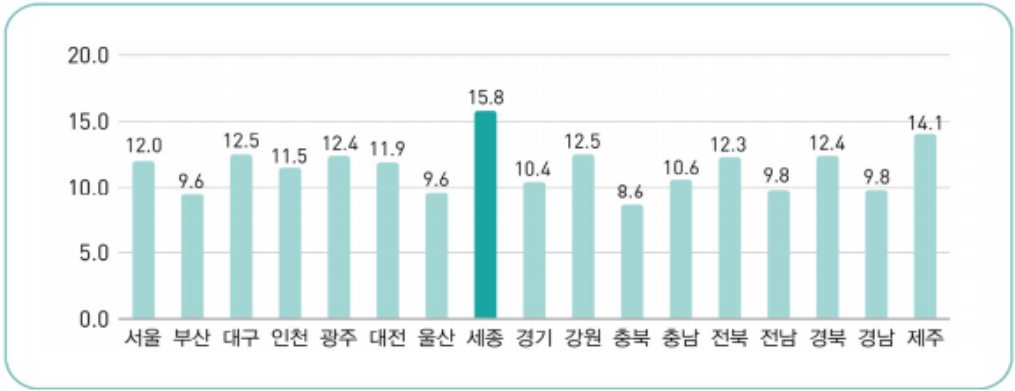
※ 연령표준화 자살률 : 인구 10만 명당 명수에 대한 자살률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자살 예방백서」, 쪽.

아울러, 청소년 자살 현황도 세종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약자들인 청소년들의 고민과 학교폭력과 사이버상 폭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교육청에서 학생 자살에 대하여

정확한 DB와 심리 부검 자료를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그림 55〉 시도별 청소년 자살 현황(2020년)



※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수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자살 예방백서」, 39쪽.

다음 〈표 44〉는 여성과 관련된 폭력 신고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2021년 2,302명에서 2022년 2,411명으로 4.7% 증가하였는데, 스토킹이 94.1%, 성폭력이 51.1%, 아동학대가 26.2% 증가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슈에 따라 세종에서도 관련 범죄가 증가 중인 만큼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표 44〉 세종청 여성 폭력 관련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성매매
2021년	2,302(명)	139	1,484	251	85	327	16
2022년	2,411(명)	210	1,504	254	165	241	37
전년 대비	4.7% ↑	51.1% ↑	1.4% ↑	1.2% ↑	94.1% ↑	26.2% ↓	131.2% ↑

출처 : 세종청 자료(2023).⁶¹⁾

61) 이 건수는 112신고 이외 다른 형태로 접수하여 여성청소년과에서 정리한 것으로 통계상 다소 수치가 다를 수 있음. 성폭력 사건의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하지 않고 추후에 신고하는 경우 등 다양함.

다음은 여성 폭력 관련 시간대별 112신고 현황으로, 교제 폭력이 8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가정폭력으로 73.4%, 성폭력이 57.7%로 나타났다. 즉, 야간 신고 비율이 73.6%로 높지만, 실제 신속하게 피해자보호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원스톱 센터는 세중에 없는 실정으로, 야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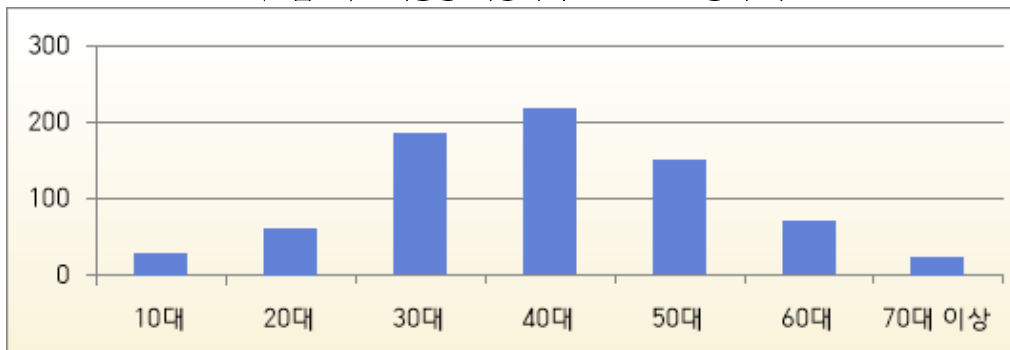
〈표 45〉 세종청 여성 폭력 관련 시간대별 112신고 현황(2022년 기준)

구 분	총신고	주간	야간	야간 신고 비율
가정폭력	1,504	399	1,105	73.4%
성폭력	97	41	56	57.7%
교제 폭력	254	48	206	81.1%
총계	1,855	488	1,367	73.6%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은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연령대별로 정리한 것으로 30대와 40대가 가장 발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6〉 세종청 가정폭력 112신고 연령대 비율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은 가정폭력 관련한 연관된 통계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8건에서 2020년 42건으로, 다시 2021년에는 56건으로 지속

해서 증가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요구된다.

〈표 4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현황

구 분	2012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	2	38	42	56
전년 대비	47.3% 증가 (38건 ^{19년} → 56 ^{21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살 사망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2018년 자살자 수는 77명에서 2019년 73명, 2020년 64명, 2021년 69명으로 변동하고 있는데, 전국 증감 평균값보다 세종이 자살률이 높고,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는데도 자살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향후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시간 자살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

〈표 47〉 세종특별자치시 자살 사망 추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평균
		계	증감*	계	증감	계	증감	계	증감	
전국	자살자수	13,670	△1,207	13,799	△129	13,195	▽604	13,352	△157	222
	자살률	26.6	△2.3	26.9	△0.3	25.7	▽1.2	26.0	△0.3	0.4
세종특별 자치시	자살자수	77	△31	73	▽4	64	△9	69	△5	10.2
	자살률	26.0	△8.3	22.4	▽3.6	18.4	△4	19.0	△0.6	2.3

* 전년도 대비 (단위: 자살자 수=명,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

출처: 통계청, 2017~2021년 사망원인 통계(2022.12월)

2020년 읍면동 자살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상위 읍면동은 조치원읍(9명), 연서면(7명), 연기면(6명), 장군면(6명)이다. 또한, 2019년 대비 증가 상위 읍면동은 전동면(5명), 연기면(4명), 부강면(4명) 순으로 확인된다.

〈표 48〉 세종특별자치시 자살 현황(다수자 순)

순위	읍면동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1	조치원읍	54	10	10	15	10	9
2	연서면	25	7	2	3	6	7
3	장군면	19	3	3	4	3	6
4	연기면	18	4	2	4	2	6

출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지역 자살사망자 특성 분석」.

5개년 합계로 자살자 수를 살펴보면, 조치원읍(54명)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이 연서면(25명), 도담동이(24명) 순이다. 이를 연령별⁶²⁾로 살펴보면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의 65세 이상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2021년 자살사망자 69명의 29%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2017년~2021년 연평균 변화율 8.3%로 전국 대비 2위(상위 2.6%)로 매우 높은 변화율을 보인다.

최근 5년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견된 농약 자살사망자는 27명으로 전체 수단 중 8%를 차지하였고, 2020년 3명에서 2021년 8명으로 전년 대비 166%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는 노년기(65세 이상) 자살사망자 수가 2020년 8명에서 2021년 20명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별도로 농약 중독 자살 사망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공직자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6월~9월 4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 공무원 3명의 연속적인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0년 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국책 연구기관은 총 63개이며, 공무원과 국책기관 종사자 수는 총 20,767명으로 전체 인구의 5.7%를 차지하여 공직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세종특별자치시민 중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및 공공분야 종사자의 42.7%가

62) 80대(128.8명) > 70대(41.3명) > 50대(32명) > 60대(18.9명) > 20대(18.5명) > 40세 이하(17명) 순임.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⁶³⁾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분야 미종사자의 22.5%가 경험하는 것에 비해 20.2% 높은 경향을 보인다. 즉, 매년 공무원 자살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족이나 친지(33.6%), 친구나 동료, 이웃(23.9%)’이라고 대답하며 도움에 대한 인지도가 일치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근거 기반 정신건강 정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및 심층분석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 자살자 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심리 부검을 통한 자살 원인 분석, 위기 개입팀의 인력 증원, 지원체계 구축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만 실질적인 자살 감소로 이어져 안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범죄예방 관련 분석

다음 〈표 49〉는 최근 3년간 범죄예방 분야 등 112신고 건수 현황으로, 2020년 5,640건에서 2022년 6,191건으로 551건이 증가하여 9.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절도는 가장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범죄로, 실제 2020년 1,478건에서 2022년 1,790건으로 312건이 증가하여 21.1% 증가하였고, 시비는 2,343건에서 2,182건으로 161건이 감소하여 6.9%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외 청소년 비행의 경우 2020년 440건에서 2022년 765건으로 325건이 늘어나 73.9% 증가하여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PM 무면허 운전, 학교폭력 등 다각적으로 일상생활과 사이버상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살펴봐야 한다. 동물 학대의 경우 2021년부터 112신고 통계의 종별에 포함하여 관리 중인데, 2021년에 25건, 2022년에는 2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위험 동물의 경우 2020년 92건에서 2022년 69건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들개 떼가 출현하여 고라니를 공격⁶⁴⁾하기도 하여 위험 동물 관리와 대응도 협업이 필요하다.

63)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 낮은 스트레스(0~13점)/중간 정도의 스트레스(14~26점))

64) KBS, 아파트 단지에서 고라니 사냥한 들개 떼.. 주민 ‘불안’, 2023.4.25.일 자.

〈표 49〉 최근 3년간 범죄예방 분야 등 112신고 건수

구분	소계	절도	시비	행패소란	청소년 비행	동물학대	위험동물
2020	5,640	1,478	2,343	1,287	440	0	92
2021	6,182	1,614	2,431	1,272	779	25	61
2022	6,191	1,790	2,182	1,357	765	28	69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 〈표 50〉은 범죄위험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으로, 긍정 의견이 62.0%, 보통 의견이 27.6%, 부정 의견이 10.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0〉 범죄위험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2020년)

구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전체	소계	1.8	8.7	27.6	49.5	12.5
	조치원읍	5.3	20.2	30.8	39.1	4.6
읍·면·동별	면 지역	2.2	13.2	30.3	45.4	8.9
	동 지역	1.0	5.5	26.4	52.3	14.7
성별	남자	1.3	7.6	26.9	50.6	13.7
	여자	2.2	9.8	28.4	48.4	11.3
연령별	13~19세	2.6	7.4	27.8	45.5	16.7
	20~29세	2.1	8.6	27.2	45.9	16.2
	30~39세	1.3	8.1	28.5	48.8	13.4
	40~49세	1.2	8.1	24.9	53.7	12.1
	50~59세	2.7	8.0	29.3	51.4	8.7
	60세 이상	1.6	11.4	29.0	47.8	10.3
	65세 이상	1.5	11.3	27.0	49.6	10.6
교육 정도별	초졸 이하	2.6	12.2	29.4	44.9	10.9
	중졸	3.0	12.0	29.0	43.2	12.7
	고졸	2.1	9.5	30.2	47.9	10.2
	대학 이상	1.2	7.0	25.8	52.2	13.8
직업별	전문관리	1.1	7.4	23.3	51.6	16.5
	사무	1.8	6.4	26.0	52.6	13.1
	서비스 판매	1.5	7.4	31.9	50.0	9.2
	농어업	2.1	18.5	37.3	31.9	10.2
	기능노무	3.2	10.7	29.3	47.8	8.9

	군인/주부/학생/무직	1.6	9.1	27.9	49.1	12.3
혼인상태별	미혼	2.1	8.1	27.1	47.6	15.1
	유배우	1.4	8.6	27.3	50.5	12.3
	사별/이혼	4.0	11.4	32.6	46.9	5.1
주거 점유형태별	자가 집	1.2	8.6	26.4	49.9	13.8
	전세	2.7	7.0	29.5	49.5	11.2
	월세/기타	2.1	9.2	29.9	51.0	7.8

출처 : KOSIS 통계(검색 : 2023.8.1.)

다음 <표 51> 은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및 불안 이유에 대한 조사로 전국 단위와 인접한 충청도, 대전광역시를 비교한 수치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긍정 의견이 72.9%, 부정 의견이 27.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단위의 긍정 의견 70.4%보다 높았고, 대전광역시의 71.2%, 충청남도의 72.9%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야간 보행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안 이유에 대해서는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서가 35.1%로 높았고, 경찰서 등 치안 시설이 부족해서가 5.6%로 다른 비교 대상보다 낮았으며, CCTV 등 야간 보행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13.3%로 가장 낮아 안전에 대해서 비교적 불만이 적고, CCTV 등 방법 시설도 많아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51>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및 불안 이유(2022년)

구분	안전도					불안 이유						
	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약간 불안	매우 불안	소계	CCTV 등 야간 보행 안전시설 부족	경찰서 등 치안 시설 부족	야간에 인적이 드물	우범 지역 존재	신문 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함	기타
전국	100	13.4	57.0	26.4	3.2	100	19.5	7.8	27.4	3.2	41.4	0.6
대전광역시	100	11.7	59.5	26.0	2.7	100	18.2	7.0	22.2	1.8	50.5	0.2
세종특별자치시	100	13.3	59.6	25.0	2.0	100	13.3	5.6	35.1	2.4	43.3	0.3
충청남도	100	15.7	57.2	24.9	2.2	100	20.9	10.3	36.3	1.1	30.8	0.6

출처 : KOSIS 통계(검색 : 2023.8.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통합정보센터는 2014년 1월 1일 개소하였는데, 1년 운영예산은 약 20억 원으로, 생활방범 분야는 총 1,254개소에 2,614대를 운영하고 있고, 차량번호 식별은 총 64개소에 197대를 운영 중이며, 이외 비상벨이 2023년 2월 기준으로 1,150대가 설치되어 있다.

모니터는 LCD 52인치 상황판 54면, LED 52인치 상황판 15면, LED 관제용 모니터 70대를 운영하고 있고, 일시점 1인당 모니터링 수는 96대이다. 근무 인원은 총 17명으로 경찰관 2명과 관제요원 25명으로, 경찰관은 7시부터 16시, 11시부터 20시까지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어 2명⁶⁵⁾이 근무하며, 야간과 심야 시간에는 근무하고 있지 않고, 관제요원은 4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

방범용 CCTV 화소에 따라서 구분하면, 300만 화소 이상은 61대, 200~300만 화소는 177대, 131만 화소~199만 화소는 2,399대, 130만 화소 미만은 174대이며, 방범용 CCTV는 고정형과 회전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방범용 CCTV 중 130만 화소 이하 174대는 6.2%에 해당하는데, 고화질로 지속해서 개선하여 야간에 선명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표 52〉는 이를 정리한 것으로, 방범용 CCTV는 2,811대, 기타는 840대를 운영 중이며, 기타의 경우 교통단속 CCTV가 591대와 교통정보 수집 140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정체와 교통사고 예방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표 52〉 세종특별자치시 방범용 등 CCTV 현황(용도별)

구 분	총 계 (대)	방범용			기타				
		소계	생활방범	차량판독	소계	돌발상황 관제	교통정보 수집	교통단속	화재예방
계	3,651	2,811	2,614	197	840	55	140	591	54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65) 세종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직원 2명이 근무 중임.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차량이나 사람 이미지 입력으로 이동 동선 검색이 가능한 AI 관제 CCTV를 운영 중이며, 비명 등 이상 음원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세종호수공원 내 8개소에 배치하였다. 중앙호수공원의 방범용 CCTV 100대는 LH에서 관리 중이며, 금강 보행교에 방범용 CCTV 41대, 세종호수공원 29대를 모니터링 중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방범용 CCTV는 1,318개소에 2,811대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별로 분류하면 세종 남부서가 1,610대(57.3%), 세종 북부서에 1,201대(42.7%)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방범용 CCTV 연도별 현황으로, 2019년 1,953대에서 2022년 2,811대로, 585대 43.9%가 증가하였다. 현재 수준으로 고화질 CCTV 카메라로 업데이트와 지능형 관제시스템의 고도화,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 향후 자치경찰 출범에 맞춰 융합행정의 시각으로 적합한 운영이 추진된다면 최근 일련의 재해재난과 각종 안전사고 등을 극복하고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안전도 향상의 최일선 부서로 거듭날 것이다.

〈표 53〉 세종특별자치시 방범용 등 CCTV 현황(연도별)

연 도	2019	2020	2021	2022
대 수	1,953	2,561	2,650	2,811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실제 2022년 말 기준으로 실제 세종 남부경찰서는 440건 열람 및 자료를 제공했으며, 세종 북부경찰서는 241건 제공을 하였는데, 주로 수사 등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관기관 공조 현황은 주로 미귀가자 수색 등 실시간 수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관제요원이 직접 관제한 경우에는 주로 주취자, 폭행, 교통사고 등을 모니터링하다 발견하여 경찰의 협조를 받아 조치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통합정보센터 영상반출시스템이 구축⁶⁶⁾되었는데, 4월에 보행자 사고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과

66) 2023.7.3.일 경찰청 일보 게재됨.

LED 바닥 형 보행신호등 설치장소 선정에 반영하였고, 5월에는 지자체 관제센터와 세종청 상황실 간 CCTV 영상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였다.

다음 〈표 54〉는 읍·면 동별 방법용 CCTV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조치원읍이 542대, 금남면이 190대, 장군면이 155대, 부강면이 153대 설치되어 있다.

〈표 54〉 세종특별자치시 방법용 등 CCTV 현황(장소별 / 읍·면 기준)

구 분	계 (개소)	조치원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읍면별	1,617	542	71	80	153	190	155	123	137	84	82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 〈표 55〉는 시내권의 방법용 CCTV 현황으로, 집현동이 182대로 가장 설치 대수가 많고, 다음으로 고운동과 어진동에 121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대평동에 108대가 설치되어 있다.

〈표 55〉 세종특별자치시 방법용 등 CCTV 현황(장소별 / 동 기준)

구 분	계 (대)	고운 (1-1)	아름 (1-2)	종촌 (1-3)	도담 (1-4)	어진 (1-5)	다정 (2-1)	새롬 (2-2)	한솔 (2-3)	나성 (2-4)	대평 (3-1)	보람 (3-2)	소담 (3-3)	반곡 (4-1)	집현 (4-2)	세종리 (S-1)	가람 (S-2)
동별	1,194	121	42	22	63	121	35	38	60	75	108	79	85	92	182	66	5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은 범죄예방 강화구역 현황으로, 세종 북부서는 총 4개소를 선정하였고, 세종 남부서는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여성안심 귀갓길의 경우 세종 북부서에 3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이 많은 세종 북부서 관할에서 선제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법용 CCTV 설치와 보안등, 비상벨을 설치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 56〉 범죄예방 강화구역 현황

연번	관서	범죄예방강화구역			여성안심귀갓길				
		개소수	CCTV	보안등	개소수	CCTV	보안등	위치 안내판	비상벨
계		5	44	637	3	17	210	2	14
1	북부	4	41	599	3	17	210	2	14
2	남부	1	3	38	0	0	0	0	0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은 세부 현황으로, 세종 북부서 관내에 7개소를 운영 중으로, 조치원지구대 관내가 5개소, 전의면이 1개소, 부강면이 1개소이며, 세종 남부서는 한솔지구대 관내가 1개소이다. 총 7개소 중 관내 대학교가 3곳 포함되어 있고, 이외는 상가 밀집 지역과 초등학교 주변, 조치원역 주변으로 다중이 밀집하거나 이동이 잦은 곳이다.

〈표 57〉 범죄예방구역 등 상세 현황

연번	관할	지역관서	구역 구분	주소	지정 사유	지정연도
1	세종 북부	조치원	범죄예방구역	교리 28	조치원역 주변	2014
2		조치원	범죄예방구역	서창리 155-4	고려대학교 인근	2022
3		조치원	범죄예방구역	명리 61-27	명리 일대	2022
4		전의	범죄예방구역	읍내리 356-4	전의초 주변	2022
5		조치원	여성안심귀갓길	충현로 159	상가 밀집 지역	2014
6		조치원	여성안심귀갓길	신안리 501	홍익대학교 주변	2020
7		부강	여성안심귀갓길	부강리 486-1	부강초 주변	2022
8	세종 남부	한솔	범죄예방구역	금암리 210	한국영상대 원룸촌	2019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은 세종청의 자율방범대 현황에 관한 자료로, 세종 남부서는 8개 조직에 남성 84명, 여성 107명으로 총 191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종 북부서는 14개 조직에 남성 148명 여성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 사항은 재해 복구와 봉사활동 위주로 진행되며, 근무 횟수는 366회 순찰을 시행하였다.

〈표 58〉 세종청 자율방범대 현황

경찰서	조직 수	인원		활동 사항	
		남	여	재해복구	봉사활동
세종북부서	14	148	110	3	13
세종남부서	8	84	107	0	0
합계	22	232	217	3	13

출처 : 세종청 자료(2023.7월 기준).

별도 자체적으로 형사범 검거 실적은 없고, 최근 흉기 관련 사건 등이 다중 인파 밀집 장소에서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야간에 합동 순찰 근무를 하면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다음은 생활안전협의회 현황으로, 총 10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종 북부서는 77명, 세종 남부서는 76명이 간담회 개최와 각종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표 59〉 세종청 생활안전협의회 현황

경찰서	조직 수	인원		캠페인 등		간담회
		남	여	횟수	인원	
세종북부서	5	63	14	3	14	19
세종남부서	5	57	19	1	6	2
합계	10	120	33	4	20	21

출처 : 세종청 자료(2023.7월 기준).

다음은 세종청 생활안전과 주관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 안심 골목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깨·안·길』이라는 약칭으로, ‘깨달음을 주는 안전한 길’이라는 의미를 줄여서 명명화한 것이다. 이는 범죄예방 패러다임을 ‘일반예방’에서 ‘특별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의 일환으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전체 인구 대비 20세 미만 인구의 비율(25.3%)이 높고, 청소년 비행과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시행한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학교 57개교(2012년 기준)에서 161개교(2022년 기준)로 인구에 비례하여 청소년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청소년 비행 112신고가 2020년에 440건에서 2021년 779건, 2022년 765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표 60>은 지구대별로 청소년 비행과 학교폭력⁶⁷⁾ 112신고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60> 세종청 관내 청소년 비행, 학교폭력 신고 건수

구분(지구대)	소계	112신고(건)	
		청소년 비행	학교폭력
계	902	765	137
아름	387	322	65
한솔	233	199	34
보람	172	158	14
조치원	102	80	22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2022년 112신고 중 청소년 비행은 아름, 한솔, 보람, 조치원 순이며, 학교폭력은 아름, 한솔, 조치원, 보람 순으로 세종 남부경찰서는 아름지구대 관내가,

67) 세종청 학교폭력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5건, 2020년 68건, 2021년 82건, 2022년 106건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폭력 범죄가 증가 추세임.

세종 북부경찰서는 조치원지구대 관내의 신고가 가장 많았다. 이에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경찰·학교·지자체의 노력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인식 개선을 통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청소년 비행⁶⁸⁾과 학교폭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결과는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우범지역에서 학교폭력 등 발생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해 세종경찰청에서는 관심을 두고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하였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아람동의 치안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그림 57〉 아람동 일대 위치도와 사업 대상 지역



다음 〈표 61〉은 아람동의 인구를 정리한 것으로서 전체 인구는 23,562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적게 거주하는 지역이다.

68) 세종청 관내의 소년범죄 중 재범률은 2020년 29.5%, 2021년 21.9%, 2022년 21.7%를 보이며, 기존 절도와 폭력 범죄에서 기타 범죄 등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고, 점차 저(低) 연령화 되고 있어 교육 당국과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건전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임.

〈표 61〉 아름동 관내 인구 현황

구분	전체인구	내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아름동	23,562	23,498	11,618	11,880	64	26	38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은 연도별 범죄 및 112신고 분석 현황이다.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86건에서, 2022년 191건으로 105건이 증가하여 122.1% 증가하였는데, 이는 절도 사건이 2020년 51건에서 2022년 122건으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대규모 아파트 밀집 단지에 입주자들이 많아지면서 절도가 증가한 것으로, 다른 강력 사건이 적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절도 발생을 줄이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표 62〉 아름동 관내 치안 현황

구분	범죄	5대 범죄						112신고
		소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합계	959	414	0	0	7	249	158	7,052
2022	361	191	0	0	0	122	69	2,611
2021	319	137	0	0	6	76	55	2,383
2020	279	86	0	0	1	51	34	2,058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이에 반해 112신고 건수는 2020년 2,058건에서 2022년 2,611건으로 553건(26.9%)이 증가한 만큼 향후 112신고 추이에 주목하면서 아름동에 적합한 자치경찰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표 63〉은 아름지구대 관내 중 ‘먹자골목’에서 접수된 112신고 건수 현황으로, 17시부터 증가하여 19시에 최다 발생 후 점차 감소하는 패턴으로 분석된다.

〈표 63〉 아름동 먹자골목 112신고 접수 시간

시간	계	17	18	19	20	21	22	23	24	기타
건수	53	5	7	11	7	7	5	5	3	3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름동 먹자골목 2022년 청소년 비행 112신고는 총 53건으로 3건을 제외하면 17시부터 24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 귀가 또는 학원 수업 등이 종료된 이후에 밀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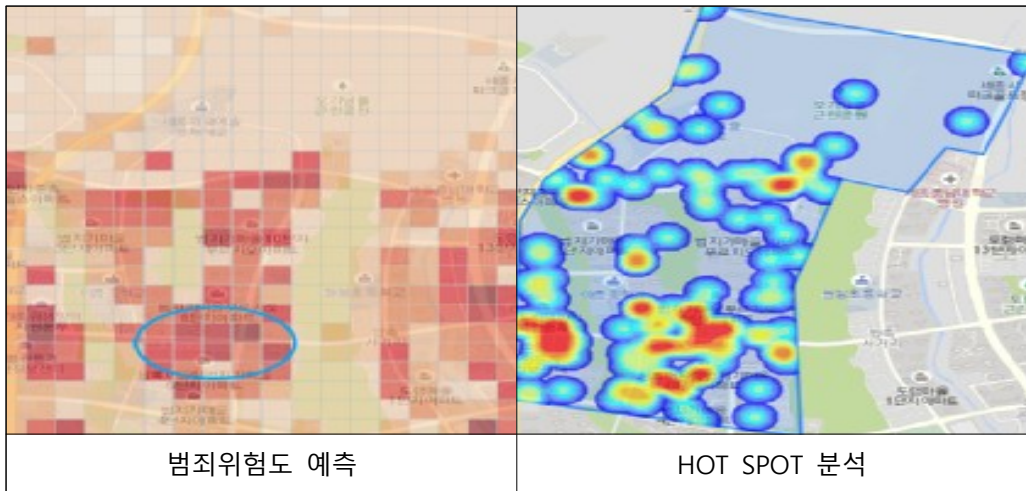
한편, 아름동 청소년 비행 장소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학원 및 상가 밀집 지역이 청소년 비행 112신고의 장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위험도 1등급에 해당한다.

현장 주변을 세부 분석해 보면, 도로 양쪽으로 7개의 상가건물이 있고, 1층에는 주로 식당·카페 등이 입주, 2층 이상에는 식당 외 교회, 학원 등이 위치하여 낮과 밤 모두 유동 인구가 많고, 왕복 2차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운전자, 보행자 모두 시야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고, 범지기마을 8단지에서 먹자골목으로 이어지는 골목(아름 주차장과 행복 프라자 사이, 약 3.3M 폭, 약 24M 길이)이 지름길로 활용되어 지나가는 사람이 많으나 흡연 등 청소년 비행으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해 신고하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감안하다면 실제 청소년 흡연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골목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식당가 부근에는 LPG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는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기에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을 보행하면서 불안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최근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해 주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향후 자치경찰사무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자치단체와 협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8〉 아람동 빅데이터 분석 결과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은 조치원 치안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그림 59〉 조치원 일대 위치도 및 사업 대상 지역



다음은 조치원 관내 인구 현황으로, 전체 43,834명으로 남성이 50.1%, 여성이 49.9%로 성비는 거의 비슷하며, 외국인의 경우 남성이 51.9%로 여성보다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표 64〉 조치원 관내 인구 현황

구분	전체 인구	내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조치원	43,834	42,201	21,977	20,251	1,633	848	785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은 조치원 관내 치안 현황으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으며 112신고 건수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라는 큰 변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원 관내는 비교적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5〉 조치원 관내 치안 현황

구분	범죄	5대 범죄						112신고
		소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합계	3,957	1,711	6	1	58	674	972	33,568
2022	1,283	550	0	0	24	228	298	11,153
2021	1,325	620	2	0	13	232	373	11,266
2020	1,349	541	4	1	21	214	301	11,149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으로 렉스 스퀘어 주변의 112신고 건수는 총 267건으로, 이 중 청소년 비행 신고는 36건 접수되어 13.5%에 이른다. 특히 2023년 1~3월의 경우 61건 신고 중 26건이 청소년 비행으로 42.6%로 급증하였다.

〈표 66〉 렉스 스퀘어 주변 치안 현황

구분	5대 범죄						112신고	
	계	살인	강도	강간·강 제추행	절도	폭력	전체	청소년 비행
합계	13	0	0	0	0	0	267	36
2023.3.	2	0	0	0	2	0	61	26
2022	7	0	0	0	4	3	133	9
2021	4	0	0	0	2	2	73	1

* 112신고·범죄 발생 건수(렉스 스퀘어 반경 100m 내)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은 112신고 접수 건수를 시간대별로 분류한 것으로, 하교 시간(16시) 이후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14시 이전과 22시 이후에는 신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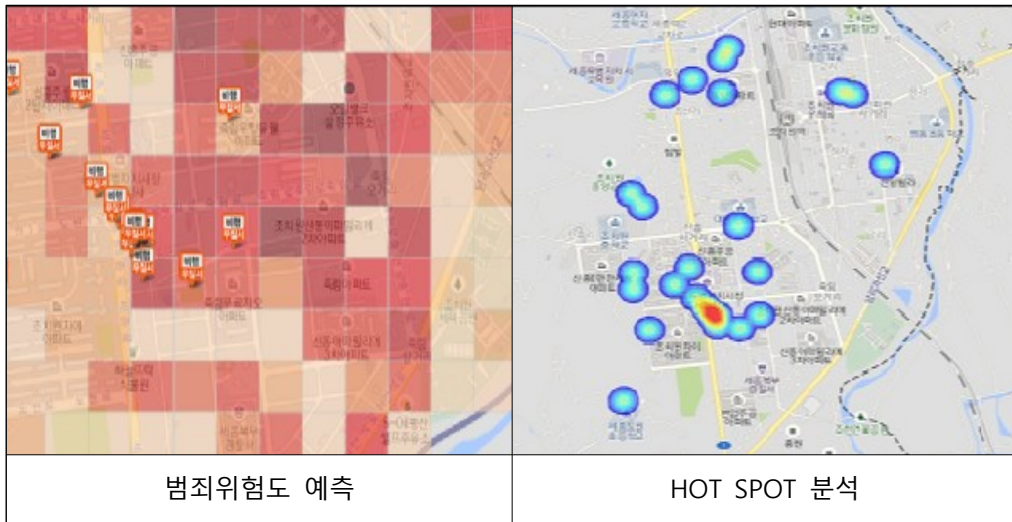
〈표 67〉 렉스 스퀘어 112신고 접수 시간

시간	계	14	15	16	17	18	19	20	21
112신고	36	1	1	3	4	9	8	6	4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렉스 스퀘어는 지상 8층, 지하 2층 건물로 1층 노브랜드 옆 공터, 계단실, 실외기실에서 청소년 흡연이 빈번하며, 특히 PC방과 코인 노래연습장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60〉 조치원(럭스 스퀘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현장 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하교 시간 이후인 17~20시가 청소년 밀집 시간대이며, 방학 기간에 청소년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 아울러 럭스 스퀘어 인근 아파트에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여 아파트 단지 내 공원·도시 공원에 모여 흡연·음주를 하는 등 청소년 비행 발생이 빈번한 지역이다.

〈그림 61〉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추진도(아름동)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그림 62〉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추진도(조치원)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이에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는 주민참여 및 하이테크를 융합한 3세대 셉테드를 적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1세대 셉테드에서 벗어나 주민·경찰·지자체 등 범죄예방 주체가 모두 참여하여 공간적 특성에 맞춘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고, 골목길 내 금연 장소를 지정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 및 빔프로젝터, 보안등, 스테인리스 반사거울 등 방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닌 공익광고(ex. 노담, 경찰·시민 참여 영상) 등 영상·음향을 송출하고, 스테인리스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거울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면서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골목길을 범죄·청소년 비행에 대한 두려운 공간이 아닌 시민·경찰·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IoT(사물인터넷) 첨단기술 기반 범죄예방 활동을 접목하여 종합적인 범죄예방을 전개하였다.

다음 표는 ‘깨·안·길’ 사업의 추진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안전분과위원회에서도 안건으로 논의되어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되었다.

〈표 68〉 ‘깨·안·길’ 사업 진행 현황

추진 일정	추진 사항
‘23. 4.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상병헌 의원장) 방문, 셉테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청소년 비행지역 환경개선 필요성 전달
‘23. 4. 26.	제4회 생활안전분과위원회 안건 논의
‘23. 5. 2.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방문, 환경개선안 의견 청취
‘23. 5. 11.	건축공간연구원 방문, 비행지역 내 영역성 강화 위한 흡연금지 사운드 방법시설 설치 및 빔 프로젝트 콘텐츠 개발 등 자문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향후 특별교부세 예산 또는 2024년 예산을 신청하여 공동체 치안 활동을 지속할 예정으로, 경찰은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지 탄력 순찰 장소를 지정하여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 등 지역 치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하여 금연 구역을 지정하였고, 다수의 교육기관에서는 청소년 비행 예방 순찰 등 선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 협력방법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있으며,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협력 단체인 자율방범대와 시민 경찰⁶⁹⁾과 합동으로 순찰하면서 선제적인 치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남부서의 경우 2021년 기준 80,392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아름지구대 관내가 31,918건으로 39.7%, 한솔지구대가 26,554건으로 33.0%, 보람지구대가 16,810건으로 20.9%, 금남파출소가 5,110건으로 6.4%를 이룬다. 여기에서 아름지구대는 도담·어진지구대 신설과 함께 향후 분리 예정으로, 실제 가장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솔지구대를 분석해 보았다.

다음은 한솔지구대 기준으로 112신고 건수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2021년과 2022년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실제 자치경찰 사무와 연관이 높은 항목을 별도로 편집하여 월별로 정리한 것으로, 2021년 1년 동안 총 11,275건이 접수되었고, 다음 〈표 69〉의 2022년에는 총 12,512건이 접수되었다. 월별 건수는 5월부터 신고 건수가 1천 건이 넘는 상태에서 10월까지 유지되다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이며, 1월과 2월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1년 1/4분기와 다음 〈표 69〉의 2022년 1/4분기를 비교해 보면 2,256건이 2,479건으로 증가하여 9.9%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연중 신고 건수도 11.0% 증가하였다. 이는 나성동 일대 상가 등 밀집 지역에서 주취자, 위험방지, 보호조치 등 신고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즉,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한솔지구대는 향후 더욱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9) 시민경찰학교는 2022년 최초로 운영하여 초기 정착 단계로, 세종남부서와 세종북부서 각 15명씩 5일간 교육 후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됨.

〈표 69〉 한솔지구대 112신고 건수(2021년)

구분	2021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10,623	652	688	916	919	1,004	1,097	1,052	1,004	1,030	999	990	924
절도	344	17	24	36	29	40	44	32	29	25	32	30	23
가정폭력	335	15	24	26	18	19	31	23	30	47	39	40	38
아동학대 (가정 내)	76	8	6	13	6	6	4	5	9	7	5	9	6
아동학대 (기타)	10	1	0	1	1	1	2	1	0	1	0	1	2
데이트폭력	48	2	4	7	6	6	4	2	4	4	4	3	4
폭력	310	30	21	27	26	30	25	36	31	40	27	35	12
스토킹	13	0	0	0	0	2	0	1	0	0	3	2	5
학교폭력	44	2	1	0	0	4	9	6	2	1	4	10	7
청소년비행	207	18	4	19	7	26	23	24	26	21	38	14	5
주취자	509	15	13	36	31	46	72	67	49	48	60	59	28
보호조치	105	2	6	2	4	8	14	4	10	15	15	10	17
위험방지	1,150	94	99	104	111	119	127	143	88	87	79	100	93
교통사고	1,080	48	75	91	127	87	97	119	83	92	103	127	79
교통불편	260	28	18	31	21	26	32	21	14	28	28	17	24
교통위반	222	6	10	23	17	11	25	24	24	37	16	15	20
음주운전	268	16	13	31	27	29	23	24	36	25	20	20	20
변사자	20	2	1	2	0	2	1	2	1	5	4	2	0
비상벨	117	6	16	8	6	4	8	10	7	15	10	19	14
가출 등	66	1	3	2	8	3	5	3	7	9	8	12	6
자살	91	7	2	4	3	7	5	9	12	8	23	13	5
실종(실종 아동 등)	202	5	9	11	17	17	24	21	21	21	20	16	25
소음	603	11	14	23	62	87	62	35	56	95	60	35	74
재해재난	157	28	25	15	11	17	6	10	30	23	10	0	10
위험동물	8	0	2	1	1	1	0	0	3	0	0	0	0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은 2022년 112신고 건수를 정리한 것으로, 절도 신고는 전년 대비 31.1%, 가정폭력은 31.9%, 아동학대(가정 내) 33.8%, 아동학대(기타) 28.1%,

데이트 폭력 34.1%, 스토킹 25.7%, 학교폭력 32.3%, 청소년 비행 33.8%가 증가하였다. 새로운 생활권이 형성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가정 내 결합과 해체 등 다양한 변인이 이러한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신고사건이 실제 어떻게 연계되고 변화하는지를 별도로 분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과 협업하는 담당이 생겨야 할 것이다. 기존과 같이 각각 해당 과에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복지와 교육자치 등 자녀의 성장과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해야만 사회적약자 관련 정책이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절도 사건도 세부 장소별로 분석하여 CPTED 전략과 함께 연계시키고, 세종통합관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치안력의 배치로 사전 범죄예방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방안도 자치경찰 추진 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외 폭력 신고사건이 45.0%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취자 신고 40.0%, 보호조치 32.5%, 위험방지 30.6% 증가한 것과 연관이 깊은 만큼 이에 대한 감소방안은 시민들이 스스로 절주(節酒)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음주운전 등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31.5% 증가한 만큼 실제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폭넓게 논의되길 바란다.

한편, 재해재난 신고는 43.6%, 위험 동물 신고도 29.9% 증가한 만큼 경찰의 치안력으로 처리가 곤란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해당 부서와 더욱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토대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음 〈표 70〉에는 항목이 빠져 있으나 기타 형사범과 풍속영업, 수배자 신고, 시비신고, 행패 소란, 비상벨 신고 등 다양한 신고가 실시간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소음 신고도 전년 대비 34.0% 증가하여 각종 민원성 신고도 접수되고 있다. 자칫 감정적으로 다투다가 강력 사건으로 급변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긴장하면서 중재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 최근 들어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불안에 기초한 순찰 강화, 현장 확인 등 신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솔지구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표 70〉 한솔지구대 112신고 건수(2022년)

구분	2022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12,512	852	758	869	1,061	1,173	1,109	1,226	1,156	1,132	1,232	1,041	903
절도	421	22	17	28	34	39	50	42	32	47	38	35	37
가정폭력	389	35	29	48	35	41	22	28	27	31	21	44	28
아동학대 (가정내)	55	6	0	8	1	6	7	5	5	1	6	7	3
아동학대 (기타)	5	0	0	2	0	0	1	0	0	1	0	1	0
데이트폭력	57	2	7	3	4	10	6	6	6	1	3	4	5
폭력	346	33	21	35	22	10	32	33	23	35	45	26	31
스토킹	24	6	2	4	1	1	0	2	1	3	3	0	1
학교폭력	34	4	2	1	1	9	3	1	1	2	6	4	0
청소년비행	199	16	7	7	18	19	21	12	26	18	31	20	4
주취자	761	29	30	18	49	94	100	133	64	73	62	57	52
보호조치	127	10	8	5	7	13	17	25	8	8	11	6	9
위험방지	1,576	97	79	86	119	133	156	194	127	130	170	152	133
교통사고	1,285	99	68	80	124	109	92	127	105	99	150	127	105
교통불편	308	7	10	34	42	32	24	22	17	20	37	27	36
교통위반	245	5	10	13	20	28	18	27	38	31	23	23	9
음주운전	395	35	24	18	29	44	33	39	36	37	33	37	30
변사자	36	4	3	3	1	3	2	2	6	4	4	1	3
비상벨	257	20	23	21	19	14	29	27	36	22	20	17	9
가출 등	56	5	1	3	6	6	13	3	5	5	2	2	5
자살	123	17	6	5	7	7	16	14	11	19	13	2	6
실종(실종 아동 등)	278	14	17	22	17	20	26	12	36	23	37	27	27
소음	497	48	53	58	52	45	37	29	70	55	28	11	11
재해재난	30	9	10	5	0	0	0	0	4	0	0	0	2
위험동물	17	1	1	1	4	2	0	2	0	2	1	2	1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5. 교통 분야 관련 분석

다음 <표 71>은 교통사고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으로, 긍정 의견이 45.7%로 범죄예방 분야의 62.0%에 비해 낮고, 보통은 33.1%, 부정 의견은 21.3%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더 불안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1> 교통사고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2020년)

구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전체	소계	3.9	17.4	33.1	41.2	4.5
	조치원읍	4.7	21.1	37.2	35.1	1.9
읍·면·동별	면 지역	3.2	17.4	37.1	39.3	2.9
	동 지역	3.8	16.7	31.4	42.8	5.3
성별	남자	3.7	15.5	33.0	42.9	4.8
	여자	4.0	19.2	33.1	39.6	4.1
연령별	13~19세	3.3	15.6	36.1	40.0	4.9
	20~29세	6.3	23.7	25.3	38.1	6.7
	30~39세	6.4	19.5	30.9	37.9	5.3
	40~49세	3.1	16.5	35.7	40.5	4.1
	50~59세	2.4	14.4	35.2	44.8	3.2
	60세이상	1.5	15.0	34.3	45.9	3.3
	65세이상	1.9	16.0	31.9	46.5	3.7
교육 정도별	초졸이하	2.1	14.8	36.5	41.5	5.0
	중졸	2.8	18.3	33.5	43.7	1.8
	고졸	3.4	17.6	34.7	40.8	3.5
	대학이상	4.6	17.7	31.5	41.0	5.2
직업별	전문관리	5.1	16.8	30.9	41.2	6.0
	사무	5.1	17.5	30.2	42.7	4.5
	서비스판매	2.3	20.1	35.6	37.9	4.1
	농어업	2.5	15.8	42.0	37.0	2.7
	기능노무	3.7	14.1	36.8	41.1	4.3
	군인/주부/학생/무직	3.3	18.0	32.8	41.9	4.0
혼인상태별	미혼	5.2	18.9	31.3	38.8	5.8
	유배우	3.5	17.2	33.6	41.4	4.3
	사별/이혼	3.0	13.5	34.8	47.6	1.1
주거 점유형태별	자가집	2.8	14.2	33.8	44.7	4.5
	전세	6.1	21.0	26.8	39.3	6.7
	월세/기타	4.8	18.4	32.4	40.6	3.8

출처 : KOSIS 통계(검색 : 2023.8.1.)

1) 실태

다음 〈표 72〉는 최근 3년간의 교통 관련 112신고 건수를 정리한 것으로, 2020년 8,766건에서 2022년 10,334건으로 1,568건 증가하여 17.9%의 증가율을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2020년 5,100건에서 2022년 5,981건으로 17.3% 증가하였고, 교통 불편 신고는 1,730건에서 1,523건으로 오히려 12.0% 감소하였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건수는 652건에서 900건으로 38.0% 증가하였으며, 음주운전 신고는 1,280건에서 1,928건으로 50.6% 증가하였다.

〈표 72〉 최근 3년간 교통 관련 112신고 현황

구분	소계	교통사고	교통 불편	교통 법규 위반	인피 도주	음주운전
2020	8,766	5,100	1,730	652	4	1,280
2021	9,868	5,532	1,919	807	7	1,603
2022	10,334	5,981	1,523	900	2	1,928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세종특별자치시는 최초부터 계획도시고 인프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교통 안전 지수가 높아야 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신고 변화에 따른 교통 정책과의 연계성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연동되고 있는지, 세종 북부서 관할의 면(面) 단위 지역에서 교통약자들이 안전한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 73〉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통 현황으로, 2018년 자동차 등록 대수 167,705대에서 2022년 213,626대로 45,921대가 증가하여 27.4% 증가하였고, 인구는 같은 기간 대비 69,465명이 증가하여 22.1% 증가하였다. 즉, 인구 증가율보다 차량 증가율의 비율이 더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

〈표 73〉 세종특별자치시 교통 현황

연도	자동차 등록 대수(대)	인구(명)	도로 연장(km)
2018	167,705	314,126	402
2019	183,696	340,575	403
2020	195,199	355,831	423
2021	204,448	371,895	423
2022	213,626	383,591	423

출처 : TASS(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검색: 2023.8.1.)

다음 〈표 74〉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교통사고 현황으로, 2018년에 795건에서 증감하다 2022년에는 932건으로, 137건 증가하여 17.2% 증가하였다. 사망자는 2018년 20명에서 2020년 7명으로 감소한 후, 다시 2022년에는 17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2018년 1,142명에서 2022년 1,330명으로 188명이 증가하여 16.5% 증가하였다.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급증하지 않았으나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대형교통사고와 사망사고 등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선제적으로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홍보 전략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74〉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고 현황

년도	교통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2018	795	20	1,142
2019	922	15	1,301
2020	813	7	1,076
2021	788	16	1,031
2022	932	17	1,330
연평균(명)	850	15	1,176

출처 : TASS(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검색: 2023.8.1.)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망사고 현황으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19라는 변수가 있어 감소하였으나 작년의 경우 17명이 사망하여 증가세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차 대 차 사고 비율이 27건으로 4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차량 단독 사고, 차 대 사람 사고가 12건으로 21.4%로 나타났다.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 세부적으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또는 음주운전 등 개별적 원인에 따른 예방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표 7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망사고 현황(연도별)

구분	차 對 사람	차 對 차	차량 단독	소계
소계	12	27	17	56
2023.7월	2	3	3	8
2022	4	7	6	17
2021	3	4	2	9
2020	1	5	1	7
2019	2	8	5	15

출처 : 세종경찰청 자료(2023).

다음 〈표 76〉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망사고를 연령대별로 구분한 것이다.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56명의 사망자 중에서 노인이 27명 사망하여 총 48.1%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즉, 세종의 경우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을 상대로 한 홍보와 예방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시내권의 경우 과속카메라 설치와 스쿨존 등 단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이 적지만, 시외권은 과속 등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별도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망사고 현황(연령별)

구분	계	노인(65세 이상)	어린이(13세 미만)	그 외
2023.1~7월	8	4	-	4
2022.1~7월	10	4	-	6
2022	17	9	-	8
2021	9	4	-	5
2020	7	2	-	5
2019	15	8	-	7
소계	66	31	0	35

출처 : 세종경찰청 자료(2023).

다음 〈표 77〉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지수 현황으로, 도로 환경과 보행자는 A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나, 자전거와 이륜차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C등급을 받은 후 개선되었다가 다시 2021년 B 등급으로 하락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별도로 사고조사 분석에서 자전거와 이륜차에 대해 세부 분석할 것이다.

〈표 77〉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지수 현황

연도	전체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이륜차	보행자	교통 약자	운전자	도로 환경
2018	B	A	C	A	A	B	A
2019	A	B	C	A	B	A	A
2020	A	A	A	A	A	A	A
2021	A	B	B	A	A	A	A

* 교통안전지수는 인구, 도로연장 등 교통여건에 따라 4개의 그룹(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으로 구분하여 A~E의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다음 <표 78>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로,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도 증가하였는데, 무인단속 건수의 경우 2021년에 19,680건에서 2022년 21,311건으로 1,631건이 증가하여 8.3%의 증가율을 보이며, 음주운전의 경우 78건이 증가하여 16.0% 증가하였다. 무면허 운전이 급증한 것은 PM과 같은 이동형 장치 등에 대한 단속이 증가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표 78>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

연도	합계	음주 운전	무면허	통고 처분	무인	범칙금	보행자	질서 요청서
2021	190,184	489	102	2,580	166,823	19,680	4	111
2022	201,111	567	526	2,245	176,296	21,311	20	146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다음 <표 79>는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시설 현황으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해당 항목 모두 증가하고 있다.

<표 7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시설 현황

연도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지	주·정차금지	횡단 보도	교차로
2021	692	12,719	4,801	434	2,383	951
2022	716	12,870	4,899	434	2,441	993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한편, 다음 <표 80>은 교통경찰관 현황으로 현재 기준으로 5명이 과원이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교통환경의 확장성과 인구 유입,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원 반영을 현실화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실제 세종청 교통계의 경우 정원은 계장과 주무관 1명만 반영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자치경찰제의 본격 출범과 함께 정원 증원은 물론 업무량을 고려하여 현원을 반영해 주는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80〉 세종청 교통경찰관 현황

구분	정원	현원	직제(교통 인원)
세종경찰청	10	12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교통계, 교통사고조사계
세종남부서	18	21	경비교통과 소속, 교통관리계, 교통사고조사팀
세종북부서	16	16	경비교통과 소속, 교통관리계, 교통사고조사계
소계	44	49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2) 교통사고 다발지역 분석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 분석(도로교통공단 자료)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2018년 자전거 사고 다발지역⁷⁰⁾을 분석하면, 발생 현황은 4건에, 사망자 1명, 중상자 3명이 발생하였다.

〈그림 63〉 조치원을 상리 사거리 부근



70) 조건 : 반경 200m 내, 대상사고 4건 이상 발생지역.

※ 교통류 분석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상리 사거리는 1번 국도의 세종 방향, 천안 방향 교통류가 상충하고 조치원을 중심지의 교통류, 청주 방향 오송역의 교통류까지 상충하여 사고가 빈번한 지역, 특히, 조치원 일반산업 단지, 번암 공업단지 등 산업단지로 인한 대형차량의 통행이 잦고, 조치원읍의 노인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도 상당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음. 홍익대, 고려대 캠퍼스 등이 있어 천안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교통류 또한 상당한 편으로 조치원읍, 세종특별자치시내 목적지가 아닌 오송 방향 목적지의 교통류는 '오송 제2생명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도로를 활용하여 분산시키는 정책 필요, 마찬가지로 세종 5-3 생활권 '세종 오송로'를 통하여 세종에서 오송으로 진행하는 교통류를 최대한 분산하는 정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프라 측면 : 도로 정비가 완료되어 오송 방향 조천교를 지나는 방향과 조치원 방향은 보차도 분리가 되어 있지만, 천안 방향, 세종 방향은 보차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음. 하석만으로 옆 조천 천변길은 보행자,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보행자나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프라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노인 보행사고 다발 지역⁷¹⁾을 분석해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역전교차로 부근으로, 4건이 발생해 중상 2명, 경상 1명, 부상 1명의 피해가 있었다.

〈그림 64〉 조치원읍 역전교차로 부근



71) 조건 : 반경 200m 내, 대상사고 3건 이상 발생지역.

※ 교통류 등 분석 : 회전교차로는 원활한 교통류의 흐름을 유도하고 신호로 인한 손실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교통류가 빈번하지 않은 지방 소도시 중심지에 많이 설치하여 교통류의 흐름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 통과 교통량이 많으면 회전교차로는 그 효율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도 빈번히 일어남. 신호 교차로 등 단속류 교차로보다 차량과 차량과의 상충, 차량과 보행자·자전거의 상충이 많기 때문임. 따라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양방향 인도 노점 등을 근절하여 노인 보행자의 차도 진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해야 할 것임.

다음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고⁷²⁾를 분석해 보면, 사고 다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에 있는 소담 초등학교 부근으로 총 2건이 발생하여 2명의 경상자가 피해를 입었다. 2020년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 다발지역 2곳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교 부근⁷³⁾인데, 4건이 발생해 부상자 2명, 중상자 2명이 피해를 봤다.

〈그림 65〉 조치원읍 서창교 부근



※ 서창교 부근은 세종중학교, 교동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보행자, 자전거 통행량이 많고 특히, 서창교 조천 지류에는 천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해당 산책로로 접근하려는 보행자, 자전거 등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서창교 남측 부근은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72) 반경 300m 내, 대상사고 2건 이상 발생지역.

73) 반경 200m 내, 대상사고 4건 이상 발생지역.

천변 산책로로 접근하는 통로에 주정차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봉 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두 번째 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에 있는 종촌 3교 부근⁷⁴⁾인데, 3건이 발생해, 사망자 1명, 경상자 1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림 66〉 세종특별자치시 종촌 3교 부근



※ 종촌 3교 부근은 주거지 밀집지의 역임과 동시에 종촌 고등학교, 종촌중학교 등 학교가 있으며 학원가, 대형 멀티플렉스 시설이 있는 '메가시티' 인접. 자연스럽게 중·고등학생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높으며 이에 대한 사고도 빈번함. 특히 종촌 3교에 최근접한 교차로는 주거 단지 내 교차로로는 규모가 크고 통과 교통량이 많아, 각 학교 또는 학원에서는 등·하교 안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자전거 통학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필요성 대두. 또한, 주차를 위해 건물을 진출입하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의 차단을 위해 차단봉을 설치하고 가드레일 연장을 지속해서 추진 필요.

다음은 2021년 사고 현황 중 학교지역 어린이 사고에 대한 분석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소담동 소재 소담초교 부근⁷⁵⁾에서 사고가 빈발하며, 발생 건수는 3

74) 반경 200m 내, 대상사고 사망자 발생 시 3건 이상 발생지역.

건에 중상자 1명, 경상자 2명이다. 이외, 도담동 소재 도담초등학교 부근⁷⁶⁾은 2건이 발생하여 경상자 2명이 발생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교통 여건은 점차 발전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 대수, 인구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분실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의 성장세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추세와 맞물려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등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교통 안전지수는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등 교통에서 안전한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초기부터 계획된 도로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내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도시의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류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세종의 중심지는 인구 증가와 도시의 성장으로 늘어나는 교통류를 확충된 교통안전 인프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지만, 중심지와 인접한 읍면 지역 (북-연기면, 조치원읍, 남-금남면, 서-장군면, 동-연동면, 부강면)은 늘어나는 교통량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조치원읍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위치하기 전에도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겨나면서 더욱 많은 교통량이 통과하는 지역이 되었고, 현재에도 도로 공사 구간이 많다.

위에서 교통사고 다발지 분석 결과 총 7건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3건, 자전거 사고 3건, 노인 보행사고 1건으로 차량 대 차량 사고보다 차량과 보행자나 자전거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고, 교통단속 및 교통안전시설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 관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7월 말 현재 전년 대비 -2명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에 구성된 도로교통환경 개선협의체⁷⁷⁾ 활동 및 교통사고 사망 장소

75) 반경 300m 내, 대상사고 2건 이상 발생지역.

76) 반경 300m 내, 대상사고 2건 이상 발생지역.

77)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모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하고 토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교통행정의 효율성 도모, 교통사고 사망 현장점검 :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유관기

합동점검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협의체의 성과가 실제 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자치경찰 위원회 산하 실무협의회⁷⁸⁾와 교통분과 위원회를 활용하여 관계기관이나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교통행정에 즉각 반영하여 최단 시간 내에 개선해 나가고 있다.

3) 개선방안

세종특별자치시의 교통환경과 시설,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가장 먼저 유관기관 간 연계에 있어 세종경찰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며, 도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세종교통경찰의 직제 상향 조정 및 정·현원 증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행정중심 지역과 이웃한 읍면 지역의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노인 보행자 안전교육 및 특별정책, 보행자와 차도 분리 등의 개선이, 세종 남부서 관내 아파트 밀집 지역은 학교, 학원을 중심으로 자전거 통학 학생들이 많은 만큼의 집중 안전교육 및 세종교육청과 협업하여 안전 장비 지급, 통학 시간 집중 계도 등이 필요하다.

이미 세종의 경우 교통단속의 기계화 및 무인화 추진, 도시통합센터와 유기적 협조체계가 강화된 만큼 실제 교통 분야에서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가와 세종경찰, 세종자치경찰위원회 간 분야별 세부 정보를 실시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실효적·입체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며, 교통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러한 변화의 시각에서 교통행정과 협업하면서 중장기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여 향후 자율주행차 보급까지 고려하여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이 교통사망사고 발생장소에, 익일 모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 중임.
78) 실무협의회는 매월 개최, 교통분과위원회는 분기별 개최 원칙.

제3장 연구 결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1절 양적 연구 결과 분석

1.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

IPA 분석은 ‘중요도’와 ‘현재 수준의 수행도’라는 두 개의 차원을 평균값을 중심으로 4사분면(2×2 매트릭스)에 배치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집중해야 할 영역과 불필요하게 과잉 투입되고 있는 영역을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⁷⁹⁾

이는 한정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⁸⁰⁾ 평가할 속성의 평균값만 산출하면 Matrix를 통해 쉽게 결과를 도출하여 시간과 비용의 한계를 줄일 수 있다.⁸¹⁾

또한, IPA 기법은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에 개별 속성들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⁸²⁾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IPA 기법은 사회과학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된다.⁸³⁾ 무엇보다, IPA 기법은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

79)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https://doi.org/10.2307/1250495>; 김정환, & 유영진. (2016). IPA 기법을 활용한 한식당 선택속성과 만족도,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 간의 영향관계 연구. *호텔경영학 연구*, 25(3), 113-132.

80) 김보미, & 이동근. (2017). 전통적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와 수정된 IPA의 비교 연구: 순천만 습지를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5(2), 40-50. <https://doi.org/10.9715/KILA.2017.45.2.040>; 남교민, 김동희, 김민영, 노윤정, & 송지훈.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정된 IPA를 활용한 대학생활만족도-중요도 분석: L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9(3), 135-158. <https://doi.org/10.22327/kei.2021.39.3.135>

81) Duke, C. R., & Persia, M. A. (1996). Performance-importance analysis of escorted tour evaluation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5(3), 207-223.

82)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https://doi.org/10.2307/1250495>

83) Lai, I. K. W., & Hitchcock, M. (2015).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n tourism: A framework for researchers. *Tourism Management*, 48, 242-267.

출하는데 유용한 분석 기법이다.⁸⁴⁾

전통적 IPA 기법은 중요도(Y축)와 성취도(X축)의 평균값 또는 중앙값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2차원 사분면으로 시각화한다(<표 1> 참조).⁸⁵⁾ 각 사분면의 의미를 살펴보면, 1사분면은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아 현재 수준을 유지관리(Keep up the good work)해야 하는 영역이고, 2사분면(concentrate here)은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는 낮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영역이다.

3사분면은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낮은 우선순위(low priority) 영역으로 추가 투입이 불필요한 영역이고, 4사분면(possible overkill)은 중요도는 낮지만 성취도는 높아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투입 자원의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영역이다.⁸⁶⁾

<https://doi.org/10.1016/j.tourman.2014.11.008>.

- 84) 남교민, 김동희, 김민영, 노운정, & 송지훈.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정된 IPA를 활용한 대학 생활만족도-중요도 분석: L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9(3), 135-158.

<https://doi.org/10.22327/kei.2021.39.3.135>; Alberty, S., & Mihalik, B. J. (1989). Evaluation of microcomputer learning experiences. Computers & Education, 13(1), 9-15.

- 85) 김경환, & 유영진. (2016). IPA 기법을 활용한 한식당 선택속성과 만족도,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 간의 영향관계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5(3), 113-132.; Matzler, K., Bailom, F., Hinterhuber, H. H., Renzl, B., & Pichler, J. (2004). The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e-level performance and overall customer satisfaction: A re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 performance analysi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3(4), 271-277.

[https://doi.org/10.1016/S0019-8501\(03\)00055-5](https://doi.org/10.1016/S0019-8501(03)00055-5)

- 86) Deng, W. (2007). Using a 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pproach: The case of Taiwanese hot springs tourism. Tourism Management, 28(5), 1274-1284.

<https://doi.org/10.1016/j.tourman.2006.07.010>;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https://doi.org/10.2307/1250495>; 김이태, & 류예빈. (2019). 전통적 IPA 와 수정된 IPA 를 활용한 컨벤션 선택속성 개선방안. 호텔경영학연구, 28(1), 47-59.

<https://doi.org/10.24992/KJHT.2019.01.28.01.47>

〈표 81〉 IPA 결과에 따른 사분면별 해석기준

Importance	High	II	I	사분면	IPA 결과 해석	
	Low	III	IV	I	Keep up the good work	
					II	Concentrate here
					III	Low priority
				IV	Possible overkill	
		Low	High	Performance		

본 연구는 자치경찰 활동을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 세종특별자치시청에 근무하면서 경찰의 치안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한편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무원 등 3개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진이 본 연구의 목적을 반영하여 집단별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표 82〉 설문조사 문항 구성 개관

구 분	시민	경찰관	공무원
전체 문항 수	41	33	34
인구사회학적 분석	8	9	10
경찰활동 관심도	21	-	11
자치경찰 특수시책	12	6	5
자치경찰제도 인식	-	12	6
자치경찰제도 만족도	-	6	2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나우앤서베이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 166건, 경찰 82건, 공무원 31건 등 총 279건을 수집하였으며, 연구 대상별로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 결과

1) 세종특별자치시민 대상

(1) 인구사회학적 통계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세종특별자치시민 166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동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으며(86.7%), 대학 졸업의 학력을 소지한 시민의 응답이 다수였다(41.6%). 응답자의 직업은 공무원이 다수였으며(37.3%), 거주하는 가구 형태는 다인(多人) 가구가 대부분이었다(82.5%). 또한, 응답자 중 2명의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다수였다(56.9%).

응답자의 연령은 40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다수였다(53%).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더 많았으나(57.2%)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응답자 중에서 세종시에 5년에서 9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였다(39.8%).

〈표 83〉 인구사회학적 통계 분석 결과(시민)

구분	항목	인원(명)	비율(%)	구분	항목	인원(명)	비율(%)
지역	동지역	144	86.7 %	가구	1인가구	29	17.5 %
	면지역	5	3.0 %		다인가구	137	82.5 %
	읍지역	17	10.2 %	자녀	없음	27	19.7 %
학력	중·고 재학	7	4.2 %		1명	17	12.4 %
	고졸	26	15.7 %		2명	78	56.9 %
	전문대 중퇴	1	0.6 %	연령	3명 이상	15	10.9 %
	전문대 졸업	21	12.7 %		19세 이하	1	0.6 %
	대학 중퇴	9	5.4 %		20-29세	31	18.7 %
	대학 졸업	69	41.6 %		30-39세	19	11.4 %
	석사 졸업	22	13.3 %		40-49세	49	29.5 %
	박사 졸업	11	6.6 %		50-59세	39	23.5 %
직업	사무직	23	13.9 %		60-69세	19	11.4 %
	공무원	62	37.3 %		70세 이상	8	4.8 %
	자영업	9	5.4 %	성별	남성	95	57.2 %
	판매/서비스직	5	3.0 %		여성	71	42.8 %
	농업/축산업	1	0.6 %	거주기간	3년 미만	37	22.3 %
	기능숙련/작업직	2	1.2 %		3-4년	22	13.3 %
	전업주부	21	12.7 %		5-7년	44	26.5 %
	중·고등학생	-	-		8-9년	33	19.9 %
	대학생	24	14.5 %		10-14년	13	7.8 %
	무직/은퇴	8	4.8 %		15-19년	3	1.8 %
	기타직업	11	6.6 %		20년 이상	14	8.4 %

(2)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분야 IPA 결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현재 수준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수준은 보통($M = 3.54$)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찰활동이 필요하다($M = 4.17$)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분야 현재 수준 및 요구수준 설문조사 결과(시민)

	현재 수준			요구수준		
	M	SD	Var.	M	SD	Var.
방범용 CCTV 설치 (CCTV)	3.99	0.798	0.636	4.44	0.691	0.478
경찰의 순찰활동 (순찰활동)	3.66	0.892	0.797	4.22	0.841	0.708
자율방범대 및 주민참여 안전순찰 (주민참여)	3.58	0.916	0.838	4.02	0.870	0.757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CPTED)	3.50	0.872	0.761	3.95	0.847	0.718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교육홍보)	3.41	0.832	0.692	4.10	0.840	0.706
주택가 침입범죄예방 사업 (침입예방)	3.43	0.869	0.755	4.18	0.773	0.597
여성귀갓길 안전지원 (귀가안전)	3.31	0.893	0.798	4.11	0.901	0.81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빅데이터)	3.41	0.802	0.643	4.30	0.733	0.537
평균	3.54	0.859	0.740	4.17	0.812	0.664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현재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8개 주요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두 보통 이상의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나타났으며(M = 3.99), ‘여성 귀갓길 안전 지원’(M = 3.31),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M = 3.4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M = 3.41), 방범 창 설치 등 ‘주택가 침입 범죄 예방사업’(M = 3.43)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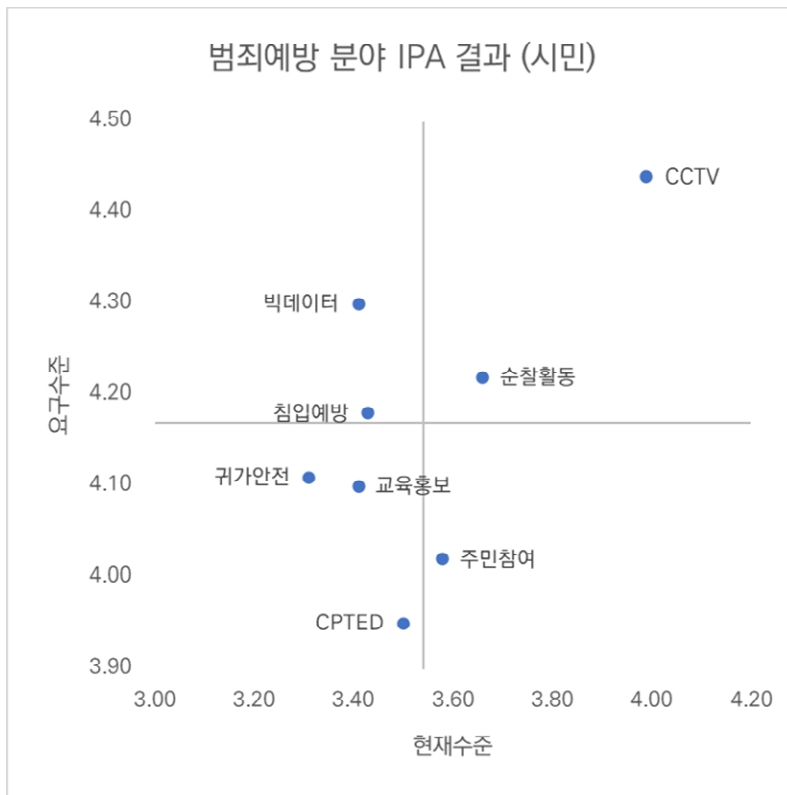
범죄예방을 위해 현재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8개 주요 활동 가운데 어떤 활동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방범용 CCTV 설치’(M = 4.4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도 CCTV 설치 및 활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율방범대 및 주민참여 안전 순찰’(M = 4.0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M = 3.95)은 현재보다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8개 주요 활동 중에서 요구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8개 분야의 현재 수준과 요구수준을 도출하고 IPA 기법에 따라 분석하여 산출한 결과를 사분면으로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67>과 같다.

<그림 67> 범죄예방 분야 IPA 결과(시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법용 CCTV 설치, 경찰의 순찰활동 강화는 이미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이 필요한 현행 유지(1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주택가 침입범죄 예방

사업은 중요도는 높지만, 현재 수준이 낮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집중 개선(2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의 경우 이미 잘 수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분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안전 귀가, 교육 홍보, CPTED는 다른 경찰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추가로 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점진 개선(3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는 이미 요구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투입 전환(4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분야 IPA 결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활동의 현재 수준과 요구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수준은 보통($M = 3.51$)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찰활동이 필요하다($M = 4.29$)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 사회적약자 대상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분야 현재 수준 및 요구수준 설문조사 결과(시민)

	현재 수준			요구수준		
	M	SD	Var.	M	SD	Var.
아동학대	3.61	0.791	0.626	4.26	0.746	0.557
학교폭력	3.46	0.905	0.819	4.28	0.777	0.604
청소년범죄	3.34	1.000	1.000	4.40	0.721	0.520
가정폭력범죄	3.50	0.893	0.797	4.25	0.734	0.539
성폭력범죄	3.57	0.903	0.816	4.39	0.752	0.566
노인 대상 범죄	3.57	0.819	0.671	4.16	0.786	0.618
장애인 대상 범죄	3.54	0.843	0.710	4.23	0.768	0.590
스토킹 범죄	3.45	0.950	0.903	4.32	0.747	0.558
평균	3.51	0.888	0.793	4.29	0.754	0.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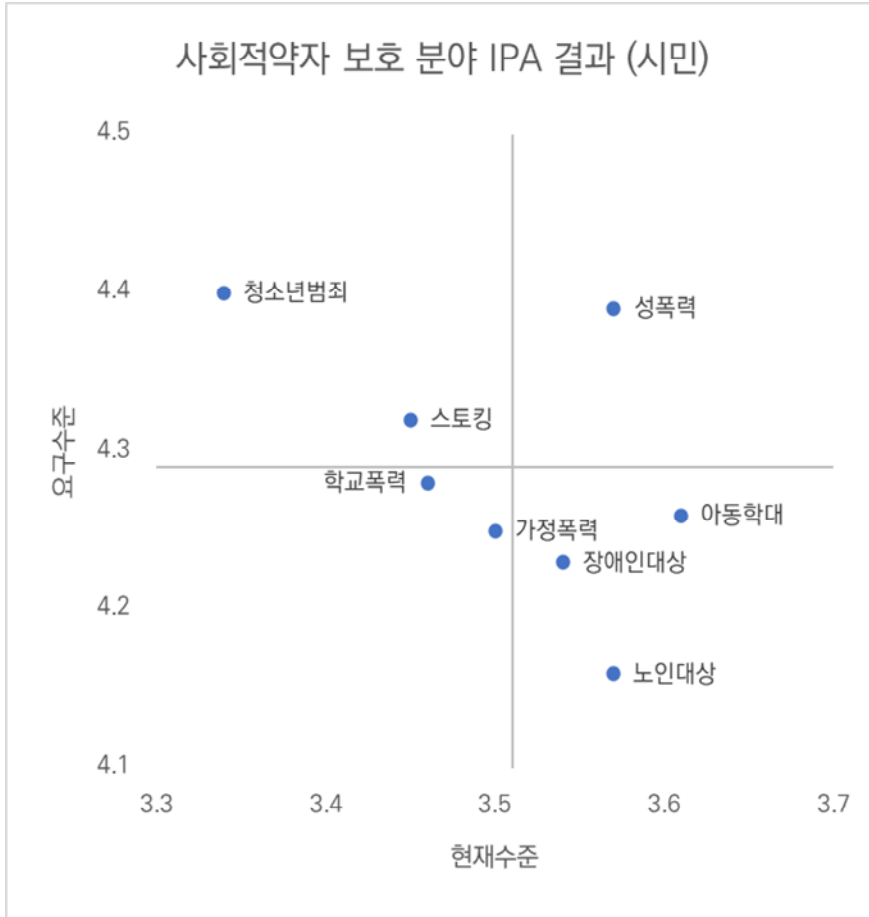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현재 경찰에서 분류하여 경찰활동을 수행 중인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두 보통 이상의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활동은 ‘아동학대’(M = 3.61) 대응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3.34~3.61 구간에 해당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경찰활동을 수행 중인 8개 영역 가운데 무엇인지에 대해, 세종특별시민은 ‘청소년범죄’(M = 4.40), ‘성폭력 범죄’(M = 4.39)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 대상 범죄’(M = 4.16), ‘장애인 대상 범죄’(M = 4.23)에 대응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

찰활동 8개 영역의 현재 수준과 요구수준을 도출하고, IPA 기법에 따라 분석하여 산출한 결과를 사분면으로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68〉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 IPA 결과(시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은 이미 잘 수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이 필요한 현행 유지(1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범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은 중요도가 높은 반면 현재 수준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더욱 개선된 경찰의 대응이 필요한 집중 개선(2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의 방향은 청소년범죄 및 스토킹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세종특별시민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은 현재 상황에서 다른 경찰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로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점진 개선(3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종특별시민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범죄보다 다른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대상 범죄는 요구수준과 비교할 때 이미 경찰이 충분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어 일부 경찰력을 다른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투입 전환(4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활동 분야 IPA 결과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활동의 현재 수준과 요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수준은 보통($M = 3.44$)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찰활동이 필요하다($M = 4.07$)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6〉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활동 분야 현재 수준 및 요구수준 설문조사 결과(시민)

구분	현재 수준			요구수준		
	M	SD	Var.	M	SD	Var.
교통법규 단속	3.57	0.937	0.877	3.87	0.825	0.681
교통안전 시설 확충	3.60	0.907	0.823	4.13	0.847	0.717
신호체계 개선	3.36	1.060	1.120	4.22	0.819	0.671
교통 보험사기 사건 처리	3.43	0.923	0.852	4.00	0.867	0.752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3.53	0.850	0.723	3.88	0.907	0.822
교통체증 해소	3.17	1.140	1.300	4.30	0.840	0.706
평균	3.44	0.970	0.949	4.07	0.851	0.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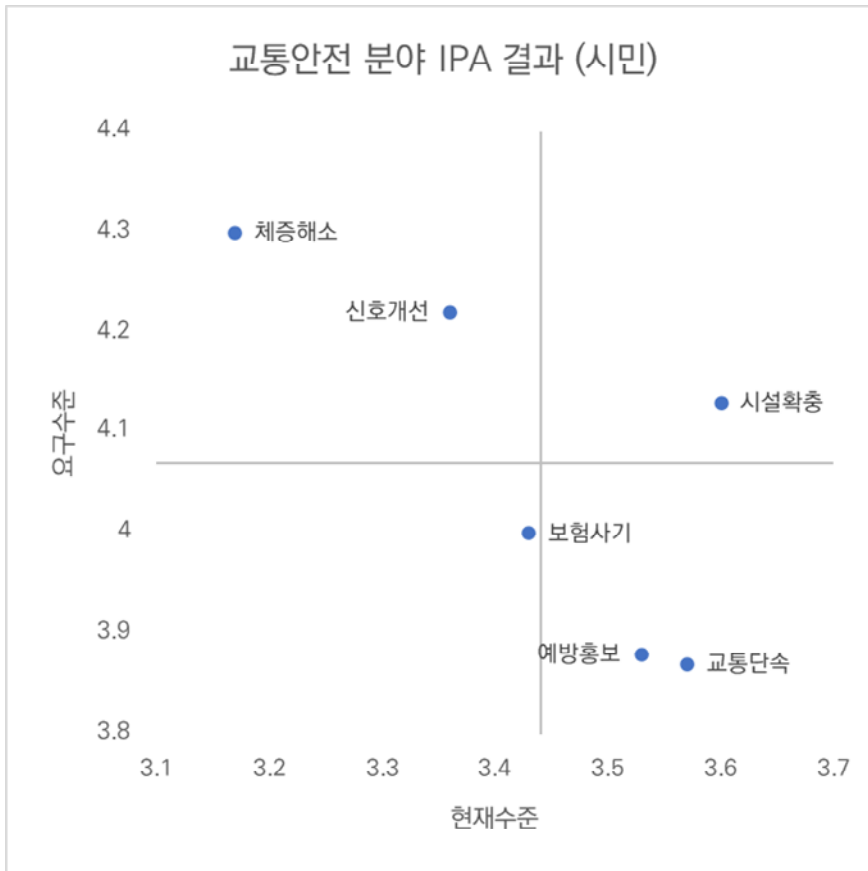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활동을 현재 경찰에서 주로 수행하는 6개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부분 보통 이상의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세종특별시민이 인식하는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활동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M = 3.60), ‘교통법규 단속’(M = 3.57),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M = 3.53)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체증 해소’(M = 3.17)를 위한 경찰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수행 중인 6개 영역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세종특별시민은 ‘교통체증 해소’(M = 4.30), ‘신호체계 개선’(M = 4.22)을 위한 경찰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교통법규 단속’이나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M = 3.88)은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활동 6개 영역의 현재 수준과 요구수준을 도출하고, IPA 기법에 따라 분석하여 산출한 결과를 사분면

으로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69>와 같다.

<그림 69> 교통안전 분야 IPA 결과(시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은 이미 잘 수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이 필요한 현행 유지(1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은 중요도는 높지만, 현재 수준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보다 경찰의 대응이 필요한 집중개선(2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특별시민이 원하는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활동은 현행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응은 현재 상황에서 다른 경찰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로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점진 개선(3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종특별시민에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상대적으로 직접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경찰력을 다른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활동을 위해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투입 전환(4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종특별시 공무원 대상

(1) 인구사회학적 통계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은 31명이 응답하였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현원은 모두 1,837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응답자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하는 데 의의를 두고 IPA 기법을 적용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청(본청)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다(87.1%). 응답자의 대부분이 팀원이었으며(67.7%), 연령은 3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근무한 기간은 10년 이하가 다수였으며(54.9%),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다수였다(64.5%). 응답자 중에서 자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응

답자가 다수였으며(41.9%), 대부분 세종시에 거주하였다(90.3%).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자녀가 있었고(51.6%), 이중에서 2명의 자녀를 둔 응답자가 다수였다(68.8%). 부부 공무원인 경우는 32.3%에 그쳤다.

〈표 87〉 인구사회학적 통계 분석 결과(공무원)

구분	항목	인원(명)	비율(%)	구분	항목	인원(명)	비율(%)
소속	시청	27	87.1 %	담당 업무	운영지원과	1	3.2 %
	읍면동	-	-		기획조정실	-	-
	직속기관	4	12.9 %		시민안전실	3	9.7 %
직책	국장	-	-		미래전략본부	-	-
	과장	2	6.5 %		자치행정국	13	41.9 %
	팀장	8	25.8 %		경제산업국	-	-
	팀원	21	67.7 %		문화체육관광국	-	-
연령	20대	4	12.9 %		보건복지국	-	-
	30대	9	29.0 %		건설교통국	-	-
	40대	9	29.0 %		환경녹지국	-	-
	50대	9	29.0 %		기타 부서	14	45.2 %
근무 기간	5년 이하	10	32.3 %	거주	거주	28	90.3 %
	6-10년	7	22.6 %	여부	출퇴근	3	9.7 %
	11-15년	3	9.7 %	자녀	있음	16	51.6 %
	16-20년	4	12.9 %	유무	없음	15	48.4 %
	21-25년	1	3.2 %	자녀	1명	4	25.0 %
	26-30년	4	12.9 %	수	2명	11	68.8 %
	31년 이상	2	6.5 %		3명 이상	1	6.3 %
성별	남성	20	64.5 %	부부	해당	10	32.3 %
	여성	11	35.5 %		해당없음	21	67.7 %

(2) 세종자치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IPA 결과

세종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인식하는 세종자치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현재 수준과 요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수준은 보통($M = 3.47$)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찰활동이 필요

하다(M = 4.05)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 치안활동에 대한 현재 수준 및 요구수준 설문조사 결과(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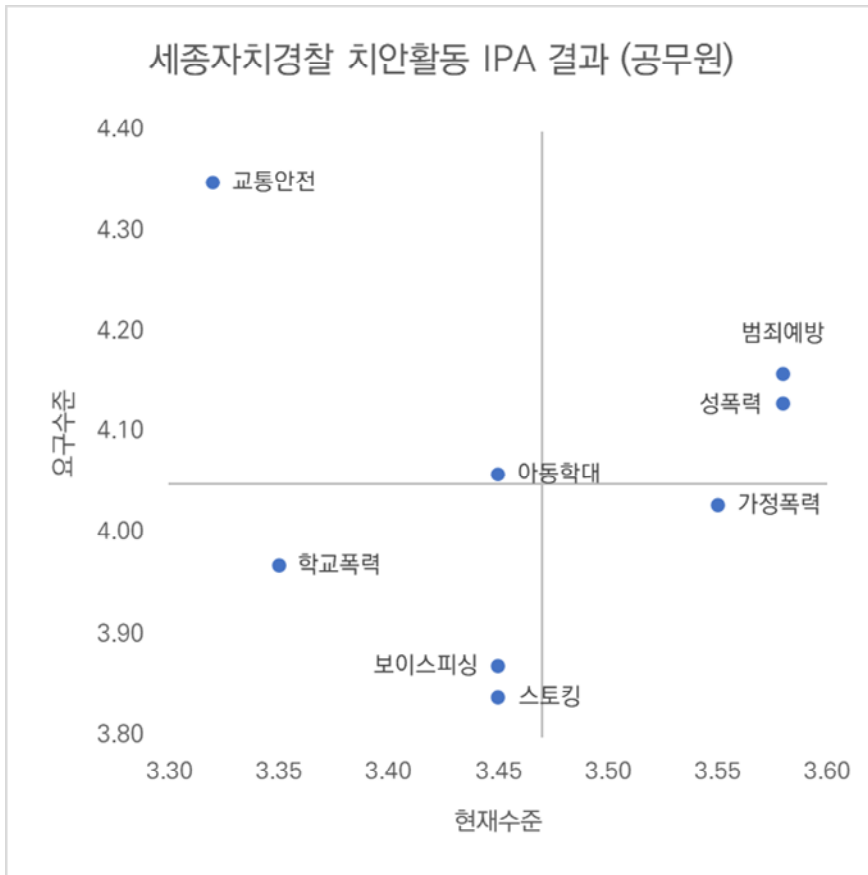
구분	현재 수준			요구수준		
	M	SD	Var.	M	SD	Var.
아동학대	3.45	1.060	1.120	4.06	0.892	0.796
학교폭력	3.35	0.985	0.970	3.97	1.140	1.300
가정폭력	3.55	0.925	0.856	4.03	1.050	1.100
성폭력	3.58	0.958	0.918	4.13	0.806	0.649
보이스피싱	3.45	1.030	1.060	3.87	0.991	0.983
스토킹	3.45	0.995	0.989	3.84	1.000	1.010
범죄예방	3.58	0.958	0.918	4.16	0.898	0.806
교통안전	3.32	1.010	1.030	4.35	0.755	0.570
평균	3.47	0.990	0.983	4.05	0.942	0.902

세종자치경찰의 치안활동을 범죄예방,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으로 구분하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 중에서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이 큰 6개 항목을 선정하여 모두 8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M = 3.58), ‘범죄예방’(M = 3.58), ‘가정폭력’(M = 3.55) 등에 대한 치안활동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M = 3.35), ‘교통안전’(M = 3.32) 등에 대한 치안활동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자치경찰의 치안활동이 향후 어떠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교통안전’(M = 4.35) 분야에 대한 요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보이스피싱’(M = 3.87), ‘스토킹’(M = 3.84)에 대한 경찰활동의 요구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세종자치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8개 영역의 현재 수준과 요구수준을 도출하고, IPA 기법에 따라 분석하여 산출한 결과를 사분면으로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70>과 같다.

<그림 70> 세종자치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IPA 결과(공무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예방 활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은 이미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이 필요한 현행 유지(1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활동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은 중요도가

높은 반면, 현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여, 보다 개선된 경찰의 대응이 필요한 집중개선(2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 활동은 높은 요구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범죄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의 활동은 다른 경찰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로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점진 개선(3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세종자치경찰의 대응은 이미 충분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어 일부 경찰력을 다른 자치경찰 활동을 위해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투입 전환(4사분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세종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관 대상

(1) 인구사회학적 통계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세종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82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도청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다수였으며(50.0%), 40~50대 경찰관이 다수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75.6%). 응답자의 계급은 경위 및 경감 계급이 다수였으며(65.8%), 대부분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었고(89.0%),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을 개청할 때부터 근무한 경찰관이 상대적으로 다수 응답하였다(31.7%).

응답자의 근무경력은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하였으나, 5년 미만 경찰관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6.1%), 26년에서 30년 사이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찰관이 다수 응답하였다(19.5%).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다수였으며(85.4%), 담당 업무는 형사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되었으며,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

역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28%), 응답자의 직책은 팀원인 경우가 다수였다(58.5%).

〈표 89〉 인구사회학적 통계분석 결과(세종청 경찰관)

구분	항목	인원(명)	비율(%)	구분	항목	인원(명)	비율(%)
소속	시도청	41	50.0 %	근무경력	5년 미만	5	6.1 %
	세종남부	18	22.0 %		5-10년	9	11.0 %
	세종북부	17	20.7 %		11-15년	12	14.6 %
	기동대/특공대	6	7.3 %		16-20년	15	18.3 %
연령	20대	1	1.2 %		21-25년	12	14.6 %
	30대	19	23.2 %		26-30년	16	19.5 %
	40대	29	35.4 %		31년 이상	13	15.9 %
	50대	33	40.2 %	성별	남성	70	85.4 %
계급	순경	3	3.7 %		여성	12	14.6 %
	경장	5	6.1 %	업무	생활안전	16	19.5 %
	경사	13	15.9 %		여성청소년	4	4.9 %
	경위	27	32.9 %		교통	6	7.3 %
	경감	27	32.9 %		지역경찰	23	28.0 %
	경정	4	4.9 %		수사	13	15.9 %
	총경	1	1.2 %		형사	-	-
	일반직	2	2.4 %		112상황실	4	4.9 %
거주	거주	73	89.0 %		정보/보안/외사	5	6.1 %
	출퇴근	9	11.0 %		경무	3	3.7 %
근무기간	개청시부터	26	31.7 %		청문	1	1.2 %
	전입 3년 미만	22	26.8 %		경비	7	8.5 %
	3년- 4년	18	22.0 %	직책	과장	6	7.3 %
	5년 이상	16	19.5 %		팀장	28	34.1 %
					팀원	48	58.5 %

경찰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상으로도 IPA 분석을 시도했으나, 유의미한 연구의 시사점이 발견되지 않아 생략하였다.

4) 특수시책 관련 분석

다음은 심층 면접을 토대로 제안된 시책과 세종경찰청에서 추진을 모색 중이거나, 타 시도 자치경찰연구에서 시사점으로 도출된 방안을 정리하여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이에 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시민, 경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90〉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특수시책에 대한 인식 비교

구분	시민 (N=166)		경찰 (N=82)		공무원 (N=31)	
	M	SD	M	SD	M	SD
시민안전 통합상황실 운영	4.06	0.90	1.93	1.04	1.77	0.81
지역 커뮤니티 치안센터	3.64	1.15	2.83	1.51	2.16	1.13
교통안전 원스톱 센터	3.95	0.99	2.34	1.22	1.71	0.64
범죄예방종합지원센터	4.13	0.86	1.73	0.96	1.90	0.87
자치경찰 별도 채용	3.84	1.03	2.38	1.38	2.32	1.25
악성 민원 대응팀	3.84	0.98	-	-	-	-

먼저, 시민안전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은 찬성(M = 4.06)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찰(M = 1.93)과 공무원(M = 1.77)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자체 예산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높은 수준으로 찬성하는 의견이었지만, 경찰과 공무원은 반대 입장이었고, 실제로 이 업무를 주도하여 추진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견이 경찰보다 상대적으로 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경찰서에 집중하여 ‘광역 기동순찰대’로 개편하여 112신고에 대응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율방법

대와 협업하거나,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상담 등의 업무는 ‘지역 커뮤니티 치안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시책이다. 이에 대해 시민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M = 3.64$), 경찰관은 보통($M = 2.83$), 공무원은 반대($M = 2.16$) 의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경찰관·공무원이 각각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편차는 크지 않았다.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교통 불편, 도로파손, 교통 표지판 개선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고 및 대응을 위하여 ‘교통안전 ONE STOP 센터’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파견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이에 대해 시민은 찬성($M = 3.95$)하는 의견이었으나, 경찰관($M = 2.34$)과 공무원($M = 1.71$)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관점에서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자, 정신질환 환자 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 이에 세종경찰청에서는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종합 센터를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 의견($M = 4.13$)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M = 1.73$)과 공무원($M = 1.90$)은 이와 같은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경찰과 공무원의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 제도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24시간 운영이나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지에 대해 알 수 없기에 반대 의견을 우선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가 점증하는 현실에서 기존 국가경찰의 지역경찰 인력으로는 충분히 자치경찰 활동을 지원하거나 시민 안전을 위한 자체 경찰활동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때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의 공무원을 채용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필요하다면 신규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찬성($M = 3.84$)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찰($M = 2.38$)과 공무원($M = 2.32$)은 보통 의견이나 부

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관점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지만, 경찰과 공무원의 관점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112·119 상습 신고 및 관공서 행패·소란 행위 등 악성 민원인에 응대하기 위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별도의 악성 민원 대응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악성 민원 대응팀은 퇴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임상 심리사 등으로 구성하여 복합·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운용하는 방안으로, 이에 대해 시민들은 악성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M = 3.84). 이외 당사자인 경찰관과 공무원은 설문 문항에서는 제외하였다.

전반적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하면서 찬성하는 의견을, 경찰과 공무원은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시민들은 범죄예방종합지원센터, 시민 안전 통합상황실 운영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관은 두 특수시책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과 경찰관·공무원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 차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향후 추진 시 입장의 차이와 예산, 운영적 애로사항 등 다양한 예상이 가능한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세종특별시민들이 진정 원한다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이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와도 맞을 것이다.

5)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 분석

『자치경찰 이원화』는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경찰관을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관하여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방안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를 적용하면, 현재 세종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을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으로 발령을 내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향후 세종자치경찰단, 세종남부경찰대, 세종북부경찰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경찰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방안은 자치단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시민, 경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91〉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에 대한 인식 비교

구분	시민 (N=166)		경찰 (N=82)		공무원 (N=31)	
	M	SD	M	SD	M	SD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3.19	1.10	2.84	1.17	2.84	1.24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시범 시행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3.13	1.22	1.87	0.75	2.35	1.23
자치경찰 이원화가 되면 안전도가 향상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3.54	0.99	2.70	1.13	2.39	0.96
자치경찰 이원화가 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3.54	1.01	2.70	1.12	2.29	0.97
국가 중요 기능 이전시 자치경찰 이원화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50	1.01	2.72	1.16	2.26	0.97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에 대해 시민(M = 3.19), 경찰(M = 2.84), 공무원(M = 2.84) 모두 보통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시민들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의 시범 시행 지역이라는 것을 상대적

으로 다수가 알고 있었던 반면($M = 3.13$), 경찰관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 = 1.87$), 공무원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M = 2.35$) 상황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되면 시민들은 지금보다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 = 3.54$). 또한,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시행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M = 3.54$), 세종 국회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등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더라도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 3.50$). 다만, 경찰은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시행되더라도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은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시행이 오히려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이나 발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제2절 심층 면접 결과 분석

1. 공무원 등 상대 심층 면접

1) 세종특별자치시청 공무원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을 나갔다가 다시 복귀한 공무원을 상대로 진행된 심층 면접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인사 등 향후 자치경찰 관련 경찰관과 합동 근무 등에 대한 의견으로는 서로 조직문화는 다르지만, 국가경찰관은 소방공무원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큼 자치경찰관들과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용성은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기존 세종특별자치시청에는 소방조직과 함께 근무하고, 같은 공간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자치경찰로 일부 인력이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을 듯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큰 이견이 없고, 다만 조직문화 또는 내부의 위계질서 등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차츰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도 막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와 기존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인 사무 간의 조정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고, 이를 위한 직무분석·조직 진단도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다.

현재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 여청, 교통) 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청 부서(교통과, 여성가족과) 등과 업무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통해 사무분장을 명

확히 해야 해당 분야 공무원들도 책임 한계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기관이 다른 경우 상호 협업하면서 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추진했으나 자치경찰이 출범되면 기존 업무간의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중복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업무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와 연계되거나 밀접한 업무는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까지 고려하여 실제 인사와 예산, 조직에 반영해야만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출범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이해 존중과 업무에 대한 폭을 넓히는 행사와 교류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평상시 예산의 규모와 활용, 예산 편성 체계는 물론 세종특별시의 시정(市政)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경찰에 대한 업무와 최근 변화상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교류의 장(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2) 세종광역자살예방센터 공무원

다음은 세종광역자살예방센터 실무 팀장의 인터뷰 내용으로, 경찰과의 협업 시스템이 올해 초에 가동되어 연계 등은 원활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살 시도 등에 대한 관리가 적시에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세종청 현장지원팀이 2023년 2월부터 신설되어 정신질환자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과 응급입원 등 사회적 공동 안전망이 강화되었으나,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개입팀이 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24시간 공동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시도 광역자살예방센터의 경우 현장지원팀이 4~6명이 배치되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은 최소 8~10명이 배치되어 있는 만큼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도 현장지원팀과 위기개입팀의 증

원이 절실합니다.

다음 〈표 92〉는 2022년 8월부터 세종청에서 자살시도자를 구조한 이후 세종광역정신건강센터에 통보한 현황이다. 세종남부서는 월평균 12건, 세종북부서는 월평균 4건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이후에 사후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 촘촘하게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즉시 사건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표 92〉 세종청 자살시도자 연계 현황

구분	소계	'22.8	'22.9	'22.10	'22.11	'22.12	'23.1	'23.2	'23.3	'23.4
남부서	105	14	17	12	12	6	8	9	13	14
북부서	33	4	6	3	5	1	3	3	5	3
소계	138	18	23	15	17	7	11	12	18	17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위 〈표 92〉에서 세종북부서의 경우 청주시 서원정신건강센터 통보가 6건,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1건, 천안서북부정신건강복지센터 1건, 충북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건으로, 총 9건에 해당하는데, 광역 단위 센터가 상이한 만큼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사례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차 자살시도가 일어날 것이며,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거지 등이 달라서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최근 일련의 강력 사건 발생이 주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사무에서 확장적 사고로 접근해서 실질적인 치안행정과 복지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신질환자와 자살시도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불안 요인이 될 것이며, 자칫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소위 ‘묻지마 범죄⁸⁷⁾’처럼

다중 인파가 밀집된 관공서나 상징적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야만 지역사회 안전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진이 연구 진행 중에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과 등의 협조를 얻어 매월 자살 관련 정보를 분석 및 정리하여 세종광역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모색 중이며, 세종의 경우 북부서 관내에서 고령층의 농약을 이용한 자살 증가와 공무원 자살 등 주요 이슈에 더욱 관심을 두고 선제적인 대안들이 제시된다면 자치경찰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전망한다.

2. 시민 상대 심층 면접

1)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마을 일에 주민이 자발적·능동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 통로이며, 마을 의사결정에 권한을 가진 협의·실행기구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현재 2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고, 현황은 다음 〈표 93〉과 같다.⁸⁷⁾ 2023년 초에 파악된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총 60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0대 이상이 38.9%, 50대가 195명으로 32.3%, 40대가 119명으로 19.7%에 이른다. 남성이 341명으로 56.5%에 달해 여성보다 많으며, 아름동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조치원읍이 35명, 장군면 33명, 연동면 33명 순이다.

87) 서현역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적 관리 부재 문제, 이데일리, 잇단 '묻지마' 범죄에 국회 "정신질환자 체계적 관리 필요", 2023.8.18.일 자. 뉴스핌, 잇단 '묻지마 범죄'에 사형제 부활·정신질환자 대책 목소리 커, 2023.8.18.일 자.

88) (2023.8.31. 기준) 586명으로, 중간에 자진 탈퇴 등 정비됨.

〈표 9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읍면동	계	연령별						성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자	여자
	604	12	9	34	119	195	235	341	303
조치원읍	35	0	0	4	6	11	14	21	14
연기면	31	0	2	0	1	6	22	18	13
연동면	33	0	0	1	2	12	18	22	11
부강면	27	1	2	0	1	11	12	11	16
금남면	28	2	0	0	3	14	9	14	14
장군면	33	0	0	0	4	11	18	19	14
연서면	34	0	0	1	8	7	18	19	15
전의면	16	0	1	0	2	9	4	9	7
전동면	26	0	0	3	0	7	16	14	12
소정면	28	0	0	1	5	15	7	17	11
한솔동	24	0	0	0	6	7	11	14	10
도담동	20	0	0	1	4	7	8	9	11
아름동	39	4	1	2	4	15	13	22	17
종촌동	22	1	0	3	7	6	5	11	11
고운동	31	0	0	4	8	3	16	20	11
보람동	25	1	0	1	9	8	6	10	15
새롬동	33	1	0	2	14	10	6	17	16
대평동	22	0	0	2	4	6	10	11	11
소담동	20	0	1	2	4	8	5	7	13
다정동	23	0	1	4	9	6	3	12	11
해밀동	28	2	0	1	12	9	4	13	15
반곡동	26	0	1	2	6	7	10	11	15
어진동	20	0	1	1	6	3	9	10	10
나성동	20	0	0	6	7	4	3	10	10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자료(2023).

다음 〈표 94〉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배분 현황으로, 읍면동 배분액은 16,209 백만 원이며, 세종특별자치시청 배분액은 2,023 백만 원이다. 조치원읍에 가장 많은 예산액이 배정되어 있으며, 그다음으로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순이다. 동 단위 지역에서는 반곡동, 다정동, 새롬동에

배정된 예산액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과 자치경찰 사무 중 안전에 관한 예산을 주민 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주민자치회와 자치경찰의 연계와 협업은 자치경찰 초기 정착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표 9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배분 현황(읍면동)

(단위: 백만 원)

읍면동	총계	주민제안사업			마을계획 사업	자치역량 강화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사업	지역문화 행사		
합계	16,208.68	9,688	2,510	907	1,070	2,033.68
조치원읍	1,832.74	1,235	200	150	131	116.74
연기면	659.14	429	150	10	11	59.14
연동면	179.38	482	150	10	12	65.38
부강면	832.74	576	150	10	22	74.74
금남면	1,118.78	822	180	10	33	73.78
장군면	1,037.06	691	180	60	27	79.06
연서면	1,036.58	702	180	50	26	78.58
전의면	1,020.46	703	180	48	20	69.46
전동면	897.54	665	150	10	11	61.54
소정면	667.14	440	150	10	8	59.14
한솔동	434.84	200	60	38.5	46	90.34
도담동	479.12	212	60	38.5	67	101.62
아름동	459.72	211	60	38.5	57	93.22
종촌동	482.64	208	60	38.5	75	101.14
고운동	532.0	240	60	38.5	89	104.50
보람동	438.40	202	60	38.5	49	88.90
새롬동	490.04	209	60	38.5	68	114.54
대평동	398.36	197	60	38.5	31	71.86
소담동	444.0	202	60	38.5	57	86.50
다정동	502.4	211	60	38.5	75	117.90
반곡동	515.2	256	60	38.5	67	93.70
해밀동	389.2	192	60	38.5	23	75.70
어진동	407.6	203	60	38.5	28	78.10
나성동	413.6	200	60	38.5	37	78.10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자료(2023).

이외 세종특별자치시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참여공동체과에서 주도하는 주민 제안 자율사업 200백만 원, 사회적경제 공동체 센터 운영 547.61백만 원, 주민 자치 인센티브 327백만 원, 시민 주권 대학 운영 359.53 백만 원, 사회적 공동체 센터 사회적 경제팀 운영 570백만 원, 이외 예비비로 19 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자치사무 분야에서 기존 행정 체제로 수행하기 힘든 소규모 현안과 주민 불편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며 협의 사무로 읍·면·동의 사무 중 주민의 문화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해 행정기관 및 타 주민조직과 협의를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자치경찰과 주민자치회의 관계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면,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유지 및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주민자치회와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5〉 세종주민자치회의 자치경찰 추진 관련 역할

자치경찰 업무	주민자치회의 역할(제언)
생활안전	▶ 주민참여 방법 활동 지원 - 순찰지역, 주기, 방법, 인력 등 협의 및 지원
사회적약자 보호	▶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대상 결정 및 방법 등 협의 ▶ 학교 폭력 관련 위원회 참석 의견 제시
교통관리	▶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개최 ▶ 어린이 보호 구역 등 교통 취약 지역 결정 제언 ▶ 교통 정책 결정 등 위원회 참석
지역행사 경비	▶ 지역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등 계획 공동 수립·시행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데이터 브리프 가을호」에서 지방정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권한’(38.2점), ‘주민의 거버넌스 참여’(38.3점)가 낮았는데, 이는 그만큼 수요자들이 거버넌스와 참여와 소통을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향후 자치경찰 분야에서도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창구를 개설하고, 함께 공동숙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경찰 위주로 시행되었던 치안 정책에서 벗어나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이곳을 통해서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창구가 만들어질 때 세종자치경찰이 한 단계 성장할 것이다.

2) 이·통장 협의회

이·통장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에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리·통별 1명을 임명한다. 이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달,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등을 주로 수행하는데, 임명 위촉권자는 읍·면·동장이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선정 방식은 마을회에서 선출(지명)하여 추천하거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추천하는 방식,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추천자가 복수이거나 공개모집의 경우 이·통장 선정심의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한, 기본수당으로 월 30만 원, 회의참석수당 2만 원, 상여금으로 연 2회 30만 원을 지급하며,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이·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이·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업무 추진과 관련된 각종 물품 지원,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나 수련 대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표 96〉은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협의회 현황으로, 전체 526명으로 이 중 이장은 253명, 통장은 273명이며, 남성은 291명, 여성은 235명이다. 조치원읍과 9개 면은 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성은 227명, 여성이 26명으로 89.7%를 차지하고 있고, 통장은 14개 동으로 남성이 64명, 여성이 76.6%를 차지하여 이장과 통장의 인적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평균 나이는 62세로 남성 이·통장의 경우 65세, 여성 이·통장의 경우 60세이며, 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동 지역의 통장도 종촌동은 여성 통장 평균 연령이 73세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6〉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협의회 현황

구분	합계	이장 (명)			통장(명)			평균 나이(만 나이)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평균	남	여
합계	526	253	227	26	273	64	209	62	65	60
조치원읍	35	35	31	4	없음			65	65	65
연기면	7	7	7	-				65	65	-
연동면	22	22	19	3				63	62	69
부강면	31	31	22	9				66	67	63
금남면	40	40	38	2				68	66	71
장군면	23	23	23	-				60	60	-
연서면	26	26	24	2				65	65	64
전의면	33	33	29	4				62	65	59
전동면	25	25	23	2				61	63	58
소정면	11	11	11	-				66	66	-
한솔동	22	없음			22	5	17	57	67	54
도담동	25				25	7	18	63	64	62
아름동	17				17	5	12	58	61	57

중촌동	21		21	3	18	67	73	61
고운동	35		35	13	22	64	54	62
보람동	17		17	5	12	59	59	59
새롬동	25		25	5	20	60	60	60
대평동	13		13	1	12	63	66	60
소담동	23		23	3	20	64	66	62
다정동	26		26	6	20	64	68	59
해밀동	6		6	1	5	66	68	63
반곡동	29		29	8	21	59	62	56
어진동	5		5	1	4	60	64	55
나성동	9		9	1	8	58	64	51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자료(2023.4월 기준).

다음은 통장 협의회 소속의 통장(여성)을 상대로 심층 면접한 것으로, ‘지역 경찰장 주민추천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어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았다.

먼저 적십자회 회장 출신으로써 겪었던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언을 해 주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서 향후 복지행정과 치안 행정에서 이러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례 발굴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저는 교육 공무원으로 교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에 적십자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시민을 만나왔고, 그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봐 왔는데, 이들 중 일부는 중복 지원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범죄 피해자 중에서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러한 부분을 향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개입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제 즉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외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면 다양한 협의체 등이 많은데, 의견이 제각각이기도 하지만, 이를 일괄하여 수용하는 기구가 없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견수렴 결과에 관해서도 확인이 어렵다면서 향후 교통 문제는 물론 학교폭력, 아동 안전 등 분야에서 『범(凡) 세종 시민 커뮤니티』와 같은 단체가 구성되어 세종특별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결집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케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앞 안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경찰에 스쿨존 등 건의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 설명하니 신속한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특히 안전에 관련된 민원은 즉시 개선될 줄 알고 있으나 예산이 필요하고, 공사를 하거나 장시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척이 더딘 경우도 많습니다.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이든지 주체가 되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러한 가교 역할을 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이고 몸소 실천하는 단체로, 이번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서도 모범적인 활동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향후 협력 치안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발전방안은 세종자율방범연합대 대장과 교육 부회장을 상대로 심층 면접하였다. 먼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 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하면서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을 지원하는 자원

봉사 조직으로 활동하였으나,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2.4.26. 공포, ’23.4.27.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체계적으로 각 지대 운영과 자율방범대⁸⁹⁾ 교육 등 자질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과 긴밀한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치경찰제도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도 제정된 만큼 이제는 단순히 치안의 보조자로 역할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특히 최근 불안한 치안에 대해 공동치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면서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방범대 정비와 지원, 교육이 절실합니다. 단순히 차량 순찰과 상해보험 가입만으로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발전방안을 별도로 논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부서인 세종특별자치시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세종자율방범대의 경우 예산 등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노후화된 차량 교체 등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8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차량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신형 차량으로 보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은 스타렉스 등 기동성과 장비 등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교체 중인데, 특히 이번에 재해재난 관련하여 산사태 및 도로 통제 시 라바콘이나 장비를 싣고 이동해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상황이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와 전통을 고려한다면 세종북부서의 경우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세종남부서의 경우 행정중심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 거주자들의 생활 방식과 직업, 가족 구성원 등이 다르고, 전입자와 기존 거주자들의 사고방식도 다른 만큼 이를 잘 이해하면서 자율방법대를 운영해야만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세종은 계획된 도시로,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과 새롭게 전입된 공무원과 연구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면(面)이 많지만, 남부 행정 중심 지역은 사실상 거의 직업, 교육 때문에 신규로 전입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자율방법대로 신규 가입 방안도 달라야 하고,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도 잘 이해해야만 실제 활동할 때 이견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녹색어머니회

세종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 소속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경찰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홍보국장, 교육국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경찰청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에는 총 52개 초등학교 중 22개교 19,304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 현황은 다음 <표 97> 과 같다.

〈표 97〉 세종청 녹색어머니회 구성 현황

구분	가입 학교 수	경찰서 연합회 임원구성	등록 인원
세종북부서	5개교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	2,266명
세종남부서	17개교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 사무국장 1	17,038명

다음 그림은 녹색어머니회의 2023년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71〉 세종청 녹색어머니회 활동내역 (2023년)

			
【굿모닝! 해피스쿨】	【스쿨존 엘로카펫】	【어린이 안전 캠페인】	【교통문화정착 홍보】
	<p>세종북부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p> <p>김희경 기자 grnews@daum.net 등록 2023.08.26 12:28:07</p>  <p>▲ 세종북부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p> <p>(중부시사신문) 세종북부경찰서와 녹색어머니연합회는 8월 26일 대동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고진 교육감, 상병현 시장의, 시청모범운전자, 학교장 및 교사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였다.</p> <p>참석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지도하고 미리 준비한 홍보 용품을 나눠주었다.</p>		
【교통안전 교육】	【언론보도 4회】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및 사고예방 홍보에 주력하면서, 관할 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활동의 지원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굿모닝! 해피 스쿨', 스쿨존 합동점검을 통해 9년 연속 사망사고 ZERO 달성에 기여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린이 안전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안전교육 지도사 자격증 취득과 안전 체험 연수 등 녹색어머니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남부·북부경찰서와 정기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를 교통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다음은 세종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과 심층 면접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활동과 예산,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녹색어머니회의 활동과 예산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 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학교가 신설되고 있는데도, 예산은 계속 동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바라고 있었다.

현재 학교별로 등교 시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시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 3천 5백만 원을 5년째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세종의 경우 인구 유입과 함께 자녀들도 전학을 오기 때문에 학교가 증설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 학교별로 홍보물도 거의 절반밖에 지급하지 못해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스쿨존 내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차량 증가와 혼잡 등 불안한 요인은 점점 커지고 있어 향후 세종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연합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합회에 미가입된 학교가 20개교로 학교별 안전 관련 현황을 파악하려고 해도 미가입된 학교 앞의 상황은 사실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로부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합회 형태로 운영되는데, 연합회에 미가입된 학교도 많아 신도심 아파트 신축과 학교 신설에 맞춰 녹색어머니회가 초창기부터 구성되어 함께 활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참여가 없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교통환경 등이 다르고 안전 관련해서 파악하는 것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연합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별 녹색어머니회 구성과 관리에도 관심을 주십시오.

한편, 학교 앞 교통 관련 민원 이외 다른 민원 사항 등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경찰청, 세종교육청 등 담당 기관이 달라 해당 민원의 진행 상황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고 종합적인 정책 판단을 해야 하는 사례도 통보받지 못해, 정책의 추진에 대한 지속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각각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미루다 보니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소통을 활성화하고, 기관별로 협업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만 세종의 안전도 향상은 물론 시정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연합회라는 별도의 조직은 가장 참여가 많고,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데,交通安全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학생 안전 등 다양한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단체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결국 제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추진하고 있어 정책적 연계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으로 향후 세종자치경찰 출범과 함께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바라고 있다.

5) 모범운전자회

세종경찰청 모범운전자연합회는 1998년 9월 6일 경찰청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에 근거한다. 임원은 지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세종청의 경우 총 45명으로 구성된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표 98〉 세종청 모범운전자연합회 구성 현황

구분	명칭	경찰서 연합회 임원 구성	등록 인원
북부서	북부지회	회장 1, 운영위원장 1	17명
남부서	남부지회	회장 1, 운영위원장 1	28명

모범운전자 연합회에서는 교통경찰관을 보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지도(수신호) 봉사활동을 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 및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급증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여건 악화에 따른 간선도로 러시아워 근무(너비뜰 사거리 등)로 차량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2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챔피언 쉽,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주년 기념식, 세종축제 및 정원산업박람회(30만 명 참가), 영평사 구절초 축제 등 행사 교통안전 활동 지원으로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치원 복숭아 축제, 마라톤 등 지역축제 교통관리 7회 실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고려대 논술고사 교통관리, '굿모닝! 해피 스쿨' 어린이 안전 캠페인 참여(2회), 고려대 세종캠퍼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되었던 우수사례들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전동킥보드 안전 사용 준수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72〉 세종청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내역 (2023년)

<p>HOME > 소식 > 사회</p> <h3>세종북부경찰서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지켜야 합니다”</h3> <p>류용규 기자 승인 2022.06.16 16:40 댓글 0</p> <hr/> <p>16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이동형 개인장치 안전 이용 당부 캠페인</p>  <p>세종북부경찰서(서장 박종철)는 16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식당 앞에서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교직원 및 중학생의 학생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p> <p>이날 오후 진행된 캠페인은 최근 대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 인식은 미흡해 법규위반 행위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의식 고취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했다고 밝혔다.</p>	<h3>세종북부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h3> <p>김효경 기자 grnews@daum.net 등록 2022.08.26 12:28:07</p> <hr/>  <p>▲ 세종북부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p> <p>(중부시사신문) 세종북부경찰서와 녹색어머니연합회는 8월 26일 대동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고진 교육감, 상병현 시장의, 시청·모범운전자, 학교장 및 교사들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였다.</p> <p>참석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운을 지도하고 미리 준비한 홍보 용품을 나눠주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언론보도 8회】</p>	

다음은 세종경찰청 모범운전자회의의 회장, 사무장과 심층 면접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평소 봉사활동과 교통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교통 봉사활동의 경우 세종북부서 모범운전자회는 홍대 세종캠퍼스 앞, 서창역 삼거리, 신한 2리 사거리 등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서 매일 7시부터 9시까지의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 소통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자긍심이 대단했다.

세종북부의 경우 조치원을 중심으로 외곽에서 세종권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주요 지역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가 막히기 때문에 현재 모범운전자회에서 3곳, 세종북부서 교통계에서 월하오거리, 합강교차로 2곳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봉사해 와서 현재는 잘 정착되어 있고, 교통계 직원들과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 협조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치경찰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용도로 공사가 끝나면 대형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며, 세종북부서 교통 근무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면서 실제 지역사회 축제에 모범운전자회등 다른 협력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도 경찰관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조치원은 청주와 인접하고 있고, 인근 오송역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이며, 서창역도 추후에 전철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홍익대 세종캠퍼스가 위치하여 교통 통행량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도로 공사도 완료되면 각종 교통사고 증가도 예상되는데 교통 자체 인원이 적어 내근도 전부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서로 이해하면서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세종특별시의 확장과 도로 확대까지 고려한다면 자치경찰과 함께 경찰관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교통 봉사활동을 전제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어 별도의 인센티브 등을 바라고 있지만 앓았지만, 대형 축제 또는 폭우 등 재난 재해 현장 등 투입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도 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평상시 봉사활동은 생활습관이 되어 잘 운영되고, 지역축제는 그나마 예상이 되지만 갑작스러운 재해 같은 상황에서는 공무원도 비상이지만 봉사활동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통봉사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지원과 관심도 가져준다면 명예심도 올라갈 것이고,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세종자치경찰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6) 여성단체 대표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단체 대표와의 심층 면접을 정리한 것이다.

여성운동은 성별, 인종, 빈부, 나이 등 모든 차별을 반대하며, 성(性)차별이 근본적인 차별의 출발이라는 시각으로, 주요 사업은 여성 권익 향상 (여성 비정규직, 사회적약자 여성- 고령 여성, 청년 여성,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한 부모, 성소수자 등), 여성의 정치세력화 (풀뿌리 조직 연대체 구성-마을공동체, 세대별, 사회적경제 등), 교육프로그램 (지역 여성, 풀뿌리 여성 활동가, 각 분야의 여성 지도자, 청년 여성, 학교 등), 여성정책 모니터링 (여성친화도시, 시의회 등), 공동 행사(3.8 여성의 날, 여성 주간 등), 거버넌스 활동(성인지위원회, 여성주의 의원 간담회 등), 여성 정치(선거 대응 정책개발, 여성 후보 진출, 모니터링사업) 등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단체,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99> 와 같다.

<표 9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단체 조직 현황

구분	단체명	설립연도	소속기관 및 단체	주요 사업
여성단체	세종여성단체 협의회	1984년	한국여성유권자세종연맹 농가 주부모임 대한어머니회 세종지부 세종시 삼꽃여성회	아버이날 행사 여성지도자 연수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세종YWCA	1948년		성인권,일자리,다문화,고령 여성,환경,평화
	사)세종여성	2018년		여성인권, 페미니즘교육과 문화, 정치세력화, 지역여성현안 대응, 여성리더양성, 연대사업 등
풀뿌리 정당			작은도서관 연합회 여성협동조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연합 전교조페미니즘연구모임 민주당,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약자 보호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비가시화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여성 노동자 문제는 워킹맘 관련 정책에 제한되어 있고, 이주민 중 이주노동자 전반의 인권 문제, 미혼모 정책 및 지원 문제, 1인 거주 청년, 고령 여성 안전 문제, 장애 여성 성희롱, 성폭력 문제, 가정폭력,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마련과 예산 우선 편성, 마을공동체에서의 문제 인식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 문제를 공동체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향후 다양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문제는 지역의 이슈이자, 해당 피해자는 회복이 어려워 지역사회의 따뜻한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관련 부서와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차별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례적인 모임이나 참여 등 신뢰를 쌓아가면서 자치경찰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려대, 홍익대 세종캠퍼스와 한국영상대 주변 여학생들의 안전 귀갓길을 위해 여성 안심 거리에 대한 방법용 CCTV 확대, 비상벨 설치 협의, 여성 안심 거리 표시로 시인성 개선, 경찰관 및 자율방범대원 합동 순찰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외 복지 측면에서 마을 돌봄 관련 마을공동체에서 같이(가치) 돌봄의 일환으로서, 1인 가구 실태조사, 주민자치회, 이장, 부녀회, 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안전한 세종을 만들기 위한 공동숙의(共同宿意)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7) 학계 등 전문가

다음은 한국영상대학교 김정환 교수의 자문 내용으로, 특히 주민자치에 기반한 참여 치안에 대해 고견을 제안해 주어 이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가칭 『치안 경청 보고회』 개최로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민들과 정례적인 소통창구 개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가칭 『치안 경청 보고회』라고 칭하고, 매월 첫 주 지역관서장과 주민과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안전과 범죄, 지역 치안 관련된 사안을 공유하면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월 소식지 형태로 발행하여 이를 세종엔 또는 SNS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치안의 적극적 참여자를 확산시키는 것이 지역사회 안전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으로,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실제 치안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대비하면서 치안과 안전의 이슈를 평상시에도 충분히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성인과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 프로그램으로, 경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직업으로 갖기 어렵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념으로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는 성인은 물론 학생들까지 포함하여 향후 가족 전원이 명예경찰단에 가입한다면 사회구성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의 안전교육과 범죄예방이 조기에 교육을 통해서 정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명예경찰단 제도를 시행하여, 발대식을 하고, 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치안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 생

활안전협의회 등 참석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치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공동체 치안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진일보하여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명예경찰단을 운영하여, 조기에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및 안전 예방 교육하면서 성장기에 따라서 지역의 치안 정책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 두는 것입니다. 세종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미래 주역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사회적약자 등 사각지대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골목길 안심 순찰대 발대』로, 지역관서별로 안심 순찰대를 운영하여 골목길 등의 순찰을 통해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전략이며, 이러한 순찰 결과를 즉시 피드백하거나 월별로 정리하고, 연 1회 경찰서에서 주관하여 치안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방안이다.

치안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을 지역관서별로 치안 수요가 차이가 큰 만큼 주간, 야간, 주말 등 실질적으로 순찰이 필요한 시간대에 운영하고, 이는 남녀노소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고, 순찰시 발견한 문제점 등은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단, 자율방범대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골목길이나 아파트, 상가 등이 밀집된 시내권 일대 또는 조치원읍의 원룸촌 일대 등 대상 지역을 선정하되 범죄예방구역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순찰 방법을 기존 112신고 출동 위주에서 자치경찰 제도 출범과 함께 변화시키는 전략이다. 이는 가칭 『통문 순찰』로서, 주간 순찰팀장은 최소 2명 이상의 이·통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면서 계절적인 치안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순찰에 적용하여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기존 112신고 체계 위주에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찰팀장은 중간관리자로 당일 근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 지역을 순찰하면서 이·통장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치안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순찰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취합한 치안 정보는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부터 비행 청소년 흡연, 특정 거주자가 위협을 한다든지, 최근 정신질환자의 관리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러한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여 사회 복지 파트와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주민들은 세종자치경찰 출범 이후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것입니다.

이외 범죄예방 전략으로 『삼각 포인트 순찰』의 실시를 제언하였는데, 이는 현재 설치된 방범용 CCTV를 정점으로 순찰차·관제센터·경찰서 상황실 등 3개의 주요한 요인이 확인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순찰 요원이 직접 도보로 해당 방범용 CCTV 비상벨 등 점검한 후 112치안종합상황실과 관제센터와 무전으로 소통하면서 이상 유무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 역시 순찰방식을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세종은 이미 방범용 CCTV가 잘 설치된 지역으로 순찰 요원이 자발적으로 방범용 CCTV 비상벨 점검 후 무전으로 소통하고, 이러한 순찰 중에 만나는 대상자들에게 범죄 관련 예방 교육하는 방식이며, 대부분 공원 등에 많이 설치된 만큼 시민으로서의 우범지역을 선제적으로 순찰하는 경찰관들을 보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종 전체의 안전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과 함께 경찰이 스스로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다가가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다시 안전도와 연결하고, 범죄예방과 안전 확보의 예산으로 자연스럽게 연동시키는 과정이 선순환 구조에 다다를 때 세종경찰에 대한 치안 고객만족도 향상은 물론 체감안전도가 향

상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의 변화는 기존 경찰의 치안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되, 세종특별자치시민을 얼마나 적극적 참여자로 동참시키는지에 달린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서까지 수립하고, 이와 함께 예산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찰관 상대 심층 면접

1) 범죄예방 분야

다음은 세종경찰청 범죄예방 분야 담당 계장과의 심층면접을 정리한 것으로, 세종청의 범죄예방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변화와 세종경찰청의 치안 트렌드에 실시간 대응 방안을 제안할 책임자로 판단하여 선정하였고, 실제 심층면접을 통해 제안한 치안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광역 기동 순찰대’ 운영, ‘지역 커뮤니티 치안센터’의 활용 방안으로, 이는 부족한 세종경찰의 인력과 신고 대응, 주민과 접촉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24년 세종자치경찰 출범 관련, 치안 인력 대비 수요에 부응하는 최적화된 순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구대·파출소 중심 순찰에서 경찰서 중심 광역순찰대 조직을 신설하여, 긴급 신고 대응과 사건처리를 하고,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커뮤니티 치안센터’로 변경하여 공동체 치안 실현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다음 〈표 100〉은 세종청 지역경찰 인력 현황으로, 세종청의 경우 현재 15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를 조속하게 충원해 주어야 현장 대응은 물론 범죄예방 마인드로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

〈표 100〉 세종청 지역경찰 인력 현황

구 분	계(명)	남부서				북부서				
		한솔	아름	보람	금남	조치원	전의	부강	연동	전동
정원	186	28	37	27	15	40	19	18	1	1
현원	171	32	36	24	14	34	15	15	1	0
대비	-15	4	-1	-3	-1	-6	-4	-3	0	-1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현재 지역경찰 인력 수급은 한계에 직면해 있는데, 세종 지역경찰 1인당 담당 인구 2,200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청의 긴급 신고 대응 측면에서 보면, 신고 처리 시간이 전국(4분 33초)과 대비하여 40초 느린데(전국 15위), 이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대비하다가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고착되어 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민접촉 순찰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인력의 부족으로 도보 순찰을 통한 주민접촉 순찰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표 101〉은 세종청 지역 관서별 출동 현황으로, 아람지구대가 1일 평균 33.8건을 처리하여 26.3%로 가장 많은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금남파출소는 1일 평균 5.3건으로 치안 수요가 적은 곳이다. 조치원지구대의 경우에 1일 평균 28.5건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어 북부서에서는 가장 치안 수요가 집중된 곳이지만 전의파출소와 부강파출소는 상대적으로 신고 출동 건수가 적다.

〈표 101〉 지역 관서별 출동 현황(실제 출동 건수)

구 분		총 출동	일 평균	비중(%)
총 계 (건)		31,229	128.5	100%
남부서	소 계	21,506	88.5	68.9%
	한솔지구대	7,239	29.7	23.1%
	아람지구대	8,227	33.8	26.3%
	보람지구대	4,608	18.9	14.7%
	금남파출소	1,296	5.3	4.1%
북부서	소 계	9,413	38.7	30.1%
	조치원지구대	6,947	28.5	22.2%
	전의파출소	1,242	5.1	3.9%
	부강파출소	1,110	4.5	3.5%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이러한 출동 건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 단위에서 광역 집중 순찰 및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지구대를 지역 커뮤니티의 최일선으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경찰 협력 단체인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모범 운전사회, 녹색어머니회,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실제로 자치경찰이 추진된 이후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집단적인 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동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자치경찰의 이원화 모형이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광역 기동 순찰대 운영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기존의 치안 시스템으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과 함께 치안시스템을 변경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세종형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에 세부적인 준비를 거친다면 전국 유일의 ‘지역 커뮤니티 치안센터’가 정착될 것이다.

다음은 경찰의 대표적인 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자율방범대는 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 자치분권과 자발적 치안의 최고 파수꾼이자 파트너입니다. 이들에게 역할을 더 부여하면서 권한을 주어야만 자발적으로 더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방대법 상 예방 순찰, 청소년 지도로 역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기에 역할과 권한이 너무 적습니다. 즉, 경찰과 합동 순찰하거나 대원들끼리 순찰시 민원 발생 우려, 자칫 안전사고 또는 부상 당할 가능성도 있고, 자발적인 순찰이라는 이유로 시민 참여가 없다면 오히려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역할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기초질서 단속(흡연, 애완견 입마개 배설물 등), 행정지도(청소년 비행지도) 관련하여 경찰법에 권한 명시하는 법제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무수탁사인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발된 자율방범대원을 한시적 공무수탁사인으로 치안의 보조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 실질적 감시자가 되도록 조례 등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자방대법 상 예산 규정은 “국가, 자자체장 ~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의무 규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차량 및 복제와 관련된 예산은 국비 지원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부분은 별도 예산 책정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2) 사회적약자 분야

이에 세종 여성청소년(여성청소년계)과에서는 ‘1366센터’ 설치의 공감대 형성 및 운영에 따른 기본구상을 추진하였고, 이를 가칭 ‘1366 정원’ 등 누구나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건축 형태는 원룸에 3~5명이 수용되는 피난처가 아닌 보호와 안식이 있는 공간으로, 특화된 운영 방식을 위해서 ‘1366센터’를 시민의 접근성이 쉬운 장소에 안전감과 편안함이 드는 건축물로 설립하고, 잠재된 초기상담 수요층을 확보하고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공존의 가치⁹⁰⁾ 상징물로서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출된 수익으로 고급화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90) 자연과 사람(정원 도시), 낮과 밤(야간관광 문화도시), 사람과 사람(미래도시)의 연결.

여기에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노인학대, 학교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폭력 피해자(피해 우려자 포함)의 범위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초기상담을 통한 원인분석, 연계지원과 긴급 지원⁹¹⁾은 물론 여성 폭력 24시간 초기상담 및 긴급 보호 본연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재발 집중관리·수사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전문 지원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여성 또는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 피해자 중심 대응 체계 강화 및 산재된 기관들을 연결한 중심체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실제 세종청에서는 수요에 따른 신설이 아닌 미래 지향적 관점이 필요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경찰(아동학대 전문)·여가부(상담 전문)·변호사(법률 전문)·병원·정신건강센터(의료 전문) 협력체계 구축 및 24시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1366센터 신설 제안은 시대적 흐름이며, 범죄피해자 보호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기존의 단순한 센터의 차원을 넘어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체성과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는 1366센터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예산 및 장소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인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폭력 수요현황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편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신설함이 적절하고, 단순 1366센터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특화된 세종형 1366센터 신설 제안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책 판단자를 설득하여 결국 추진하게 되었다.

이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단체는 여성 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1366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73〉과 같다.

91) 긴급보호 피해자를 위한 교통(택시)수단 제공 신속 대응,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콜(교통 약자형 콜택시) 이용, 여성 안심택시 홍보 문구 부착.

< YWCA상담소장 >	1366센터 신설은 공감하나 YWCA상담소에 상담원을 추가배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며, 1366센터는 25년쯤 세종의 수요현황에 따라 신설을 판단함이 적절하다는 의견
<충촌통합상담소장 >	여성폭력(가정폭력) 상담업무가 과부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1366센터 신설 시급
<세종여성대표 >	여성폭력을 전문적으로 24시간 지원하는 1366센터 신설이 시급하며, 지속적으로 시청 및 각종 간담회 참석시 설치의 필요성 제시
<세종여성플라자대표 >	여성폭력 수요에 따른 신설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로 조속히 설치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	대한민국의 위싱턴 역할을 하게 될 세종특별자치시에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표기관인 1366센터를 신설하여 여성폭력 근절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길 응원함
<충남·충북1366센터장 >	1366센터는 여성폭력에 대한 병원 응급실의 역할을 하는 기관임. 피해자를 지원토록 하는 시도의 지원 및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1366센터 전국협회장 >	세종센터 신설이 필요하다 말해왔으며 지금도 그 의견은 변함이 없다. 세종센터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설립되고 피해자 통합지원 기능 역할로 추진된다면 他 센터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

다음은 실제 세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형 1366 庭園’의 가안을 모형화한 것으로,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모형이며, 추후 지속해서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안으로 진일보할 것이다.

〈그림 73〉 세종형 1366센터(가칭 ‘세종형 1366 庭園’) (안)



출처 : 세종청 자료(2023).

3) 교통안전 분야

다음은 TCS⁹²⁾ 시스템상에 기록된 세종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TCS는 현재 고도화가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을 일일이 클릭하여 검색 후 사건을 정리해야 하는 단계로, 개별 사건 모두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음 〈표 102〉를 살펴보면, 2021년 세종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781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9명, 중상자는 271명, 경상자는 709명, 부상자는 39명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제 세종특별시민들이 설문조사에서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필요성 제기, PM 단속 요청, 청소년들의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을 근거로 3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오토바이의 경우 6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전체 사고의 7.9%를 차지하였는데, 사망자는 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3.3%에 해당하여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반드시 관련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전거나 PM에 비해 중상, 경상, 부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사용자에게 대한 사전 교육과 적절한 단속,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별로 통계를 산출하여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 담당 경찰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표 102〉 세종청 교통사고 현황(2021년)

구분	발생 건수	소계	사망자 수	중상자 수	경상자 수	부상자 수
전체 교통 사고 건수	781	1,028	9	271	709	39
오토바이	62 (7.9%)	81 (7.9%)	3 (33.3%)	28 (10.3%)	44 (6.2%)	6 (15.4%)
자전거	14 (1.8%)	15 (1.5%)	0	5 (1.8%)	5 (0.7%)	5 (12.8%)
PM	11 (1.4%)	11 (1.1%)	0	4 (1.5%)	5 (0.7%)	2 (5.1%)

출처 : 세종경찰청 교통계 자료(2023).

92) Traffic Cop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경찰에서 운용하는 교통 프로그램임.

다음은 자전거 사고로, 14건이 발생하여 15명이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이중 사망자는 없었으나 부상자의 비율이 12.8%로 다소 높았고, 이동형 PM의 경우 11건 사고가 발생하여 모두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전거와 PM은 1인이 운전하는 반면, 오토바이는 동승자도 뒷자리에 태운 상태에서 발생하여 부상자가 많이 생기는 만큼 안전모 착용 홍보와 뒷자리에 승차하는 대상자들의 안전에도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2022년 교통사고 현황으로, 전년 781건에 비해 146건이 증가하여 927건 발생하였고, 증가 비율은 18.7%이며, 사망자가 9명에서 17명으로 8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이동이 많아지고 활동이 많아진 것과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오토바이 사고는 83건으로 전체 사고의 9.0%, 자전거는 39건이 발생하여 전체 사고의 4.2%, PM은 35건으로 3.8%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오토바이는 1.1%p 증가했지만, 자전거와 PM은 2.4%p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자전거와 PM 교통사고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청소년들의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선제적인 예방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103〉 세종청 교통사고 현황(2022년)

구분	발생 건수	소계	사망자 수	중상자 수	경상자 수	부상자 수
전체 교통 사고 건수	927	1,338	17	232	737	352
오토바이	83 (9.0%)	111 (8.3%)	3 (17.6%)	19 (8.2%)	66 (9.0%)	23 (6.5%)
자전거	39 (4.2%)	49 (3.7%)	0	7 (3.0%)	29 (3.9%)	13 (3.7%)
PM	35 (3.8%)	43 (3.2%)	1 (5.9%)	10 (4.3%)	18 (2.4%)	14 (4.0%)

출처 : 세종경찰청 교통계 자료(2023).

오토바이 사고는 62건에서 83건으로 9.0% 증가하였고, 이 중 사망자 수는 전년도 3명과 동일하고 중상자 수는 감소한 데 반해, 경상자와 부상자 수는 증가하였다. 결국, 전체 인명 피해는 전년 81명에서 111명으로 30명이 증가하여 37.0% 증가하였다.

자전거 사고도 14건에서 3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인명 피해도 15명에서 49명으로 증가하였고, PM의 경우 2022년에 처음으로 사망자도 발생하였다. 특히 PM의 경우 전년도에는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일치하였으나 2022년에는 사고 대비 인명 피해자 수가 8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인용 이동장치인 PM에 2인이 탑승하는 경우 등이 빈발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세부적인 사례를 분석 후 주요 대상자들을 상대로 홍보가 필요하다.

2021년 대비 2022년 오토바이 인명 피해는 30명이 증가하여 37.3%로 나타났는데, 자전거는 34명이 증가하여 226.7% 증가하였고, PM은 32명이 증가하여 290.1%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추가로 2023년 말 기준으로 교통사고 통계 산출은 물론 오토바이, 자전거, PM의 인명 피해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교통안전 사업과 계획에 반영하고, 특히 계절적인 증가 요인에 따라서 청소년층이나 20대 등 젊은 연령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주의를 해야만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TCS상 자료를 일괄적으로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향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세종특별시의 공유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며, 이를 다시 TAAS와 연계시켜 고도화한다면 세종특별시의 교통안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세종경찰청 교통계의 협조를 받았으나, 연구자료의 한계로 인해 개별적인 각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젊은 층들의 교통수단과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교통 분야에서 선제적인 아이디어와 협업이 필요한 만큼 교통안전 DB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할 것이다.

실제 세종특별시에서 2022년에 발생한 PM 관련 교통사고 2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두 건 모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사례 1】

○일시 및 장소 : 2022.8.1.(화) 19:03경, 반곡동 00 마을 단지 앞 보도

○발생개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탄 중 2학생(남) 2명이 보행자(78세, 여성)를 충격하여 응급수술하였으나, 15일 후 사망

【사례 2】

○일시 및 장소 : 2022.6.2.(목) 17:40경,

○발생 개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고교 2년(여) 학생이, 보도에서 자전거도로로 걸던 8세(남)를 치어 경상을 입힘

이는 중고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최근 전동킥보드가 도로와 인도를 넘나들면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2~3명이 탑승한 채 과속을 한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 홍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도 이러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범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PM 사고 관련 인명 피해 여부와 그 경중을 떠나 전수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 〈그림 74〉는 세종경찰청 교통계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로, PM 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면허가 없이 운전하고 있고, 대여 시 부모의 운전 면허를 도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가정 내에서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세종경찰청 자료(2022).

4.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 상대 심층 면접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은 구성되어 활동 중⁹³⁾으로, 본 심층 면접은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이 구성되어 자체적인 의견이 정리된 이후 시점에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단을 실제로 만나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심층 면접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치경찰사무는 현행 「경찰법」에 규정된 자치경찰사무 전부가 실질적으로 이관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112치안종합상황실, 지구대·파출소 등이 실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12신고의 16% 정도는 국가사무이므로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합동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 및 지역경찰 이관 필요성을 112신고 중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교(세종 북부경찰서)해 보면, 다음 〈표 104〉와 같다. 신고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 건수는 총 1,425건으로, 동일 신고 및 신고취소 등 248건을 제외하면 유효건수는 1,177건이다.

〈표 104〉 국가사무 신고 건수

구분	계	변사	납치 감금	폭행 협박	사기	절도	손괴	화재	마약	도박	실종	수배	기타
건수	195	8	1	38	36	54	13	14	7	8	60	2	14

※ 실종은 형사 기능에서 처리하나 자치사무임. 기타 :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허위신고 등

출처 :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 자료(2023).

93) 대전일보, “이대론 안 된다.... 자치경찰 제대로 해보자”, 앞장선 세종경찰, 2023.8.11.일 자.

〈표 105〉 자치경찰 사무 신고 건수

구분	계	여청	교통 사고	음주 운전	교통 불편	소란 시비	풍속 영업	소음	분실	주취자	보호 조치	기타 안전	도움 등
건수	922	71	163	51	108	109	9	70	74	91	48	15	113

※ 여청 : 성폭 1, 학폭 4, 가폭 29, 아동학대 4, 데이트폭력 4, 스토킹 4, 청소년비행 25, / 도움 등 : 비상벨 및 상담 안내 등 서비스 제공.

출처 :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 자료(2023).

실제 분석 결과 유효 신고 건수 1,177건 중 국가사무는 195건(16%), 자치사무는 982건(84%)으로 대부분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즉 현재 처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112신고 출동은 자치경찰사무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추가로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이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이관 필요성에 대해서 업무의 밀접성 측면에서 본다면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주요 임무가 치안 상황에 대한 접수·지령 및 상황 관리인 점, 지령의 주요 대상이 제1차 출동 요소인 지역 경찰인 점, 상황관리 즉 초동 조치의 지휘 대상에 지역경찰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과 현재 행정적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이지역경찰의 조직·인사 등에 대해 일반적 행정권을 갖는 점 등으로 볼 때 112치안종합 상황실과 지역경찰은 상호 관련 정도가 밀접하다고 할 것이므로 두 개의 부서는 동시에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는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상 치안상황관리관의 분장사무에 112업무와 지역경찰업무를 규정(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9조 참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안의 효율성 측면에 관하여 제시된 의견이다.

다음은 치안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현장 출동·조치 부서와 이를 지령·관리하는 부서는 일반적으로 지휘체계로 보아야 하고, 지휘체계는 같은 공무원 신

분을 갖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역관서는 자치경찰본부 소속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 본부)를 일반적으로 지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83조)⁹⁴⁾에 위배된다고 보 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찰 이관 필요성에 대한 심층 면접 내용을 정리한 결과이다.

첫째로, 치안상황(112신고)에 대한 1차 출동(책임) 부서가 지역경찰이고, 신고사 건의 약 80%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역경찰을 자치경찰본부로 이관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둘째로, 지역경찰이 국가경찰로 남게 될 경우 자치사무에 대한 신고 출동 시 미온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실종이나 자살의 심 사건은 발견까지 많은 시간과 경력이 필요하여 지역경찰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셋째로, 치안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는 하나의 지역에서 동일 유사한 사무를 두 개의 기관이 처리하게 되면 사건 떠넘기기 등 비효율성과 치안 사각지대 발생 야기, 이는 하나의 목표 아래 업무를 기능적으로 배분하는 분업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행정 실패 사례의 대표적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동일·유사한 사무의 예 : 시비·소란은 성격상 물리력을 동반하기 쉽고, 물리력이 행사되었을 때 이것을 시비·소란과 독립된 폭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비·소란 내의 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 데이트 폭력의 경우 데이트라는 부분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인정 여부가 문제 (연인관계가 아니면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처리)

94) 지방자치법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 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수사권에 대해서 제시된 세부 의견을 정리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 있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등 現 경찰법상 '자치경찰수사사무' 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대등한 위상을 갖추면서 동시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시청 고발 특별법 업무를 취급하는 수사 경찰과 시청의 특사경 조직을 자치경찰로 전환하여 전속관할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치경찰이 업무수행 중 인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과 담당 내 공무원 범죄,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찰·지역경비·공동체협력·112치안종합상황실 등 주민 밀착 민생 치안 활동은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단에서 전담 수행하며, 현행 「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수사 포함),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원 대상 범죄는 현재와 같은 현장 조치권 행사로 치안 공백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범인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가 경찰사무의 경우 인도·인계하도록 상호 전담 및 응원체계를 유지하여 업무 공백 및 주민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이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현재와 똑같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시스템 적용 대상에 자치경찰이 포함되어 있어야 신속한 수사로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초동 조치권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로, 초동 조치권을 현재 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치경찰의 현재의 초동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과 별개로, 초동 조치권도 그대로 보유해야 합니다. 경찰 대응의 신속성은 범죄피해자 만족도 결정 1순위로

작용하며, 현장 경찰관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초동 조치권'에 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이 불비(不備)하여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거나 경찰법이나 자치경찰법(시도특별법) 제정 내용에서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동 조치권은 현장 출동한 지역경찰관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근거 위험방지, 출입, 보호 등, 현장보존 등을 말하며, 초동수사권은 현장 출동한 지역경찰관의 형소법근거, 현행범, 긴급체포, 영장없는 압수수색 초동 조치를 말합니다. 초동 수사 후, 국가사무는 담당 사무 전담 직원에게 인계하면 됩니다.

자치경찰의 인력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요약하자면 자치경찰 인력이 정원 기준으로 모두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인력이 정원으로 모두 이관되어야 합니다. 세종경찰청, 세종남·북부경찰서의 생활안전·여성·교통·경비·수사·112치안종합상황실, 지구대·파출소 인력과, 경무·홍보·청문감사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인력도 정원으로 이관되어야 하며, 향후 시범운영 종료 후에도 이원화 자치경찰제 지속 운영을 위해 정원 이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종자치경찰 연구모임은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찰관은 신분을 전환하고 그 외의 경찰관은 국가직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로 전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원을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력이 부족한 지역경찰·112치안종합상황실, 경비, 수사 인원은 주민 맞춤형 치안을 위해 지자체에서 신규 채용 및 퇴직 경찰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구대·파출소와 연계되는 다양한 주민 체감 방법활동, 각종 행사나 출·퇴근 시간대 교통 근무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적극 행정응원의 형태로 기동대 일부를 이관(집회 시위 우선 수행 원칙, 3개 기동대 중 1개 기동대 이관)하여 (교통) 순찰대로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집회 시위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측면에서 경력 동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세종청의 경우 2020년 경력 대비율이 14.5%⁹⁵⁾에서 2021년 18.1%로 상향되었고, 2022년에는 23.1%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인력조정 관련한 심층 면접 결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사무와 유사한 市·警 업무를 통·폐합하여, 경찰업무와 행정지원 업무로 구분한 뒤, 수요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고 인력을 개편하는 등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의 특사경 수사 인력,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민간협력단체 관리부서, 범죄 예방업무 등 유사 업무 자치경찰로 인력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와 치안 수요 증가에 맞는 국비, 정원 확보와 연계되어야 하며, 향후 2030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가 8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세종의 확장성을 고려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특사경과 관련하여 제시한 실질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특사경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특사경 직무범위 비교(직무 분야/지명법률, 단위 : 개수)해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17개 분야 73개 법률을 의율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33개 범위에

95) 세종청 내부 자료 인용, 이외 집회 소음 관리 등도 증가추세이며,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108개의 법률⁹⁶⁾을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4개 직무분야에 4개 법률을 적용하고 있고, 특사경 부서인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에서 4개 법률을 담당하고, 그 외 산림·환경 등 각 부서에서 지명된 특사경이 분야별 특사경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⁹⁷⁾의 경우 21개 분야에 102개의 법률을 적용하면서 수사 중입니다.

다음은 인사권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자치경찰의 채용, 승진, 전보, 징계 등을 행사하고,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단장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이직을 희망하면 즉시 자치경찰로의 신분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자치경찰 상호간에 인사교류 및 교육 등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분 전환 경찰관에게 동기 부여 및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직급 일원화를 통한 갈등 해소를 위해 직급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개의 직급으로 통상 동장 및 면장은 5급 사무관이지만(일부는 4급 서기관), 경찰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경정, 경장이라는 계급이 1969년에 추가되어 11개 계급으로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6급 경감(일부 지구대장은 5급 경정)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행 시 직급 차이로 인해 조직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직급간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분 전환 유도 및 향후 인사교류 확대를 위해 조직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직 직급과 경찰 계급을 일치하는 9급(순경), 8급(경장), 7급(경사), 6급(경위), 5급(경감), 4급(경정), 3급(총경), 2급(경무관), 1급(치안감)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적용되던 계급 정년은 폐지하고, 경찰관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의

96) 경기도 특사경(공정·민생) 직무범위는 108개 법률로 제주 대비 동물보호, 개발제한구역, 종자관리, 운수사업 등 6개 법률이 많음.

97) 자치경찰 90개, 소방 8개(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세정 4개(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등), 총 102개 법률 수행 중.

지방직 전환 유도를 위해 행정관·주무관(경찰용어)에 대해서도 행정관은 신분 전환시 사무관 등 상위직급 승진을 보장해 주며, 주무관은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일반행정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정부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수·복지포인트 및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직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의 책임과 권한 하에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본부, 세종남·북부서를 관할하는 세종남·북부자치경찰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법령상 기능(주요정책, 인사, 예산 등의 심의·의결)을 유지하면서, 집행기관인 자치경찰본부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갈등 조정 권한을 실질화하고 동시에 자치경찰본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시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세종경찰청, 세종직협)에서 1/3 이상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치경찰본부는 수사사무에 대해 구체적·개별적 지시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시장이 지방 치안감을 자치경찰본부장으로 임명하여 경무기획과, 수사과(특사경 포함),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경비과, 교통정보센터, 112치안종합상황실, 공동체협력과(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통합)를 두고, 해당 과장은 지방 총경, 계장은 지방 경정으로 보해야 합니다. 산하에는 남부와 북부자치경찰단, (교통) 순찰대를 별도 두어서 운영⁹⁸⁾해야 합니다.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본부 산하로 남부·북부경찰서를 관할하는 각 지역에 시장이 자치경찰본부장의 추천으로 지방 총경을 자치경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세종남부 자치경찰단과 세종북부자치경찰단을 두고, 각 자치경찰단에는 경무기획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경비과, 공동체 협력과, 수사과,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두고, 해당 과장은 지방 경정으로 보해야 합니다. 산하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두며,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단 산하로 현행처럼 운영하되,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의 파출소와 치안센터는 신규채용, 퇴직경찰관 활용 등을 통해 부활시켜 운영토록 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지방 경정으로 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원과 시설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재원의 경우 인력 이관에 따른 인건비·운영비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약칭 균특 회계) 계정으로 국비로 지원하되, 신규사업비에 대해선 市에서 부담하고,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교통 과태료·범칙금은 전부 이관되고, 주세(酒稅)는 일부 이관되어야 합니다.⁹⁹⁾

또한, 시설의 경우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행 초기에 자치경찰본부 시설은 임대 건물을, 자치경찰단은 기존 경찰서와 공동으로 사용하여 시설 마련을 위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대국민 홍보 및 시설 완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은 자생적인 연구모임으로, 세종형 자치경찰의 진일보한 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설득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98) ▶경무기획과(경무기획, 총무)에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인력으로 구성, ▶ 119 소방 등과 통합상황실 운영, 市와 교통통합정보센터 운영, 주취자·정신질환자·자살기도자 관련 보호센터는 市·소방과 공동 운영
99) 주취자 보호 조치 등 경찰의 주요 업무 관련성 있는 주세를 자치경찰 예산으로 활용, 소방은 업무 관련성 근거로 담배소비세 중 일정부분을(40-60%) 활용하고 있음.

제3절 우수사례 수집과 세종형 활용방안

1. 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우수사례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별 추진 시책 중 우수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과학 치안자문단,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안전 모델,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드론 순찰대 등이 있다.

첫 번째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과학 치안자문단의 구성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우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특히나 대전 지역에는 대덕연구단지, KAIST 등 과학 치안과 관련된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폭넓은 기술 자문을 통한 과학 치안 정책 수립이 쉬운 지역으로서 과학 치안자문단을 운영¹⁰⁰⁾ 중에 있다.

자문단은 관계기관별 치안과 과학 기술 분야 등 실무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명으로서 민간 5명은 치안·기초과학·과학학계·정보통신·특구재단 등의 전문가¹⁰¹⁾이고 이외 공무원 4명은 자치경찰위원회 3명, 대전광역시경찰청 1명이다.

이들은 과학 치안 고도화 사업발굴 및 협력 지원을 담당하는데, 치안과 과학 기술 접목을 통한 과학 치안 시책 발굴, 과학 치안 상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첨단장비 시연·도입, 지능범죄 분석 대응과 과학 기술 기반 미래 사회 선제 대응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100) 대전일보,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과학치안정책자문단' 위촉, 2021.9.28.일 자.

101) ETRI(전자통신연구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SKT, INNOPOLIS(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7월부터 IoT 스마트 안심화장실 구축 사업 기술 자문(사업 예산, 2.5억), 2022년 7월부터 청소년 비행 예방 AI CCTV 설치·운영 관련 기술 자문(사업 예산, 12.5억),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정책 현행화 기술 자문¹⁰²⁾을 담당하였다.

최초 2021년 9월 자문단 구성 이후, 2021년 2회, 2022년 9회, 2023년 7회 자문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아이디어 제공 및 정책 제언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학 치안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민 아이디어 수용에 한계가 있고, 자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인 과제 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치안 관련 당사자인 경찰관의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실제 대전과학치안자문단 구성 이후,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치안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향후 대학 입주 등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림 75〉 집현동 일대 입주 예정 대학 현황



출처: TJB 대전·세종·충남 뉴스, ‘7개 대학 캠퍼스 공유’...세종 ‘공동 캠퍼스’ 운영 탄력, (2023.10.12일).

102) ① 다목적 이동형 CCTV (1.5억) ②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한 행정서비스(챗봇 등) 예정.

두 번째 경기남부경찰청 시민 안전 모델의 경우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각종 강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자율방범대 등이 실제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 아래 〈그림 76〉은 시민 안전 모델의 단계별 추진 전략으로 경찰과 안산시가 협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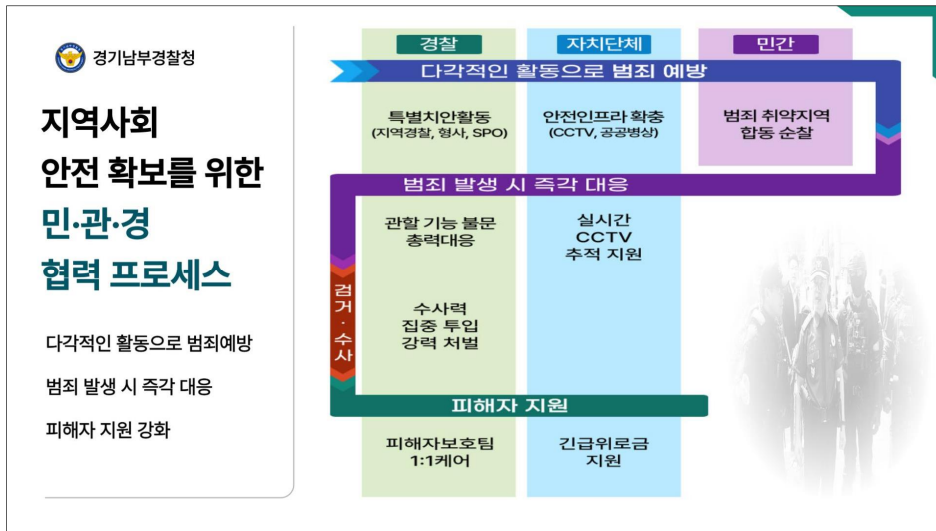
〈그림 76〉 시민 안전 모델 추진 전략



출처: 경기남부청, 시민 안전 모델(2023.9월).

다음 〈그림 77〉은 계획의 종합적인 추진도로서, 경찰과 자치단체, 민간이 공동으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각종 사고 발생 전에 그 예방을 위해 협업하고, 범죄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제 피해자들에게는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지원을 해 주는 모델이다.

〈그림 77〉 시민 안전 모델 추진도



출처: 경기남부청, 시민 안전 모델(2023.9월).

세 번째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순찰 목적에 특화된 ‘치안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드론 합동 순찰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고흥군으로, 고흥경찰서와 합동으로 운영하게 되며, 군청 직원 1명과 경찰서 직원 1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실제 고흥군에서는 검증을 거쳐 순조롭게 계획을 추진 중이며,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고흥군은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과기부·행안부의 주민 공감 현장 문제 해결 사업¹⁰³⁾인 '섬 지역 치안 드론 운용 통합체계 개발' 제1차 본 실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섬 지역에서의 주야간 순찰을 위한 장기 체공과 비상 대응이 가능한 드론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103) 과기부와 행안부의 과학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선정. 전남자치경찰위원회·고흥군·순천대·대한항공·전남테크노파크 협업으로 해양환경 및 순찰 목적에 적합한 드론 개발을 완료함(2022.5월 ~ 2023.7월까지 총사업비 8억 원).

기까지 실증 과정을 거쳐 섬 지역의 범죄 예방, 실종자 수색, 양식 어장 도난 방지, 해양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현장 문제 해결에 활용될 계획이다.¹⁰⁴⁾

운용 방식은 이동식 관제 차량에 치안 드론을 실어 목적지까지 이동 후 순찰(2시간 이상 비행)하며, 드론을 통해 촬영된 영상은 이동식 관제 차량 및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드론에는 음성 및 경고 사이렌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과 탐조등, 열화상 카메라, 경광등, 통신장비 등 순찰 목적에 특화된 장비를 탑재하였다.

다음 〈그림 78〉은 관계기관이 모여 모의 비행 등을 실증했던 장면으로 이는 체감안전도 향상은 물론 치안 드론을 통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과학 치안을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78〉 고흥군 드론 실증 장면



출처: 브레이크 뉴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섬지역 특화 ‘치안드론’ 개발 속도, 2023.6.12.일 자.

104) 로봇 신문, 고흥군, ‘섬 지역 치안드론’ 뜬다, 2022. 10. 21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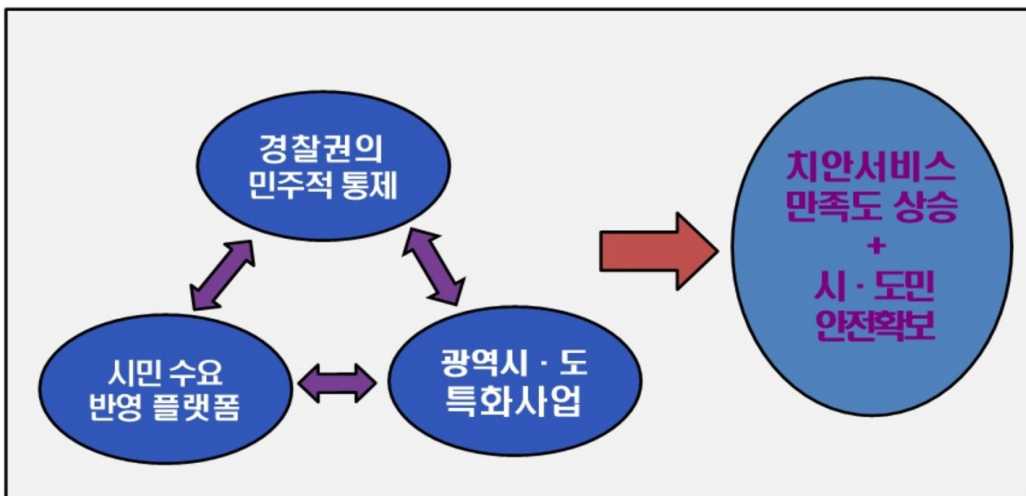
2. 세종형 활용방안

이미 자치경찰위원회별 우수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1호 시책 사업으로 ‘지역경찰장 주민 추천제’를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른 시책들도 홍보하면서 전략화하고 있다.

또한, 대구·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재)과학치안진흥센터에서 지원하는 정부 R&D예산을 받아서 지역 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향후 이러한 편차는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종은 세종형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다음 〈그림 79〉는 자치경찰의 방향성을 도식화한 것으로, 세종은 시민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도시 성장이 팽창될 것이므로 세종특별시민을 위한 방향성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그림 79〉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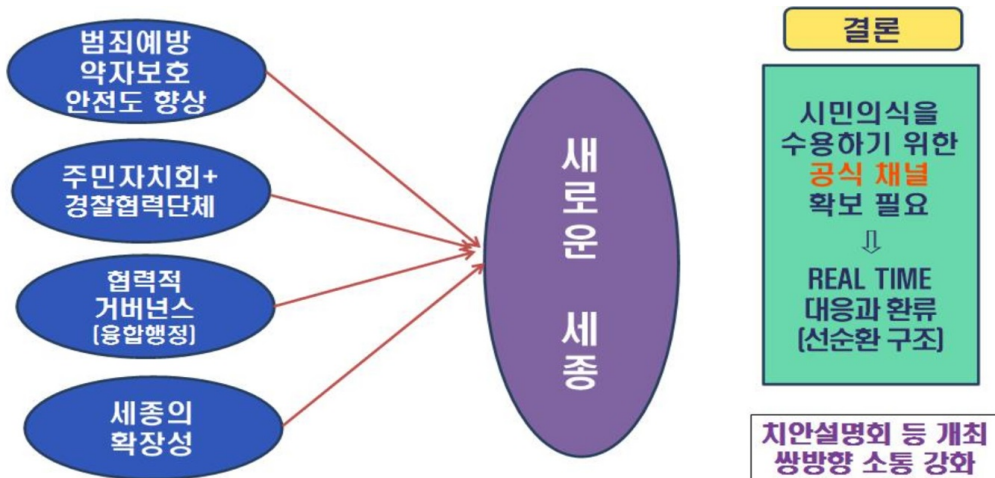
출처: 장일식, 현행 자치경찰제 시행 평가 및 발전방안(2023.3.3.일) 세미나 자료집, 34쪽.

아울러 ‘새로운 세종’을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식 채널을 만들고, 이를 실시간 소통 창구를 만들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기존 세종특별시의 다양한 인프라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결합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융합 행정을 적용하여 선순환 구조로 선도해야 한다.

다음 〈그림 80〉은 이를 도식화한 것으로, 세종자치경찰은 추후 세종시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치안유지를 기본으로 하여 세종자치경찰 모델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

치안행정과 지역 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해서 확대하여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자치경찰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105)

〈그림 80〉 세종자치경찰 모델



출처: 장일식, 세종자치위-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공동 학술세미나 제안모델(2022.6.3.일).

105) 장일식, “자치경찰제도 시행 1년 후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책임 연구 과제」, 2023, 221쪽.

제4장 세종형 이원화 모형 적용 및 발전방안

제1절 세종형 이원화 모형 적용 및 추진 방안

1. 세종형 이원화 모형 적용

지역에 따라 범죄예방,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시민과의 소통 등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선 그 지역에 맞는 이원화 모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세종의 경우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신도시가 있고, 조치원읍과 같은 구도시가 이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 평균 연령, 공무원 도시, 스마트 시티(5생활권) 등 타 지역과 다른 면이 많이 있는 도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39만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 그 규모가 가장 작아서 어떤 모형이든 적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대륙계, 특히 프랑스의 자치경찰을 롤모델로 하고 있다고 한다. 굳이 치안과 치안서비스를 구분한다면, 치안서비스에 특화된 이원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영미계, 특히 런던 경찰과 같은 완전한 이원화 모형은 구현된 적이 없다. 과거 서울시에서 런던 경찰과 같은 완전한 이원화 모형을 주장한 적이 있고, 2023년에 이원화 시범운영 지역인 4개 시도(세종, 제주, 강원, 전북)에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사무에 따라 구분하는 이원화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세종의 경우 규모 면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완전한 이원화 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해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에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사당, 세종 대통령 집무실 등을 봤을 때, 국가경찰의 역할도 타 시도에 비해 상당 부분 필요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종,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시도가 제시한 공동건의문의 이원화 모형이 세종에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적합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타 시

도의 경우는 현재 상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으로는 완전한 이원화 모형이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원화 모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장치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이원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시민참여와 같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는 지역주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예전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민주적 통제장치로 ‘주민 옴부즈만(ombudsman)’¹⁰⁶⁾ 제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제도는 영국의 IPCC(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독립적 경찰 민원 조사위원회)를 모델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치경찰의 경찰권 남용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시민이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경찰에게 지역의 주민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안으로 기존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상호 의견 및 정보교환, 의견수렴의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1주일 혹은 월 단위의 구역별 모임을 통해 소통의 장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자치경찰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종특별시장 주재 아래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 운영¹⁰⁷⁾되고 있어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세종특별시장은 관할 구역 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교육 분야 대표, 국가경찰, 소방, 마을공동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내 아파트, 상가, 학교지역 등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도록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6)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권리 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옴부즈맨은 고대 스웨덴어로 대리인(ag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헌 내지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임.

10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년 10월 16일 일부 개정, 기존 간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세종지방경찰청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 및 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신설) 이외 위원 중 당연직 지정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 의결함.

그러나 문제는 지역치안협의회 관계자들의 경우 지역사회 기관장, 단체장 등의 정기적 모임의 성격으로 여겨, 실질적인 의사 결집과 정책 판단 등 순기능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경찰과 주민 간 의사소통이 미흡할 뿐 아니라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단층제적인 특성¹⁰⁸⁾을 가진 세종시의 상황을 고려해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치안 문제의 발굴,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 내 자치경찰 주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가경찰 체제하에 지역 밀착 민·관 협력적 치안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데,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지구대, 파출소는 관할 지역의 치안유지, 방법 순찰 등 임무를 수행하는 기초 치안 활동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112종합상황실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한계를 보인다.

자율방범대의 경우 협력적 치안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중요한 대표조직으로 지역주민과 친밀한 경찰상 제고에 그 효과가 크며, 저비용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의 관리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이어서 경찰과 함께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기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치안의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려면 지역경찰과 주민 간 상호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단위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규정이 미비할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행정기관, 다른 주민조직과도 연계성이 매우 취약해, 지역주민과 협력적인 치안 서비스, 공동서비스의 공동창출 차원에서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세종시 역시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 지구대 단위에서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으나 실제 관리 및 지원 규정의 미비로 인해 민관협력, 주민밀착형 공동치안 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대표조직(주민자치회 등), 자율방범대 등과의 네트워크를 읍면동 이하의 소지역에 실질화해 그

108)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자치단체가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형태의 운영을 말함.

한계를 극복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읍면동 단위에 자율방범대, 자전거 순찰대,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청년회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의제를 도출함으로써 읍면동 행정, 관할 지구대 파출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세부 방안으로 자율방범대의 경우 취약 시간대 중심 순찰 및 방범 활동 전개, 아동·청소년 보호와 같은 지역의 현안은 아동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 학생 및 학부모 순찰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협력 치안 파트너십을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주민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해당사자들 간 분기별 혹은 월별 간담회 등 회의를 정례화하고 관할 구역 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공동대처, 민간 경비 업체 등과도 협력 치안을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분야별 추진 방안

1) 범죄예방

(1) 가칭 ‘시민 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 또는 직제 신설 추진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 중인 방범용 CCTV 등을 경찰이나 소방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¹⁰⁹⁾ 논의 중에 있어 사회재난을 위한 CCTV와도 연계시킬 전망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모니터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이 중요해진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관제센터 시설이 유희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모니터링도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는 만큼 112 치안종합상황실이 현재 세종경

109) 시사저널 e, ‘재난 발생시 경찰 즉시 확인’ CCTV 통합법 나왔다. 2023. 8. 26.일 자,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NDMS)에 CCTV 영상정보를 포함하는 안을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함.

찰청에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길 바란다.

이를 가칭 ‘시민안전통합 관제센터’로 칭하고, 이곳에 세종특별자치시청과 경찰, 소방이 합동 근무한다면 현장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조치할 수 있고, 특히 야간·심야 등 취약 시간대 재난재해는 물론 범죄 대응, 인명 구조 등 실질적인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자치경찰의 확장성을 예측하여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더 진행된 시점이라면 ‘시민안전통합실’의 직제를 신설하여 전국 최초로 경찰, 소방, 시청이 동시에 예찰 및 상황판단과 조치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융합행정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오송역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하여 협업의 중요성과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기존 통합관제센터의 활용성을 배가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프로세스가 구축된다면 전국 첫 사례로 호평받을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기관별로 애매한 영역에서 사무 처리시 이견 등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조정, 중재하는 별도 협력관도 배치하여 법률 개정과 조례 정비, 추진 이후 성과와 홍보 전략 등 세종 안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협의하여 인력, 예산, 장비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일 안전 책임자는 ‘세종엔’의 앱을 통해 실명제로 매일 지역 안전 정보와 교통 등 상황을 업데이트한다면 공무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게 되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갖는 좋은 정주 여건과 자연환경을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연결하여 기관별 협업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자치경찰제도 출범과 함께 긍정적인 사례도 발굴될 것이며, 기존 국가경찰 시스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민을 지향하는 마인드로의 전환도 점차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에서도 CCTV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적극 확대해 볼 시점이다.

2018년에 조성한 송파구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영상 시스템, 지진계측기, 소방·경찰 핫라인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 내 CCTV

와 연계되어 있지만, 상황 발생 시 해당 장소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인근 CCTV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송파구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은 교통·방범·방재·환경 등 각종 도시 인프라를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연계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CCTV 영상이 자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관제센터가 아닌 구청사에서도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실시간 영상 중계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해 재난 대응 인력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 받을 수 있게 하였다.¹¹⁰⁾

향후 세종특별시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본 제안에 대해 기관별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거쳐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여 세종특별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 〈그림 81〉은 세종 안심이 서비스 체계도로 도시통합관제센터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시민안전통합센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세종 도시통합정보센터 자료(2023).

110) 아시아경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통합적 대응 역량 높여, 2023.10.4.일 자.

(2) 방법 시설의 적정 운영과 관리 필요

세종특별시는 계획된 도시로, 현재 방법용 CCTV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양적인 팽창은 한계가 있고, 그 효과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 수도 있는 만큼 기존 방법 시설의 적정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 그림은 기존 세종특별시에 설치된 로고젝터 사진들로 심야시간대 이러한 문구를 보행자들이 본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자 비용과 그에 대비한 효과를 고려한다면 시민이 요청하는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고, 시설적·물리적인 확대보다는 그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주도로 현장 경찰관, 이미 구성된 협력 단체원들과 심사 숙고하여 판단하고, 추진하길 바란다.

〈그림 82〉 범죄예방 홍보 로고젝터 장면



출처: 세종경찰청 자료(2023).

〈그림 83〉 여성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장면



출처: 세종경찰청 자료(2023).

(3)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청소년범죄 관련 최근 학교폭력 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106〉과 같다. 이는 실제 사건 처리된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112신고 이외에도 사후 신고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상해·폭행의 경우 2020년과 2021년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2022년에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6〉 최근 4년간 학교폭력 사건 추이

구분	계	상해·폭행	금품갈취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기타
2019	85	47	1	0	16	21
2020	68	39	2	4	17	6
2021	82	36	6	8	13	19
2022	106	55	7	10	2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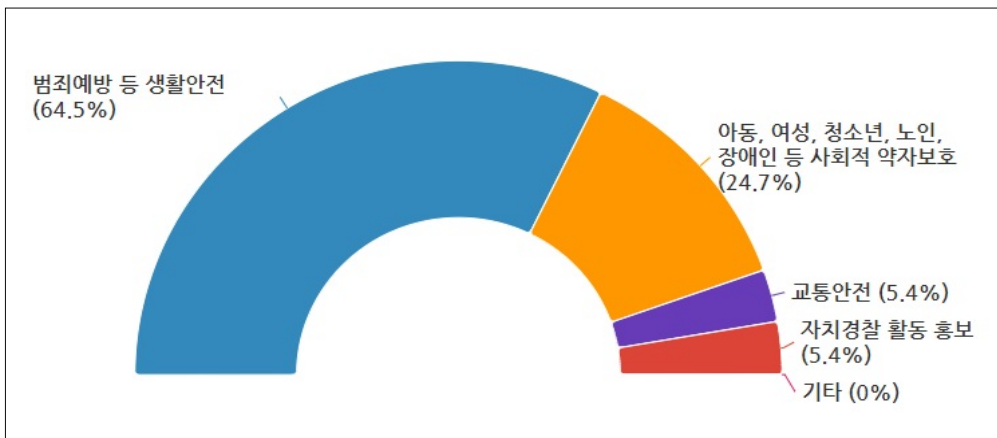
출처: 세종경찰청 자료(2023).

사건 자체의 증가도 중요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신체, 경제, 정신적으로 모두 사건이 증가하여 그 피해자들의 지원과 보살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솔루션 회의의 수준 이상의 협의체가 상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폭력의 증가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학급 동급생에게도 영향을 미쳐 우울감은 물론 자살 시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지표인 만큼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사회 모두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은 상대적으로 소문이 빠르고,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이 가공되어 확산될 가능성도 농후한데, 그 경우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어 다각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세종특별시민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 중 1순위를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4〉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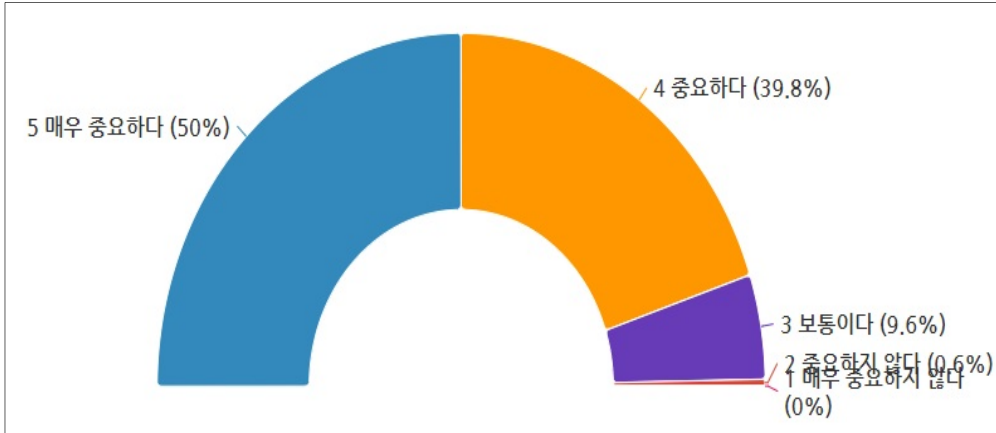


또한, 순찰이 강화되어야 할 장소 8개소¹¹¹⁾에 대해 중요도를 묻은 바, 그 중 학교 주변 및 청소년 밀집 지역의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50.0%로 가장 높게

111) 유흥업소 밀집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혼잡지역, 공원·수변 산책로 등, 학교 주변 및 청소년 밀집지역, 원룸 등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 및 인근 상가, 공사·폐가 등 인적이 드문 지역, 정부 행정기관 및 연구원 등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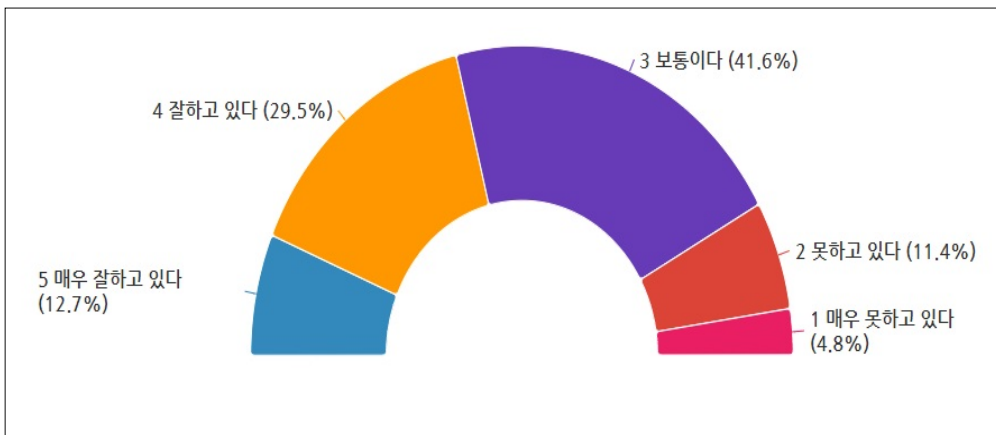
나타났다.

〈그림 85〉 학교주변 및 청소년 밀집지역 중요도(시민)



다음 〈그림 86〉은 경찰의 대응 수준을 질문하였는데, 그 중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응답한 것으로, 7개 대상¹¹²⁾ 중에서 부정 의견(못하고 있다, 매우 못하고 있다)이 16.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세종특별시민들이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가장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림 86〉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재 경찰의 대응 수준(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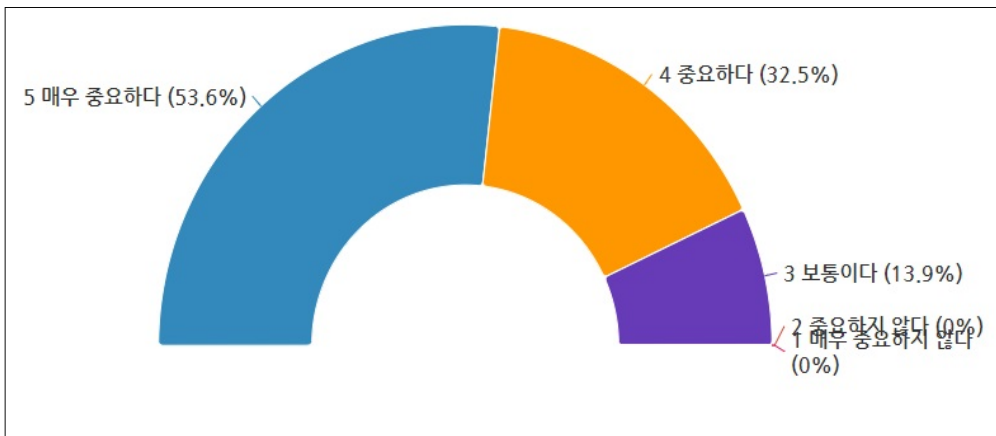


112) 부정의견 빈도가 높은 순, 청소년범죄 16.2%, 스토킹 12.6%, 학교폭력 12.0%, 가정폭력 11.4%, 성폭력 8.4%, 장애인 범죄 7.2%, 노인대상 범죄 5.4% 순서임.

다음 〈그림 87〉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의 걱정 대응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긍정 의견이 86.1%로 다른 비교 대상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다. 이는 시민들이 청소년범죄를 우선 1순위로 선택한 만큼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세부 분석과 지역별, 학교별, 연령별 심층분석을 토대로 향후 치안 시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세종특별시의 가족 구성단위가 대부분 핵가족이며, 전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교사, 친구 이외 다른 상담이나 지지 요인이 적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수치보다 더 수요가 많을 수도 있는 만큼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87〉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의 걱정 대응 수준(시민)



그렇다면 세종특별시의 특성상 하교 이후 시간부터 귀가까지 학생들의 생활 패턴과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SNS상에서 기인한 각종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까지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관심사와 이성 문제, 사이버 도박 등 그 연령대 파악은 물론 학교별로 위험군에 속하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2022년도 학생 자살이 3건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세종광역자살예방센터, Wee센터 등과도 정보 공유가 절실하나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기관별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만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특별시의회에서 더욱 관심을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세종경찰청에서는 범죄예방 홍보 아이디어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는데, 세종경찰청의 'SOS'는 최근 자전거 및 무인(無人)점포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절도가 크게 늘는 등 청소년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SOS(Sound Of School)'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막고자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안전 알리미 신호로 초·중·고별 교내 방송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¹¹³⁾

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세종형 예방 전략이 필요할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2) 사회적약자 보호

세종특별시에는 현재 범죄피해 종합지원센터가 부재하며, 자살시도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 이에 ‘1366센터’의 개소를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각종 단체와의 연대도 필요하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개개인별로 살펴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이미 세종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준비를 차분히 해 오고 있으나, 세종특별시에 전입자들이 많은 만큼 이러한 정보 공유는 다소 미흡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시청 주무 부서와 세종경찰청의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113) 중도일보, 세종경찰, SOS 경보 통해 청소년 비행·범죄 예방, 2023.10.3.일 자.

또한, 세종시의원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범죄예방 관점에서 시와 교육청, 경찰, 소방, 병원, 대학, 기업 등을 연계한 복지·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¹¹⁴⁾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약자 보호 커뮤니티의 결성과 실제 추진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의 문제도 향후 중요해질 것으로, 경찰의 범죄정보와 112신고 정보를 토대로 사회복지 분야의 ‘행복e음시스템’¹¹⁵⁾과의 연계 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다음 〈그림 88〉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연구 관련 MOU¹¹⁶⁾를 체결한 이후에 약 4개월간에 걸쳐 목포형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우수사례로 소개되어 연합뉴스에서도 보도되었다.

이를 위해 실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사팀장과 직원 2명이 현장을 뛰면서 목포지역에서 일원화된 범죄 피해 서비스 구축을 완성하였고, 다시 이를 순천과 여수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나, 해당 지역에서 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지역마다 각종 지원 체계와 전문가, 예산과 지원들이 달랐고, 지역 정서도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피해자 종합 연계망의 구축에 있어서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더욱 견실하게 하면서 일원화시키고 이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세종의 행정중심복합지역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세종의 면 단위 지역까지 포함하여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114) 충청뉴스, 김재형 세종시의원, "범죄 대응에 세종자치경찰이 주도적 역할 해야", 2023.9.8.일 자.

115) 아직도 행복e음 시스템상에는 범죄피해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이 협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16) 전남 목포 신문, 전남자치경찰-경찰대, 연구·교육 협력키로, 2021.10.30.일 자.

〈그림 88〉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우수사례



출처 : 장일식, 「현행 자치경찰제 시행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발제집, (2023.3.3.일) 14쪽.

한편 다양한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은 이미 세종특별시에서도 다수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부문화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정·성폭력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공서, 지역사회, 민간기관이 협업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임직원이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한 기금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하면, 이를 세종경찰청 등이 선정한 대상자의 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117)

117) 뉴스티엔티 세종, 세종자치경찰위원회, 범죄 피해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힘 모은다, 2023.8.28.일 자.

3) 교통안전

교통사고 분석은 앞의 157~162페이지 TASS¹¹⁸⁾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을 참고 바란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TCS¹¹⁹⁾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산출 받아 일일이 사건별로 검색해야 하므로 현재는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실시간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시에서는 별도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는 방안도 적극 검토 바란다.

향후 세종의 교통 문제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시에 국가 보안상 문제와도 연결되는 만큼 교통안전 관련 컨트롤타워에서 이러한 DB를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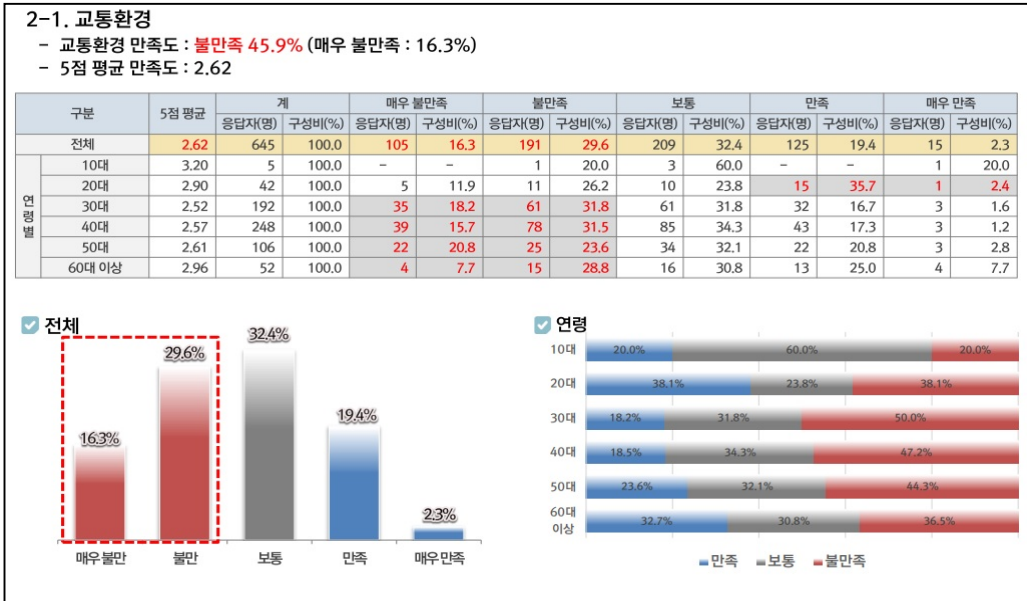
세종특별시는 계획된 도시로, 기존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요 교차로 등 병목 현상으로 교통체증을 상시 겪고 있어 시민들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요 도심에서도 도로상에는 주차 공간이 없고, 보행자를 위한 환경은 제공하고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만족도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다음 〈그림 89〉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 교통환경 분야가 저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118)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당해 연도 자료는 미산출됨.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로 산출 결과 확인가능한 시스템임.

119) Traffic Cop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그림 8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환경 만족도



출처 :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설문조사(2021.3월).

출·퇴근 시간대 지·정체 현상의 근본 원인이 세종~대전 통행에 있는 만큼, 대전을 왕복하는 교통수단의 버스 점유율 확대가 주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실제 세종시로부터 외부로 오가는 통행의 절반 가까이를 대전시에서 점유했다. 120)

아울러 지난해 BRT를 이용한 사람은 460만8000명이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DRT를 이용한 승객은 1217만8000명으로, 세종시 전체 버스 노선은 74개다. 121)

또한, 2023년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대중교통 사업 예산은 BRT, 시내버스, 마을버스, DRT, 셔클 등 운수사업에 428억6900만 원, CNG 충전소, 조치원터미널, 전기충전소 운영과 승강장, 버스 광고 사업에 50억8200만 원, 장애인콜택

120) 디트NEWS24, '세종~대전' 자가용 점유율 88% 대...1001·M버스에 꺾일까, 2023.10.17.일 자.

121) 광역 노선 2개를 포함해 12개 노선을 운행하고, BRT 4개, 광역 2개, 시내버스 11개, 마을버스 30개, DRT 14개, 도심형 DRT인 셔클 1개 등 62개 노선을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영함.

시 세종누리콜과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 승강장 관리 등 대행사업에 60억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버스요금 무료화 시행에 드는 연간 예산은 256억 원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평균 4.9%를 차지하는 다른 지자체에 견줘 3.2~3.6%로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영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확대와 탄소 저감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 최초의 무상교통 실험에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 민영제,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¹²²⁾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맞춰 새로운 도시 문화를 고려하여 추진하되, 차량 이용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이는 추후 후속 연구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길 바란다.

한편,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PM(개인형 이동장치)으로 인한 각종 민원과 112신고, 교통사고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최근 5년간 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2건→78건, 39배), 세종특별시(1건→35건, 35배), 경상남도(4건→80건, 20배) 순이며,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67명으로 경기도(24명)가 가장 많았다.¹²³⁾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이 보행자 사고까지 이어진 바 있어, 이에 대해 각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와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사전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시점으로, 자칫 방임한다면 추가적인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할 것이므로 선제적인 교통안전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시교육청에서 홍보활동을 펼친 적이 있지만, 하교 이후부터 급증하는 PM의 무면허 운전을 홍보와 단속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도 필요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무단횡단 등으로 발생하는 학생과 시민의 통학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행의 위험성과 무면허 운행 시 발생하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의 무

122) 울산 I, 2025년 무상교통에 도전하는 세종시, 2023.10.13.일 자.

123) 뉴스데일리,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경기도 전국 최다, 사고율 증가는 전남 제일 높아", 2023.9.22.일 자.

면허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124)

다음 <그림 90>은 이러한 교통 안전망을 구현하는 체계도로,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은 물론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림 90> 세종 스마트시티 '실시간 교통서비스' 제공 체계도



출처: 세종 도시통합정보센터 자료(2023).

4) 시민 소통

새로운 제도로 출범한 자치경찰에 관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홍보영상의 제작과 방영 및 SNS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경찰순찰차에 자치경찰 문구를 부착하거나 대학생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자치경찰과

124) 세종의 소리, “전동킥보드는 車… 학생·시민이 안전한 통학로 만들자”, 2023.10.25.일 자.

관련된 과제를 주어 활동하게 하고,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¹²⁵⁾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주민, 지구대·파출소·주민센터의 유기적 협력으로 시민참여형 공동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치안 네트워크 구성이 절실했던 시점에서, 세종형에 맞도록 재편되어야 할 시점이다. 즉, 자치경찰제도의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안전한 사회에 대한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유기적인 참여와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종자치경찰에서 선도적으로 기존의 협력단체에서 확장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면 성과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국가경찰 시스템에서 경찰 위주의 치안 정책을 실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약지 치안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등 문제 해결 지향적 사고로 접근한다면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 자치단체 책무), 세종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에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시민과 지역경찰의 정기적인 치안 설명회 및 시민참여 범죄예방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참여 주체는 지역경찰관서와 각 행정복지센터, 지역주민들이고,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만큼 지역별로 치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치안 정책을 펼친다면 체감안전도 향상은 물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여 지역치안에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지역관서장들이 매월 지역별 치안설명회를 개최하여,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계절적·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치안의 문제를 함께 공동숙의(公同熟議)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다시 피드백하고, 여기에서

125) 이순동, 앞의 책, 218쪽.

해결이 어려운 사안과 이슈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치안 설명회를 통한 지역별 치안 이슈 공유, 실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예방 순찰과 각종 안전 이슈에 대한 정책제언, 112신고 등 활용방안 등의 설명을 통해 단순한 신고자에서 지역사회 관심을 끌어내는 네트워크의 주체이자 ‘자치경찰의 실천적 참여자’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세종엔’ 앱은 실제 긴급 도움 요청 안내 서비스는 물론 미세먼지, 생생버스, 각종 예약 기능, 안심이 서비스, 택시 타요, 생활 속 민원 해결까지 종합적인 구성으로 활용자도 많은 만큼 이를 통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길 바란다. 이러한 세종특별시민들의 앱을 통한 각종 정책제언을 담당하는 ‘SNS 소통팀장’ 직제를 신설하여 실시간 민원 응답은 물론 해당 기관 연결로 정책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91〉 ‘세종엔’ 앱 현출 장면



특히 안전과 치안 관련 문제는 큰 관심사 중 하나로 경찰관이 대면 접촉하여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평상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데이터화 한다면 치안 시책의 근거자료와 예산확보에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은 세종엔 앱에 가입한 연구자의 로그인 화면으로 해당 앱을 통해 실제 다양한 생활정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시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안전을 중심으로 한 ‘시민 커뮤니티’의 결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공무원 등 외부에서 전입한 세대들이 많고, 핵가족과 1인 가구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연대감이 떨어지면 인간관계 결속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혼자 생활하는 가구가 많을 것인만큼 안전 이외에도 정신건강 등 다양한 추가적 위험 요인이 예상된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이러한 고독과 복지 체계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견되고, 세종특별시의 경우 생활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서 도시 안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갈등도 우려되는 만큼 이러한 시민 커뮤니티는 안전을 지향하면서 부수적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단순히 경찰에서 협력 단체 수준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지역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으로 인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며, 그 중심점에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특별시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제도개선

세종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원화 모형을 추구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사무, 인력, 인사권, 조직, 재원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세종형 이원화 모형의 사무는 현행 경찰법에 규정된 자치경찰사무 전부가 이

관되어야 하며, 특히 그중에서도 지구대·파출소,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이관되어야 한다.

새로운 행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도 안에 포함된 정책 자체를 융통성 있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견지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시행한 ‘지구대·파출소 운영·관리 업무 이관’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¹²⁶⁾

또한, 여청청소년수사, 교통사고조사 등 현 경찰법상 자치경찰 수사사무도 당연히 이관되어야 사건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는 특사경 사무는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고, 시등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특별법도 자치경찰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 밖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나 공무원 범죄에 대한 권한은 국가경찰과 동등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KICS, TCS, 예산 등도 권한에 맞게 그대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인력이 정원으로 모두 이관되어야 하고, 경무·홍보·청문감사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인력도 사무의 비율에 맞게 이관되어야 한다. 이때 지방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경찰 채용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기동대 일부도 최소 현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비율만큼은 이관되어야 하며, 이후 국가경찰과 서로 긴밀한 행정응원을 통해 세종 지역에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경찰로 지방·치안·소방·교육행정을 일원화하는 인력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112상황실, 119상황실, 관제센터의 일원화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부장, 단장 등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이 행사하되, 위원회에서의 견제 그리고 국가경찰과의 인사 교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경찰이 지방직 경찰이 되는 경우, 지방직 공무원과 직급을 9단계로 일원화하거나, 지구대장·파출

126) 한형우·최천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가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22(2), 313쪽.

소장의 직급을 동·면장과 일원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1개의 국가경찰 계급과 9개의 지방직 공무원 직급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자치경찰 이원화의 성공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이원화가 치안에 역효과를 낼 소지가 다분하다. 상명하복의 국가경찰에서 운용하던 계급 정년은 폐지하고, 민원실 등 필수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 행정관과 주무관들의 이관을 위한 직급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조직은 세종경찰청에 상응하는 세종시자치경찰본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경찰서에 상응하는 세종남·북부경찰단을 신설하며 그 산하에 지구대·파출소를 전부 이관하여 구성한다. 이에 더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 본부장은 세종경찰청장과 동일하게 지방 치안감으로, 경찰단장은 경찰서장과 동일하게 지방 총경으로 임명함으로써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대등한 위상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각 기관이 세종지역의 안전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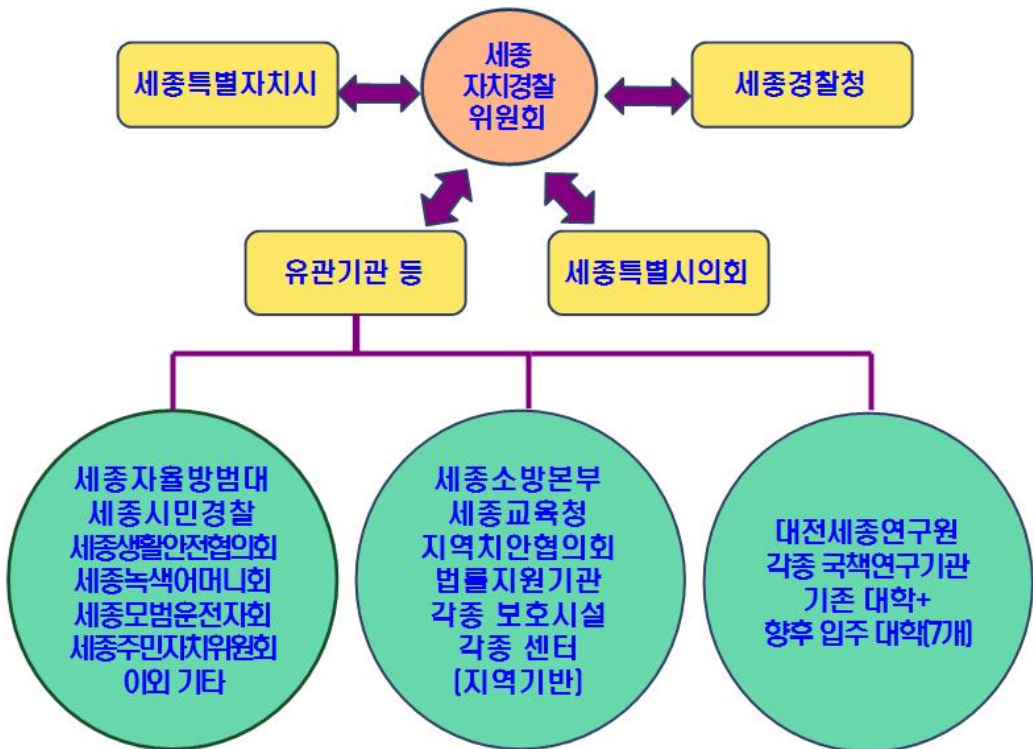
현재 경찰이 관리하는 교통 과태료·범칙금은 전부 이관하여 교통안전과 소통과 관련된 사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와 연관성이 가장 큰 주세(酒稅)는 일부 이관하여 주취자 관리 등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은 현재의 시설을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대·파출소 시설은 전부 이관하고, 본부와 단 등의 시설은 시에서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종합적 대응 전략

이를 위해서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중심의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를 모형화하면 다음 〈그림 92〉와 같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시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유관기관 등과 상호 신뢰를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림 92〉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중심의 치안 협력 모형



출처: 장일식, 세종자치위-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공동 학술세미나 제안모델(2022.6.3.일).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증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활동 정보 및 자료 충분성, 자치경찰채용 방식 다양화, 자치경찰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등 다양한 시책 마련도 필요하다.¹²⁷⁾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썬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구도 필요한데, 현재 세종자치경찰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한 활용 방안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에서는 세종경찰 150명을 회원으로 한 ‘세종자치경찰 연구모임’이 결성이 되었고, 4개 시도의 공동건의문과 총리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세종을 방문했을 때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시행, 세종자치경찰 연구모임 건의문’을 작성하였다.

실제 추진을 위해 건의문 형태로 작성한 문서를 세종특별시장은 물론 지역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의장 등 세종지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연구모임 임원진들이 방문하여 직접 설명하면서 세종지역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행안부, 경찰청,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에는 우편으로 보내서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과학치안정책자문단 구성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2021년 9월 28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문가 10명¹²⁸⁾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IOT 스마트 안심화장실 구축 사업 기술 자문(2.5억), 청소년 비행 예방 AI CCTV 설치·운영 관련 기술 자문(12.5억) 등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관별 신뢰를 통한 협업 프로세스 구축,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시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치안 정보의 고도화, 과학치안과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조속하게 과학치안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예산확보와 전문가 영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2024년에 집현동 일대에 입주하는 대학 공동 캠퍼스(KDI, 서울대, 공주대, 충남대 등)에도 전략적 관심이 필요하다.

127) 장명분,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2022,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0쪽.

128) ETRI(전자통신연구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SKT, INNOPOLIS(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제2절 정책제언 및 특수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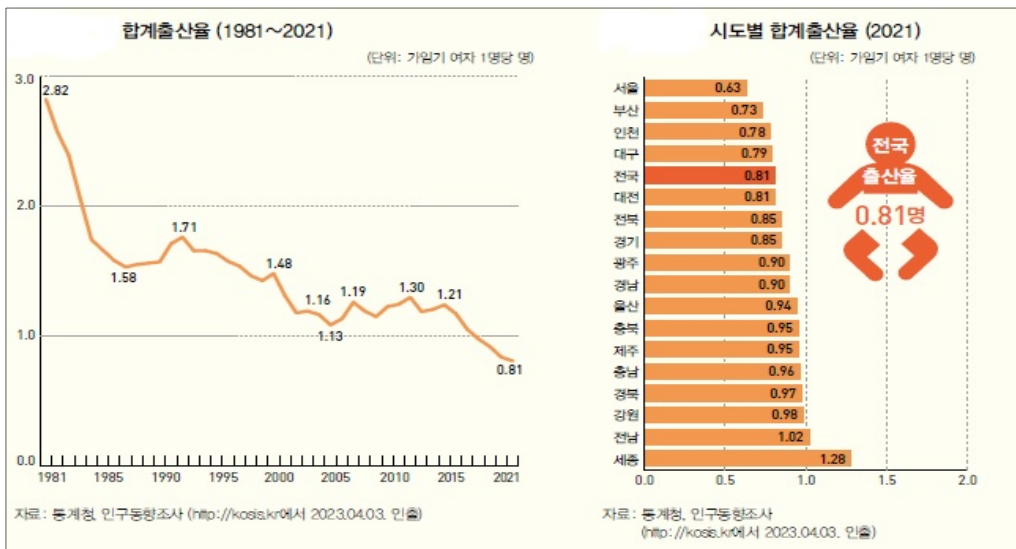
1. 정책제언

세종특별시는 젊은 여성인구 유입 증가, 구직, 생활권 개발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2021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28명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아래 〈그림 93〉 처럼 전국 시도별 합계출산율로 전국 출산율이 0.81명인데, 세종특별시는 1.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2위인 전남에 비해서는 0.26명이 높은 수치이다.

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출생 이후 성장에 따라서 자녀들의 안전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융합 행정의 측면에서 생애주기별 예방 및 교육이 연동되어야 한다.

〈그림 93〉 시도별 합계출산율(2021)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9.18.),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 통계로 확인해보세요!, 4쪽.

이를 위해서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중요 아젠다를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개발하고, 이를 다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시교육청과 민간 단체 등과 협업하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성범죄 예방 교육, 교통사고 예방 요령,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 등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때부터 안전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며, 시민참여 기반의 교육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민주성 등을 교육한다면 안전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삶의 질도 더욱 개선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 인구, 차량 등 외부 환경 변수들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세종경찰청의 인원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관 증원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표 107〉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현황으로, 아파트가 2018년 99,512호에서 2021년 124,375호로 24,863호가 증가하여 25.0%의 증가율을 보인다. 2022년 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아파트가 130,572호로 2021년 대비 6,197호 증가하여 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세종특별자치시의 확장성을 고려하면 그 증가 폭은 적으나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7〉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아파트	99,512	112,722	117,312	124,375
단독주택	16,099	16,168	16,178	16,015
그 외 주거 형태	3,348	3,367	3,397	3,408
계	118,959	132,257	136,887	143,798

출처: 주택 총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검색일 : 2023.8.25.)

다음 〈표 108〉은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증가 현황으로, 주택 비례와 함께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고는 있으나, 인구는 계속 유입되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386,192명으로 2022년 말 인구에 비해 2,735명이 감소하여 0.7%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일시적 현상인지 그 추이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표 108〉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

구분	계	내국인	외국인	증감
2019년 말	346,210	3,240,575	5,635	-
2020년 말	360,907	355,831	5,076	4.2% ↑
2021년 말	376,779	371,895	4,884	4.4% ↑
2022년 말	388,927	383,591	5,336	3.2%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검색일 : 2023.8.25.)

다음 〈표 109〉는 차량등록 대수 현황으로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는 3년 만에 30,372대 증가하여, 18.6% 증가한 반면, 1인당 차량등록 대수는 0.5로 동일하다. 이는 인구 유입만큼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율이 고정된 것을 의미한다.

〈표 109〉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차량등록 대수	163,339	174,742	185,042	193,711
1인당 차량등록 대수	0.5	0.5	0.5	0.5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검색일 : 2023.8.25)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구 유입에 따라 주택, 차량 등도 증가하였는데, 세종경찰청의 경찰관 인원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0〉과 같다. 세종경찰청

은 정원의 증가는 물론 현원도 증가하여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985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인데, 향후 정원의 순증은 물론, 현원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표 110〉 세종특별자치시 경찰관 정원 비율 변화

구분	정원	현원	정원대비 현원 비율	증감
2019년 12월	565	542	96%	-23
2020년 12월	699	657	93%	-42
2021년 12월	817	778	95%	-39
2022년 12월	830	890	107%	+60
2023.2월	852	985	116%	+133

출처: 세종청 자료(2023).

이를 다시 담당 인구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1인당 담당 인구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치안력을 단순히 경찰관 수로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적정규모의 인력 보강은 지속해서 필요하다.

〈표 111〉 1인당 담당 인구 변화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경찰관(현원)	346,275/542	360,907/657	376,779/778	388,927/890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	637	550	484	437
인구 천 명당 경찰관 수	1.6	1.8	2.0	2.3

출처: 세종청 자료(2023).

한편, 자치경찰 출범과 함께 인력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경찰관 인력 증원은 비례하여 즉시 충원이 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이를 자치경찰사무의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에서 별도의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 또는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시민 안전과 사회적약자 보호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는 자살방범대의 본격적인 활용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하는 협력 치안의 가교로 활용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자살시도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에 일정 부분 자질을 갖춘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한 만큼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성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하여 경찰력만으로 치안을 책임지는 시대를 뛰어넘어 세종특별자치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도시 세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의 인력 증원은 현재 국가경찰 체제하에서는 어렵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현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해서 치안과 안전 확보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 충분한 경찰력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건인 만큼 향후 세종자치경찰 위원회와 세종경찰청에서는 지속해서 인력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협력방법 확대와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인센티브 제공을 연구해야 한다.

아울러 실제 치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종자치경찰의 추진 사례와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종특별자치회와의 교류를 통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별도의 ‘치안 예산’을 정례적으로 확보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찰로서는 이러한 예산 수립과 집행, 감사까지도 고려하여야 적기에 성과를 거두고, 이를 선순환 구조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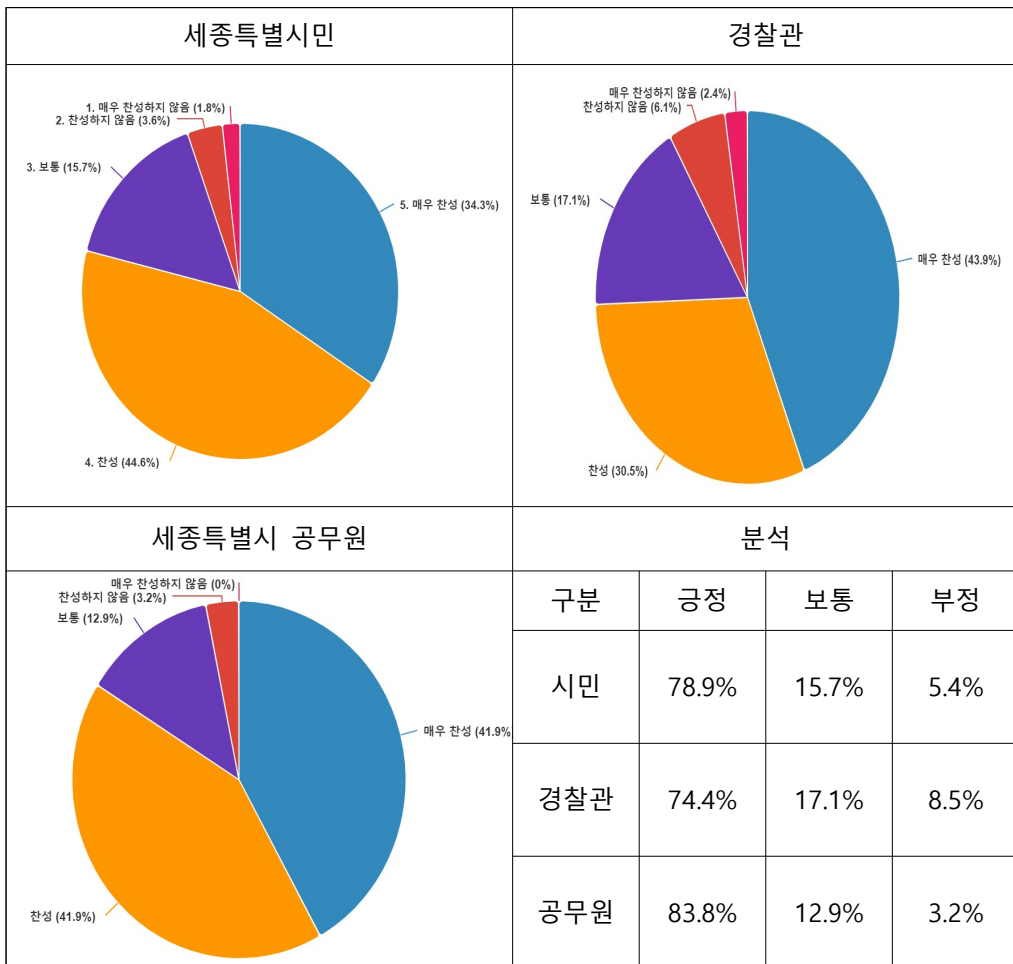
다른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업무의 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 추진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시민들이 자치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종형 특수시책

다음은 본 연구과제 수행 중 시행된 설문조사 항목 중 특수시책 관련한 문항에서 시민, 경찰관, 공무원의 응답 결과를 빈도 분석한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향후 후속 연구 또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특별시의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추진하길 바란다.

1)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세종도시통합정보센터 합동 근무 모델)

〈표 112〉 가칭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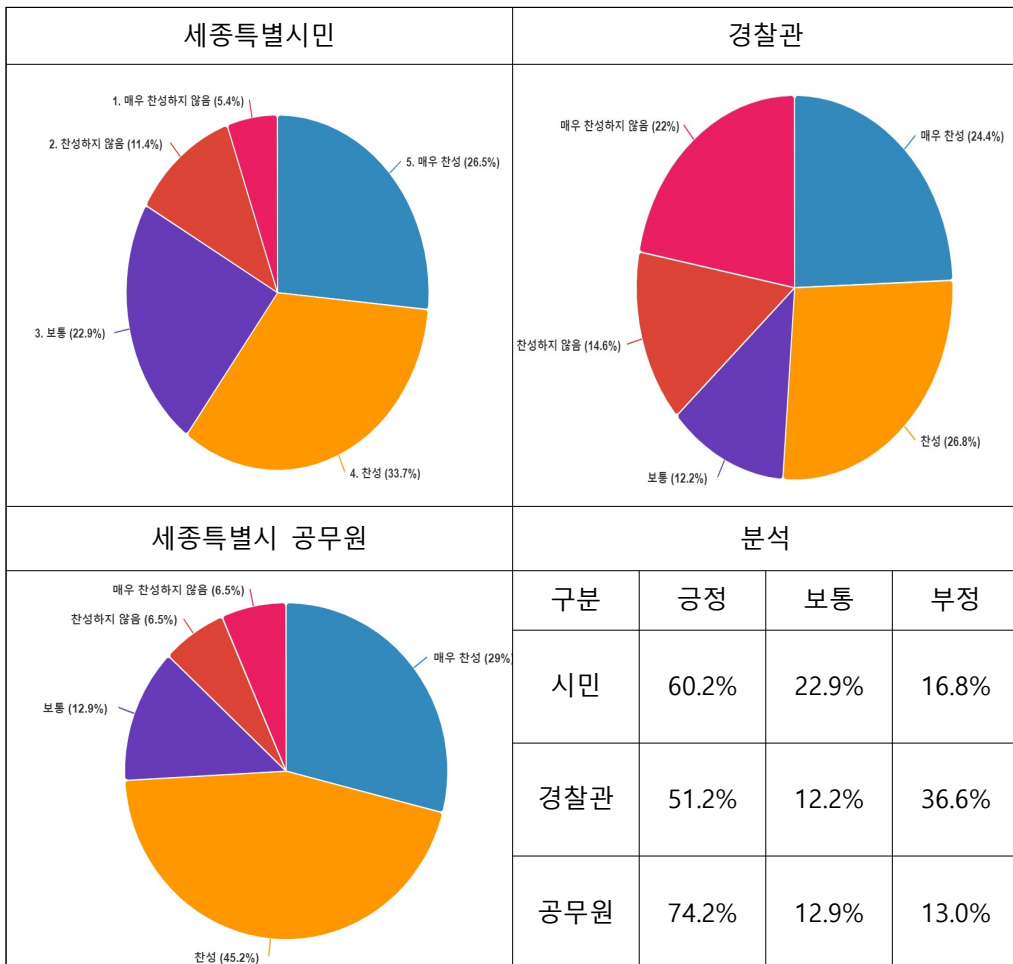


2) 광역순찰대 신설, 지역 커뮤니티 치안센터 운영

다음은 지역경찰 근무 체계와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했을 때 그룹 간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관은 부정 의견이 36.6%로 시민과 공무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근무 체계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과 최근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여러 환경의 변화에 대해 예고가 있었던 만큼 현재 시점에서 변화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판단에서 기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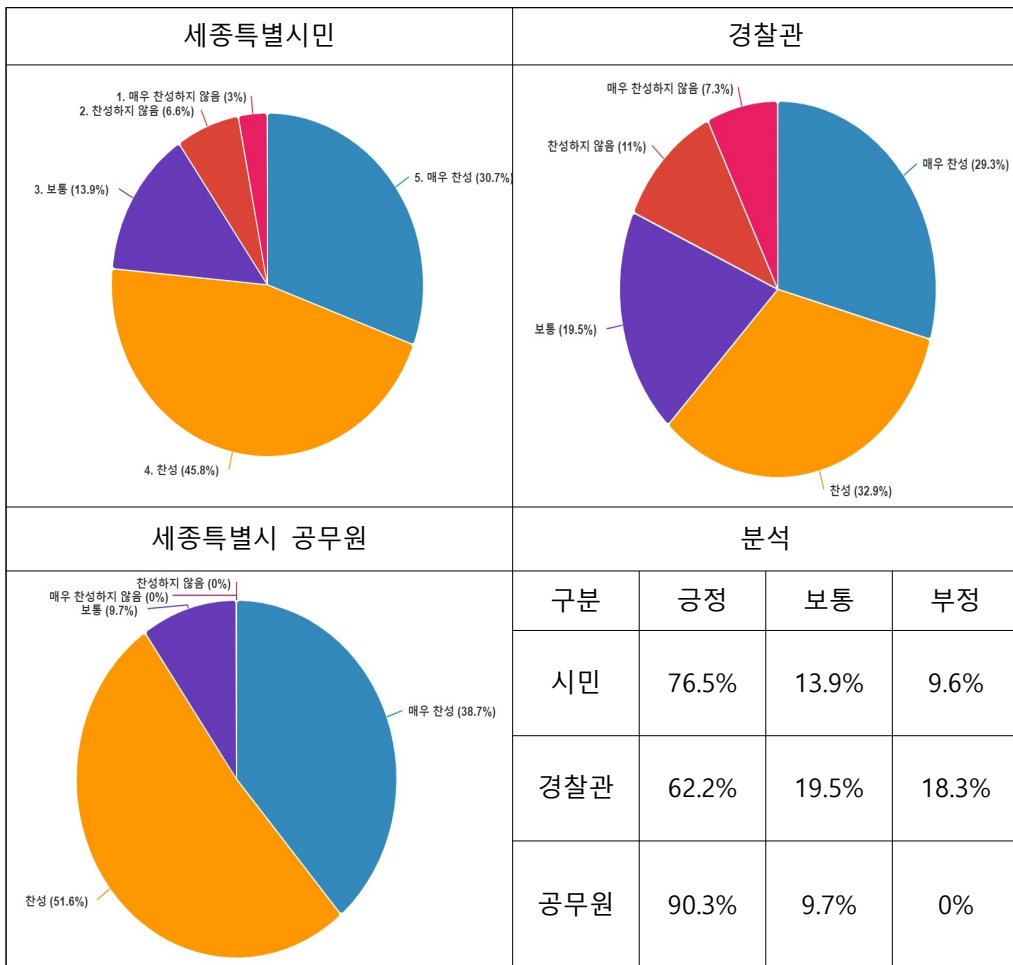
〈표 113〉 광역순찰대, 지역 커뮤니티 치안센터 운영 의견



3) 교통안전 ONE-STOP 센터

다음은 교통안전 ONE-STOP 센터 운영과 관련된 의견으로, 공무원은 긍정 의견이 90.3%로 매우 높았고, 시민은 76.5%, 경찰관은 62.2% 순으로 나타났다. 융합 행정의 시각에서 교통 문제와 대응을 일원화한 센터의 신설에 경찰관은 일부 부정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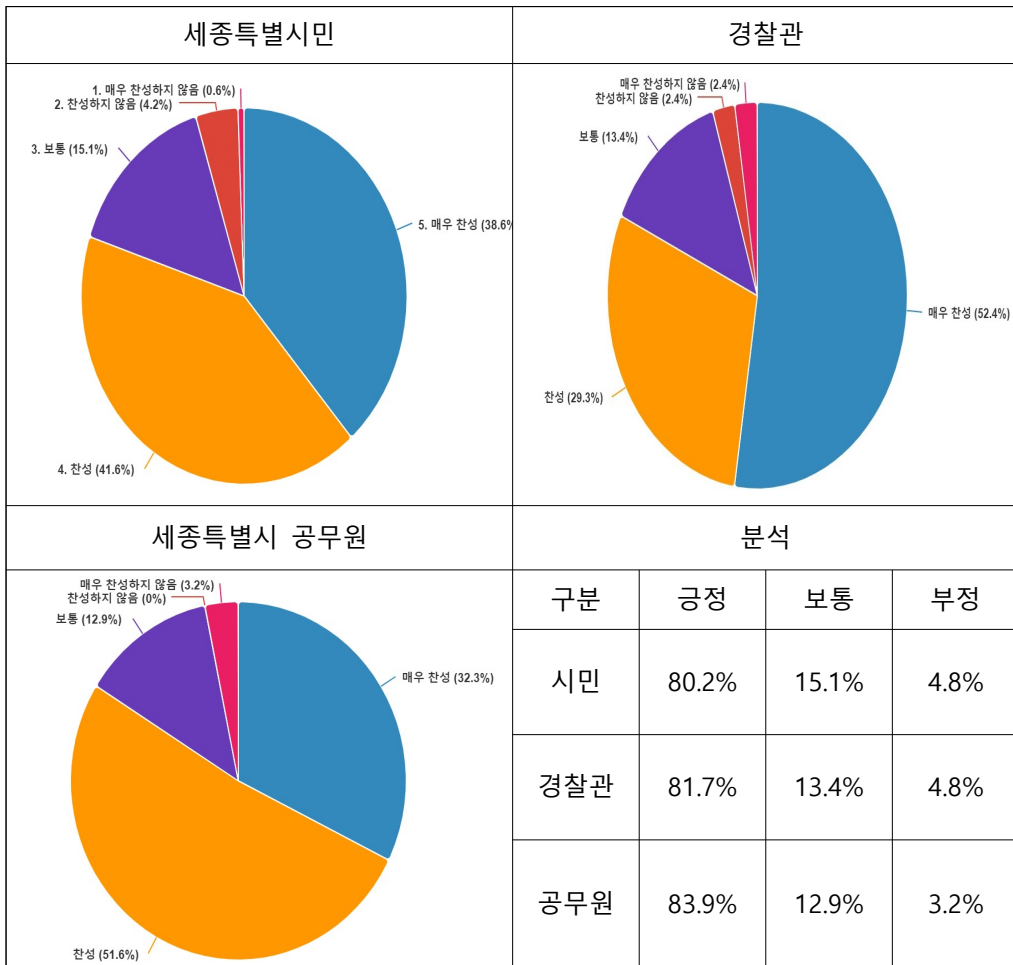
〈표 114〉 교통안전 ONE-STOP 센터 운영 의견



4) 범죄예방 지원 종합센터(가칭 1366 庭園)

다음은 세종 범죄예방 지원 종합센터의 신설과 관련된 의견으로, 3개 그룹 모두 80.0%가 넘는 높은 비중으로 긍정 의견이 나타났으며, 부정 의견은 소수였다. 사실 이 센터는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진 중인 만큼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연도별 계획을 잘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 센터에 종사하게 될 경찰관과 관련자들의 전문가적 수준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비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반드시 선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표 115〉 세종 범죄예방 지원 종합센터 운영 의견



5) 자치경찰 사무 신규 공무원 채용 방안

다음은 자치경찰 사무의 확장 시 이에 대한 별도의 신규 채용을 통해 공무원
을 선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3개 그룹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경찰
관은 보통 의견이 17.1%, 부정 의견이 20.7%로 부정 의견도 다소 나타났다.

〈표 116〉 자치경찰 사무 신규 채용에 대한 의견

세종특별시민	경찰관																												
<table><tr><th>구분</th><th>매우 찬성하지 않음</th><th>찬성하지 않음</th><th>보통</th><th>찬성</th><th>매우 찬성</th></tr><tr><td>세종특별시민</td><td>3%</td><td>7.2%</td><td>22.9%</td><td>36.7%</td><td>30.1%</td></tr></table>	구분	매우 찬성하지 않음	찬성하지 않음	보통	찬성	매우 찬성	세종특별시민	3%	7.2%	22.9%	36.7%	30.1%	<table><tr><th>구분</th><th>매우 찬성</th><th>찬성</th><th>보통</th><th>찬성하지 않음</th><th>매우 찬성하지 않음</th></tr><tr><td>경찰관</td><td>34.1%</td><td>28%</td><td>17.1%</td><td>7.3%</td><td>13.4%</td></tr></table>	구분	매우 찬성	찬성	보통	찬성하지 않음	매우 찬성하지 않음	경찰관	34.1%	28%	17.1%	7.3%	13.4%				
구분	매우 찬성하지 않음	찬성하지 않음	보통	찬성	매우 찬성																								
세종특별시민	3%	7.2%	22.9%	36.7%	30.1%																								
구분	매우 찬성	찬성	보통	찬성하지 않음	매우 찬성하지 않음																								
경찰관	34.1%	28%	17.1%	7.3%	13.4%																								
세종특별시 공무원	분석																												
<table><tr><th>구분</th><th>매우 찬성</th><th>찬성</th><th>보통</th><th>찬성하지 않음</th><th>매우 찬성하지 않음</th></tr><tr><td>세종특별시 공무원</td><td>29%</td><td>35.5%</td><td>19.4%</td><td>6.5%</td><td>9.7%</td></tr></table>	구분	매우 찬성	찬성	보통	찬성하지 않음	매우 찬성하지 않음	세종특별시 공무원	29%	35.5%	19.4%	6.5%	9.7%	<table><tr><th>구분</th><th>긍정</th><th>보통</th><th>부정</th></tr><tr><td>시민</td><td>66.8%</td><td>22.9%</td><td>10.2%</td></tr><tr><td>경찰관</td><td>62.1%</td><td>17.1%</td><td>20.7%</td></tr><tr><td>공무원</td><td>64.5%</td><td>19.4%</td><td>16.2%</td></tr></table>	구분	긍정	보통	부정	시민	66.8%	22.9%	10.2%	경찰관	62.1%	17.1%	20.7%	공무원	64.5%	19.4%	16.2%
구분	매우 찬성	찬성	보통	찬성하지 않음	매우 찬성하지 않음																								
세종특별시 공무원	29%	35.5%	19.4%	6.5%	9.7%																								
구분	긍정	보통	부정																										
시민	66.8%	22.9%	10.2%																										
경찰관	62.1%	17.1%	20.7%																										
공무원	64.5%	19.4%	16.2%																										

제3절 발전방안

‘안전’은 경찰과 시민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가치이며, 근거·과학에 기반한 DB를 얼마나 빨리 생산하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가 향후 경찰과 지역사회 안전의 척도가 될 것이다.

이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치경찰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과학치안의 접목과 현장 적용은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세종특별시는 이러한 환경적 토대와 지원이 가능한 만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 〈그림 94〉는 실제 최근에 AI 로봇을 시연했던 장면으로, 세종의 명물인 ‘이음 대교’에 현재 자율주행 로봇이 투입되어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추가로 1대 더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림 94〉 세종특별자치시 AI 로봇 순찰 시연회 보도



출처: AI 로봇 ‘스팟’은 순찰 중, MBC 뉴스, 2023.9.21일 자.

세종특별시는 2020년부터 세종 국가 시범도시 안전 분야 혁신 기술도입의 단계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 범죄예방 및 긴급 대응 체계 구축이 중점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00백만

원(전액 국비 사업)이며, 사업명은 「세종 국가 시범도시 도시(공원 등)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구축」이다. 추진기관은 국토교통부(주무 부처), LH(전담 기관), 세종특별시(관리청)로, 연차별 3단계 추진을 하는데, 1년 차 사업은, 2020년 11월 ~ 2021년 8월까지 객체 식별(사람, 차량), 재식별(실종자, 용의자 추적 등) 영상 관제 기술도입 및 112·119 상황전파(200개소, 430백만 원)이며, 2년 차 사업은, 2022년 5월 ~ 2022년 12월까지로 AI 기반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선별 관제(쓰러짐, 싸움 등)시스템 구축 및 통합플랫폼↔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간 연계(600개소, 800백만 원)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로봇 분야에서는 금강 보행교¹²⁹⁾ 자율주행 로봇 운영으로 안내 홍보 및 자율순찰을 시행하는데, 운영시간 내에는 각종 시설물 안내, (운영시간 외) AI 기반 순찰, 방역 기능을 하며, 향후 수배 차량검색 시스템¹³⁰⁾과 연동시키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시민 편의 제공 및 사건·사고 예방 등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피의자 검거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 95〉는 금강 보행교 순찰 로봇 활용 구성도로 전국 최초이며, 로봇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현장 적용단계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의 범죄예방 부서와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그 효과성 입증에도 주력해야만 시민 안전은 물론 추후 과학 치안 분야 예산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10월 18일부터 4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국제 치안 산업대전’에서도 이 로봇이 전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¹³¹⁾, 시연에서 로봇 상부에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야간시간 실종자의 수색을 돕는 로봇 응용 예시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치안 분야에 대한 로봇의 적용은 향후 더욱 확장될 것이므로 세종자치경찰에서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129) 금강 보행교 개통 이후 방문객(740,000명) 지속 증가 및 투신소동('22.7.) 등 주기적인 순찰 필요.

130) 수배 차량검색시스템(WASS) : 간선도로 등 CCTV를 활용해 긴급 수배 차량 실시간 조회, 관독하는 시스템임.

131) 로봇 신문, 에이던로보틱스, ‘2023 국제치안산업대전’서 치안용 4족 보행 로봇 선보여, 2023.10.20.일자.

〈그림 95〉 금강 보행교 순찰 로봇 활용 구성도



순찰로봇 영상관제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 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2031년 전후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12개 위원회의 회의와 소관 상임위 대상 국정감사 등도 세종시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되며, 국회 사무처는 규칙안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 방식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32)

이러한 세종의 확장성에 맞게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현재의 일원화 자치경찰 체제하에서 치안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고, 정부의 이원화 모형이 확정된 이후에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과 대전·세종연구원 등 현장 전문가와 시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어 이러한 방향성에 맞춰 세종자치경찰의 발전방안을 마스터플랜(MP)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갖는 특성과 단층제의 장점을 시민수요와 결합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 가능성을 염두하고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이 중요하며, 세종경찰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문가들이 융합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동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특별시의회의 협업도 중요하며, 두 기관의 상생 전략은 향후 자치경찰 발전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 고스란히 세종특별시민들에게 ‘공공 안전’이라는 수혜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세종특별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단순한 시책 홍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자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한데,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한 교육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입체적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후속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132) 동아일보, 기재위 등 국회 상임위 12개 세종으로 옮긴다, 2023.10.7.일 자.

제5장 결론

대한민국 경찰 창립 76년 만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더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경찰 제도가 헌정사상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물론 현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에서 별도의 자치경찰을 분리하지 않는 일원형 모델로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합의제 자치경찰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무 분리형 모델로 설계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 모델이 아니고, 생활안전, 지역 경비와 교통, 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 사무를 소관으로, 인사권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경찰 제도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 역사, 전통의 산물이며, 특히 현재 일원형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경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대확산에 따라 국가재정 부담의 최소화라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서, 특히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많고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신생 도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이지만 행정수도로서의 특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성격도 갖는 이중성을 갖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처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었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2년 10월 27일 자로 위원 비상임 및 사무국 미설치를 규정한 세

종특별자치시 특례조항이 폐지되어 다른 시도위원회와 동일하게 사무국이 설립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시행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의 현황과 시민들의 요청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세종의 치안 트렌드의 변화, 112신고 세부 분석, 사회적약자, 범죄예방, 교통 분야 등 치안 현황을 시민, 경찰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양적 설문조사 분석과 질적 심층 면접을 혼합한 방법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우수 모범사례도 살펴보고, 이를 세종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시행을 위한 정부의 권고안이 발표 기한을 넘기고도 발표되지 않아 세종형 이원화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에는 지장이 있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안현황 분석에서는 세종경찰청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치안 수요의 점증과 인력 등을 비교하면서 향후 현원 증가의 근거가 되는 분석을 완료하였고, 세부적으로 범죄예방 분야와 사회적약자 분야에서는 ‘깨안길’ 사업을 통해 이미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전략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정리하였으며, 사회적약자 분야는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366센터’의 예산을 확보¹³³⁾하여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그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양적 설문조사의 결과는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의 추진 시책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하는 방식(IPA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시민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범죄예방 분야는 방법용 CCTV 설치 또는 활용은 현재 수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미 계획된 도시로 설계되어 방법 시설물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설치되어 있

133) 시비 국비 매칭 사업으로 9억 원 확보.

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주택가 침입 범죄예방 사업에 대해 경찰의 대응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음은 사회적약자 분야의 분석 결과 세종특별시민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은 이미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범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은 중요도가 높는데, 현재 수준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청소년범죄에 대해 경찰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세종특별시의 교육기관 등이 신설되고 있고, 외부에서 전입 가구들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은 물론 학생들의 방과 후부터 귀가까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제 세종특별시민들은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 청소년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시간대에 아람동의 경우 17시 이후에 자율방범대 등 협력방법의 일환으로 시범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세종특별시의 불안 요인은 결국 기성세대들의 인식 중 자녀, 청소년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다음 연도 연구에서는 이들의 생활실태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청·교육청과의 협업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실시간 대응하면서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해야만 실질적인 체감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교통 분야 IPA 분석에서 시민들은 교통체증 해소,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경찰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교통법규 단속이나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은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낮았던 만큼 이에 주력하여 소통 위주의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타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 우수사례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 피해 종합 커뮤니티를 소개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의 ‘안산형’ 시민 안전 모델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였고, 세종은 과학치안을 접목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징인 ‘이응 대교’에 시범적으로 4족 보행 로봇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범죄 예방 사업으로 잘 정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공무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IPA 분석을 한 바,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요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보이스피싱과 스토킹에 대한 경찰활동의 요구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는 실제 공무원들은 세종에 거주하기 때문에, 교통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외 범죄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크게 시사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성폭력, 범죄예방, 가정폭력 등에 대한 치안활동 수준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폭력, 교통안전 등에 대한 치안활동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한 만큼 이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심층 면접은 세종특별자치시민과 공무원, 경찰관, 학계 등 총 20명을 만나서 직접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참여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변화와 확장성에 주목하면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인식하면서 실제 치안 정책에도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대상자는 세종의 치안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은 세종형 맞춤형 치안 시책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세종이 이원화 모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찰관 인원 확보와 복지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학계에서는 오송역의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 안전 통합센터 개소’ 등 실질적인 변화를 주장하였다.

연구가 종료된 시점에도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시행 권고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자치경찰 이원화의 추진 동력이 다소 상실된 것 같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의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세종의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훌륭한 정책 방향이 많이 제시되었다. 특히 IPA 분석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에 필요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한 시민,

경찰, 세종시청 공무원의 인식 차이 등도 비교할 수 있었다.

특수시책의 경우 시민들은 특수시책 도입에 긍정적 인식이었으나, 경찰관과 공무원은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이중 시민들은 범죄예방 종합 지원센터(1366 센터) 신설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시민 안전 통합관제 센터’ 운영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형 재해재난 발생 때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각 그룹 간 인식 차이가 분명하며, 특히 실질적인 사업추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반대 의견으로 향후 자치경찰 추진 시 다양한 갈등도 예상되는 만큼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와 추진 필요성을 공유하며, 시민과 시의 회 의견 등을 상시 채널을 통해서 수집해야 할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 의사 추진 과정에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세종자치경찰위원회'로 합의제 심의 의결 기구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전략과 방향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이원화 모형에 대해 응답한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시민들은 지금보다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행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세종 국회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이전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경찰관은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행되더라도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공무원은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시행이 오히려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이나 발전에 부정적일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설문 참여자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각 그룹 간 인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향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

결국 세종자치경찰의 발전 방안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면서 세종에 있는 시민 협력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서 견고한 안전망을 갖추고, SNS 소통팀장 직제를 신설하여 실시간 소통을 해야만 시민들을 만족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과학치안의 시각에서 지역 인재와 전문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시행해 나가며, 과학치안자문단을 발족하고, 향후 집현동에 입주하는 공동 캠퍼스의 우수한 인력을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안심까지도 배려하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추진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심층 면접을 한 세종의 주민자치회, 이·통장 협의회,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의 회원 및 학계 전문가 등의 소중한 의견들도 실시간 적극 반영하는 창구의 개설은 꼭 필요하며, 이러한 치안 정책의 공동생산이라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는 궁극적으로 경찰의 민주성과 책임성 향상, 경찰이 권력이 아닌 시민에 대한 지향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의 안전 욕구에 최대한 신속히 응답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치안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이 세종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이 지향해야 궁극적 가치라는 점을 절대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안의 외부고객인 시민뿐만 아니라 내부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 시책들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영국 근대 경찰의 창립자 로버트 필의 명언처럼 결국 ‘시민이 경찰이고 경찰이 시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도움을 준 세종특별시민들과 세종특별시의회,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세종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I. 단행본

- 신현기, (2021), 「자치경찰」, 법문사.
- _____, (2021), 「자치경찰론」, 진영사.
- 양영철, (2021), 「新 지방자치 경찰론」, 온누리디앤피.
- 이순동, (2023), 「자치경찰법 해설」, 육법사.

II. 논문 등

- 고승희·조 성, (2020), “경찰법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운영 활성화 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9(5), 1-30.
- 강남수, (2023),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청수사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경찰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2(2), 43-67.
- 강필영, (2020), “지역주민 자율방범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7(3), 1-20.
- 곽영길, (2018),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2(1), 1-35.
- _____, (2019),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소고”, 「치안정책연구」, 33(3), 67-102.
- 김경환·유영진, (2016), “IPA 기법을 활용한 한식당 선택속성과 만족도, 재방문 의도 및 추천 의도 간의 영향 관계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5(3), 113-132.
- 김보미·이동근, (2017), “전통적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와 수정된 IPA의 비교연구: 순천만 습지를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

- 지」, 45(2), 40-50.
- 김상호, (2022), “자치경찰활동 평가모형 구축:성과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치안행정논집」, 19(2), 19-38.
- 김용훈, (2023),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구축을 위한 경찰- 자율방범대 협력방안-영국 자원경찰제도를 참고하여”, 「법학논고」 제80집, 93-125.
- 김원중, (2021), “주민참여가 제한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21(3), 325-353.
- _____, (2022),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23(3), 169-197.
- 김이태·류예빈, (2019),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를 활용한 컨벤션 선택속성 개선방안”, 「호텔경영학연구」, 28(1), 47-59.
- 김종철, (2022), “자치경찰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시민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택·오승규, (2013), “프랑스 경찰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윤리적 거버넌스”, 「한국경찰학회보」, 18(4), 127-147.
- 김홍주, (2023),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향성 모색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4), 1-34.
- 김홍주·박상철, (202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현대사회와 행정」, 32(1), 55-87.
- 김홍주·박상철, (2022), “자치분권 2.0시대에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방향 모색”, 「한국지방자치연구」, 23(4), 67-95.
- 나재필 외, (2023), “2022년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기술운영 용역 연구보고서”.
- 남교민 외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정된 IPA를 활용한 대학생활만족도-중요도 분석: L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9(3),

135-158.

남재성, (2021),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보완 방향”, 「한국경찰연구」, 20(1), 69-1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자료집」.

박종철, (2018), “일본의 자치경찰제 분석과 시사점”, 「자치경찰연구」, 11(2), 23-44.

박준휘 외 11인, (2020),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21-B-14).

박준휘 외 8인, (2021),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Ⅲ)”,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21-B-01).

박현호, (2007),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한국의 일선 경찰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일선 경찰관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6(1), 35-78.

방면석, (2010), “선진외국 자치경찰제도 비교연구”,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미란, (2021),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과제-주로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4(2), 125-153.

신현기, (2022),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한국자치경찰논총」, 1(1), 36-50.

신현기, (2017), “일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10(1), 25-51.

안성훈, (2018) “주요 국가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비교분석:견제·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안영훈, (2020), “프랑스 코뮌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제도 연구”, 「자치경찰연구」, 13(1), 31-70.

- 양영철, (2020), “바람직한 자치경찰 조직운영 방안에 관한 소고”,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성공을 위한 과제와 제언 토론회 자료집」, 서울연구원.
- 윤태웅, (2019),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6회 학술대회 자료집」.
- 이상열, (2023),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시민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연구”, 「한국경찰연구」, 22(1), 125-148.
- 이상훈, (2022),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 과제 :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과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4(2), 269-302.
- _____, (2022), “현행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하에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요소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치안정책연구」, 36(3), 7-40.
- 이상훈 · 남재성 · 심민규, (2022),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 이세환, (2022),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과 주민간의 거버넌스- 치안 서비스 공동생산 중심으로-»,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제15호, 129-144.
- 이임걸, (2014), “프랑스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2(2), 31-60.
- 이행준·김정옥, (2021), “인천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 인천연구원 2021 시정밀착형 기획연구.
- 이종화, (2002), “프랑스 경찰 조직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3, 236-247.
- 이진, (2021),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신입경찰 교육생의 인식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우, (2020), “강원지역 자치경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빈·주혜린(2022),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책 평가 연구: 정책평가의 기준과 성공 범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9(3), 211-233.

- 장명본, (2022),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일식·강용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경찰교육제도 도입 「2020년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과제 연구보고서」.
- 장일식, 사회적약자 보호와 자치경찰, 「2021.12.3일 세종자치위 세미나 자료집」.
- _____, 자치경찰제도 시행 1년 후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22년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과제 연구보고서」.
- _____, 치안행정과 지역복지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21년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과제 연구보고서」.
- _____, 시민지향적 시책의 발전방안-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시행, 「2022.6.3.일 세종자치위 세미나 발제집」.
- 정세종 등 5인, (2022), “광주형 자치경찰 발전전략 수립”,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정세종, (2022), “지구대(파출소) 운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자치경찰제도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4), 283-306.
- 제영민, (202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찰지역사회 관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계표, (2018), “경찰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자치경찰도입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42, 1-25.
- 조성호 외, (2020),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20-49.
- 최대민·정우열, (2023), “텔파이기법을 활용한 자치경찰제 성과관리모형 개발 연구”, 「한국경찰연구」, 22(2), 221-244.
- 최종술 · 황문규 · 박종승 · 이상훈, (2022),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미래“,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정책포럼 자료집」.

- 최천근·김중곤·오경석, (2022), “경북 맞춤형 치안행정 모델 개발”, 경상북도 연구용역 보고서.
- 한형우·최천근, (2023),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가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22(2), 291-321.
- 허 준, (2023), “경찰 직무별 핵심역량 분석을 통한 자치경찰관 채용제도 도입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2, 435-460.
- 황문규 외, (2022), “자치경찰에 바란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정책 세미나 자료집」.
- 홍승표, (2022),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조사”, 「한국경찰학회보」, 24(2), 247-268.
- 홍승표, (2023), “자치경찰 시대 맞춤형 경찰활동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과 활용에 관한 연구-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5(2), 133-157.
- Alberty, S., & Mihalik, B. J. (1989). Evaluation of microcomputer learning experiences. *Computers & Education*.
[https://doi.org/10.1016/0360-1315\(89\)90033-x](https://doi.org/10.1016/0360-1315(89)90033-x)
- Deng, W. (2007). Using a 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pproach: The case of Taiwanese hot springs tourism. *Tourism Management*, 28(5), 1274-1284.
<https://doi.org/10.1016/j.tourman.2006.07.010>;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https://doi.org/10.2307/1250495>;
- Duke, C. R., & Persia, M. A. (1996). Performance-importance analysis of escorted tour evaluation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5(3), 207-223.
-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Journal of Marketing, 41(1), 77. <https://doi.org/10.2307/1250495>
- Matzler, K., Bailom, F., Hinterhuber, H. H., Renzl, B., & Pichler, J. H. (2004c). The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e-level performance and overall customer satisfaction: a re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3(4), 271-277. [https://doi.org/10.1016/s0019-8501\(03\)00055-5](https://doi.org/10.1016/s0019-8501(03)00055-5)
- Lai, I. K. W., & Hitchcock, M. (2015).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n tourism: A framework for researchers. *Tourism Management*, 48, 242-267. <https://doi.org/10.1016/j.tourman.2014.11.008>

Ⅲ. 온라인 자료

- 경기일보, 재난·범죄 막아라... 안전 확보나선 지자체들 [불안한 일상, 안전을 확보 하라], 2023.8.28.일 자.
- 경기북부 일보, 김영우 의원, 경찰도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설문 결과 발표, 2019.10.4.일 자.
- 국민일보, 관악산 둘레길에 퇴직 경찰 투입, 주민 불안 해소 기대, 2023.9.4.일 자.
- 금강일보, 시민 일상이 안전한 미래전략 수도 세종 만든다, 2023.7.2.일 자.
- 뉴스티엔티, 세종특별자치시 '신호체계 전면 개편 시 지체시간 34% 개선, 2023.3.30.일 자.
- 노컷뉴스, AI로 위험 파악하는 CCTV 스마트 관제 체계 본격 추진, 2023.4.5.일 자.
- 뉴데일리, 나승권 위원장 "자치경찰제, 치안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 만들 것", 2023.5.10.일 자.
- 뉴스데일리,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경기도 전국 최다, 사고율 증가는 전남 제일 높아", 2023.9.22.일 자.

- 뉴스핌,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제1기 정책자문위원 22명 위촉, 2023.4.7.일 자.
- _____,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 강화... 공원·하천 CCTV 추가 설치, 2023.8.22.일 자.
- 대전일보, “이대론 안 된다.... 자치경찰 제대로 해보자”, 앞장선 세종경찰, 2023.8.11.일 자.
- _____,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과학치안정책자문단' 위촉, 2021.9.28.일 자.
- 데일리 한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소통 강화로 세종형 자치모델 만든다, 2023.1.26.일 자.
- 동아일보, 기재위 등 국회 상임위 12개 세종으로 옮긴다, 2023.10.7.일 자.
- 동양일보, 세종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 민원 인력 배치 사업'추진, 2023.3.2.일 자.
- 디트NEWS24, '세종~대전' 자가용 점유율 88% 대...1001·M버스에 꺾일까, 2023.10.17.일 자.
- 로봇 신문, 에이딘로보틱스, ‘2023 국제치안산업 대전’에 치안용 4족 보행 로봇 선보, 2023.10.20.일 자.
- _____, 고흥군, ‘섬 지역 치안드론’ 뜬다, 2022.10.21.일 자.
- 브릿지경제, 세종시설공단, 악성민원 대응책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2023.9.20.일 자.
- 브레이크뉴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공식 출범, 2023.2.16.일 자.
- _____,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발굴 나선다, 2023.5.10.일 자.
- _____,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섬 지역 특화 ‘치안 드론’ 개발 속도, 2023.6.12.일 자.
- 불교공뉴스, 세종자치경찰, 도로·교통 환경 개선 온 힘, 2023.4.28.일 자.
- _____, 세종특별자치시자율방법대 직무역량 강화·양성평등 교육, 2023. 6. 2일 자.

서울신문, 도봉구 ‘안전 안심 도시’ 조성 총력… CCTV 확대하고 전담팀 신설,
2023.8.29.일 자.

세종의 소리, 학생 ‘극단적 선택’... 상가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필요,
2023.5.16.일 자.

_____, 세종시 조치원읍 공무원들 흥기 피습…양심 품은 민원인 범행,
2023.4.12.일자.

_____, “전동킥보드는 車… 학생·시민이 안전한 통학로 만들자”,
2023.10.25.일자.

시사저널 e, ‘재난 발생시 경찰 즉시 확인’ CCTV 통합법 나왔다. 2023. 8.
26.일 자.

신아일보, 자치경찰제 시행 2년... 세종자치경찰위, 시민밀착형 치안행정 구현,
2023.3.8.일 자.

아시아경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통합적 대응 역량 높여,
2023.10.4.일 자.

연합뉴스, 지자체 주민참여 평가 ‘낙제점’... 100점 만점에 38.47점-한국행정연구원
‘데디퍼브리프’ 가을호, 2021.11.24.일 자.

_____, 세종자치경찰위·경찰·LH·경실련 '범죄예방 환경 개선' 협약, 2023.8.31.
일 자.

열린뉴스통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민선4기 1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2023.6.29.일 자.

울산 I, 2025년 무상교통에 도전하는 세종시, 2023.10.13.일 자.

이뉴스투데이,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통합적 대응 역량 높여,
2023.10.4.일 자.

전남목포신문, 전남자치경찰-경찰대, 연구·교육 협력키로, 2021.10.30.일 자.

중도일보, 세종경찰, SOS 경보 통해 청소년 비행·범죄 예방, 2023.10.3.일 자.

- 충청뉴스, 세종특별자치시, 민관 합동 이륜차 안전운행 캠페인, 2023.4.27.일 자.
_____, 세종자치경찰위, 유관기관과 범죄 피해 사회적약자 보호,
2023.8.28.일 자.
- 쿠키뉴스, 경북도민 10명 중 7명 “자치경찰, 안전한 사회조성에 기여”,
2023.7.29.일 자.
- KBS, 아파트 단지에서 고라니 사냥한 들개 떼... 주민 ‘불안’, 2023.4.25.일 자.
_____, 범인 검거부터 노인 돌봄까지... 동네 지키는 자전거 순찰대, 2023.9.15.
일 자.
- MBC 뉴스, AI 로봇 ‘스팟’은 순찰 중, 2023.9.21.일 자.
- TJB, 세종특별자치시 '10대 무면허' 전동 킥보드 문제..." 단속 강화",
2023.6.10.일 자.

IV. 관련 사이트

-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국회전자도서관(di.nanet.go.kr)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https://www.gaok.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 법제처(<http://www.moleg.go.kr>).
- BIG KINDS(www.bigkinds.or.kr).
- e-나라지표(www.index.go.kr).
- 통계청(kostat.go.kr).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20)

(<https://bjs.ojp.gov/library/publications/federal-law-enforcement-officers-2020-statistical-tables>)

V. 기타

경찰청, 「2023 주요 업무계획」.

경찰청, (2022), 「경찰 미래 비전 2050」.

경찰청, (2021), 「자치경찰 소식」, 자치경찰 창간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2 경기도남부 자치경찰 백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우리동네 자치경찰」.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2022 경남자치경찰백서」.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정책세미나 자료집」.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2022 대전 자치경찰 백서」.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 자치경찰 백서」.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년 자살예방백서」, 2022.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훈령 제38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2023).

세종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계획서」, 「시정백서」. 2023.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평가보고서」.

202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백서」. 2022.

세종자치경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세종특별자치시민)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서준배 교수입니다. 현재 세종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에 관해 연구 중으로, 시민들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주관기관 :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원장 서준배 교수(041-968-2664)

SQ 1) 사는 곳	① 동 지역 ② 읍 지역 ③ 면 지역
SQ 2) 가구 구성	① 1인 가구 ② 다인 가구
SQ 3) 자녀 수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SQ 4) 연령대	① 19세 이하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69세 ⑦ 70세 이상
SQ 5)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 6)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학 중퇴 ③ 전문대학 졸업 ④ 대학 중퇴 ⑤ 대학 졸업 ⑥ 대학원 이상
SQ 7) 직업	① 사무직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직 ④ 농업/축산업 등 ⑤ 기능숙련/작업직 ⑥ 전업주부 ⑦ 중·고등학생 ⑧ 대학생 ⑨ 공무원 ⑩ 연구원 ⑪ 무직/은퇴 ⑫ 기타
SQ 8) 세종 실 거주기간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8년 미만 ④ 8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15년 미만 ⑥ 15년 이상~20년 미만 ⑦ 20년 이상

다음의 질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세종특별자치시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상시 경찰 활동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책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세종자치경찰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중 자치경찰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고르세요)

①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②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 ③ 교통안전 ④ 자치경찰 활동 홍보 ⑤ 기타 ()

8)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경찰활동의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매우 못하고 있다	못 하고 있 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방범용 CCTV 설치	①	②	③	④	⑤
경찰의 순찰활동	①	②	③	④	⑤
자율방범대 및 주민참여 안전순찰	①	②	③	④	⑤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반사경, 벽화그리기, LED전광판 등)	①	②	③	④	⑤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주택가 침입범죄예방 사업(예, 방범창 설치)	①	②	③	④	⑤
여성귀갓길 안전지원	①	②	③	④	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①	②	③	④	⑤

9)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은 어느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 요 하 지 않 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방범용 CCTV 설치	①	②	③	④	⑤
경찰의 순찰활동	①	②	③	④	⑤
자율방범대 및 주민참여 안전순찰	①	②	③	④	⑤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반사경, 벽화그 리기, LED전광판 등)	①	②	③	④	⑤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주택가 침입범죄예방 사업(예, 방범창 설치)	①	②	③	④	⑤
여성귀갓길 안전지원	①	②	③	④	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①	②	③	④	⑤

10)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찰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1)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순찰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 요 하 지 않 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①	②	③	④	⑤
유동인구가 많은 혼잡지역	①	②	③	④	⑤
공원, 수변 산책로 등	①	②	③	④	⑤
학교 주변 및 청소년 밀집 지역	①	②	③	④	⑤
원룸 등 주거 밀집지역	①	②	③	④	⑤
아파트 및 인근 상가 등	①	②	③	④	⑤
공사, 폐가 등 인적이 드문 지역	①	②	③	④	⑤
정부 행정기관 및 연 구원 등 주변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사회적약자 대상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매우 못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아동학대	①	②	③	④	⑤
학교폭력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범죄	①	②	③	④	⑤
가정폭력범죄	①	②	③	④	⑤
성폭력범죄	①	②	③	④	⑤
노인 대상 범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대상 범죄	①	②	③	④	⑤
스토킹 범죄	①	②	③	④	⑤

13) 다음 사회적약자 대상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 요 하 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	①	②	③	④	⑤
학교폭력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범죄	①	②	③	④	⑤
가정폭력범죄	①	②	③	④	⑤
성폭력범죄	①	②	③	④	⑤
노인 대상 범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대상 범죄	①	②	③	④	⑤
스토킹 범죄	①	②	③	④	⑤

14)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경찰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5) 아동·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두 가지를 선택

해주십시오. [두 가지 복수 선택]

- 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② 가해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 ③ 경찰의 신속한 수사 ④ 관계기관 연계 및 협력활동 강화 ⑤ 범죄예방 홍보 및 교육 활성화 ⑥ 기타()

16) 다음 교통안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매우 못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교통법규 단속	①	②	③	④	⑤
교통안전 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신호체계 개선	①	②	③	④	⑤
교통 보험사기 사건처리	①	②	③	④	⑤
교통예방 홍보 활동	①	②	③	④	⑤
교통체증 해소	①	②	③	④	⑤

17) 다음 교통안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 요 하 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교통법규 단속	①	②	③	④	⑤
교통안전 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신호체계 개선	①	②	③	④	⑤
교통 보험사기 사건처리	①	②	③	④	⑤
교통예방 홍보 활동	①	②	③	④	⑤
교통체증 해소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사는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두 가지 복수 선택]

- ① 음주운전 ② 보복·난폭운전 ③ 불법 주·정차 ④ 과속·신호 위반 ⑤ 보행자 무단횡단 ⑥ 차량불법개조 소음유발 ⑦ 킥보드 관련 각종위반 ⑧ 오토바이 폭주 ⑧ 기타()

19)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중요도에 따라 두 가지를 선택해주시요. [두 가지 복수 선택]

- ① 보호구역 내 속도·주정차 단속 강화 ② 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 ③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④ 보호구역 지정 확대 ⑤ 녹색 어머니회 등 교통봉사 단체와 합동근무 ⑥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조치강화 ⑦기타()

20)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경찰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1) 자치경찰시책에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청 홈페이지(바로소통) ② 현장간담회 ③ 경찰에 직접 전화 등 통신 ④ 시책 아이디어 공모 ⑤ 주민행정복지센터 시책수집 ⑥ SNS를 통한 의견 청취(『세종엔』 앱 활용등) ⑦찾아가는 치안설명회 ⑧기타()

22)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 공동체 치안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 ① 없다 ②있다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원하십니까?)

- ① 자율방범대 등 직접적인 순찰 참여
②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실시간 의견 제출
③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등 가입

④ 기타(직접 기재)

23) 자치경찰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홍보한다면 어떤 매체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언론보도(TV, 라디오, 신문 등) ②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③ SNS, 유튜브 등 홍보 ④ 대중교통 내외부 광고(버스, 택시 랩핑 등)
 ⑤ 홍보 리플렛, 포스터 등 ⑥ 옥외광고

2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예’ 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원하십니까?)

- ①세종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②SNS 등 실시간 제공(카카오톡 등, 개인정보 동의 후)
 ②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유튜브 운영, 필요시 접속
 ③별도 제작된 치안 소식지 형태(1-2페이지 분량)
 ④기타(직접 입력)

다음은 향후 자치경찰 관련 특수시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주세요시오.

25)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 및 예산을 투입, 별도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관제하고 있는데, 향후 ‘시민안전통합상황실’로 개편하여 경찰, 소방, 시청이 합동 근무하는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입니까?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26) 현재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경찰서로 집중하여 ‘광역 기동 순찰대’로 개편, 112신고 출동 위주로 대응하고, 현재 지구대(파출소)는 자율방범대 또는 범죄예방 및 청소년 상담 등 ‘지역 커뮤니티 치안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입니까?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27) 교통불편, 도로파손, 교통 표지판 개선 등 다양한 교통민원 신고와 처리를 위해 ‘교통안전 ONE STOP’센터를 신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경찰관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28)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범죄예방 지원 종합 센터 기능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에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자와 정신질환 환자 등을 위한 24시간 운영하는 종합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입니까?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29) 자치경찰 추진시 경찰이 부족할 경우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청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입니까?

*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30)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악성 민원인(112, 119 상습 신고자 및 관공서 행패 소란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읍면동 사무소에 별도 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입니까? (1개 팀 : 퇴직 공무원+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일종의 복합·악성 민원 관리팀)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다음은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자치경찰 이원화』는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경찰관을 시장·도지사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며, 향후 세종자치경찰단, 세종남부경찰대, 세종북부경찰대가 신설되며, 장점은 세종형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변화한다는 것이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30) 귀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에 대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보통 ④ 알고 있음 ⑤ 잘 알고 있음
- 31) 귀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시행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보통 ④ 알고 있음 ⑤ 잘 알고 있음
- 32) 귀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경찰 이원화가 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향상되지 않을 것임 ② 향상되지 않음 ③보통 ④ 향상될 것임 ⑤ 매우 향상될 것임
- 33) 귀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경찰 이원화가 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34) 귀하는 향후 세종 국회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등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이원화가 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 및 자치경찰 활동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치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자치경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찰관, 행정관 등)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서준배 교수입니다. 현재 세종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에 관해 연구 중으로, 경찰관들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주관기관 :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원장 서준배 교수(041-968-2664)

SQ 1) 소속	① 세종청(기동대, 특공대 제외) ② 세종남부경찰서 ③ 세종북부경찰서 ④ 세종청 소속 기동대, 특공대
SQ 2) 업무 파트	① 생활안전 ② 여성청소년 ③ 교통(사고조사 포함) ④ 지역경찰 ⑤ 수사· ⑥ 형사 ⑦ 112치안종합상황실 ⑧ 정보·보안·외사 ⑨ 경무 ⑩ 청문 ⑪ 경비 (기동대, 특공대 포함)
SQ 3)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SQ 4) 신분 등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⑥ 경정 ⑦ 총경 ⑧ 행정관(주무관)
SQ 5) 근무경력 (재직)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이하 ③ 10년 초과~15년 이하 ④ 15년 초과~20년 이하 ⑤ 20년 초과~25년 이하 ⑥ 25년 초과
SQ 6)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 7) 직책	① 과장 ② 팀장(계장) ③ 팀원(계원) ④ 서장 이상
SQ 8) 세종 거주 여부	① 거주 ② 출·퇴근
SQ 9)세종청 전입 후 근무 기간 (전체)	① 세종청 계속 근무 ② 전입 3년 미만 ③ 전입 3년 이상~5년 미만 ④ 전입 5년 이상

다음의 질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자치경찰 제도 전반에 걸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자치경찰 사무는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세종자치위와 세종특별시청 간 협업이 잘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세종자치위와 세종경찰청 간 협업이 잘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민지향적인 마인드로 전환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민의 경찰신뢰도가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치안활동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으로 치안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세종특별시청에서 실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실제 자치경찰사무가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의 복지 혜택이 타시도 자치경찰에 비해 미흡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자치경찰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추후 자치경찰제도가 이원화(완전분리)된다면 찬성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만일 자치경찰제도가 이원화된다면 나는 지방직으로 신분전환을 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현재 경력 중 자치경찰 사무수행 경험은 나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현재 경력 중 자치경찰 사무수행 경험은 나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자치경찰 업무수행에 만족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자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다음의 질문은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19)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은 세종특별시청의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은 세종경찰청의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세종자치경찰의 치안활동 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 ① 생활안전 분야 ② 여성청소년 분야 ③ 교통 분야 ④ 기타(직접 기재)
⑤ 없다

22) 세종자치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못하고 있다 ② 못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고 있다
⑤ 매우 잘하고 있다

다음은 향후 자치경찰 관련 특수시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23)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 및 예산을 투입, 별도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관제하고 있는데, 향후 ‘시민안전통합상황실’로 개편하여 경찰, 소방, 시청이 합동 근무하는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입니까?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24) 현재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경찰서로 집중하여 ‘광역 기동 순찰대’로 개편, 112신고 출동 위주로 대응하고, 현재 지구대(파출소)는 자율방범대 또는 범죄예방 및 청소년 상담 등 ‘지역 커뮤니티 치안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입니까?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25) 교통불편, 도로파손, 교통 표지판 개선 등 다양한 교통민원 신고와 처리를 위해 ‘교통안전 ONE STOP’센터를 신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경찰관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26)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범죄예방 지원 종합 센터 기능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에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자와 정신질환 환자 등을 위한 24시간 운영하는 종합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입니까?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27) 자치경찰 추진시 경찰이 부족할 경우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청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입니까?

*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28) 위 문항에서 ①, ②에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세종특별자치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추가 선발 반대
②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③ 현시점에서 자치경찰의 확장성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 ④ 애매한 사무 분장으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 ⑤ 기타(직접 기재)
- 29) 세종특별시민들에게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면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예’ 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어떤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 ② SNS 등 실시간 제공(카카오톡 등, 개인정보 동의 후)
- ② 자치경찰위원회 유튜브 운영, 필요시 접속
- ③ 별도 제작된 치안 소식지 형태(1-2페이지 분량)
- ④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등(대면 홍보)
- ⑤ 기타(직접 입력)
- 30)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지역거점 대학(또는 각 지역 인재개발원) 등과 연계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 또는 석사·박사 과정을 지원해 준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④, 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어떤 분야가 개설되기를 바랍니다?
- ① 상담학 ② 심리학 ③ 범죄예방(CPTED 등) 분야 ④ 사회복지 분야 ⑤ 빅데이터 관련 분야 ⑥ 디지털 포렌식 등 사이버 전반 분야 ⑦ 과학치안 분야
- ⑧ 기타(직접 기재)
- 31)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못하고 있다 ② 못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고 있다 ⑤ 매우 잘하고 있다

①,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현행 ‘경찰법’의 한계로 인한 권한 미흡
- ②홍보 등 부족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인식 저하
- ③시도 또는 경찰청과 협업 프로세스가 원활하지 않아서
- ④기타(직접 기재)

다음은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자치경찰 이원화』는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경찰관을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며, 향후 세종자치경찰단, 세종남부경찰대, 세종북부경찰대가 신설되며, 장점은 세종형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변화한다는 것이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2) 귀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에 대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보통 ④ 알고 있음 ⑤ 잘 알고 있음

33) 귀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시행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보통 ④ 알고 있음 ⑤ 잘 알고 있음

34) 귀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경찰 이원화가 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향상되지 않을 것임 ② 향상되지 않음 ③보통 ④ 향상될 것임 ⑤ 매우 향상될 것임

35) 귀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경찰 이원화가 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6) 귀하는 향후 세종 국회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등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치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자치경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서준배 교수입니다. 현재 세종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에 관해 연구 중으로, 공무원들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주관기관 :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원장 서준배 교수(041-968-2664)

SQ 1) 소속	① 세종특별시청(본청)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③ 직속기관/사업소 등
SQ 2) 신분	① 국장 ② 과장 ③ 팀장 ④ 팀원
SQ 3)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SQ 4) 근무경력 (재직 기간)	① 5년 이하 ② 5년 이상~10년 이하 ③ 10년 이상~15년 이하 ④ 15년 이상~20년 이하 ⑤ 25년 이상
SQ 5) 업무 파트 (본청 기준/ 읍면 동은 해당 업무)	① 운영지원과 ② 기획조정실 ③ 시민안전실 ④ 미래전략본부 ⑤ 자치행정국 ⑥ 경제산업국 ⑦ 문화체육관광국 ⑧ 보건복지국 ⑨ 건설교통국 ⑩ 환경녹지국 ⑪ 이외 기타
SQ 6) 세종 거주 여부	① 거주 ② 출·퇴근
SQ 7) 자녀 학령 (세종거주자만 응답 /막내 기준)	① 미취학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대학생
SQ 8)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 9) 부부 공무 원 여부	① 해당 ② 해당되지 않음

다음의 질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특별시청간 협업이 잘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경찰청간 협업이 잘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특별시의회간 협업이 잘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나간 경찰관과 지방직 공무원간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향후 자치경찰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사무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와 지방행정사무의 직무분석과 업무량 측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향후 세종자치경찰 이원화가 추진될 경우 같은 공간에 경찰관과 근무해도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경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의 질문에 대해 세종자치경찰의 치안활동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못하고 있다	못 하고 있 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8) 아동학대	①	②	③	④	⑤
9) 학교폭력	①	②	③	④	⑤
10) 가정폭력	①	②	③	④	⑤
11) 성폭력	①	②	③	④	⑤
12) 보이스 피싱	①	②	③	④	⑤
13) 스토킹	①	②	③	④	⑤
14) 범죄예방 분야	①	②	③	④	⑤
15) 교통안전 분야	①	②	③	④	⑤

다음의 질문에 대해 세종자치경찰의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지 표시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 요 하 지 않 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6) 아동학대	①	②	③	④	⑤
17) 학교폭력	①	②	③	④	⑤
18) 가정폭력	①	②	③	④	⑤
19) 성폭력	①	②	③	④	⑤
20) 보이스 피싱	①	②	③	④	⑤
21) 스토킹	①	②	③	④	⑤
22) 범죄예방 분야	①	②	③	④	⑤
23) 교통안전 분야	①	②	③	④	⑤

24)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은 세종특별시청의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5)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은 세종경찰청의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6) 세종자치경찰의 치안활동 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 ① 생활안전 분야 ② 여성청소년 분야 ③ 교통 분야 ④ 기타(직접 기재)
⑤ 없다

27) 세종자치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못하고 있다 ② 못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고 있다
⑤ 매우 잘하고 있다

① 시청 홈페이지(바로 소통) ② 현장간담회 ③ 경찰에 직접 전화 등
통신 ④ 시책 아이디어 공모 ⑤ 주민행정복지센터 시책수집 ⑥ SNS를 통
한 의견 청취

⑦ 기타 ()

① 언론보도(TV, 라디오, 신문 등) ②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③ SNS 등 인터넷 매체 ④ 대중교통 내외부 광고(버스, 택시 랩핑 등)
⑤ 홍보 리플렛, 포스터 등 ⑥ 지하철 광고 등 옥외광고

① 아니오 ②예

(‘예’ 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어떤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 ② SNS 등 실시간 제공(카카오톡 등, 개인정보 동의 후)
- ② 자치경찰위원회 유튜브 운영, 필요시 접속
- ③ 별도 제작된 치안 소식지 형태(1-2페이지 분량)
- ④ 기타(직접 기재)

① 매우 못하고 있다 ② 못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고 있다
⑤ 매우 잘하고 있다

①,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현행 ‘경찰법’의 한계로 인한 권한 미흡
- ②홍보 등 부족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인식 저하
- ③시도 또는 경찰청과 협업 프로세스 미구축
- ④기타(직접 기재)

다음은 향후 자치경찰 관련 특수시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32)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 및 예산을 투입, 별도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관제하고 있는데, 향후 ‘시민안전통합상황실’로 개편하여 경찰, 소방, 시청이 합동 근무하는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입니까?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찬성
- ⑤ 매우 찬성

33) 현재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경찰서로 집중하여 ‘광역 기동 순찰대’로 개편, 112신고 출동 위주로 대응하고, 현재 지구대(파출소)는 자율방범대 또는 범죄예방 및 청소년 상담 등 ‘지역 커뮤니티 치안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입니까?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찬성
- ⑤ 매우 찬성

34) 교통불편, 도로파손, 교통 표지판 개선 등 다양한 교통민원 신고와 처리를 위해 ‘교통안전 ONE STOP’센터를 신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경찰관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찬성
- ⑤ 매우 찬성

35)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범죄예방 지원 종합 센터 기능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에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자와 정신질환 환자 등을 위한 24시간 운영하는 종합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입니까?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36) 자치경찰 추진시 경찰이 부족할 경우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청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입니까?

*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매우 찬성하지 않음 ② 찬성하지 않음 ③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다음은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자치경찰 이원화』는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경찰관을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며, 향후 세종자치경찰단, 세종남부경찰대, 세종북부경찰대가 신설되며, 장점은 세종형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변화한다는 것이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7) 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에 대해 들어서 잘 알고 있다.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보통 ④ 알고 있음 ⑤ 잘 알고 있음

38) 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시행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보통 ④ 알고 있음 ⑤ 잘 알고 있음

39)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경찰 이원화가 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이다.

- ① 매우 향상되지 않을 것임 ② 향상되지 않음 ③보통 ④ 향상될 것임 ⑤ 매우 향상될 것임

40)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경찰 이원화가 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① 매우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1) 향후 세종 국회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등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 및 자치경찰 활동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치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발 행 : 2023년 10월 31일

인 쇄 : 2023년 10월 31일

발 행 인 :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발 행 처 :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공동 연구자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